기본연구 2018-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A Study on Social Strategy in Fishing Community against Age of Demographic Extinction

2018. 12.

박상우 | 류정곤 | 황재희 | 이상규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황재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박상우 연구총괄,제1장, 제2장 제1절~제2절 일부, 제3장 제1절, 제4장 제1절 일부, 제6장, 제7장

연구진

류정곤 제2장 제1절
황재희 제4장 제1절 일부, 제5장
이상규 제3장 제2절~제3절, 제4장 제2절~제3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정봉 경상대학교 교수
문정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권준영 해양수산부 창조혁신일자리추진단 부단장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정부주도의 출산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불과 반세기 만에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거쳤고, 반면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내몰리게 되었다. 농어촌 인구감소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구소멸이나 지역소멸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쏟아지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어촌의 지역소멸 고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어촌지역의 지역소멸지수가 0.2미만인 고위험 지역은 2015년 기준 131개 읍면(31.1%)으로 나타났고, 2045년에는 342개로 전체의 81.2%로 나타나 도시 어촌을 제외한 대부분 어촌사회에서 지역소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어촌사회는 수산업 침체와 낮은 삶의 질 여건으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를 국정기조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귀어귀촌 정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귀어인은 연간 1,000명 내외에 불과하다. 특히, 귀어인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귀어인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소외되었던 항·포구와 배후 어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통해 어촌혁신을 이끌어나갈 계획

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단순한 하드웨어 인프라가 아닌 도시민이 살고 싶은 어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청년이 어촌사회에 정착하여 창업·창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촌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던 다양한 과제들이 정부의 관련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의 박상우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였고,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황재희 전문연구원, 이상규 연구원이 함께 수행하였다. 또한, 이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정부·지자체, 학계, 연구기관의 자문위원 분들께도 필자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심사와 감리를 맡아 적절한 지적과 조언으로 완성도를 높여 주신 경상대학교 김정봉 교수와 이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2018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양 창 호**

목차

❖ 요 약 · i

❖ Executive Summary · ix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목적 ····· 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3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 3
2. 연구 방법 ····· 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13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진단 관련 연구 ····· 13
2. 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응한 정책방안 관련 연구 ····· 1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7

제 2 장 인구소멸 개념 및 어촌사회 정책 이슈 · 19

제1절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 현상의 개념 ····· 19
1. 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한 정의 ····· 19
2. 인구절벽·지방소멸의 원인 ····· 21
제2절 인구소멸에 따른 어촌사회 정책 이슈 ····· 30
1. 예상되는 문제점 ····· 30
2. 새로운 정책수요 발생 ····· 43

제 3 장 어촌사회 현황 및 인구추계 전망 • 47
제1절 어촌의 인구·사회 현황 ····· 47
1. 어촌지역 인구 현황 ····· 47
2. 어촌지역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여건 ····· 54
제2절 어촌 인구추계 전망 ····· 64
1. 어촌지역 장래인구추계 ····· 64
2.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지수 분석 ····· 75
제3절 지역현황 및 인구추계 결과 종합 ····· 79

제 4 장 인구소멸 어촌지역 심층조사 및 국내외 사례 • 81
제1절 인구소멸 어촌지역 심층조사 ····· 81
1. 도서형 어촌 현장조사 ····· 81
2. 연안촌락형 어촌 현장조사 ····· 96
제2절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한 국내외 사례연구 ····· 104
1. 해외사례 ····· 104
2. 국내사례 ····· 132
제3절 어촌 현장조사 및 국내외 정책대응의 시사점 ····· 138

제 5장 어촌 인구소멸에 대한 인식조사 • 141
제1절 조사 개요 ····· 141
1. 조사 배경 및 목적 ····· 141
2. 조사 설계 및 방법 ····· 143
3. 응답자 특성 ····· 150
제2절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어촌주민 인식조사 결과 ····· 155
1. 어촌의 정주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 155
2. 어촌의 인구소멸 원인과 대응방안 ····· 168
제3절 어촌이주에 관한 도시민 인식조사 결과 ····· 176

1. 어촌이주에 대한 인식: 새로운 거주지로서 어촌 ····· 176
2. 어촌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소멸위험 지역으로서 어촌 ····· 190
제4절 인식조사 결과 종합 ····· 193

제 6장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대응전략 • 197

제1절 기본방향 ····· 197
1. 대응전략 도출 ····· 197
2. 추진전략 ····· 205
제2절 전략별 추진과제 ····· 208
1. 인구소멸 대응 정책기반 마련 ····· 208
2. 어촌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 217
3. 인구유입 촉진 및 어촌 커뮤니티 기반 강화 ····· 224
4. 인구소멸 위험지역 활력 제고 ····· 231

제 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33

제1절 결론 ····· 233
제2절 정책제언 ····· 235
1. 단기적 정책제언 ····· 235
2. 중·장기적 정책제언 ····· 242

❖ 참고문헌 • 247

❖ 부록 • 253

〈부록 1〉 전국 어촌지역 인구추계 전망 ····· 254
〈부록 2〉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지역주민 인식조사 ····· 263
〈부록 3〉 어촌 이주에 관한 도시민 인식조사 ····· 270

표 목차

〈표 1-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진단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4
〈표 1-2〉 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응한 정책방안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6
〈표 2-1〉 선행연구의 지방소멸 지역에 대한 지표 및 적용 ····· 21
〈표 2-2〉 생산가능인구 추이와 전망 ····· 22
〈표 2-3〉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 ····· 24
〈표 2-4〉 고령화율 추이와 전망 ····· 26
〈표 2-5〉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 현황 ····· 27
〈표 2-6〉 가임기 여성의 도시 및 농어촌지역 분포 ····· 30
〈표 2-7〉 시도교육청별 폐교재산 현황 ····· 36
〈표 3-1〉 전국 입지유형별 읍·면·동 수 ····· 48
〈표 3-2〉 전국 입지유형별 가임여성(20~39세) 비율(평균) ····· 48
〈표 3-3〉 전국 입지유형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평균) ····· 50
〈표 3-4〉 전국 입지유형별 15세 미만 인구 비율(평균) ····· 51
〈표 3-5〉 전국 지역유형별 지역소멸 위험지수 ····· 53
〈표 3-6〉 전국 입지유형별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 ····· 54
〈표 3-7〉 전국 입지유형별 교육서비스업 ····· 56
〈표 3-8〉 전국 입지유형별 보건시설 1개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 58
〈표 3-9〉 문화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 ····· 60
〈표 3-10〉 전국 입지유형별 종합소매업 사업체 수 ····· 62
〈표 3-11〉 행정구역의 변동(2010~2015년) ····· 69
〈표 3-12〉 인구추계 제외지역 ····· 70
〈표 3-13〉 인구증가 상위지역 ····· 71
〈표 3-14〉 인구감소 상위지역 ····· 72
〈표 3-15〉 시·도별 인구추계 결과 ····· 73

〈표 3-16〉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지수 변화(2015년, 2045년) ····· 75
〈표 3-17〉 지역 시·도별 지역소멸위험단계 지역변화 ····· 77
〈표 3-18〉 어촌 입지유형별 비교 ····· 78
〈표 3-19〉 어촌지역 여건 및 실태 종합 ····· 80
〈표 4-1〉 조사개요 ····· 101
〈표 4-2〉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103
〈표 4-3〉 일본의 어업집락 입지유형별 지방소멸 현황 ····· 106
〈표 4-4〉 마을, 사람, 일자리와 창생의 종합전략 ····· 109
〈표 4-5〉 일본 총무성의 과소지역 지원방안 ····· 112
〈표 4-6〉 지방창생을 통한 주민 생활서비스 향상 사례 ····· 116
〈표 4-7〉 지방창생을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사례 ····· 118
〈표 4-8〉 지방창생을 통한 소득향상 사례 ····· 119
〈표 4-9〉 스마트 빌리지 조성 방향 ····· 130
〈표 4-10〉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별 주요과제(안) ····· 133
〈표 4-11〉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 134
〈표 5-1〉 어촌주민 인식조사 개요 ····· 144
〈표 5-2〉 어촌주민 인식조사 대상지역 ····· 144
〈표 5-3〉 어촌주민 인식조사 항목 ····· 146
〈표 5-4〉 도시민 인식조사 개요 ····· 147
〈표 5-5〉 도시민 인식조사의 지역 타켓팅 정보 ····· 148
〈표 5-6〉 도시민 인식조사의 연령·직업 타켓팅 정보 ····· 148
〈표 5-7〉 도시민 인식조사 항목 ····· 149
〈표 5-8〉 어촌주민 인식조사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 150
〈표 5-9〉 어촌주민 인식조사의 거주지역·입주유형별 분포 ····· 151
〈표 5-10〉 도시민 인식조사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 152
〈표 5-11〉 도시민 인식조사의 거주지역별 분포 ····· 153
〈표 5-12〉 도시민 인식조사의 직종·직업별 분포 ····· 154
〈표 5-13〉 지역별, 어촌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원인 ····· 157
〈표 5-14〉 주거생활 측면의 문제점 ····· 159
〈표 5-15〉 지역별, 젊은 층이 어촌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 ····· 171

〈표 5-16〉 어촌이주 가능성에 따른 응답자 그룹 현황 ····· 177
〈표 5-17〉 응답자 그룹별 소득 현황 ····· 178
〈표 5-18〉 응답자 그룹별 동거인 구성 현황 ····· 179
〈표 5-19〉 어촌이주를 선호하는 응답자 현황 ····· 179
〈표 5-20〉 어촌이주 고려사유에 대한 응답자 현황 ····· 180
〈표 5-21〉 귀촌 고려경험 유무에 따른 어촌 인구소멸 위험 인식수준 ····· 190
〈표 5-22〉 어촌 인구절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194
〈표 6-1〉 인구추계 전망에 따른 대응전략 도출 ····· 199
〈표 6-2〉 어촌지역 실태에 따른 대응전략 도출 ····· 201
〈표 6-3〉 지역주민 및 도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전략 도출 ····· 202
〈표 6-4〉 국내외 정책동향 검토를 통한 대응전략 도출 ····· 204
〈표 6-5〉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대비한 대응전략 ····· 206
〈표 6-6〉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대응 4대 전략과 과제 ····· 207
〈표 6-7〉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방향(안) ····· 208
〈표 6-8〉 (가칭)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원 특별회계 방향 ····· 210
〈표 6-9〉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 영향평가(안) ····· 212
〈표 6-10〉 수산업·어촌 인구활력 종합계획 구성(안) ····· 216
〈표 6-11〉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여성 보건복지분야 우대지원(안) ····· 225
〈표 6-12〉 입지유형·부문별 어촌 인구소멸 위기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안) ··· 227
〈표 7-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 237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범위 ····· 4
〈그림 1-2〉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설문조사 ····· 7
〈그림 1-3〉 전화설문 및 조사원 현장 대면조사 ····· 8
〈그림 1-4〉 현장 조사지역 및 인터뷰 조사 ····· 9
〈그림 1-5〉 공간통계분석 적용 사례 ····· 11
〈그림 1-6〉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12
〈그림 2-1〉 인구절벽 개념 ····· 20
〈그림 2-2〉 총인구와 인구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22
〈그림 2-3〉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 추이 및 전망 ····· 23
〈그림 2-4〉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와 전망 ····· 23
〈그림 2-5〉 합계출산율 및 연령대별 출산율 현황 ····· 24
〈그림 2-6〉 합계출산율 및 연령대별 출산율 현황 ····· 25
〈그림 2-7〉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 추이 ····· 27
〈그림 2-8〉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 28
〈그림 2-9〉 읍면동 인구규모 분포 ····· 29
〈그림 2-10〉 어가인구 및 고령화율 추이 ····· 31
〈그림 2-11〉 1차 산업 청장년 인구추이 ····· 32
〈그림 2-12〉 1차 산업 청장년 인구추이 ····· 32
〈그림 2-13〉 어선척수 및 연근해어업 생산량 현황 ····· 33
〈그림 2-14〉 열악한 어업작업 환경 실태 ····· 34
〈그림 2-15〉 읍면지역 빈집 현황 ····· 35
〈그림 2-16〉 어촌 지방소멸 위험지역 내 폐교현황 ····· 37
〈그림 2-17〉 어항 유휴부지 해역별·지역별(섬) 분포 현황 ····· 38
〈그림 2-18〉 어항 유휴부지 면적·규모별 분포 현황 ····· 39

〈그림 2-19〉 어촌 지방소멸 위험지역 내 하수처리시설 현황 ····· 40
〈그림 2-20〉 어촌지역 연안여객선 운영 현황 ····· 41
〈그림 2-21〉 어촌지역 의료서비스 현황 ····· 42
〈그림 2-22〉 어촌의 공간적 특성 ····· 43
〈그림 2-23〉 어촌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향 ····· 44
〈그림 3-1〉 전국 지역별 가임여성(20~39세) 비율 ····· 49
〈그림 3-2〉 전국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 50
〈그림 3-3〉 전국 지역별 15세 미만 인구 비율 ····· 51
〈그림 3-4〉 전국 지역별 지역소멸위험지수 ····· 53
〈그림 3-5〉 전국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수(천명당) ····· 55
〈그림 3-6〉 전국 지역별 교육서비스업 ····· 57
〈그림 3-7〉 전국 지역별 보건시설 수 ····· 59
〈그림 3-8〉 전국 지역별 문화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61
〈그림 3-9〉 전국 지역별 소매점 수 ····· 63
〈그림 3-10〉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지수 분포 변화 ····· 76
〈그림 4-1〉 유부도 위치도 및 항공사진 ····· 81
〈그림 4-2〉 유부도 인구추정 결과 및 인구피라미드 ····· 82
〈그림 4-3〉 유부도 지역현장 ····· 83
〈그림 4-4〉 비양도 위치도 및 항공사진 ····· 84
〈그림 4-5〉 비양도 인구추정 결과 및 인구피라미드 ····· 85
〈그림 4-6〉 비양도 지역현장 ····· 86
〈그림 4-7〉 호도·녹도 위치도 및 항공사진 ····· 87
〈그림 4-8〉 호도·녹도의 인구추정 결과 및 인구피라미드 ····· 88
〈그림 4-9〉 실리도 위치도 및 항공사진 ····· 90
〈그림 4-10〉 실리도 인구추정 결과 및 인구피라미드 ····· 91
〈그림 4-11〉 실리도 둘레길 및 전망대 ····· 92
〈그림 4-12〉 금오도·안도 위치도 및 항공사진 ····· 93
〈그림 4-13〉 금오도·안도 인구추정 결과 및 인구피라미드 ····· 94
〈그림 4-14〉 금오도·안도 지역현황 ····· 95
〈그림 4-15〉 강원도 양양군 인구리 위치도 및 항공사진 ····· 97

〈그림 4-16〉 인구리 지역활성화 사업 ····· 98
〈그림 4-17〉 노곡1리 위치도 및 항공사진 ····· 99
〈그림 4-18〉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중요도 ····· 102
〈그림 4-19〉 일본사회의 인구감소와 대응전략 필요성 ····· 105
〈그림 4-20〉 일본 지방소멸에 따른 농·어업집락에서 발생하는 지역문제 ····· 107
〈그림 4-21〉 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응한 일본의 범정부 대응전략 ····· 108
〈그림 4-22〉 국토교통성 소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 개념 ····· 110
〈그림 4-23〉 일본 과소지역 지정 추이 및 현황 ····· 111
〈그림 4-24〉 일본 농림수산성 6차산업화 추진체계 ····· 114
〈그림 4-25〉 일본 수산청 수산업·어촌 6차산업화 추진 사례 ····· 115
〈그림 4-26〉 시마네현 아마쵸 위치 및 전경 ····· 120
〈그림 4-27〉 아마쵸의 농수산 지역산업의 육성 ····· 121
〈그림 4-28〉 아마쵸의 매력적인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효과 ····· 122
〈그림 4-29〉 아마쵸의 소거점화 및 I턴 이주자 거주단지 ····· 123
〈그림 4-30〉 아마쵸 지역재생을 통한 인구추이와 지방재정 ····· 123
〈그림 4-31〉 세토우치 섬지역 혀황 ····· 124
〈그림 4-32〉 빈집 이에(家) 프로젝트 및 해상교통 ····· 124
〈그림 4-33〉 세토우치 예술제 관람객 ····· 125
〈그림 4-34〉 세토우치 섬 예술제 경제적 효과 ····· 126
〈그림 4-35〉 입지유형별 인구비율 및 농어촌 우세지역의 인구증감율 ····· 126
〈그림 4-36〉 지역쇠퇴의 악순환 ····· 127
〈그림 4-37〉 스마트 마을의 핵심가치 및 개념 ····· 128
〈그림 4-38〉 스마트 마을의 주요내용 ····· 128
〈그림 4-39〉 LAG와 FLAG 사업지역(2007-2013년) ····· 131
〈그림 4-40〉 LAG와 FLAG 사업지역(2007-2013년) ····· 131
〈그림 4-41〉 유럽 지역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 사업내용 ····· 131
〈그림 4-42〉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과제 ····· 132
〈그림 4-43〉 농촌 3·6·5 생활권 개념도 ····· 135
〈그림 4-44〉 귀농어·귀촌 현황 ····· 136
〈그림 4-45〉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18~2022년) ····· 137

〈그림 5-1〉 어촌의 지역소멸지수 현황 ····· 142
〈그림 5-2〉 도시민 인식조사 설문 화면 ····· 147
〈그림 5-3〉 도시민 인식조사 설문 화면 ····· 151
〈그림 5-4〉 도시민 인식조사의 성별·연령대별 응답 현황 ····· 152
〈그림 5-5〉 도시민 인식조사의 거주지역별 응답 현황 ····· 153
〈그림 5-6〉 도시민 인식조사의 직종·직업별 응답 현황 ····· 154
〈그림 5-7〉 어촌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원인 ····· 155
〈그림 5-8〉 연령대별, 어촌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원인 ····· 156
〈그림 5-9〉 주거생활 측면의 문제점 ····· 157
〈그림 5-10〉 연령별, 주거생활 측면의 문제점 ····· 159
〈그림 5-11〉 산업기반(수산·어업) 측면의 문제점 ····· 160
〈그림 5-12〉 연령별, 산업기반(수산·어업) 측면의 문제점 ····· 161
〈그림 5-13〉 환경여건 측면의 문제점 ····· 162
〈그림 5-14〉 지역별, 환경여건 측면의 문제점 ····· 162
〈그림 5-15〉 교육여건 측면의 문제점 ····· 163
〈그림 5-16〉 성별, 교육여건 측면의 문제점 ····· 164
〈그림 5-17〉 교통여건 측면의 문제점 ····· 165
〈그림 5-18〉 편의생활 측면의 문제점 ····· 166
〈그림 5-19〉 연령별, 편의생활 측면의 문제점 ····· 167
〈그림 5-20〉 지역주민의 어촌이탈 원인 ····· 168
〈그림 5-21〉 연령별, 지역주민의 어촌이탈 원인 ····· 169
〈그림 5-22〉 젊은 층이 어촌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 ····· 169
〈그림 5-23〉 연령별, 젊은 층이 어촌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 ····· 170
〈그림 5-24〉 주민이탈 완화 및 청년층 유입에 요구되는 정책사업 ····· 172
〈그림 5-25〉 어촌 인구소멸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지원의 적절성 ····· 173
〈그림 5-26〉 응답자 특성별, 어촌 인구소멸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지원의 적절성 ··· 173
〈그림 5-27〉 어촌의 인구소멸에 대응한 정부지원이 미흡한 이유 ····· 174
〈그림 5-28〉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최우선 지원사업 ····· 175
〈그림 5-29〉 어촌지역 거주 여부 ····· 176
〈그림 5-30〉 어촌이주 가능성에 따른 응답자 그룹 분리 문항 ····· 177

〈그림 5-31〉 어촌으로 이주를 고려해 본 이유 ····· 180
〈그림 5-32〉 어촌이주를 고려하게 된 경제적인 이유 ····· 181
〈그림 5-33〉 어촌이주를 고려하게 된 정서적인 이유 ····· 182
〈그림 5-34〉 어촌이주를 실행하지 못한 이유 ····· 183
〈그림 5-35〉 '배우자(연인)의 반대'에 응답한 집단 현황 ····· 183
〈그림 5-36〉 어촌이주를 다시 고려하기 위한 요건 ····· 184
〈그림 5-37〉 농·산촌 대비 어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 185
〈그림 5-38〉 어촌이주 결정에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사항 ····· 186
〈그림 5-39〉 귀촌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 187
〈그림 5-40〉 '배우자(연인)을 만나기 어려움'에 응답한 집단 현황 ····· 187
〈그림 5-41〉 도시와 가까운 어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 ····· 188
〈그림 5-42〉 어촌의 거주지 매력도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 189
〈그림 5-43〉 어촌의 인구소멸 위험에 대한 동의여부 ····· 190
〈그림 5-44〉 어촌거주민의 어촌이탈 원인 ····· 191
〈그림 5-45〉 젊은 층의 어촌이주 기피요인 ····· 192
〈그림 6-1〉 대응전략 도출방안 ····· 198
〈그림 6-2〉 어촌 인구소멸 위기지역 영향평가 체계(안) ····· 211
〈그림 6-3〉 (가칭) 어촌사회정책과 신설 방안 ····· 213
〈그림 6-4〉 범정부 차원의 인구소멸 거버넌스 구축(안) ····· 214
〈그림 6-5〉 수산업·어촌 인구활력 추진방향(안) ····· 215
〈그림 6-6〉 연안 지자체별 인구활력 이행계획 ····· 216
〈그림 6-7〉 수산·어촌 일자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안) ····· 218
〈그림 6-8〉 수산업·어촌 일자리 생태계 구축 ····· 220
〈그림 6-9〉 어업 일자리 지원센터 확대·개편방안 ····· 221
〈그림 6-10〉 (가칭) 어촌계 사회적경제조직 구성과 추진방향 ····· 222
〈그림 6-11〉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2.0 추진방향 ····· 222
〈그림 6-12〉 타 부처의 예비 사회적경제조직 연대·협력 기반 마련 ····· 223
〈그림 6-13〉 가족친화형 '漁울림 복합단지' 조성 예시 ····· 224
〈그림 6-14〉 어촌 인구소멸지역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안) ····· 229
〈그림 6-15〉 어촌생활복지 거점센터 조성(안) ····· 230

〈그림 6-16〉 어촌사회 통합이 필요한 지방소멸 고위험지역 도출(안) ····· 231
〈그림 6-17〉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추진방향 ····· 232
〈그림 7-1〉 어촌형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및 거점 조성사업 개념도 ····· 239
〈그림 7-2〉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240
〈그림 7-3〉 가족친화형 '漁울림 복합단지' 조성 개념 ····· 241
〈그림 7-4〉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개념 ····· 242
〈그림 7-5〉 어촌사회정책과 신설 방안 ····· 244
〈그림 7-6〉 범정부 차원의 인구소멸 대응 거버넌스 구축(안) ····· 245

요약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한 어촌사회 정책 연구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어촌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소멸에 대한 실태 및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전망을 통해 어촌의 인구이탈 방지,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유도함으로써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그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어촌쇠퇴에 따른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어촌사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둘째, 어촌사회의 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젊은 세대의 어촌사회 유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어촌 지역 활력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 마지막으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해양수산부 및 연안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table>
<tr><th>연구공정</th><th>연구내용</th><th>연구방법</th></tr>
<tr><td>착수워크숍
(2018.1)</td><td>연구방향 설정</td><td>연구진 워크숍</td></tr>
<tr><td>1차
진도보고
(2018.4)</td><td>인구절벽/지방소멸 이론적 검토</td><td>문헌조사
자문회의</td></tr>
<tr><td rowspan="8">중간심의
(2018.6.15)</td><td>인구절벽/지방소멸 전망 및 실태분석</td><td rowspan="2">공간통계분석
인구추계 전망
국내외현장조사
어촌사회
설문조사
(지역주민/도시민)</td></tr>
<tr><td>인구추계
전망 / 실태조사 / 인식도
조사</td></tr>
<tr><td>선진사례 조사 및 시사점</td><td>현장조사</td></tr>
<tr><td>종합분석 및 기본방향</td><td rowspan="4">연구심의
(내외부 전문가
평가)</td></tr>
<tr><td>추진전략 및 과제</td></tr>
<tr><td>인구소멸
대응
정책기반
마련 / 어촌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 인구 유입
촉진 및
커뮤니티
기반 강화 / 인구소멸
위험지역
활력 제고</td></tr>
<tr><td></td></tr>
<tr><td>세미나
(2018.9)</td><td>인구절벽/지방소멸 대응전략 마련</td><td>세미나 발표 /
토론</td></tr>
<tr><td>최종심의
(2018.11)</td><td>결론 및 정책제언</td><td>연구심의
(내외부 전문가
평가)</td></tr>
<tr><td>품질평가
(2018.11)</td><td>보고서 교정 및 편집</td><td>-</td></tr>
<tr><td>연구완료
(2018.12)</td><td>보고서 발간</td><td>-</td></tr>
</table>

2) 연구의 특징

- 이 연구는 어촌지역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실태파악과 이를 완화·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하는 연구이다. 특히, 어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과 세부적인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 이 연구에서는 어촌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도시지역과 어촌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각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외부자의 시각에서 고려되는 어촌의 개선점 및 추진과제를 살펴보았으며, 어촌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내부자 인식조사 차원에서 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문제와 어촌이탈 방지를 위한 추진과제를 살펴보았다.
- 이 연구에서는 읍·면·동의 행정구역 단위로 2045년까지 인구추계와 지역소멸지수 등을 전망하고, 그 분석결과에 대해 GIS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어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도시지역 대비 매우 열악한 거주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지역은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연안촌락형 어촌 대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주요결과	세부내용
인구구조		〈가임여성비율〉 · 도시지역 : 13.55 · 어촌(읍·면) : 7.23 〈고령화율〉 · 도시지역 : 13.62 · 어촌(읍·면) : 32.51 〈15세미만비율〉 · 도시지역 : 12.37 · 어촌(읍·면) : 7.89	• 가임여성 및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은 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40%수준)으로 나타났고, 고령화 비율은 오히려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일자리 현황		〈평균 종사자수〉 · 도시지역 : 526명 · 어촌(읍·면) : 341명 · 섬지역 : 230명	• 천명당 평균 사업체 종사자 수는 평균에서 어촌지역이 도시지역의 65%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 보다도 종사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공공인프라	교육시설	〈10개 미만 지역〉 · 도시 : 96(5.03%) · 어촌(읍·면) : 164(60.52%) · 섬 : 32(86.49%)	• 교육서비스업은 도시지역에서 100개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어촌지역은 10개 미만 지역이 60%를 넘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시설	〈100명 미만 지역〉 · 도시 : 954(50.03%) · 어촌(읍·면) : 11(4.06%) · 섬 : 2(5.41%)	• 도시지역의 경우 보건시설당 노인인구수가 100명 미만인 지역이 50%이상으로 어촌지역의 4%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으며 농촌지역과 비교하여도 의료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문화시설	〈20개 미만 지역〉 · 도시 : 474(24.86%) · 어촌(읍·면) : 216(79.70%) · 섬 : 36(97.30%)	•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대부분 지역에서 10개 미만일 정도로 열악하며 평균 수에서도 농촌지역과 큰 차이를 보임
	편의시설	〈평균개수〉 · 도시지역 :39개 · 어촌(읍·면):26개 · 섬지역 : 14개	• 생활유지를 위한 생필품 등의 구매를 위한 소매점의 수가 도시지역대비 부족한 실정이며, 섬 지역을 고려한다면 농촌지역보다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

▸ 국내외 정책대응 사례와 국내 어촌현장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는 현재 인구감소 추세 전망에 따른 연안·어촌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예측과 범정부 합동 대책 마련을 통해 중·장기적인 접

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지자체의 혁신과 청년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재생 추진이 요구된다.
- 셋째, 연안·어촌의 교통, 의료, 복지,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생활서비스 거점지역을 형성하고 주변 어촌마을의 연계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 넷째, 지역 학교 특성화와 신규 이주촉진을 통해 지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6차산업화 등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어촌지역 내 급격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촌주민 및 도시거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주요 결과 및 이슈	
어촌 주민 인식 조사	어촌지역의 정주환경 문제점	1순위: 수산업 여건의 지속적 쇠퇴(51.8%), 2순위: 주민 편의생활 기반 미비(30.8%) - 산업기반 측면에서 '청년 종사자 감소(지원인력 부족)', '어업기반시설 취약', '수산업의 확장성 한계' 문제 지목 - 여성은 '편의생활 기반 미비' 문제 제기
	어촌주민의 이탈요인	1순위: 일자리 부족 및 수산업 여건 악회(81.4%), 2순위: 공공서비스(문화/의료) 취약(32.6%) - 고령층 중심 '대중교통/해상교통 부족' 문제 제기
	청년층의 기피요인	1순위: 일자리 부족 및 수산업 여건 악회(81.7%), 2순위: 교육인프라 부족(38.7%)
	정책대응 문제	1순위: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부족 원인(60.1%), 2순위: 지자체 중심 실태조사 및 문제진단 미흡 원인(40.4%)

구 분	주요 결과 및 이슈	
도시민 인식 조사	어촌이주 기피원인	어촌이주 가능성에 따라 유입/기피 원인 상이 ① 높음: (선호) 정서적 이유 → (문제) 원하는 일자리 탐색 ② 보통: (한계) 정보부족 → (문제) 재해위험, 낮은 쾌적성 등 ③ 낮음: (비선호) 교통/편의/의료 및 문화/여가 생활 어려움 → (제안) 공공서비스 확충
		성별/연령대에 따라 비유입 요인 상이 - 20~30대 여성: 어촌 일자리 정보 부족 +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 - 20~30대 남성: 어촌이주/생활정보 부족 + 배우자 만남 어려움 - 40대: 교육인프라 개선 → 가족단위 이주고려
	청년층의 어촌비유입	1순위: 원하는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63.4%), 2순위: 교통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미비(42.4%), 3순위: 교육/학습여건 취약(40.4%), 4순위: 문화/여가생활 여건 부족(32.0%), 5순위: 배우자(연인) 반대 및 결혼 문제(25.0%)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인구추계, 실태조사, 인식도 조사, 국내외 정책동향 등의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분야의 정책환경 변화와 거버넌스, 예산,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4대 전략	세부 전략과제	추진과제
인구소멸 대응 정책기반 마련	인구소멸 대응 법제도 개선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칭)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어촌 인구소멸 위기지역 영향평가제도 도입
	인구소멸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전문기관 지정·운영	해양수산부 '어촌사회정책과' 신설
		범 부처 차원의 인구소멸 대응 거버넌스 구축
		어촌의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
	어촌지역 인구활력 체계 구축	수산업·어촌 인구활력 종합계획
		연안 지자체별 인구활력 이행계획

4대 전략	세부 전략과제	추진과제
어촌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수산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수산·어촌 일자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수산·어촌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어업 일자리 매칭 강화	
	해양수산형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2.0	어촌계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타 부처 예비 사회적경제조직 연대·협력 기반 마련
인구유입 촉진 및 커뮤니티 기반 강화	가족친화형 지원 강화	가족친화형 '漁울림' 복합단지 조성
		여성 정착을 위한 우대 지원
	어촌 생활서비스 최소기준 도입	입지유형·부문별 어촌 생활서비스 기준 마련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삶의 질 지수 도입 및 서비스기준 이행 평가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어촌 인구소멸지역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어촌 생활복지 거점센터 지원
소멸위험지 역활력제고	어촌사회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조성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어촌지역 인구소멸에 대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 및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전략 및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현장체감형의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촌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소멸 위험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향후 어촌사회가 겪게 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ECUTIVE SUMMARY

A Policy Study on Fishing Communities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Population Extinction

1. Purpose

-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fishing communiti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that fishing communities are facing, preventing the population from exiting fishing communities while contributing to the settlement of young people based on future forecasts. Specific purpos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study intends to suggest policy direction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of the fishery industry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fishing communities. Therefore, it would prevent fishermen and local residents from exiting fishing communities resulting from the decline of fishing society.
- Second, in response to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due to low

birth rate and super aging of fishing communities, this study aims to present measures to induce young people to fishing communities, improving the vitalization of fishing communities.

- Lastly, it intends to suggest measures to establish a pan-governmental governance in response to population cliff and local extinction, while suggesting measures with whic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reflect in the policy.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table>
<tr><th>Study process</th><th colspan="3">Study contents</th><th>Methods</th></tr>
<tr><td>Starting workshops (2018.1)</td><td colspan="3">Setting a direction of the study</td><td>Workshops with researchers</td></tr>
<tr><td>1st round progress report (2018.4)</td><td colspan="3">Theoretical review of population cliff/local extinction</td><td>Literature review
Consultation meeting</td></tr>
<tr><td rowspan="3">Intermediate review (2018.6.15)</td><td colspan="3">Forecasting population cliff/
local extinction and status analysis</td><td rowspan="2">Spatial statistics analysis
Forecasting population projection
Domestic and foreign field investigation
Survey on fishing communities (local/urban residents)</td></tr>
<tr><td>Forecasting population projection</td><td>Status survey</td><td>Awareness survey</td></tr>
<tr><td colspan="3">Studying cases in advanced countries and implications</td><td>Field investigation</td></tr>
</table>

<table>
<tr><td>Study process</td><td colspan="4">Study contents</td><td>Methods</td></tr>
<tr><td rowspan="4"></td><td colspan="4">Comprehensive analysis and basic direction</td><td rowspan="4">Research review (Evaluation from domestic and foreign experts)</td></tr>
<tr><td colspan="4">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tasks</td></tr>
<tr><td>Building policy foundation for responding population cliff</td><td>Establishing a job platform customized to fishing communities</td><td>Facilitating the inflow of population and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communities</td><td>Enhancing the vitalization of areas at the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td></tr>
<tr><td></td></tr>
<tr><td>Seminar (2018.9)</td><td colspan="4">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population cliff / local cliff</td><td>Seminar presentation / discussion</td></tr>
<tr><td>Final review (2018.11)</td><td colspan="4">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td><td>Research review (Evaluation from domestic and foreign experts)</td></tr>
<tr><td>Quality assessment (2018.11)</td><td colspan="4">Proofreading and editing</td><td>-</td></tr>
<tr><td>Complete the study (2018.12)</td><td colspan="4">Publication of the study report</td><td>-</td></tr>
</table>

2) Features

▸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in Korea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population cliff and local extinction in fishing communities, presenting policy measures to alleviate and ultimately resolve it. In particular,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other studies that it presented strategies befitt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ishing communities with specific customized policy measures.

-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awareness of population cliff and local extinction in fishing communities targeting residents of urban areas and fishing communities. The study looked into improvement measures and implementation tasks from the perspective of outsiders, meaning urban residents. Having conducted an awareness survey from the perspective of insiders targeting residents of fishing communities, this study presented implementation tasks for preventing regional problems resulting from low birth rate and super aging, as well as population from exiting.
- This study forecasts population projection and local extinction index by 2045 at the administrative units of Eup, Myeon, Do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visually presented by utilizing GIS spatial analysis.

3. Results

1) Summary

- Fishing communities are faced with extremely poor living conditions compared to cities in terms of declining population and delivery system of public infrastructure. In particular, the public infrastructure of island regions was analyzed to be very poor compared to that of fishing communities in coastal areas.

Classification		Major results	Specific contents
Demographic structure		〈Ratio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 Urban area: 13.55 · Fishing community (Eup, Myeon): 7.23 〈Aging rate〉 · Urban area: 13.62 · Fishing community (Eup, Myeon): 32.51 〈Ratio of those under 15〉 · Urban area: 12.37 · Fishing community (Eup, Myeon): 7.89	• The rate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and those under 15 in fishing communities was far low (40% level) than those in urban areas and the aging rate in fishing communities turns out to be two times higher than that of urban areas
Current status of jobs		〈Average number of workers〉 · Urban area: 526 · Fishing community (Eup, Myeon): 341 · Island region: 230	• The average number of workers in a business per 1000 people in fishing communities was 65% level of that in urban areas. The number turns out to be lower than agricultural regions.
Public infrastructure	Education facility	〈Areas with less than 10〉 · City: 96(5.03%) · Fishing community (Eup-Myeon): 164(60.52%) · Island: 32(86.49%)	• The highest ratio of education service businesses in urban areas are those with more than 100 education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more than 60% of fishing communities have less than 10 education facilities, showing education conditions are extremely poor.
	Health facility	〈Areas with less than 100 people〉 · City: 954(50.03%) · Fishing community (Eup, Myeon): 11(4.06%) · Island: 2(5.41%)	• More than 50% of urban areas have the elderly population less than 100 per one health facility, which is a stark contrast to 4% of fishing communities. Health facilities in fishing communities are poor compared to those in agricultural communities.

Classification		Major results	Specific contents
	Culture facility	〈Areas with less than 20〉 · City: 474 (24.86%) · Fishing community (Eup, Myeon): 216 (79.70%) · Island: 36 (97.30%)	• Most of fishing communities have less than 10 culture, arts and sports related service businesses for leisure activities, and the average number of facilities show big difference from that of agricultural regions.
	Convenience facility	〈Average number〉 · Urban area:39 · Fishing community (Eup, Myeon):26 ·Island region: 14	• The number of retail stores for purchasing daily necessities in fishing communities is shorter than that in urban areas, and even lower than that in agricultural areas considering island regions.

▸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policy response and the survey result of Korea's fishing communit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mid-to-long term strategy based on the forecast of local areas at the risk of extinction in coastal and fishing communities and pan-governmental measures following the prospect of declining population.
- Second, revitalization of local areas is required through innov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inflow of young workers.
- Third, it is necessary to form base areas of living service for improving the delivery system such as transport, medical treatment, welfare and culture of coastal and fishing communities. In addition, the quality of local residents' lives should be enhanced by increasing the connection with neighboring fishing communities.
- Fourth, local talents should be nurtured for the future by

specializing local schools and facilitating new migration.

- Lastly, local industries should be fostered such as the 6th Industrialization to create new jobs and added value.

▸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rapidly declining population within fishing communities, coming up with countermeasur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carried out an awareness survey targeting residents in fishing communities and cities and the result is as follows;

Classification	Major results and issues	
Survey on the awareness of residents in fishing communities	Problems of settlement conditions in fishing communities	No.1: Continuous decline in conditions of the fishery industry (51.8%) No.2: Lack of foundation for the convenience of living (30.8%) - Problems such as 'decreasing the number of young workers (the shortage of supporting labor)', 'poor fishery-based facilities' and 'limitation of expansion of the fisheries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foundation. - Women raise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foundation for the convenience of living'
	Factors affecting the leave of residents from fishing communities	No.1: Job shortage and worsening conditions of the fishery industry (81.4%) No.2: Poor public service (culture/medical treatment) (32.6%) - The elderly people raised the issue of 'the shortage of mass transportation and maritime transportation'
	Avoidance factors of young people	No.1: Job shortage and worsening conditions of the fishery industry (81.7%), No.2: Lack of education infrastructure (38.7%)

Classification	Major results and issues	
Survey on the awareness of residents in fishing communities	Problems in policy response	No.1: Lack of support policy customized to local areas (60.1%) No.1: Insufficiency in the status survey and problem diagnosis driven by local governments (40.4%)
Survey on the awareness of residents in cities	Avoidance factors for migrating into fishing communities	Depending on the possibility of migrating into fishing communities, causes of inflow/avoidance are different ① High: (prefer) emotional reason → (problem) seeking for a job that he/she wants ② Medium: (limits) lack of information → (problem) disaster risk, low pleasantness etc. ③ Low: (non-prefer) difficulties in transportation/ convenience/medical treatment and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 (suggestion) improving the public service
		Factors of not flowing into the fishing communities vary depending on gender and age bracket. - Women in their 20s~30s: lack of job information in fishing communities + difficulties in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 Men in their 20s~30s: lack of migration/living information in fishing communities + difficulties in finding a spouse - Those in their 40s: improving education infrastructure → considering family migration
	Young people's reluctance to move into fishing communities	No 1. Difficulty in seeking a job that he/she wants (63.4%), No.2: lack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public service (42.4%), No. 3: Poor education/learning conditions (40.4%) No. 4: Lack of environmental conditions of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32.0%) No. 5: Opposition from the spouse (lover) and marriage issue (25.0%)

2) Policy suggestions and relevant activities

▸ This study established implementation strategies after analyzing and reviewing population projection, status survey, awareness survey and the content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y trends. In addition, it considered the changes of policy environment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the sector of fisheries and fishing communities, governance, budget and policy impacts etc.

Four Strategies	Specific tasks	Implementation tasks
Establishing policy foundation to respond to population extinction	Legal improvements for responding population extinction	Pushing ahead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law concerning the vitalization and support for areas at the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Establishing (Tentatively named) the Special Accounting for the Support of Fishing Communities at the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Introducing the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fishing communities at the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Establishing the governance for responding population extinction and designating and operating a specialized institution	Establish 'fishing community policy division'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uilding a pan-governmental governance for responding population extinction
		Designating a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 for responding the population risk of fishing communities
	Building the system for vitalizing the population of fishing communities	Comprehensive plan for vitalizing the fishery industry and the population of fishing communities
		Implementation plans for vitalizing the population per local governments in coastal areas

Four Strategies	Specific tasks	Implementation tasks
Establishing a job platform customized to fishing communities	Strengthening the support for generating jobs in the fishery industry	Designating and operating an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jobs for the fishery industry and fishing communities
		Building an ecosystem for vitalizing jobs for the youth in the fishery industry and fishing communities
	Strengthening the matching for jobs in the fishery industry	
	Vitalization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maritime and fisheries industry 2.0	Invigorating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fishing communities
		Building the foundation for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preliminary organizations in other governmental departments
Facilitating the inflow of population and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a community	Strengthening family-friendly supports	Building a family-friendly integrated complex of the 'fishing society'
		Preferential support for the settlement of women
	Introducing the minimum standards of living services in fishing communities	Establishing the standards for living service in fishing communities per type of location and sector
		Introducing the quality of life index in fishing communities at the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and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service standards
	Building delivery system for living service customized fishing communities	Building a network for living services in fishing communities at the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Supporting a base center for living welfare in fishing communities
Enhancing the vitalization of areas at the risk of extinction	Setting up a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system for the fishing society	
	Creating the 'Smart Fishing Community'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This study carried out analysis with various methodologies to establish specific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tasks to prepare for population extinction of fishing communities. Through this effort, the study allows the government to set up relevant policies of which fishing communities are able to feel its impact. Directly facing the fishing communities'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this study intends to establish systematic countermeasures in advance. With this as a basis, fishing communities will be able to actively respond to various problems in the future.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사라진다"고 발표한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전 총무장관의 언급에 일본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1]. 최근 일본의 지방소도시와 농어촌에서 관찰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아베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도쿄 중심의 단극집중화를 방지하는 전략으로 지방창생(地方倉生, Compact + Network)'을 2014년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명[2]으로

1) 「일본 창생회의·인구감소 문제 검토분회의(2014. 5. 8.)」에서 발표된 '마스다 리포트', p. 37 참고
2) 통계청(www.kosis.kr), 인구동향조사(2017년) 합계출산율(검색일 : 2018.3.5.)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고령화율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러한 추이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인구성장이 정체되는 것에서 나아가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이탈에 따른 공동화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가임여성(20~39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역소멸 기준에 따르면, 지역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0.2 미만) 가운데 어촌지역은 2015년 기준 130개소에서 2045년 342개소로 증가할 전망이다. 즉, 50년 후 어촌의 431개 읍·면·동 중 342개소(79.4%)가 소멸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3)]

어촌사회의 소멸이 야기할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역적 이슈뿐만 아니라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가치 측면에서도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어촌사회의 소멸 또는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면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 해양영토의 감시·경계, 해난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등이 더 이상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촌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귀어·귀촌과 같이 도시 거주자를 단순히 어촌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는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기피요인과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청장년층이 어촌을 '살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촌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전략은 젊은 세대에게 어촌을 매력적인 정주공간이자 미래 희망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시켜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찾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 3장, 71p 인용

제2절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어촌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에 따른 지역의 실태와 문제 진단, 그리고 향후 미래 전망을 통해 어촌의 인구이탈 방지와 외부에서 어촌으로의 인구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등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그 세부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쇠퇴에 따른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어촌사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둘째, 어촌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젊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해양수산부 및 연안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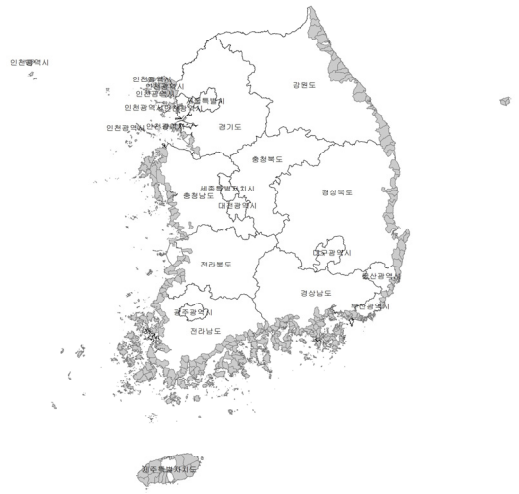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1) 연구범위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 중 내수면 지역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연구범위는 '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해면의 읍·면 전지역과 동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범위



〈연구범위〉
- 읍·면지역 : 267개소
- 동지역 : 183개소

〈입지유형별 분류〉
- 도시형어촌 : 183개소
- 연안촌락형어촌 : 230개소
- 도서형어촌 : 37개소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주요내용

이 연구는 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가 미래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어촌의 지방소멸 실태와 미래 전망에 따른 대응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지자체의 어촌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부터 제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추진배경과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수행체계,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을 담고 있다. 선행연구는 2014년 일본의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수행되었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성이

있는 8개 선행연구의 문제진단과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어촌지역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다루는 국내 최초의 연구이며, 어촌지역 지방소멸에 대한 내·외부자의 인식도 조사, 읍·면 단위 인구추계 전망과 공간통계분석 등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 검토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개념과 원인, 어촌사회에 직면할 정책적 이슈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어촌사회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따른 실태조사와 미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어촌사회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실태조사의 관점에서 인구와 지역산업, 공공서비스 등의 수준이 농촌·도시지역 대비 상대적 열위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소멸지수 분석과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향후 2065년까지 장기적인 어촌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 관련 정책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사회보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해외사례의 정책을 검토하고, 국내의 정책방향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어촌사회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도시민과 지역주민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도시민 인식조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어촌주민의 이탈요인 및 진입장애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외부인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소멸 위험성이 높은 지역주민에게는 전화설문과 대면 조사방식을 병행하여 지방소멸의 원인을 정주환경, 산업기반, 환경, 문화·공동체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이

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6장 대응전략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6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5장에서 검토·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어촌의 인구소멸 대응전략의 방향과 전략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전략은 크게 ⅰ) 인구소멸 대응 정책기반 마련, ⅱ) 어촌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ⅲ) 인구유입 촉진 및 커뮤니티 기반 강화, ⅳ) 인구소멸 위험지역 활력 제고를 중심으로 11대 전략과제와 2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어촌사회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주요과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에 정책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 논문, 저서 등 각종 문헌자료를 살펴보았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인구소멸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일반국민과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인식도를 살펴보았다. 동 설문조사의 결과는 어촌사회의 외부자와 내부자의 시각에서 제5장 대응전략과 제6장 정책제언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였다.

(1) 어촌 이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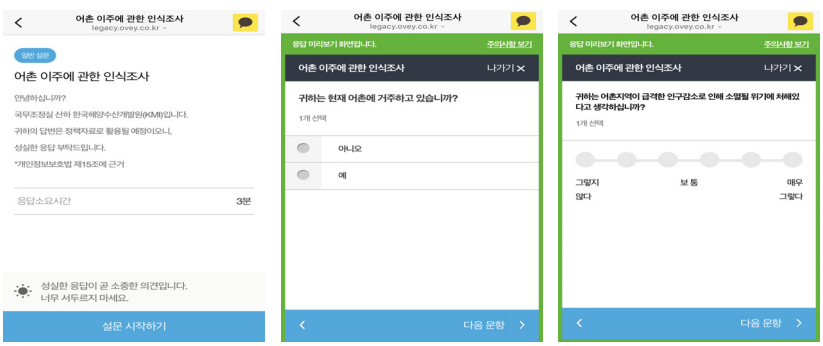
가. 조사내용

「어촌 이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는 어촌 이주에 대한 의사, 이주 의사에 따른 결정요인과 기피요인, 어촌 이주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등 19개 문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민을 대상으로 어촌 이주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와 젊은 청년층이 어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설문결과는 어촌사회에 대한 외부자의 인식이 어떠한지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나. 조사방법

본 설문조사는 스마트폰 앱(오픈서베이[4])을 통한 방식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5일 간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림 1-2〉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설문조사



동 조사는 사전에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조사방식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모바일 앱

4) 오픈서베이(www.opensurvey, 모바일을 통한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

에 직접 응답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이 직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어촌 인구소멸지역 지역주민의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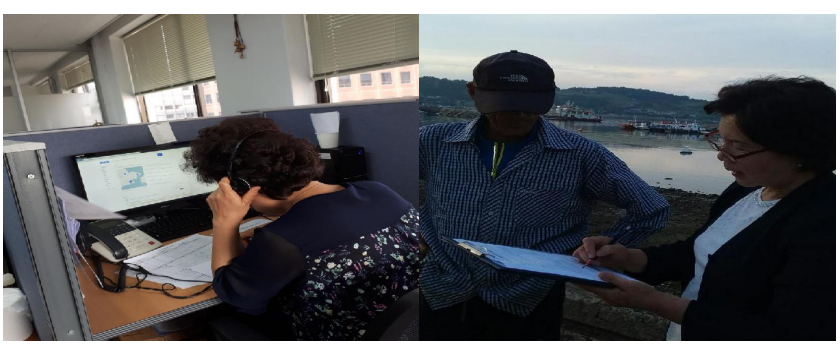
가. 조사내용

「어촌 인구소멸지역 지역주민의 인식조사」는 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부자의 시각에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동 조사는 지역소멸지수가 높은 어촌의 입지유형별(연안촌락형, 도서형)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어촌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조사방법

본 설문조사는 전화조사와 현장 대면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10일 간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는 특히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촌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설문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3〉 전화설문 및 조사원 현장 대면조사



주: 저자 촬영(촬영일자 : 2018년 6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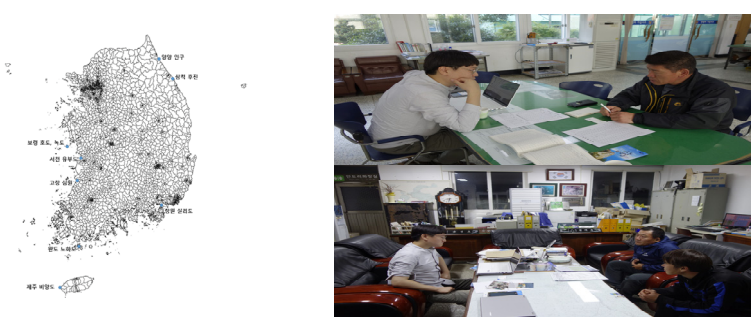
3) 국내외 현장조사

본 연구는 어촌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방소멸에 대응한 선진국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이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1) 국내 현장조사

국내 현장조사는 어촌의 읍·면·동 기준으로 지방소멸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진들이 어촌지역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행정기관(시·군청, 읍·면사무소), 어촌계, 마을주민 인터뷰와 현장실사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사회의 지역여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연안촌락의 어촌지역 보다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 서·남해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섬 지역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1-4〉 현장 조사지역 및 인터뷰 조사



주: 저자 촬영(촬영일자 : 2018년 5월 8일 ~ 5월 31일)

(2) 국외사례 현장조사

해외의 지방소멸에 대응한 정책동향과 사례조사는 일본 정부부처(내각부, 총무성, 국토교통성, 수산청 등)를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지방창생, 과소지역 대책, 농어업 6차산업화 등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창생 전략의 성공사례로 시마네현(島根県)의 아마쵸(海士町) 현장조사에서 소거점화, 6차산업화, 매력 있는 지역학교 만들기 등 몇 가지 의미 있는 정책들을 벤치마킹 하였다.

한편 중간심의 이후에는 유럽연합의 농어촌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C.L.L.D,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 정책동향과 국가별 성공적인 지역사례를 살펴보았다.

4) 인구추계 모형

본 연구에서는 어촌지역 450개소 읍·면·동에 대해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10,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Hamilton-Perry 인구추계 모형을 통해 2065년까지 인구를 추계하였다. 이 모형은 두 센서스 간의 연령별 변화율(코호비 변화비, cohort-change ratio)이 차년도 센서스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것으로 연령별 변화율(CCR)을 우선적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_nCCR_x = \frac{{}_nP_{x+y,l}}{{}_nP_{x,b}} $$ 5)

어촌지역의 장래인구 추계방법은 가장 최근 두 시점의 인구조사로부터 어린이-여성비율(child-woman ratio, CWR)을 구하고 이를 추정시점의 여성인구(15~39세)를 곱해주어 계산하며, 추계의 정확성을

5) ${}_nP_{x+y,l}$은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시점(l)에 집계된 $x+y$부터 $x+y+n$ 연령대의 인구수이고, ${}_nP_{x,b}$는 두 번째로 가까운 인구조사시점(b)에 집계된 x에서 $x+n$연령대의 인구수이며, y는 두 인구조사시점간의 연도차이임

높이기 위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여기에서 FP와 MP는 각각 여성인구수와 남성인구수를 나타내며, l은 기준이 되는 인구조사 년도, t는 추계시점을 의미한다.

$$FP_{0\sim4,t} = \frac{FP_{0\sim4,l}}{FP_{15\sim49,l}} \times FP_{15\sim49,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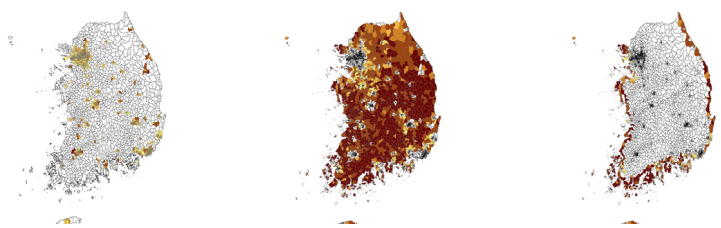
$$MP_{0\sim4,t} = \frac{MP_{0\sim4,l}}{FP_{15\sim49,l}} \times FP_{15\sim49,t}$$

5) 공간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촌사회의 지방소멸에 따른 지역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공간통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공간통계 분석은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읍·면·동 행정구역도와 지방소멸 관련 통계자료(총인구수, 15세 미만 유소년인구수, 가임여성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보건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를 확보하여 이를 도시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간에 비교하여 살펴하고, 특히, 어촌지역 내 입지유형별로 분석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1-5〉 공간통계분석 적용 사례

〈도시지역 소멸지수〉 〈농촌지역 소멸지수〉 〈어촌지역 소멸지수〉



주: 저자 작성

〈그림 1-6〉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table>
<tr><th>연구공정</th><th>연구내용</th><th>연구방법</th></tr>
<tr><td>착수워크숍
(2018.1)</td><td>연구방향 설정</td><td>연구진 워크숍</td></tr>
<tr><td>1차
진도보고
(2018.4)</td><td>인구절벽/지방소멸 이론적 검토</td><td>문헌조사
자문회의</td></tr>
<tr><td rowspan="7">중간심의
(2018.6.15)</td><td>인구절벽/지방소멸 전망 및 실태분석</td><td rowspan="2">공간통계분석
인구추계 전망
국내외 현장조사
어촌사회 설문조사
(지역주민/도시민)</td></tr>
<tr><td>인구추계 전망 / 실태조사 / 인식도 조사</td></tr>
<tr><td>선진사례 조사 및 시사점</td><td>현장조사</td></tr>
<tr><td>종합분석 및 기본방향</td><td rowspan="4">연구심의
(내외부 전문가 평가)</td></tr>
<tr><td>추진전략 및 과제</td></tr>
<tr><td>인구소멸 대응 정책 기반 마련 / 어촌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 인구유입 촉진 및 커뮤니티 기반강화 / 인구소멸 위험지역 활력제고</td></tr>
<tr><td></td></tr>
<tr><td>세미나
(2018.9)</td><td>인구절벽/지방소멸 대응전략 마련</td><td>세미나 발표 / 토론</td></tr>
<tr><td>최종심의
(2018.11)</td><td>결론 및 정책제언</td><td>연구심의
(내외부 전문가 평가)</td></tr>
<tr><td>품질평가
(2018.11)</td><td>보고서 교정 및 편집</td><td>-</td></tr>
<tr><td>연구완료
(2018.12)</td><td>보고서 발간</td><td>-</td></tr>
</table>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지역쇠퇴 요인과 문제점을 다루었던 선행연구에서는 어촌 지방소멸지역의 진단과 정주환경, 산업기반, 공동체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방안으로는 지역발전정책, 지방분권, 공공서비스 등 정책과제 발굴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소멸에 대비한 전략과 정책과제 도출의 방향성 설정에 활용하였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진단 관련 연구

박승규·이제연(2017)는 인구감소지역을 구분해 내기 위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선정된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표는 인구부문(인구감소율, 노령인구비율)에 기초하여 인당 주민세, 재정자립도 등을 보정하여 대안별로 제시하였다.

이제연·박진경(2016)는 전국 유인도서 인구자료를 활용하여 조성법을 통해 인구추계로 향후 무인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정하였다. 이 연구는 무인도서 발생을 억제하고 도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정책대안의 구체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섬 지역으로 한정되어 연안·어촌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인구감소지역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강미나 외(2017)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빈집 발생원인을 탐색하고 현상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빈집의 예방,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빈집 관리의 원칙, 빈집관리 추진체계, 빈집조사 및 DB 관리, 주체별 역할, 빈집 정비사업 추진 및 각종 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원규·황원식(2017)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저출산·고령화가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이론적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1-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진단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구 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 연구자 : 박승규·이제연(2017) • 연구목적 : 지역구분 기준에 대한 사전적인 선행연구를 파악하고, 지정기준 설정안 제시	• 문헌조사 • 사례분석 • 인구추계	• 지역구분 기준의 문제점 제시 • 지정기준 수립 고려 요소 파악 • 지정기준 설정안 제시 • 지정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 대안별 장단점 및 향후 방향 제시
	2	• 과제명 :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연구자 : 이제연·박진경(2016) • 연구목적 : 전국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인구추계와 인구유입 방안 및 섬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 문헌조사 • 인구추계	• 도서지역 인구현황 분석 • 도서인구 추계 분석 • 지속가능한 도서인구 정책 방안
	3	• 과제명 :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 연구자 : 강미나 외(2017) • 연구목적 : 빈집의 정의, 현행 법제도, 외국의 빈집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빈집의 발생원인에 따른 정비방안 마련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계량분석 • 설문조사 • 현장조사	• 빈집 현황과 관련 법제도 검토 • 외국의 빈집관리 정책 • 빈집 실태에 관한 사례 분석 •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제안

구 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4	• 과제명 :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정책시사점 • 연구자 : 김원규 외(2017) • 연구목적 : 저축산·고령화가 우리 산업 및 지역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문헌조사 • 실증분석	• 저출산·고령화 관련 기존 연구 검토 • 저출산·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분석 • 연령대별 고용비중과 생산성·임금 간의 관계 분석

2. 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응한 정책방안 관련 연구

기정훈(2011)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를 통해 시·군·구 수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들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례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감소의 주요요인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입법적 과제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박진경·김선기(2017)외 는 국토공간, 균형발전, 인구사회 등 한국의 지역발전 관련 정책분석과 일본 지방창생, 국제기구의 포용적 지역발전정책 등 외국의 지역발전정책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인구감소시대에 따른 지역발전정책으로 사업구조를 인구구조변화 대응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균형발전사업과 정부의 컨트롤타워 재편을 제시하였다.

이병기(2017)는 일본 사례와 한국 기초자치단체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속가능성 확보 대책으로 지자체의 정책적 자율성 부여, 표준화된 지원체계 구축, 생애주기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자체의 기초인프라 확충 등 생활환경여건 개선으로 연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등을 제시하였다.

박상헌 외(2017)는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강원도 지역사회 전반의 인구, 고용, 산업, 삶의 질 여건 등 지표를 검토하고, 강원도 시·군 및 읍·면·동에 대한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소멸 위험지역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정책 실현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1-2〉 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응한 정책방안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구 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쇠퇴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연구자 : 기정훈(2011) • 연구목적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설정하고, 사례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감소의 주요요인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입법적 과제	• 문헌조사 • 현장조사 • 면담조사 • 설문조사	•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의 및 지역쇠퇴의 문제점 • 인구감소지역군과 인구증가 지역군 간 비교분석 • 인구감소지역 설문조사 •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입법과제
	2	• 과제명 :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 연구자 : 박진경 외(2017) • 연구목적 :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인구감소시대에 장기적으로 가능한 지역발전정책과 정책의 종합적 추진체계 마련	• 문헌조사 • 자문회의(워크숍)	• 한국 인구구조 및 지역정책 환경변화 • 한국의 지역발전 관련 정책분석 • 외국의 지역발전정책 트렌드 •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체계 개편방안
	3	• 과제명 :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 연구자 : 이병기(2017) • 연구목적 : 인구감소 변화가 뚜렷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모색	• 문헌조사 • 면담조사 • 사례조사	•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 검토 • 일본 인구과소지역 대응사례 • 지자체 사례분석 •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구 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4	• 과제명 : 강원도 인구구조 분석과 지역소멸 대응 방안 • 연구자 : 박상헌 외(2017) • 연구목적 : 강원도 시군 및 읍·면·동 지역별 인구 현황분석과 지역소멸 대응 방안 마련	• 문헌조사 • 공간통계 분석 • 인구추계	• 강원도 인구구조 및 사회지표 분석 • 강원도 장래인구 예측 및 소멸위험지역 분석 • 지역소멸 대응 해외사례 분석 • 지역소멸 가능성에 따른 대응 방안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어촌지역의 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한 최초의 연구

이 연구는 공간적으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실태파악과 이를 완화·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하는 연구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어촌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실태를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과 비교하고, 어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과 세부적인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2) 어촌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내·외부 시각에 대한 접근

이 연구에서는 어촌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도시지역과 어촌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각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이는 도시민에게 새로운 일터와 삶터로서 어촌의 한계요인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추진과제를 외부자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어촌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문제와 어촌이탈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정책을 내부자 인식조

사 차원에서 질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3) 인구소멸에 대한 읍·면·동 단위의 인구추계와 공간통계분석

이 연구에서는 읍·면·동의 행정구역 단위로 2065년까지 인구추계와 지역소멸지수 등을 전망하고, 그 분석결과에 대해 GIS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제 2 장

인구소멸 개념 및 어촌사회 정책 이슈

제1절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 현상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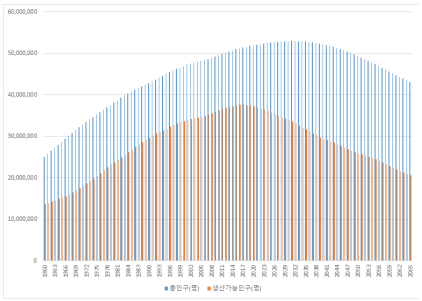
1. 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한 정의

1) 인구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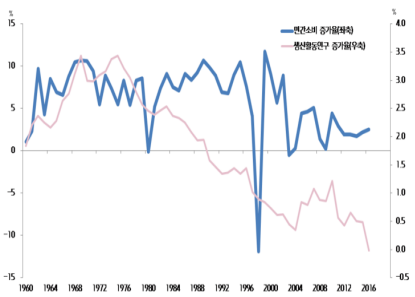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2014년 저서 「The Demographic Cliff」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한 사회 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다 협의적인 개념으로는 소비력이 가장 높은 45~49세 중년층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소비위축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설명하고 있다.

〈그림 2-1〉 인구절벽 개념

〈생산가능인구 추이〉



〈생산가능인구와 민간소비 관계〉



자료: www.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2018.3.5.)

2) 지방소멸

일본의 관료(官僚)이자 정치가인 마스다 히로야(增田 寬也)는 일본사회의 인구감소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일본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사회에 경각심을 일으켰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토의 장기전망(2011년)」 보고서에서 2050년에는 일본 전 국토의 60% 이상이 지금보다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며, 사람이 살지 않는 무거지(無居地)가 1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방소멸은 고령인구에 비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이 낮아져서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마침내 지역이 소멸한다는 개념이다.[6] 이는 가임기(20~39세) 여성의 인구변화 등 '재생산력'의 관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6) 안성조, 지방소멸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경북신문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188648)

〈표 2-1〉 선행연구의 지방소멸 지역에 대한 지표 및 적용

구분		자료	대상	지표	비고
2014년	마스다 히로야	장래 인구추계	인구	20~39세 여성인구 감소율	• 소멸가능성 높은 지자체896개 • 소멸위험성 높은 지자체 523개
2016년	이상호	주민등록 행정인구	인구	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노인인구	• 소멸위험지역 79개
2016년	박승규 김선기	인구주택 총조사 (2015)	인구	인구변화, 가임기 인구변화. 고령인구변화, 주민세	• 인구감소 안정지역, 인구감소 검토지역, 인구감소 신중검토지역,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구분 • 인구감소 위험지역에는 시지역 5개, 군지역 39개, 구지역 13개
2017년	유선종 노민지	인구주택 총조사 (2015)	인구	노인인구(65세이상) ÷ 가임기 여성인구(20~39세)	• 소멸가능지역, 소멸위험지역, 도시재상 및 농촌정비가 시급한 지역, 빈집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구분
			가구	노인가구(65세이상) ÷ 청·중년가구(20~54세)	
			주택	노후주택(40년 초과) ÷ 신규주택(5년 이하)	

자료: 유선종 외,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 ?」, 매일경제신문사, 2018,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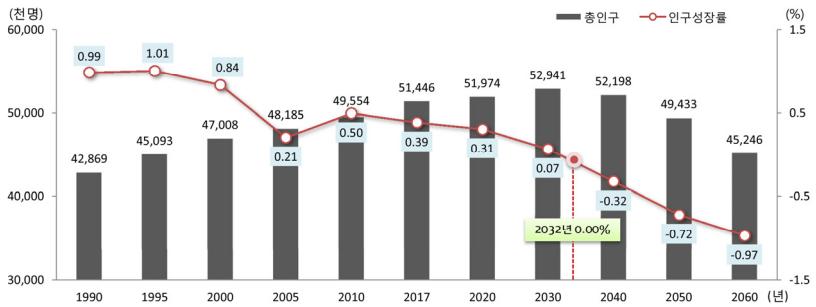
2. 인구절벽·지방소멸의 원인

1) 인구구조 변화

(1) 인구 성장률 정체 및 감소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은 1995년 1.01%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0.39%로 나타났다. 그 이후 인구추계 전망에 따라 2032년에 인구 성장률 0% 이후 2060년에는 -0.97% 추계되었다.

〈그림 2-2〉 총인구와 인구 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www.kosis.kr, 장래인구추계(검색일: 2018.3.5.)

(2)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표 2-2〉와 같이 2017년 73.1%에서 인구 성장률이 0% 수준으로 떨어지는 2032년에는 62.5%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그 이후에 더욱 감소하여 2040년 56.4%, 2050년 52.4%, 2060년 49.6%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중위연령은 2000년 31.8세에서 2017년 42.0세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2032년 49.8세, 2060년 58.9세로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2-2〉 생산가능인구 추이와 전망

(단위 : 천명,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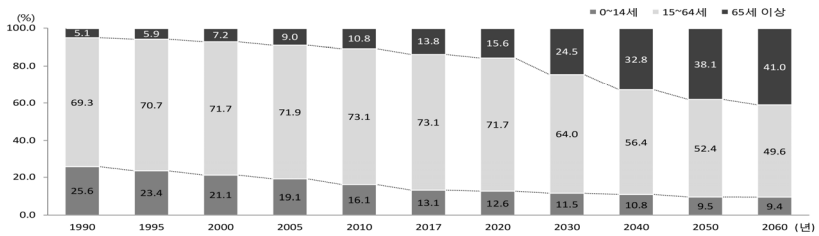
구분	총인구	인구 성장률	중위연령	비고		
				0~14세	생산가능인구 (15~64세)	65세 이상
2000년	47,008	0.84	31.8	21.1	**71.7**	7.2
2010년	49,554	0.50	37.9	16.1	**73.1**	10.8
2017년	51,446	0.39	42.0	13.1	**73.1**	13.8
2020년	51,974	0.31	43.6	12.6	**71.7**	15.6
2032년	52,956	0.00	49.8	11.5	**62.5**	26.1

(단위 : 천명, %, 세)

구분	총인구	인구 성장률	중위연령	비고		
				0~14세	생산가능인구 (15~64세)	65세 이상
2040년	52,198	-0.32	53.0	10.8	**56.4**	32.8
2050년	49,433	-0.72	56.4	9.5	**52.4**	38.1
2060년	45,246	-0.97	58.9	9.4	**49.6**	41.0

자료: www.kosis.kr, 장래인구추계(검색일: 2018.3.5.)

〈그림 2-3〉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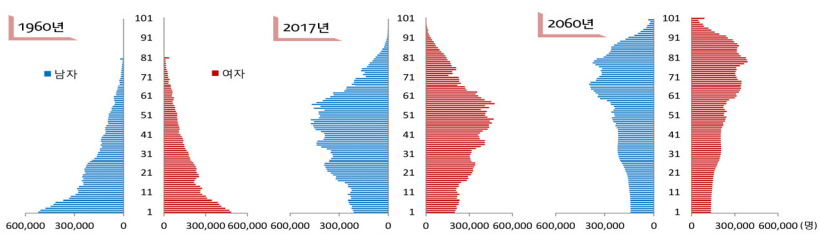


자료: www.kosis.kr, 장래인구추계(검색일: 2018.3.5.)

(3) 연령 구조

연령 구조는 인구규모가 증가하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소년 인구(15세 미만)의 아랫부분이 두터운 형상에서 인구절벽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윗부분이 두터운 모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4〉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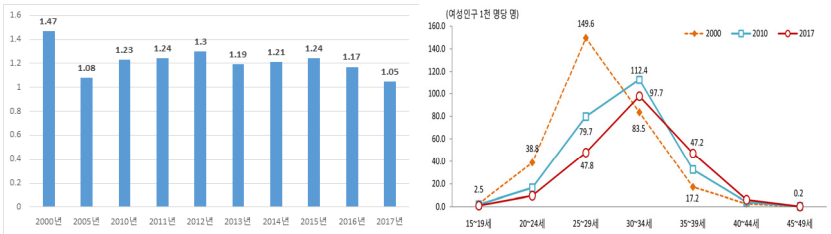
자료: www.kosis.kr, 장래인구추계(검색일: 2018.3.5.)

2) 초저출산 시대로의 진입

(1) 초저출산 현상

한국사회는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으로 낮아지는 초저출산 현상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합계추산율의 감소는 20대 가임 여성의 출산력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합계출산율 및 연령대별 출산율 현황



자료: www.kosis.kr,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검색일: 2018.3.5.)

〈표 2-3〉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

(단위 : 명, %)

구분	연령대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0년	2.5	38.8	149.6	83.5	17.2	2.5	0.2	1.47
2005년	2.1	17.8	91.7	81.5	18.7	2.4	0.2	1.08
2010년	1.8	16.5	79.7	112.4	32.6	4.1	0.2	1.23
2011년	1.8	16.4	78.4	114.4	35.4	4.6	0.2	1.24
2012년	1.8	16.0	77.4	121.9	39.0	4.9	0.2	1.30
2013년	1.7	14.0	65.9	11.4	39.5	4.8	0.1	1.19
2014년	1.6	13.1	63.4	113.8	43.2	5.2	0.1	1.21
2015년	1.4	12.5	63.1	116.7	48.3	5.6	0.2	1.24
2016년	1.3	11.5	56.4	110.1	48.7	5.9	0.2	1.17
2017년	1.0	9.6	47.8	97.7	47.2	6.0	0.2	1.05

(단위 : 명, %)

구분	연령대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연평균 증감율	-5.0	-7.5	-6.1	0.9	5.8	5.0	0.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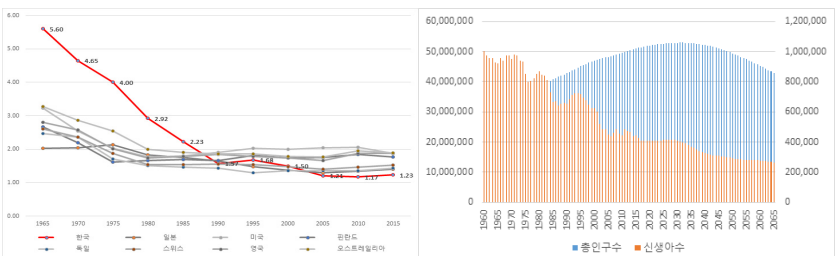
주: 해당 연령 여성인구 1천명 당 출생아수

자료: www.kosis.kr,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검색일: 2018.3.5.)

(2) OECD 국가들의 출산율

한국사회는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합계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 1965년 합계출산은 5.60명에서 2015년 1.2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후에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6〉 합계출산율 및 연령대별 출산율 현황



자료: www.kosis.kr,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검색일: 2018.3.5.)

3) 고령화

(1) 고령인구의 증가

가. 고령화율

한국사회는 2017년 기준 65세 이상의 인구가 7백만 명을 넘어 고령화율이 13.8%로 나타났고, 그 이후 2030년 경에는 고령사회, 2040년 이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를 유소년(0~14세) 인구와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각각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값이 높을수록 고령사회로 볼 수 있다.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는 2017년 기준 104.8, 18.8에서 2060년에는 각각 434.6, 82.6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고령화율 추이와 전망

(단위 : 천명, %, 100명당 명)

구분	총인구(A)	65세 이상(B)	고령화율 (B/A)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1990년	42,869	2,195	5.1	20.0	7.4
2000년	47,008	3,395	7.2	34.3	10.1
2010년	49,554	5,366	10.8	67.2	14.8
2017년	51,446	7,076	13.8	104.8	18.8
2020년	51,974	8,134	15.6	123.7	21.8
2030년	52,941	12,955	24.5	212.1	38.2
2040년	52,198	17,120	32.8	303.2	58.2
2050년	49,433	18,813	38.1	399.0	72.6
2060년	45,246	18,536	41.0	434.6	82.6

주: *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자료: www.kosis.kr, 장래인구추계(검색일: 201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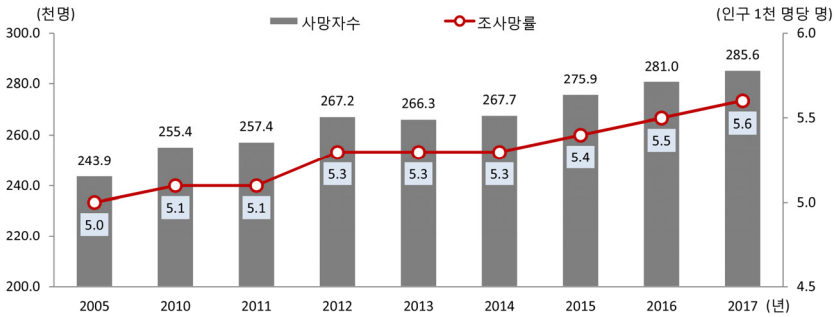
(2) 조사망률[7] 증가

우리나라 사망자수는 198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2017년 28만 6천명으로 최대치로 나타났고, 조사망률도 2005년 5.0명에서 2017년 5.6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률

7) 조(組)사망률은 인구 1천 명당 사망자수를 말함

은 증가하지만 50대 이상에서 연도별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7〉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 추이



자료: www.kosis.kr,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검색일: 2018.3.5.)

〈표 2-5〉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 현황

(단위 : 천명, 인구 1천 명당 명)

	전 체		성별			연령별							
	사망자수	조사망률	남성	여성	사망률 성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005	243.9	5.0	5.5	4.5	1.22	0.5	0.2	0.5	1.0	2.4	5.1	12.5	53.2
2010	255.4	5.1	5.7	4.5	1.26	0.4	0.2	0.5	0.9	2.0	4.2	9.7	45.0
2011	257.4	5.1	5.7	4.6	1.25	0.4	0.2	0.5	0.8	1.9	4.1	9.2	43.9
2012	267.2	5.3	5.9	4.8	1.23	0.4	0.2	0.5	0.8	1.8	3.9	8.7	44.4
2013	266.3	5.3	5.8	4.7	1.22	0.4	0.2	0.4	0.8	1.7	3.8	8.2	42.2
2014	267.7	5.3	5.8	4.7	1.22	0.4	0.2	0.4	0.8	1.7	3.7	7.8	41.1
2015	275.9	5.4	5.9	4.9	1.20	0.4	0.2	0.4	0.7	1.6	3.5	7.6	41.8
2016	281.0	5.5	6.0	5.0	1.19	0.4	0.2	0.4	0.7	1.5	3.5	7.4	41.4
2017	285.6	5.6	6.0	5.1	1.2	-	0.2	0.4	0.7	1.5	3.3	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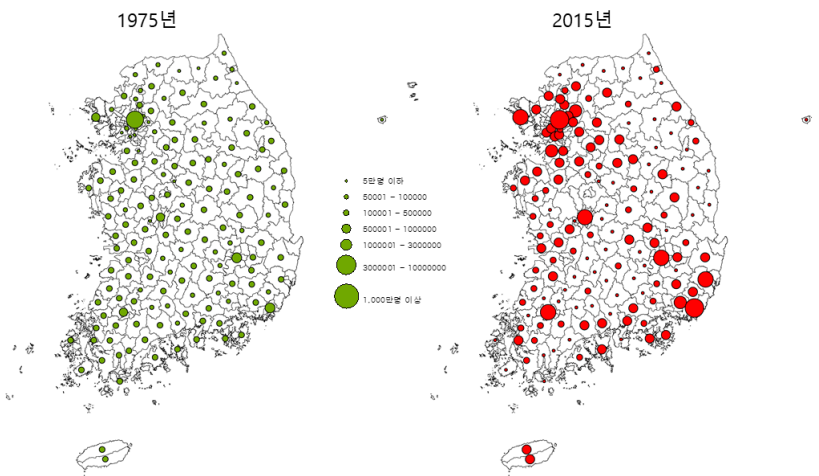
자료: www.kosis.kr,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검색일: 2018.3.5.) ;
www.kosis.kr, 2017년 출생·사망통계(잠정)(검색일: 2018.3.5.)

4) 지역 간 인구 불균형

(1) 도시로의 이주

〈그림 2-8〉은 1975년과 2015년의 지역별 인구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농어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일자리, 소득,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삶의 질 여건에 따른 것으로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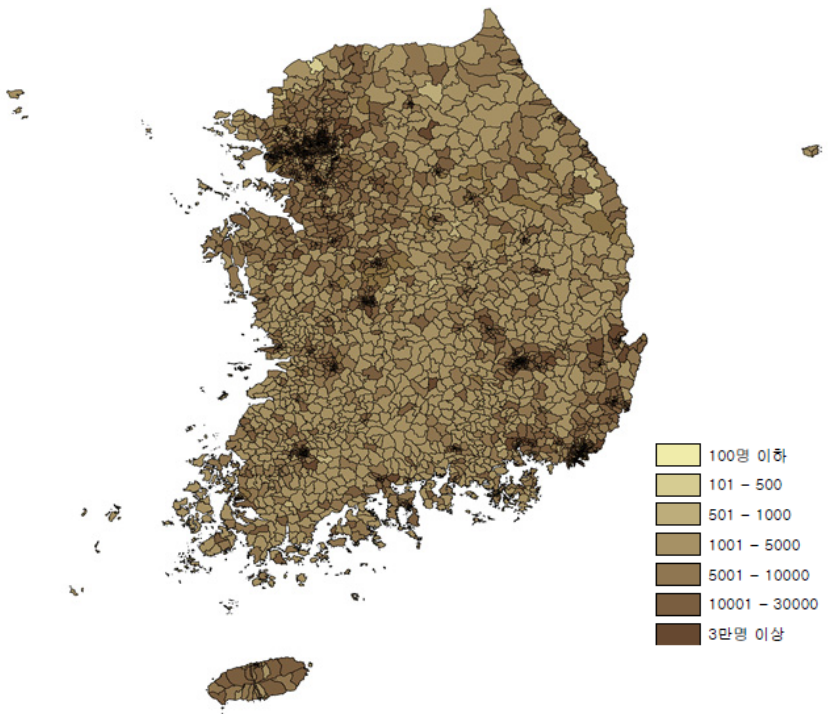
〈그림 2-8〉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자료: www.kosis.kr, 인구주택총조사(검색일 : 2018.3.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특히,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농어촌으로부터 인구유입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지역으로 인구이동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9〉 읍면동 인구규모 분포



자료: www.kosis.kr, 인구주택총조사(검색일 : 2018.3.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가임기(20~39세) 여성의 농어촌 기피

우리나라 여성 인구수는 2010년 기준으로 2천 414만 9,865명으로 이중 20~39세의 가임기 여성은 전체의 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인구수는 1천 980만 4,504명이며, 이 가운데 가임기 여성이 611만 6,472명(30.9%)으로 나타났다.

전체 20~39세의 가임기 여성인구는 총 703만 4,058명으로 이 중 87%인 611만 6,472명이 동지역에 거주하고, 읍지역 54만 4,305명(7.7%), 면지역 37만 3,281명(5.3%)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이 농어

촌 보다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임기 여성이 도시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교육환경과 일자리 기회, 삶의 질 여건 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2-6〉 가임기 여성의 도시 및 농어촌지역 분포

(단위 : 명, %)

구분	여성 인구수 (A)	가임기(20~39세) 여성인구수(B)	비율 (B/A)
합계 (비율)	24,149,865	7,034,058 (100.0)	29.1
동부 (비율)	19,804,504	6,116,472 (87.0)	30.9
읍부 (비율)	2,063,152	544,305 (7.7)	26.4
면부 (비율)	2,282,209	373,281 (5.3)	16.4

자료: www.kosis.kr, 총조사인구(검색일: 2018.3.5)

제2절 인구소멸에 따른 어촌사회 정책 이슈

1. 예상되는 문제점

1) 지역경제 침체

(1) 어가인구 및 고령화

가. 어가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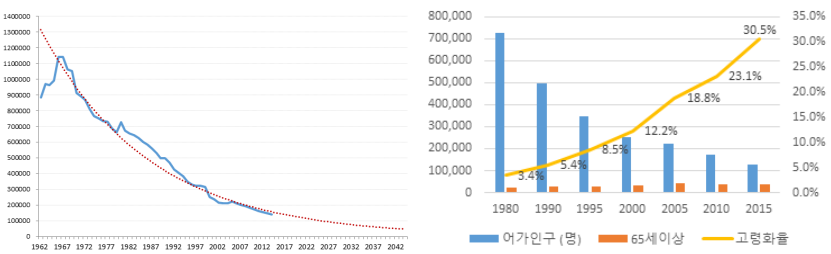
우리나라 어가인구는 1967년 114만 2,761명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19만 2,341명으로 20만 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에는 13만 명 미만으로 향후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어업기반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나. 고령화율

어촌사회의 고령화율은 1980년 3.4%에서 2010년에는 23.1%, 2015년 30.5%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사회는 지금처럼 신생아 출생이 저조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신규인력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령화율은 급속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0〉 어가인구 및 고령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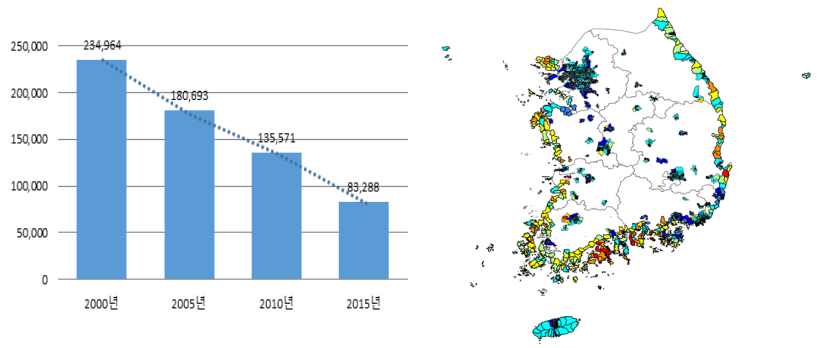


자료: www.kosis.kr, 어업총조사(검색일: 2018.3.5.)

(2) 농어업 청장년 인구감소에 따른 구인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청·장년의 인구수는 2000년 23만 4,956명이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8만 3,288명으로 나타나 2000년 대비 1/3 규모로 급감하였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청장년의 인구규모는 정책환경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농·어촌 현장에서 종사할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1〉 1차 산업 청장년 인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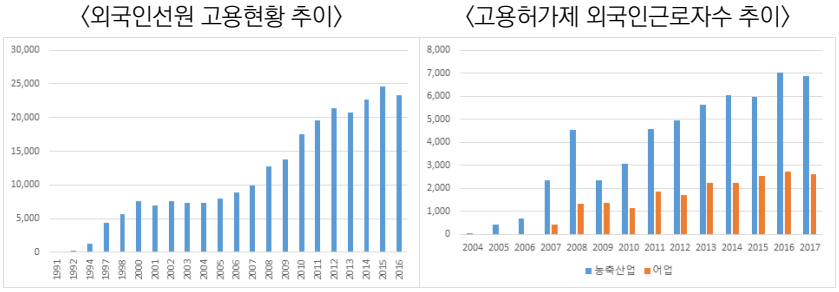


자료: www.kosis.kr, 농어업총조사(검색일: 2018.3.5.)

농어촌 현장에서 청장년 인구의 감소로 외국인근로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선원 고용현황과 농축산업 및 어업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2〉 1차 산업 청장년 인구추이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추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수 추이〉



자료: www.kosis.kr, 한국선원통계(검색일: 2018.3.5.) ; www.kosis.kr, 고용허가제 고용동향(검색일: 2018.3.5.)

(3) 수산업 위축

가. 어선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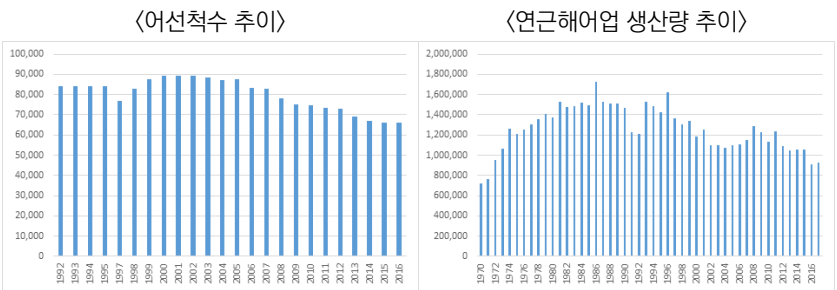
인구감소에 따른 수산업의 위축은 어선의 감소추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어선감소는 수산자원과 연계되어 있으나 신규 어업경영

자의 진입이 미흡한 상황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인력부족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어선척수는 감척사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연근해어업 생산량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5년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어업생산량 감소는 어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잡는 어업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어업환경이 어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기르는어업으로 전환 이후 양식산업 중심으로 수산업 환경은 전환되고 있다.

〈그림 2-13〉 어선척수 및 연근해어업 생산량 현황



자료: www.kosis.kr, 등록어선통계(검색일: 2018.3.5.) ; www.kosis.kr, 어업생산동향(검색일: 2018.3.5.)

다. 열악한 어업작업 환경

어업활동을 위한 작업환경은 일부 기계화와 작업환경이 개선이 되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여건으로 어업재해에 따른 사망·상해 등 어업재해율은 5.56%로 전산업 중 가장 높은 위험한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업재해율은 농업 0.9%, 건설업 0.7%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업인력 손실은 매년 20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업재해의 주요요인은 기계

적 요인과 동일한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숙련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신규 어업인이 어업재해에 취약하다. 이러한 어업작업 환경은 어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그림 2-14〉 열악한 어업작업 환경 실태

〈어업재해율〉



〈미숙련자 및 외국인근로자 재해율〉



〈어업작업의 반복된 재해 비율〉



〈어업재해 주요 요인〉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작업 안전재해 거버넌스 구축 및 과제발굴 연구』, 2017, p.73의 내용을 재구성함

2) 유휴공간 증가

(1) 빈집

가. 빈집 현황

읍·면지역의 빈집은 1995년 16만 384호에서 2016년 42만 5,788호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의 노후화는 2016년 기준으로

읍지역 3만 3,552호, 면지역 17만 9,628호로 면지역에서 약 5.4배 더 많았다. 읍·면지역에서 10년 미만의 빈집은 6,056호인 반면에 50년 이상의 빈집은 12만 7,014호로 60% 이상이 노후화된 빈집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지역에서는 50년 이상 노후화된 빈집이 2만 0,909호로 62.3%, 면지역은 10만 6,105호로 면 전체의 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읍면지역 빈집 현황



자료: www.kosis.kr, 인구주택총조사(검색일: 2018.3.5); 저자 촬영(2018.4.20.)

(2) 폐교

가. 시·도별 폐교 현황

연안 11개 시도의 폐교학교수는 2018년 3월 기준으로 총 3,440개이며, 전남 816개소, 경북 714개소, 경남 564개소, 강원 454개소, 전북 32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폐교학교 가운데 민간에 매각된

폐교는 2,184개소(63.5%), 이 중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폐교도 373개소(10.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별로 미활용 폐교는 전남 118개소, 경남 75개소, 경북 69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전국에 1,242개소로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은 200개소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표 2-7〉 시도교육청별 폐교재산 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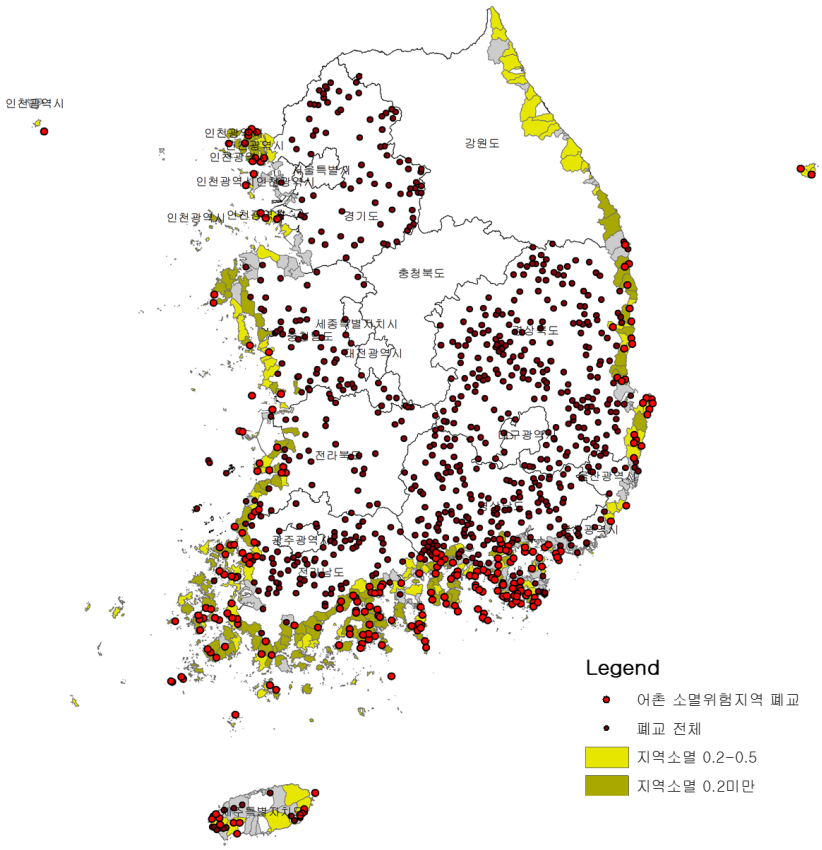
시도 교육청	폐교학교수	매각폐교	보유폐교				
			활용폐교			미활용 폐교 (B)	계 (A+B)
			대부 (임대)	자체활용	계(A)		
부산	36	13	1	16	17	6	23
인천	54	38	4	6	10	6	16
울산	25	9	3	10	13	3	16
경기	161	57	55	35	90	14	104
강원	454	222	175	17	192	40	232
충남	261	198	15	16	31	32	63
전북	323	269	10	38	48	6	54
전남	816	598	57	43	100	118	218
경북	714	457	129	45	174	69	243
경남	564	319	125	45	170	75	245
제주	32	4	24	-	24	4	28
계	3,440	2,184	598	271	869	373	1,242

자료: http://www.eduinfo.go.kr/portal/theme/abolSchStatusPage.do(검색일: 2018.3.5.)
내용을 재구성

나. 어촌지역 내 폐교현황

어촌지역 내 폐교는 총 245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2미만 지역에서는 130개소, 0.2이상 0.5미만의 지역에서는 115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6〉 어촌 지방소멸 위험지역 내 폐교현황



자료: http://www.eduinfo.go.kr(검색일: 2018.3.5.)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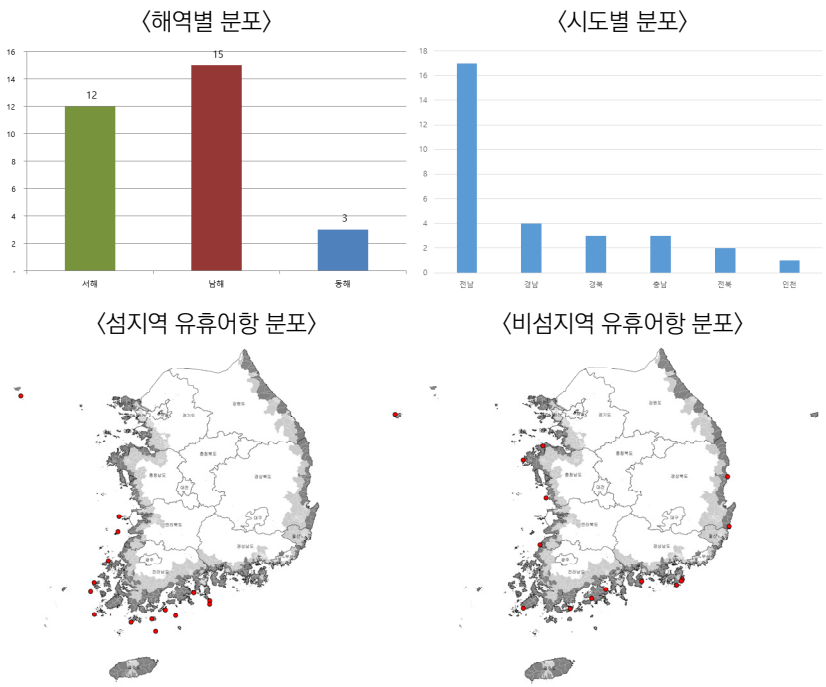
(3) 유휴어항(부지 및 시설)

가. 유휴어항 분포

어항 유휴부지는 부지면적 5,000㎡ 이상의 어항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으며, 해역별로는 남해안 15개소, 서해안 12개소, 동해안 3개소로 전체의 90%가 서남해안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17개소(56.7%)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

4개소(13.3%), 경북, 충남이 각각 3개소(10.0%), 전북 2개소(0.7%), 인천 1개소(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섬지역 내 어항 유휴부지는 17개소로 전체 어항 유휴부지의 56.7%로 절반이상이 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7〉 어항 유휴부지 해역별·지역별(섬)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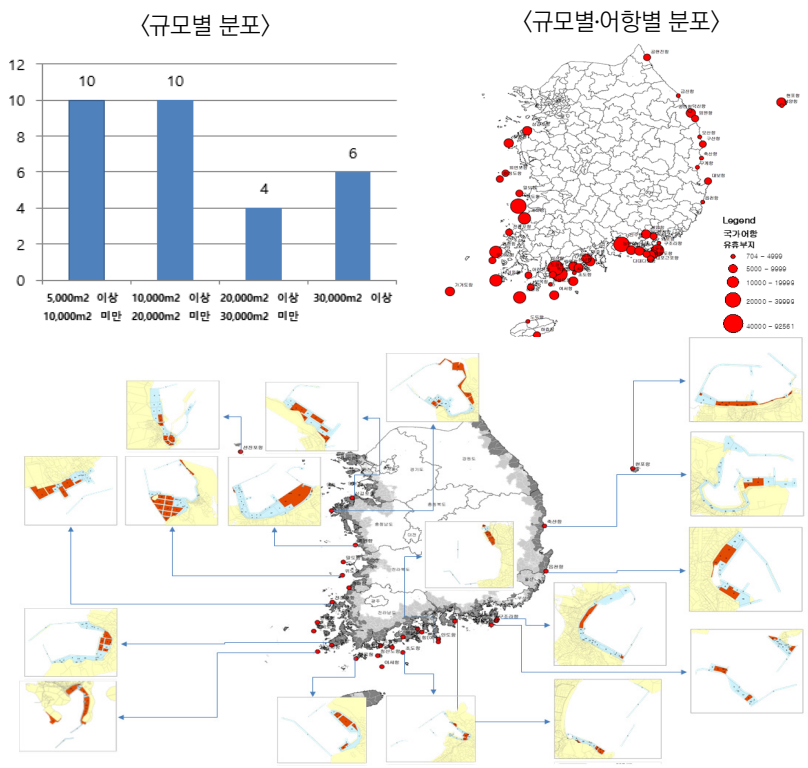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2016. p.29

나. 유휴어항 면적 및 입지적 특성

어항 유휴부지는 어항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어항 입지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어항 유휴부지가 30,000㎡ 이상인 경우가 6개소(20%)로 나타났다. 20,000~30,000㎡가 4개소 (13.3%), 10,000~

20,000㎡, 10,000㎡ 미만이 각각 10개소(33.3%)로 파악되었다. 어항 유휴부지는 어항의 입지특성과 여건에 따라 육역면적과 형상이 각기 다르며, 일반적으로 입지적 특성에 의해 좁고 긴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18〉 어항 유휴부지 면적·규모별 분포 현황



자료: 해양수산부, 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2016. p.30

3) 공공서비스 취약 및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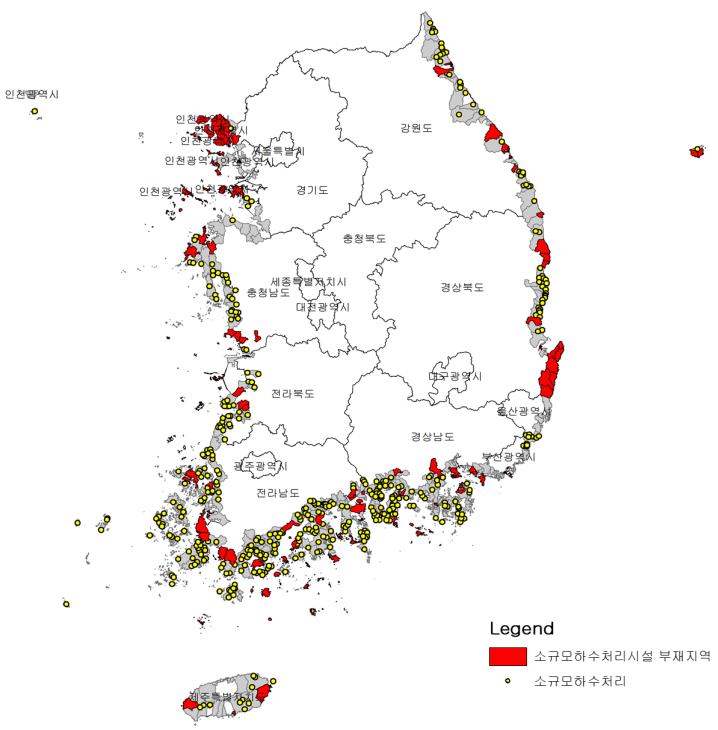
어촌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직면하면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더욱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자체에

서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는 정책결정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어촌지역 인구감소에 따라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있거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활쓰레기 및 생활오수

어촌지역 내 생활쓰레기는 분리배출보다는 매립·소각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활오수는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전혀 없는 어촌의 읍·면지역은 모두 117개소로 나타났고, 이중 마을 단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2-19〉 어촌 지방소멸 위험지역 내 하수처리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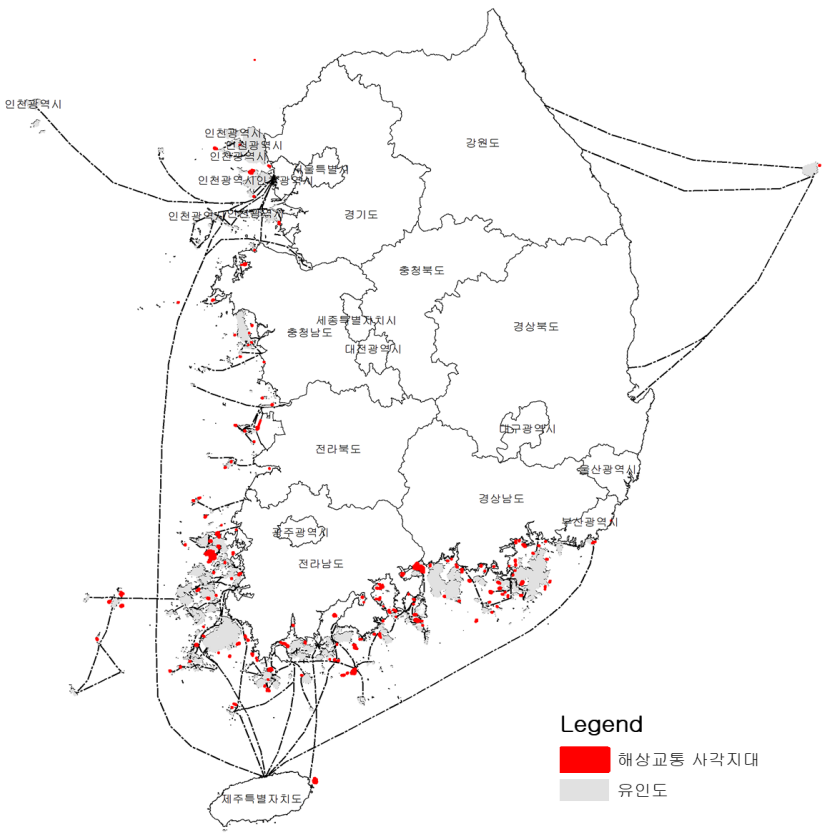


자료: 「하수종말처리시설 자료」, http://www.nsdi.go.kr(검색일: 2018.8.31.)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해상교통

연안여객선(정기선과 부정기선)과 차도선 등이 운행하지 않아 사실상 해상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섬지역은 총 170개소로 나타났고, 서남해안 지역의 소규모 섬지역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어선을 활용하고 있어 교육, 의료, 복지 등 삶의 질 여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0〉 어촌지역 연안여객선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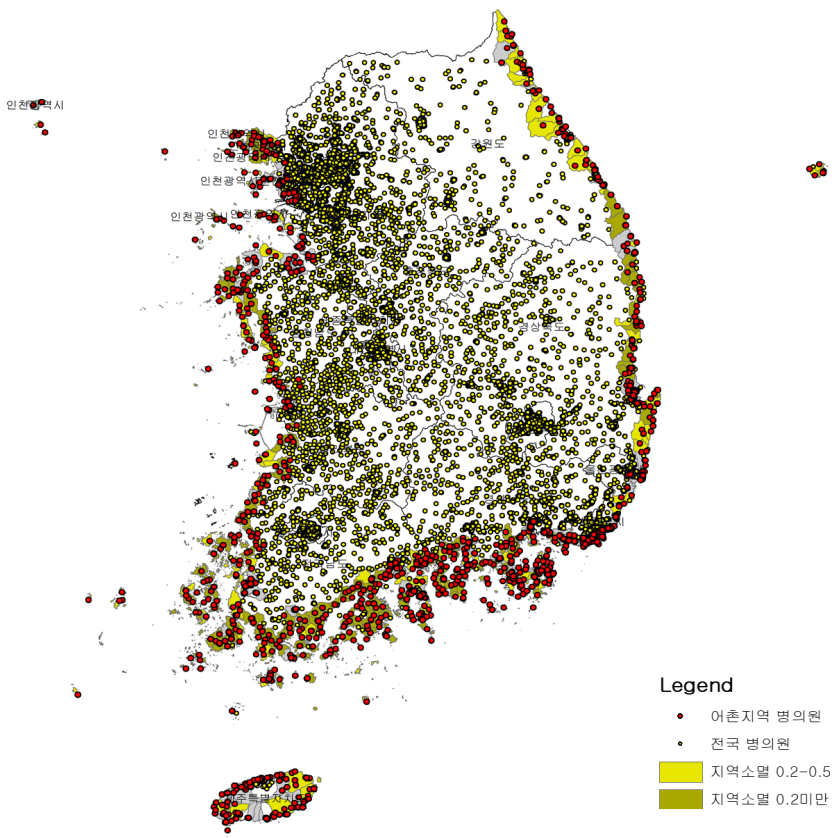


자료: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2016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의료서비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등을 포함해 27,033개소로 나타났다. 한편 연안어촌지역의 의료기관은 모두 2,475개로 약 9.15%이며, 대부분 병의원이나 보건소(보건지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산부인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태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그림 2-21〉 어촌지역 의료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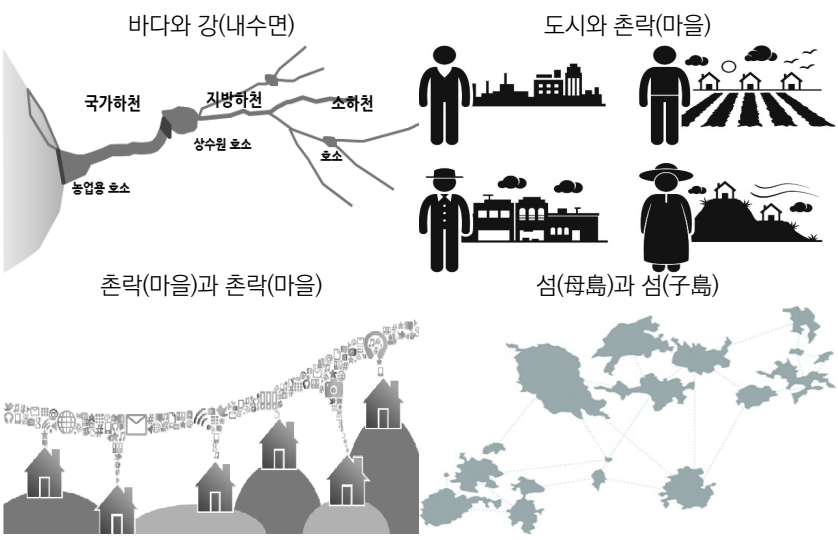
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 「의료기관 자료」 http://www.nsdi.go.kr(검색일: 2018.5.30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새로운 정책수요 발생

1) 효율적 국토공간관리 필요성

어촌사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국토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은 정주환경 유지를 통해 국경감시, 해상·해난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 등 해양영토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어촌은 도시, 내륙(내수면), 연안촌락, 섬 등 도시에서 소규모 촌락(마을단위)까지 인구규모와 인프라 등이 각각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다와 강을 중심으로 연계하는 공간체계, 도시와 촌락(마을), 촌락(마을)과 촌락(마을), 섬(母島)과 섬(子島) 간 연계성을 재고할 수 있는 새롭고 효율적인 국토공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2-22〉 어촌의 공간적 특성



자료: 저자 작성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우리나라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공공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어촌지역은 국토의 가장자리에 입지하고, 해상교통 이용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다. 결국 어촌사회의 입지적 여건과 현재의 삶의 질 수준으로 볼 때 도시의 젊은 청년들과 가임기 여성을 유입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국가 최소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넘어서 일정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1) 공간적 특성에 맞는 어촌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어촌사회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문제는 부족한 어촌의 공공서비스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섬지역은 제약적인 접근성과 인구 과소화로 인해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반면 도시형어촌은 도시지역 내 형성된 어촌으로 도시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어촌의 공간적인 입지 특성에 따른 어촌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함으로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2-23〉 어촌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체계적 접근체계 필요

어촌사회는 정책환경의 큰 변화가 없는 경우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과소화된 어촌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지역활력은 더욱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서비스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촌락(마을)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이 요구된다.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효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체계적인 접근체계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3) 지방분권 및 공동체 참여형 지역발전 수요 증대

어촌사회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따른 문제는 국가차원의 문제이며 동시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직면한 현안이다. 지방분권은 지자체의 문제를 지역여건에 따라 자치행정과 예산을 통해 책임성과 차별성에 근거하여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제기한다. 아울러 지방소멸 문제는 어촌사회의 공동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참여형 지역발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 3 장

어촌사회 현황 및 인구추계 전망

제1절 어촌의 인구·사회 현황

1. 어촌지역 인구 현황

현재 대부분의 어촌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지고 있으며, 이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안 어촌지역의 인구 구조적인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16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토대로 지역쇠퇴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전국의 읍·면·동 지역들은 4개의 입지유형[8]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4개 지역 유형에 각각 포함된 읍·면·동 수는 다음과 같다.

8) 어촌지역은 읍·면의 어촌지역과 동지역의 어촌지역(도시형어촌)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지역은 도시형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음. 농촌지역은 읍·면의 어촌지역 제외한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함. 추가적으로 도서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서지역(읍·면) 37개 지역을 읍·면 어촌지역에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표 3-1〉 전국 입지유형별 읍·면·동 수

(단위 : 개)

구분	어촌지역		어촌지역(동)	농촌지역	도시지역	계
	섬지역	전체읍·면				
읍·면·동 수	37	271	183	1,134	1,907	3,495

자료: 저자 작성

1) 가임여성(20~39세) 비율

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평균 가임여성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인구 비율 또한 해당 동지역의 총인구 대비 13.55%를 나타냈다. 반면, 농촌지역 및 어촌지역의 경우는 7%대의 인구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가임여성의 인구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절반보다 조금 큰 수치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20~39세의 여성이 비율이 낮을수록 지역 인구구조 지표 중 하나인 출생아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섬지역의 경우는 가임여성의 인구 및 비율이 다른 비교 지역들보다 낮은 6.62%를 보여주고 있어 취약 어촌지역인 섬주변의 여건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 전국 입지유형별 가임여성(20~39세) 비율(평균)

(단위 : 명, %)

구분	섬지역	어촌지역(읍·면)	어촌지역(동)	농촌지역	도시지역
가임여성 인구비율	183(6.62)	606(7.28%)	1,757(11.53)	717(7.43)	2,927(13.55)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 전국 지역별 가임여성(20~39세) 비율



자료: 저자 작성

2) 65세 이상 인구비율

인구의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65세 이상인구의 수를 살펴보았을 때, 도시지역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해당지역의 인구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은 13.62%로 4개 지역유형 중 가장 낮게 나왔으며, 동지역을 포함한 어촌지역이 16.28%로 나타났다. 읍·면의 어촌지역과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각각 31.44%, 30.88%로 비슷하게 나왔으나 어촌지역의 고령화율이 농촌지역의 고령화율 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섬지역의 경우는 평균 인구수는 적게 나왔으나 이는 섬지역의 인구수가 다른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고령화율을 보면 읍·면의 어촌지역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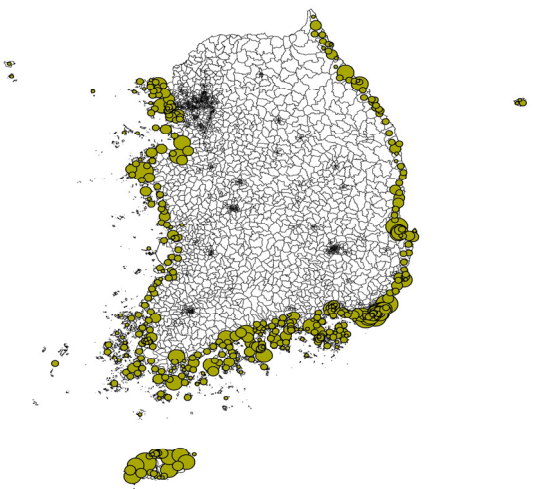
〈표 3-3〉 전국 입지유형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평균)

(단위 : 명, %)

구분	섬지역	어촌지역 (읍·면)	어촌지역 (동)	농촌지역	도시지역
65세 이상 인구비율	815 (32.51)	1,613 (31.14)	1,744 (16.28)	1,424 (30.88)	2,425 (13.62)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2〉 전국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자료: 저자 작성

3) 15세 미만 인구비율

15세 미만의 인구 역시 도시지역 및 동 행정단위의 어촌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인구비율도 읍·면의 농촌 및 어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5세 미만의 인구비율에서도 어촌지역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임지 여성의 자료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는 출산률이 낮아지게 되면, 어촌지역의 유소년 인구유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결국 유소년의 인구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섬지역은 평균 인구 수에서도 읍·면 어촌지역에 비해 1/3 미만의 수를 보이고 있어, 향후 청년층 연령대의 인구구성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비율도 7.03%로 가장 낮은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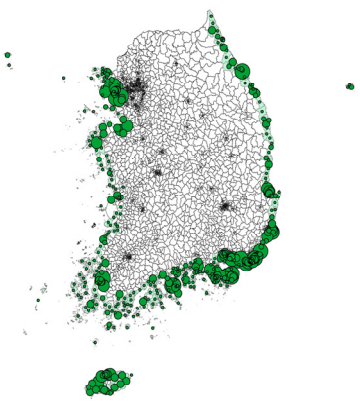
〈표 3-4〉 전국 입지유형별 15세 미만 인구 비율(평균)

(단위 : 명, %)

구분	섬지역	어촌지역 (읍·면)	어촌지역 (동)	농촌지역	도시지역 (어촌제외)
15세 미만 인구비율	202 (7.03)	728 (7.89)	2,009 (12.14)	842 (7.77)	2,830 (12.37)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3〉 전국 지역별 15세 미만 인구 비율



자료: 저자 작성

4) 지역소멸 위험지수 현황

지역소멸위험지수는 일본 창생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 '지방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지방소멸위험의 지표로써 활용한 인구재생산력 지표로, 출생아의 95%가 20~39세 사이의 여성에게서 태

어나는 것을 착안하여 65세 이상 인구대비 20~39세 여성의 비율로 산출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text{지역소멸위험지수} = \frac{(20 \sim 39\text{세 여성인구})}{65\text{세이상 인구}}$$

이상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소멸 위험지수의 값이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미만이면 정상지역, 0.5~1.0미만이면 소멸주의단계지역, 0.5미만이면 소멸위험단계지역으로 분류되며, 특히 0.2 미만인 지역은 소멸고위험단계지역으로 분류된다.[9]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지역소멸 위험지수를 토대로 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성을 살펴볼 필요성 있다.

전국의 읍·면·동 단위 지역의 지역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4개 지역유형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해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정상단계로 나타나고 동 행정단위의 어촌지역은 지역소멸위험지수가 평균 0.981로 낮은 수준의 소멸주의단계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은 0.5이하의 값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자료에서도 농촌지역 1,134개 지역 중 약 83.4%인 953개 지역의 지역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596개의 지역의 지역소멸위험지수가 0.2미만으로 나타나 고위험단계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어촌지역의 경우는 총 271개 읍·면 지역중 231개 지역(85.2%)가 지역소멸위험지역이었으며 그중 132개 지역은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행정단위의 어촌지역의 27.8%인 50개 지역이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 160개 지역(8.4%)이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난 도시지역과 큰 대조를 보였다. 섬지역의 경우, 가장 낮은 0.234의 지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0.5 미만의 지역이 전체

9)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370422&memberNo=2993146&vType=VERTICAL

의 94.6%, 고위험단계지역은 54.05%를 보여주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지역소멸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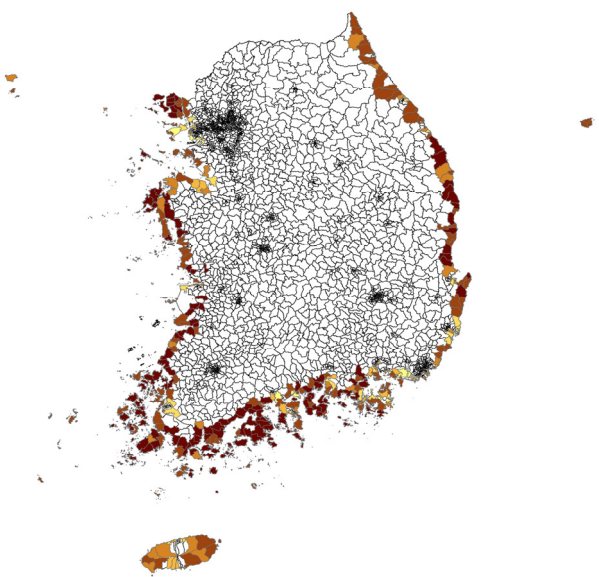
〈표 3-5〉 전국 지역유형별 지역소멸 위험지수

(단위 : 개, %)

지역소멸 위험지수	섬지역	어촌지역 (읍·면)	어촌지역 (동)	농촌지역	도시지역
평균	0.234	0.303	0.981	0.341	1.208
0.5미만 지역 수	35(94.6)	231(85.2)	50(27.32)	952(83.4)	160(8.39)
0.2 미만 지역 수	20(54.05)	132(48.7)	1(0.01)	596(52.5)	5(0.26)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4〉 전국 지역별 지역소멸위험지수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지역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여건

1) 어촌의 일자리 현황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사업체수와 총인구수를 활용하여 인구 천명당 사업체 종사자수를 산출하였다.[10]

〈표 3-6〉을 살펴보면 어촌지역의 경우 천명당 사업체 종사자수가 300명 미만인 지역이 총 155개 지역으로 전체 어촌지역 중 57.2%를 차지하여 다른 지역유형보다 종사자수가 적은지역이 많았으며, 특히 500명 이상인 지역은 전체의 12.55%로 농촌지역의 20.55%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행정단위 어촌지역의 경우는 500명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42.08%인 77개 지역으로 나타나 읍·면의 어촌지역보다 일자리 현황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지역은 주로 100~300사이의 종사자 지역이 31개 지역(83.78%)로 나타나 다른 지역이 약 50% 비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전국 입지유형별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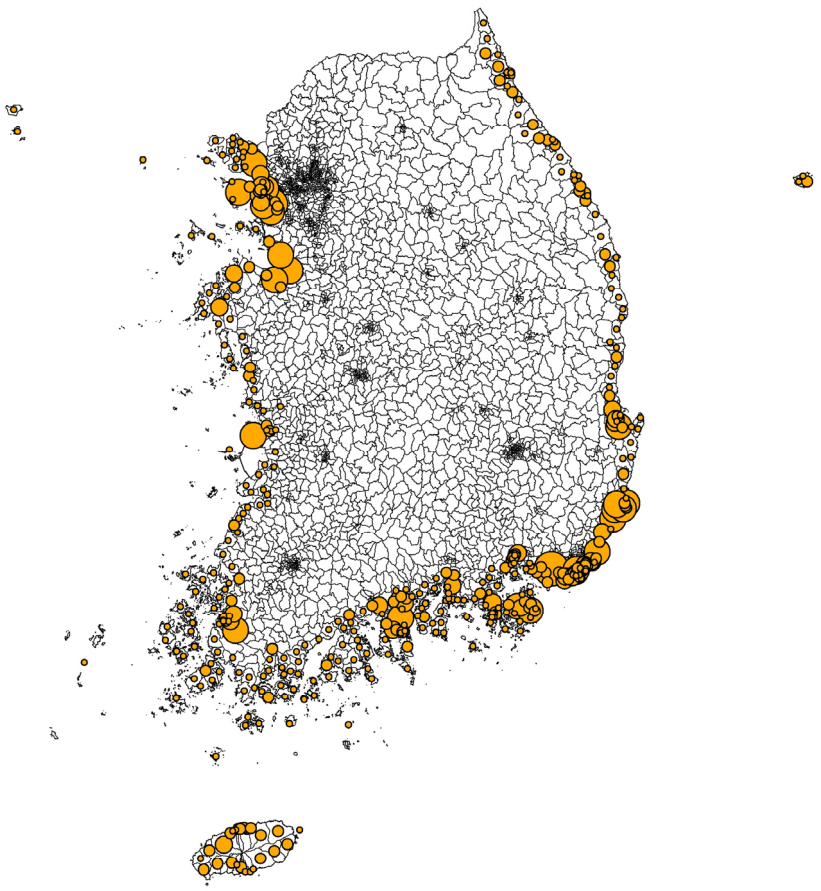
(단위 : 명, 개, %)

사업체 종사자수 (천명당)	섬지역	어촌지역 (읍·면)	어촌지역 (동)	농촌지역	도시지역
평균	230	341	815	393	526
100명 미만	0	2(0.74)	3(1.64)	34(3.00)	72(3.78)
100~200명 미만	15(40.54)	66(24.35)	28(15.30)	327(28.82)	490(25.69)
200~300명 미만	16(43.24)	87(31.10)	36(19.67)	256(22.57)	468(24.54)
300~400명 미만	4(10.81)	54(19.93)	24(13.11)	152(13.40)	258(13.53)
400~500명 미만	2(5.41)	27(9.96)	15(8.20)	132(11.64)	175(9.18)
500명 이상	0	34(12.55)	77(42.08)	233(20.55)	444(23.28)

자료: 저자 작성

10) 사업체 종사자수(천명당) $= \left(\frac{\text{전체산업 사업체 종사자수}}{\text{총 인구수}}\right) \times 1000$

〈그림 3-5〉 전국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수(천명당)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의 공공인프라 현황

(1) 교육서비스 인프라

지역의 교육서비스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교육시설의 합을 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서비스 환경을 파악하여 보았다. 어촌 및 농촌지역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의 개수가 10개 미만인 지역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는 교육서비스업이 100개 이상인 지역이 24.75%로 전체 분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어촌지역은 1.85%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섬지역의 경우는 10개 미만이 86.49%로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에 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개 이상의 수를 가진 지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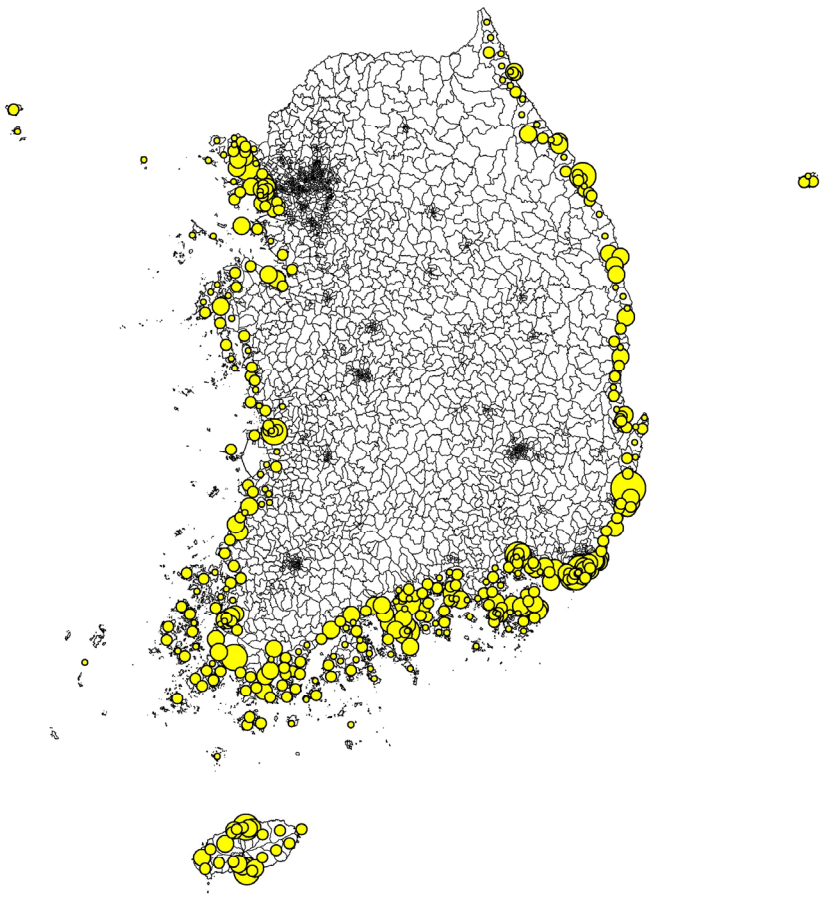
〈표 3-7〉 전국 입지유형별 교육서비스업

(단위 : 개소, 개, %)

교육시설 수	섬지역	어촌지역 (읍·면)	어촌지역 (동)	농촌지역	도시지역
평균	6	17	45	18	77
10개 미만	32(86.49)	164(60.52)	33(18.03)	749(66.05)	96(5.03)
20개 미만	36(97.30)	220(81.18)	68(37.16)	917(80.86)	265(13.90)
20~40개 미만	1(2.70)	20(7.38)	55(30.05)	91(8.02)	360(18.88)
40~60개 미만	0	14(5.17)	17(9.29)	41(3.62)	353(18.51)
60~80개 미만	0	7(2.58)	12(6.56)	25(2.20)	276(14.47)
80~100개 미만	0	5(1.85)	7(3.83)	13(1.15)	181(9.49)
100개 이상	0	5(1.85)	24(13.11)	47(4.14)	472(24.75)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6〉 전국 지역별 교육서비스업



자료: 저자 작성

(2) 보건시설

의료복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시설 1개당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산출[11]하였다.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보건시설 1개당 노인인구수 100명 미만인 지역이 954개소(50.03%)로 의료여건이 어촌지역이나 농촌지역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읍·면의 어촌지역(4.06%)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지역은 보건시설 1개당 노인인구가 500명이 넘는 지역도 36개(13.28%)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보건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지역의 경우는 100~200명의 비율이 48.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환경이 좋다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섬지역 인구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의료서비스는 보건소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8〉 전국 입지유형별 보건시설 1개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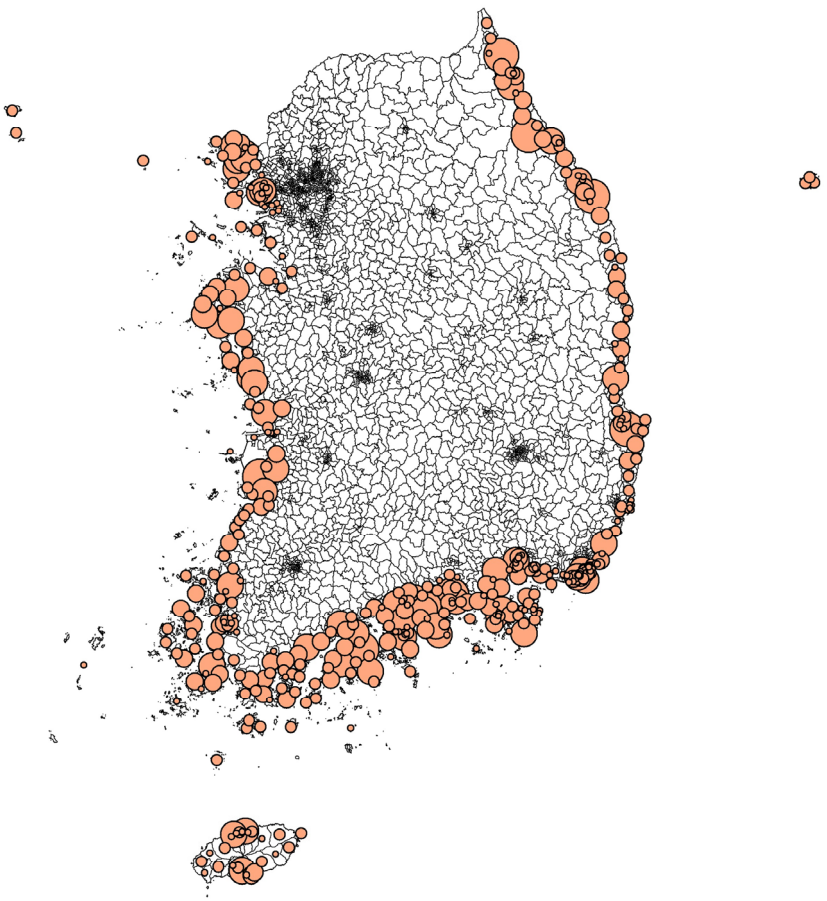
(단위 : 명, 개, %)

보건시설 노인인구	섬지역	어촌지역 (읍·면)	어촌지역 (동)	농촌지역	도시지역
평균	220	673	761	713	903
100명 미만	2(5.41)	11(4.06)	71(38.80)	73(6.44)	954(50.03)
100~200명 미만	18(48.65)	97(35.79)	39(21.31)	254(22.40)	584(30.62)
200~300명 미만	13(35.14)	63(23.25)	31(16.94)	336(29.63)	181(9.49)
300~400명 미만	1(2.70)	44(16.24)	12(6.56)	235(20.72)	67(3.51)
400~ 500명 미만	3(8.11)	20(7.38)	10(5.46)	112(9.88)	41(2.15)
500명 이상	0	36(13.28)	20(10.93)	124(10.93)	80(4.02)

자료: 저자 작성

11) 보건시설1개당65세이상노인인구 = $\frac{65세이상인구수}{보건업종수}$

〈그림 3-7〉 전국 지역별 보건시설 수



자료: 저자 작성

(3) 문화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종 수

어촌지역의 여가활동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수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MDIS 자료를 통한 분포를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촌지역 및 농촌지역의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가 대부분 10개 미만이라는 점이다. 농촌지역은 70.81%, 어촌지역은 64.94%로 대부분의 지역의 여가관련 업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어촌지역은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평균이 6개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20~60개 미만까지의 분포가 전체의 20개 이상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지역도 8.5%를 나타내고 있어 0.37%인 어촌지역과 큰 대조를 보였다. 동행정단위의 어촌지역은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가 10개 미만인 지역이 20.77%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의 경우는 도시지역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읍·면의 어촌지역보다는 나은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섬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10개 미만(89.19%)으로 나타나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여건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문화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

(단위 : 명,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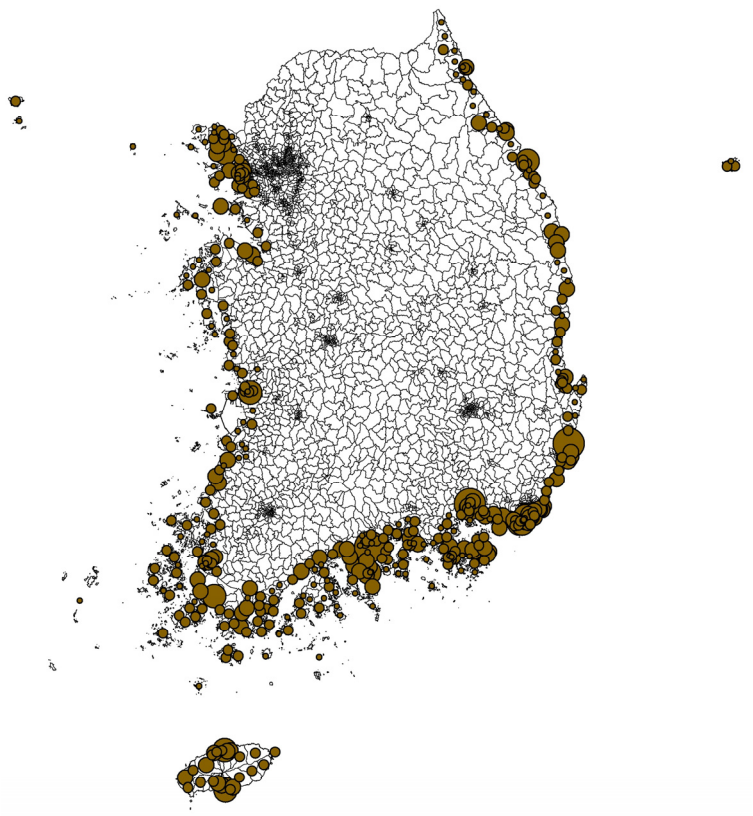
문화시설 인구	섬지역	어촌지역 (읍·면)	어촌지역 (동)	농촌지역	도시지역
평균	5	6	30	13	46
10개 미만	33(89.19)	176(64.94)	38(20.77)	803(70.81)	174(9.12)
20개 미만	36(97.30)	216(79.70)	79(43.17)	925(81.57)	474(24.86)
20~40개 미만	1(2.70)	32(11.81)	55(30.05)	103(9.08)	547(28.68)
40~60개 미만	0	13(4.80)	27(14.75)	55(4.85)	389(20.40)

(단위 : 명, 개, %)

문화시설 인구	섬지역	어촌지역 (읍·면)	어촌지역 (동)	농촌지역	도시지역
60~80개 미만	0	7(2.58)	10(5.46)	17(1.50)	231(12.11)
80~100개 미만	0	2(0.74)	8(4.37)	15(1.32)	104(5.45)
100개 이상	0	1(0.37)	4(2.19)	19(1.68)	162(8.5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8〉 전국 지역별 문화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료: 저자 작성

(4) 주민편의시설

지역주민의 기초 생필품 구매 등, 생활편의를 위한 마트 등의 소매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내, 백화점, 종합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소매점 수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10〉과 같다.

〈표 3-10〉 전국 입지유형별 종합소매업 사업체 수

(단위 : 개소,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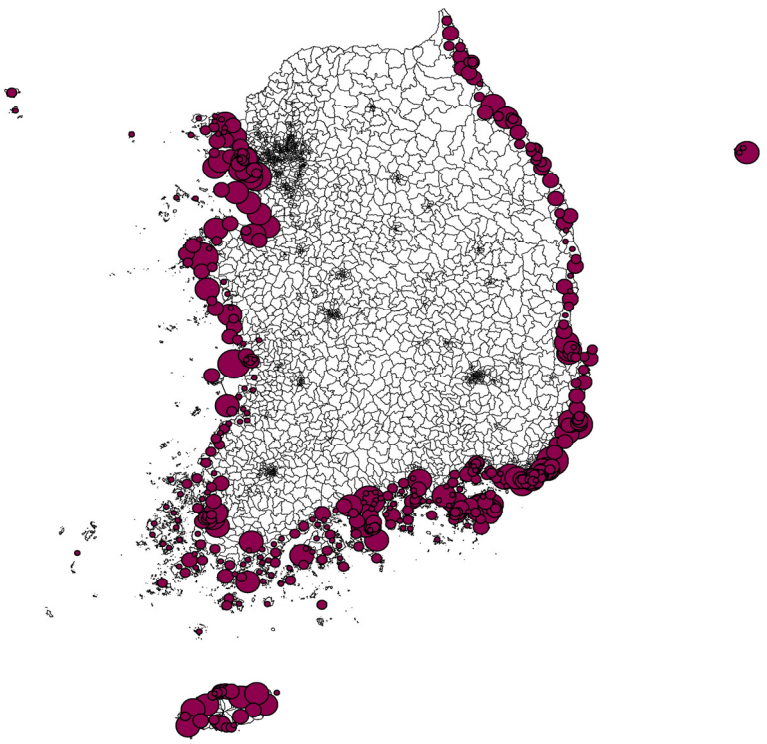
소매업 사업체수	섬지역	어촌지역 (읍·면)	어촌지역 (동)	농촌지역	도시지역
평균	14	26	37	20	39
10개 미만	12(32.43)	51(18.82)	6(3.28)	486(42.86)	41(2.15)
20개 미만	30(81.08)	142(52.40)	32(17.49)	793(69.93)	308(16.15)
20~40개 미만	5(13.51)	80(29.52)	89(48.63)	186(16.40)	828(43.42)
40~60개 미만	2(5.41)	25(9.23)	41(22.40)	78(6.88)	484(25.38)
60~80개 미만	0	12(4.43)	10(5.46)	39(3.44)	176(9.23)
80~100개 미만	0	9(3.32)	7(3.83)	18(1.59)	68(3.57)
100개 이상	0	3(1.11)	4(2.19)	20(1.76)	43(2.25)

자료: 저자 작성

지역주민의 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 등의 소매업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어촌지역은 20개 미만인 지역이 142개 지역(52.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10개 미만인 지역도 51개소로 나타나 거주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행정단위인 경우(어촌지역(동포함), 도시지역), 종합소매업 수는 20~40개 미만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20~60개 미만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동 행정단위 어촌지역이 71.08%, 도시지역이 68.08%를 차지하고 있어 어촌 또는 농촌지역의 거주여건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촌지역과 비교를 하였을 때, 농촌지역이 소매업 수에서 더욱 열악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어촌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떨

어지는 지역(섬지역 등)을 고려할 경우, 농촌지역보다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섬지역은 평균 소매점 수에서도 14개로 다른 읍·면 어촌지역과 비교해도 에 절반정도의 수준(54%)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10개 미만지역이 32.43%를 차지하고 있어 기본 생필품 구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전국 지역별 소매점 수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어촌 인구추계 전망

1. 어촌지역 장래인구추계

본 연구에서는 장래 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험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연안지역 읍·면·동 단위의 인구추계를 실시하였고,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장래인구를 추계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1) 인구추계 방법

(1) 소규모 지역 인구추계를 위한 Hamilton-Perry 모형(H-P 모형)

통계청 및 여러 연구에서 인구추계 방법으로 코호트 조성법(Cohort-component method)이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구 추계에 필요한 요인들(시점별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이 요구된다. 통계청의 경우, 시·군·구 단위별 출생률, 사망률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이 방법을 활용한 인구추계가 가능하나, 시·군·구보다 작은 규모인 읍·면·동 단위의 인구를 추계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의 인구추계 시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Hamilton과 Perry에 의해 1962년 새로운 추계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소규모 지역단위의 인구추계를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2) Hamilton-Perry 모형의 인구추계 방법

H-P 모형은 코호트 조성법에서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쳐 추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최근 조사된 두 센서스기간의 연령별 변화율을 사용하여 추계한다. 두 기

간 간의 연령별 변화율(코호트 변화비, Cohort-change ratio)이 다음 번 센서스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으로, 이 가정에는 ⅰ) 인구에 대한 정의 또는 추계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가 변하지 않고, ⅱ) 세부 연령별 사망률과 이동률이 변하지 않으며, ⅲ) 과거 센서스에서의 추계 오차가 향후 센서스에서도 동일하다는 세부적 가정들이 포함되어 있다.[12]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인구추계를 위해 가장 먼저 구해야할 값이 연령별 변화율(CCR)이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CCR_{x \sim x+n} = \frac{P_{x+y \sim x+y+n,t+y}}{P_{x \sim x+n,t}}$$

$P_{x \sim x+n,t}$은 두 기간의 인구조사시점 중 처음에 집계된 시점(t)의 x세부터 $x+n$세 미만 연령대의 인구수이고, $P_{x+y \sim x+y+n,t+y}$는 나중에 집계된 시점($t+y$)의 $x+y$세에서 $x+y+n$세 미만 연령대의 인구수를 의미하며, 여기서 y는 두 인구조사시점간의 연도차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경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인구추계를 위해 5세 연령별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식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CR_{x \sim x+4} = \frac{P_{x+5 \sim x+5+4,t+5}}{P_{x \sim x+4,t}} = \frac{P_{x+5 \sim x+9,t+5}}{P_{x \sim x+4,t}}$$ [13]

예를 들어, 2010년과 2015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24세 연령집단의 연령별 변화율을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Hamilton, Horace C. and Josef Perry, "A Short Method for Projection Population by Age from One Decennial Census to Another.", Social Forces, vol41, 1962, pp163-170.

13) 위 식에서 연령구분을 나타내는 n의 경우, 인구추계에서 5세별 연령구분 자료를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n의 값은 5이지만 추계 시 연령중복을 피하고 표현의 정확성을 위해 4로 값을 조정함. 예를 들어 20세 이상~25세 미만의 표현을 20에서~24세까지로 표현을 바꿈

$$CCR_{20\sim 20+4} = CCR_{20\sim 24} = \frac{P_{20+5\sim 20+5+4,2010+5}}{P_{20\sim 20+4,2010}} = \frac{P_{25\sim 29,2015}}{P_{20\sim 24,2010}}$$

이렇게 산출된 연령별 변화율을 활용하여 다음 시점의 인구를 추계하게 되는데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으며, 위의 예를 바탕으로 2020년도의 25~29세의 인구추계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_{x+y\sim x+y+n,t+5} = CCR_{x\sim x+4} \times P_{x\sim x+4,t}$$

$$P_{25\sim 29,2020} = CCR_{20\sim 24} \times P_{20\sim 24,2015} = \left(\frac{P_{25\sim 29,2015}}{P_{20\sim 24,2010}}\right) \times P_{20\sim 24,2015}$$

즉, 과거 2시점간의 연령별 변화율이 다음 시점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2020년 25~29세 인구수는 2015년 20~24세 인구수에서 연령별 변화율(CCR)을 곱해줌으로써 대부분의 연령대 인구를 추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연령별 변화율로 추계할 수 없는 0~4세 및 일정연령 이상의 고령자(85세 이상)에 대한 인구 추계이다. Hamilton and Perry(1962)는 이를 위해 최근시점과 그 이전 시점간의 출생아수와 가장 최근 시점에서 추계시점까지의 출생아수의 비율을 최근시점의 0~4세 인구에 곱하여 추계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최근시점과 추계시점사이의 출생아수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가임연령의 여성인구와 연령별 출산율을 통해 산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며, 소규모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연령별 출산율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추계를 하는데 있어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Smith, Tayman, Swanson(2001)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어린이-가임기 여성비율(Child-Woman Ratio, CWR)[14]을 구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0~4세 인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

14) Smith, Tayman, Swanson, "State and Local Population Projections : Methodology and Analysis, 2001, pp.78

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추계하여 분석하였다. 0~4세 인구추계를 위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FP_{0\sim4,t} = (\frac{FP_{0\sim4,t-5}}{FP_{15\sim49,t-5}}) \times FP_{15\sim49,t}$$

$$MP_{0\sim4,t} = (\frac{MP_{0\sim4,t-5}}{FP_{15\sim49,t-5}}) \times FP_{15\sim49,t}$$

또한 85세 이상의 인구추계를 위해서 최근시점의 85세 이상 인구와 이전시점의 80세 이상 인구의 변화율을 최근시점의 80세 이상 인구에 곱해줌으로써 산출하도록 하였다. 85세 이상 연령의 인구추계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15]

$$P_{85^+,t+5} = (\frac{P_{85^+,t}}{P_{80\sim84,t-5} + P_{85^+,t-5}}) \times (P_{80\sim84,t} + P_{85^+,t})$$

본 연구에서 연안지역의 읍·면·동 단위의 인구추계를 위해 위의 추계 방법을 통해 전 연령대의 인구추계를 실시하였으며, 남·녀 구분 인구추계를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3) Hamilton-Perry 모형 장점 및 한계

H-P 모형에서 인구추계를 위해 사용되는 연령별 변화율(코호트 변화비)은 두 시점간의 이동과 사망이 발생한 결과 값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과 사망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지 않는다.[16] 따라서 정확한 연령별 자료를 구하기 힘든 소규모 지역, 특히, 국내의 읍·면·동 지역의 인구 추계를 할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하면 인구추계가 가능해진다. 즉, 인구 추계의 요인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15) Smith, Tayman, Swanson, "State and Local Population Projections : Methodology and Analysis, 2001, pp.156~158
16) 이지연(2005), p.10

자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별 인구추계를 위해 복잡한 산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상림, 조영태(2005)[17], Smith and Tayman (2003)[18], 이지연(2005) 등의 연구에서 H-P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에서 코호트 조성법보다 인구추계 오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P 모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한계점은 두시점간 인구 변화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할 경우, 인구추계가 과대 추정되거나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오차는 추계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경우는 인구추계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도 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5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하는 지역들이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우는 인구추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인구추계 기초자료

연안지역 읍·면·동의 장래 인구추계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과 2015년도의 인구총조사 읍·면·동 자료의 연령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행정구역이 변동되어 분동된 지역(6개 지역)의 경우는 2010년 기준 분동 이전의 동으로 합산하여 설정하였고, 합동된 지역(4개 지역)의 경우, 지역 명칭이 개칭되거나 읍으로 승격된 지역(5개 지역)은 2015년 읍·면·동명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450개 연안지역의 읍·면·동 지역을 인구추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행정구역상 변화가 생긴 지역을

17) 이상림, 조영태, "H-P 기법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장래인구추계",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2005, pp.149~172

18) Smith and Tayman, " An evaluation of population projections by age", Demography, 2003, Nov;40(4):741-757.

정리하면 다음 〈표 3-11〉과 같다.

〈표 3-11〉 행정구역의 변동(2010~2015년)

행정구역		변경내용	일자	비고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군자동과 월곶동으로 분동	2014. 3. 1	2010년 기준 행정단위로 설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동	논현2동과 논현고잔동으로 분동	2011. 5. 20	
	서구 검단1동	검단1동과 검단 5동으로 분동	2013. 9. 2	
	서구 청라동	청라1동과 청라2동으로 분동		
	연수구 송도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으로 분동	2012. 1. 1 2014. 9. 24	
	중구 영종동	영종동과 운서동으로 분동	2012. 1. 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우암1동, 우암2동을 우암동으로 합동	2013. 7. 1	2015년 기준 행정단위로 설정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도천동, 인평동을 도천동으로 합동	2011. 1. 1	
	통영시 미수동	미수1동, 미수2동을 미수동으로 합동		
	통영시 봉평동	봉평동, 도남동을 봉평동으로 합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1동	논현동을 논현1동으로 개칭	2011. 5. 20	행정구역명 개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천가동을 가덕도동으로 개칭	2015. 1. 30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원남면을 매화면으로 개칭	2015. 4. 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삼향면에서 삼향읍으로 승격	2011. 1. 1	행정구역 승격
	신안군 압해읍	압해면에서 압해읍으로 승격	2012. 1. 1	

자료: 저자 작성

3) 인구추계 결과

소규모 단위 지역의 인구추계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 인구추계처럼 50년의 장기간 인구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30년까지의 인구추계(2045년)를 실시하였다.[19]

19) 통계청의 시도 인구추계 역시 이러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30년의 인구추계만 실시함

(1) 지역별 인구추계 결과

가. 인구추계 제외지역

2010년과 2015년 사이 인구 증감율이 25% 이상인 지역은 인구추계 시 과대추계 가능성이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지역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 지역들의 두 시기 사이 인구변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2〉 인구추계 제외지역

인구변동원인	행정구역	지역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부산 강서구 녹산동, 여수시 소라면, 울산 북구 강동동, 거제시 아주동, 부산 강서구 명지동, 울산 동구 전하2동, 창원 마산합포구 현동, 순천시 해룡면,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제주시 삼양동, 거제시 사등면, 전남 무안군 삼향읍, 창원 마산합포구 오동동,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천 서구 검단1동, 제주 화북동, 경남 사천시 사남면,	18
산업단지 개발	통영시 광도면, 충남 당진시 송산면	2
신규 산업시설 입지	부산시 가덕도동, 여수시 만덕동	2
공공기관(시청 등) 이전 및 신설	경남 사천시 용현면	1
정부지원	인천 옹진군 연평면	1
기존산업위축	군산시 해신동	1
기타	창원 마산합포구 가포동, 경남 통영시 미수동, 전남 여수시 한려동 전남 여수시 삼일동	4
계	·	29

자료: 저자 작성

나. 인구증가 상위지역

인구증가 상위지역을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이 많으며, 부산, 인천, 울

산 등 일부 광역시도 인구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지역 및 제주도를 제외한 연안 읍·면지역의 경우는 7개 정도만이 인구증가 상위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연안읍·면지역의 인구증가 지역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 인구증가 상위지역

순위	행정구역	연평균 인구증가율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3.86%
2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동	3.60%
3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3.33%
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륜동	3.18%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3.17%
6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	3.06%
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93%
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2.75%
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65%
1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2.53%
1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동	2.44%
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2.35%
13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25%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2.02%
15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	1.78%
16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75%
17	전라남도 순천시 도사동	1.52%
18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52%
19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1.51%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	1.51%
2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1.50%
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1.49%
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1.47%
2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1.28%
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1.20%

자료: 저자 작성

다. 인구감소 상위지역

인구가 감소된 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에서 8개 지역이 인구감소율 상위지역으로 포함되었고, 경상남도 4개 지역, 전라북도 3개 지역으로 국내 수산세력이 강한 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3-14〉 인구감소 상위지역

순위	행정구역	연평균 인구증가율
1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5.72%
2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동	-5.42%
3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5.09%
4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동	-5.07%
5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02%
6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	-5.00%
7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4.84%
8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동	-4.84%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4.72%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4.67%
11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4.66%
12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동	-4.65%
13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장생포동	-4.55%
14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4.54%
15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4.52%
16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	-4.49%
17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동	-4.44%
1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4.39%
19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4.37%
20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4.37%
21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4.35%
22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5동	-4.33%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25%
24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4.22%
25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4.21%

자료: 저자 작성

(2) 시·도별 인구추계 결과

시·도별 인구추계를 살펴보기 위해 입지유형별 추계인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15〉와 같다. 시·도별 인구추계에서, 총인구는 2020년 374만 명 수준에서 2045년 약 375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 중 충남, 부산, 인천,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특히, 경북지역의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장 큰 인구증가율을 보여주었다.

동지역의 인구는 214만 명에서 231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의 인구는 160만 명에서 144만 명으로 감소하여, 도시어촌지역보다 연안읍·면지역의 인구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섬지역의 경우는 2020년 대비 2045년에 22,598명이 감소하여 전체 섬 지역 인구의 24.2%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섬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험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시·도별 인구추계 결과

(단위 : 명)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총 계	계	3,737,453	3,759,059	3,772,971	3,795,042	3,821,164	3,752,206
	동	2,138,184	2,174,152	2,211,110	2,256,309	2,309,443	2,308,584
	읍·면	1,599,269	1,584,907	1,561,861	1,538,733	1,511,721	1,443,622
	섬	93,691	89,973	85,540	81,242	77,067	71,093
강원	계	273,239	273,528	272,406	271,793	271,121	261,633
	동	171,435	175,007	178,413	182,436	186,641	184,253
	읍·면	101,804	98,521	93,994	89,357	84,479	77,379
경기	계	147,044	149,153	148,442	145,922	141,879	133,458
	동	78,734	80,334	80,394	79,275	77,204	72,339
	읍·면	68,310	68,818	68,048	66,647	64,676	61,119

(단위 : 명)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충남	계	225,021	232,953	240,960	251,030	263,489	271,257
	동	6,880	6,562	6,147	5,667	5,130	4,459
	읍·면	218,141	226,391	234,812	245,362	258,359	266,798
전남	계	679,980	674,736	670,706	670,130	671,325	652,619
	동	278,816	297,242	318,468	342,363	368,716	383,470
	읍·면	401,164	377,494	352,238	327,767	302,609	269,148
	섬	57,452	54,977	52,171	49,605	46,953	42,972
총 계	계	3,737,453	3,759,059	3,772,971	3,795,042	3,821,164	3,752,206
	동	2,138,184	2,174,152	2,211,110	2,256,309	2,309,443	2,308,584
	읍·면	1,599,269	1,584,907	1,561,861	1,538,733	1,511,721	1,443,622
	섬	93,691	89,973	85,540	81,242	77,067	71,093
전북	계	86,246	80,233	73,983	67,711	61,388	53,872
	동	42,873	41,021	38,906	36,591	34,173	30,876
	읍·면	43,373	39,213	35,077	31,120	27,215	22,997
	섬	3,705	3,336	2,938	2,549	2,172	1,775
경남	계	636,468	639,033	639,647	639,645	638,092	619,436
	동	421,678	425,562	428,426	430,931	432,861	423,735
	읍·면	214,790	213,472	211,221	208,714	205,230	195,701
	섬	5,215	4,571	3,929	3,311	2,699	2,111
경북	계	260,485	243,021	224,433	206,020	187,081	164,305
	동	92,014	83,783	75,250	66,735	58,171	48,961
	읍·면	168,471	159,239	149,183	139,285	128,911	115,345
	섬	9,532	8,920	8,187	7,435	6,692	5,871
부산	계	682,162	688,665	694,888	704,115	715,917	713,805
	동	606,571	610,492	614,815	622,670	634,014	634,219
	읍·면	75,591	78,173	80,073	81,445	81,903	79,585
울산	계	171,314	172,519	172,069	170,942	169,833	165,285
	동	135,072	133,163	129,939	126,297	122,796	117,112
	읍·면	36,242	39,355	42,130	44,645	47,036	48,173
인천	계	268,174	276,180	284,180	292,584	301,118	304,310
	동	178,769	184,390	191,046	199,036	207,813	213,885
	읍·면	89,405	91,790	93,134	93,548	93,305	90,424
	섬	14,258	14,738	14,930	14,974	15,201	15,089

(단위 : 명)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제주	계	307,320	329,037	351,258	375,151	399,922	412,228
	동	125,342	136,596	149,306	164,308	181,924	195,275
	읍·면	181,978	192,441	201,951	210,843	217,998	216,953
	섬	3,529	3,431	3,385	3,368	3,350	3,275

주: 각 시·도별 인구자료는 인구증감률이 큰 지역 29개 지역을 제외한 421개 연안 읍·면·동 지역을 추계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지수 분석

1) 인구추계 결과를 활용한 어촌의 지역소멸위험지수 전망

어촌지역의 지역소멸 위험지수를 기준으로 2015년과 2045년 인구추계 전망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비교해 보았다. 2015년 기준으로 어촌 지역소멸지수 0.2 미만인 어촌지역은 131개소(31.12%), 2045년에는 211개소가 증가한 342개 지역으로 전체의 81.24%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역소멸지수가 0.2~0.5미만 지역은 2015년 138개소(32.78%)에서 2045년 69개소(16.39%)로 감소하였고, 이들 지역들은 대부분 지역소멸 위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3-16〉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지수 변화(2015년, 2045년)

(단위 : 개소, %)

구분	2015년(a)	2045년(b)	비고(a-b)
소멸 고위험 (0.2 미만)	131 (31.12)	342 (81.24%)	211
소 멸 위 험 (0.2~0.5 미만)	138 (32.78)	69 (16.39)	△69
소 멸 주 의 (0.5 ~1.0미만)	98 (23.28)	10 (3.38)	△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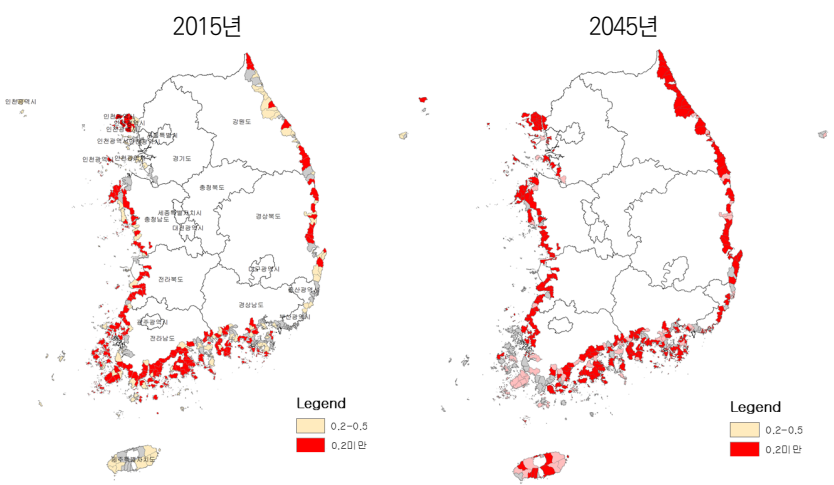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2015년(a)	2045년(b)	비고(a-b)
소멸 비위험 (1.0 이상)	54 (12.83)	0	△ 54
계	421 (100.0)	421 (100.0)	-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읍·면·동 지역별로 2015년과 2045년의 지역소멸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의 어촌지역에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지역소멸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21개 연안지역중 지역소멸위험 지수가 개선되는 지역은 1개 지역이었으나 이 지역은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개선의 의미는 크지 않았다. 또한 일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소멸위험지수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화 및 출산여성인구 감소 문제가 매우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0〉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지수 분포 변화



자료: 저자작성

2) 시·도별 인구추계 및 지역소멸 위험수준 전망

(1) 시·도별 소멸 고위험 지역 전망

지역소멸지수의 시·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지역소멸위험단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0.2 미만지역의 경우는 크게 증가하여 전체지역으로 보면 81.2%가 지역소멸고위험단계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2045년에는 도시지역의 경우도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위험 진입단계로 들어서고 고위험지역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2045년의 연안지역의 인구문제는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라북도 지역은 2045년 모든 지역이 지역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지역 시·도별 지역소멸위험단계 지역변화

(단위 : 개)

구분	2015년		2045년	
	0.5미만	0.2미만	0.5미만	0.2미만
강원도(36)	26	**2**	36	**31**
경기도(8)	4	**0**	8	**6**
충청남도(28)	23	**12**	27	**24**
전라북도(20)	17	**11**	20	**20**
전라남도(115)	97	**62**	113	**96**
경상남도(74)	42	**21**	71	**59**
경상북도(34)	23	**11**	34	**31**
부산광역시(40)	8	**0**	38	**25**
울산광역시(9)	0	**0**	9	**2**
인천광역시(31)	20	**11**	30	**26**
제주특별자치도(26)	9	**0**	25	**22**
계	269	**130**	411	**342**

자료: 저자 작성

2) 입지유형별 지역소멸 고위험 지역의 변화

입지유형별 분석 및 비교를 위해 인구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지표를 산출하여 2015년과 2045년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8〉 어촌 입지유형별 비교

(단위 : 개, %)

구 분		어촌지역 (전체 421개)		어촌지역 (섬, 36개)		어촌지역 (동지역, 160개)		어촌지역 (읍면지역, 261개)	
		2015	2045	2015	2045	2015	2045	2015	2045
지역 소멸 지수	0.2미만	131	342	19	31	1	105	130	237
	0.5미만	269	411	33	36	40	151	229	260
	0.5~1.0미만	98	10	3	0	71	9	27	1
	1.0 이상	54	0	0	0	49	0	5	0
고령화율		19.79	31.41	30.65	40.13	12.89	26.82	25.48	38.76
가임여성비율(20~39세)		23.07	18.61	14.88	13.42	25.39	20.60	17.66	15.30
15세미만 비율		15.61	16.08	8.04	10.93	13.80	17.72	10.22	13.46

자료: 저자 작성

(1) 도시형어촌

도시형어촌(동지역)의 경우 2045년 지역소멸위험지역이 크게 증가하여 160개 지역 도시형어촌 중에 94%가 넘는 지역이 위험지역(0.5미만)으로 분류되었고 고위험단계 지역도 2015년 1개에서 105개 지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화율은 12.89%에서 26.82%로 2배 이상 증가하여 크게 악화된데 이어, 가임여성의 비율도 25.39%에서 20.60%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5세 미만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15세 미만인구의 감소 비율보다 전체인구감소 비율이 더 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안어촌지역 및 섬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 연안촌락형 어촌

섬지역을 제외한 연안촌락형 어촌의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15년에도 고령화율이 도시형어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45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38.76%이 되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0.5미만) 지역은 229개에서 260개 지역으로 1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은(0.2미만) 130개 지역에서 237개 지역으로 전체지역 중 90.8%가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바뀌는 결과를 보여주어 연안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서형어촌 인구추계 결과

도서형어촌의 경우는 2015년에 고령화율이 30%를 넘어섰으며, 가임여성 인구비율은 다른 지역(도시형어촌, 연안어촌)의 2045년 비율보다도 낮은 14.88%를 나타낼 정도로 이미 현재 상황에서도 매우 인구구조가 취약한 상황이다. 2045년에는 모든 항목의 수치가 더 악화되는 것은 물론, 모든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36개 지역 중 31개 지역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섬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연안어촌과 함께 대응방안이 당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지역현황 및 인구추계 결과 종합

어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도시지역 대비 매우 열악한 거주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

지역은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연안촌락형 어촌 대비 매우 열악한 수치들을 보여준다. 가령 교육 및 문화시설 등 청장년층의 거주에 필수적인 정주환경 요소의 부족은 어촌사회의 지속적인 공동화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어촌의 지역소멸위험을 심화시킨다.

〈표 3-19〉 어촌지역 여건 및 실태 종합

구분		주요결과	세부내용
인구구조		〈가임여성비율〉 · 도시지역 : 13.55 · 어촌(읍·면) : 7.23 〈고령화율〉 · 도시지역 : 13.62 · 어촌(읍·면) : 32.51 〈15세미만비율〉 · 도시지역 : 12.37 · 어촌(읍·면) : 7.89	• 가임여성 및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은 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40%수준)으로 나타났고, 고령화 비율은 오히려 2배정도 높게 나타남
일자리 현황		〈평균 종사자수〉 · 도시지역 : 526명 · 어촌(읍·면) : 341명 · 섬지역 : 230명	• 천명당 평균 사업체 종사자 수는 평균에서 어촌지역이 도시지역의 65%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 보다도 종사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공공인프라	교육시설	〈10개 미만 지역〉 · 도시 : 96(5.03%) · 어촌(읍면) : 164(60.52%) · 섬 : 32(86.49%)	• 교육서비스업은 도시지역에서 100개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어촌지역은 10개 미만 지역이 60%를 넘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시설	〈100명 미만 지역〉 · 도시 : 954(50.03%) · 어촌(읍·면) : 11(4.06%) · 섬 : 2(5.41%)	• 도시지역의 경우 보건시설당 노인인구수가 100명 미만인 지역이 50%이상으로 어촌지역의 4%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으며 농촌지역과 비교하여도 의료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문화시설	〈20개 미만 지역〉 · 도시 : 474(24.86%) · 어촌(읍·면) : 216(79.70%) · 섬 : 36(97.30%)	•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대부분 지역에서 10개 미만일 정도로 열악하며 평균 수에서도 농촌지역과 큰 차이를 보임
	주민편의시설	〈평균개수〉 · 도시지역 :39개 · 어촌(읍·면):26개 · 섬지역 : 14개	• 생활유지를 위한 생필품 등의 구매를 위한 소매점의 수가 도시지역대비 부족한 실정이며, 섬 지역을 고려한다면 농촌지역보다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제 4 장

인구소멸 어촌지역 심층조사 및 국내외 사례

제1절 인구소멸 어촌지역 심층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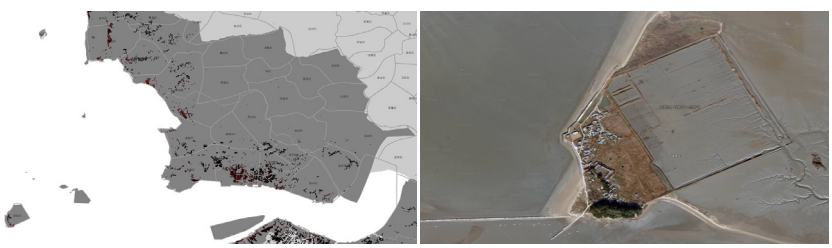
1. 도서형 어촌 현장조사

1) 충남 서천군 장항읍(유부도)

(1) 지역개요

유부도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에 위치한 0.790㎢의 작은 섬

〈그림 4-1〉 유부도 위치도 및 항공사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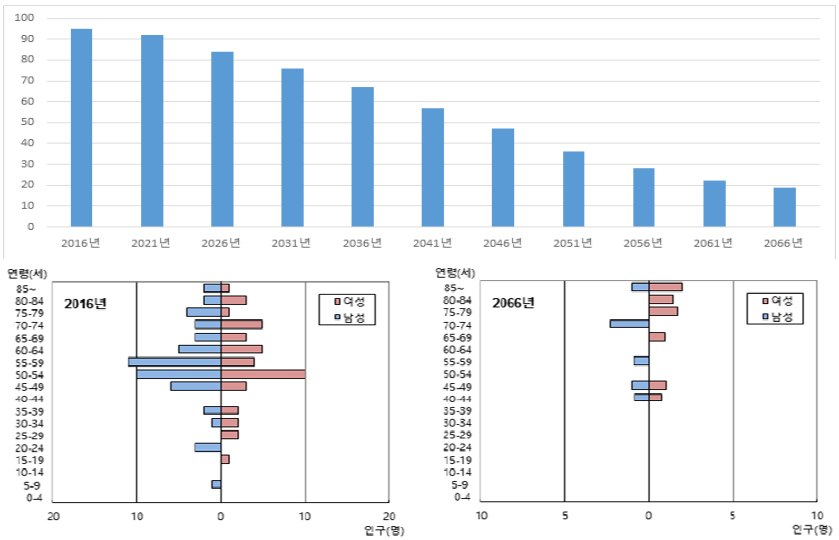
으로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의 유배지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 초반까지 어업과 염업 경제활동으로 약 150명 정도가 거주하였다.

(2) 인구감소 및 지역실태

가. 인구감소

유부도는 2016년 기준 95명이 거주하고, 이중 어업인은 3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유부도는 거주민의 평균연령이 약 70세이고, 50대가 지역 내 가장 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부도의 인구는 신규 유입이 거의 없어 2066년에는 19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20]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지역 내 재생산력이 없고, 외부로부터 인구유입도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지역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4-2〉 유부도 인구추정 결과 및 인구피라미드



자료: 이제연 외,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부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pp.160-161

20) 이제연·박진경(2017), p. 160.

나. 지역실태

유부도의 가장 불편사항은 지역 내에 소매점 등 편의시설이 없고, 선외기를 제외한 별도의 해상교통 수단이 없어 고령자들의 생활불편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어촌계의 선외기를 통해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유부도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젊은 층의 유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평균 70세의 고령화된 어촌사회의 여건으로 볼 때, 젊은 층의 유입이 필요하지만 패류(동죽, 가무락 등), 김 등 제한적인 어업활동 여건과 열악한 삶의 질로 인해 사실상 신규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4-3〉 유부도 지역현장

〈노후화된 주택으로 주거여건〉



〈유부도 선착장〉



〈발전시설 및 통신설비〉



〈유부도 마을어장(동죽, 가무락)〉



자료: 저자 직접촬영(촬영일자 : 2018년 5월 31일)

(3) 지역 여건변화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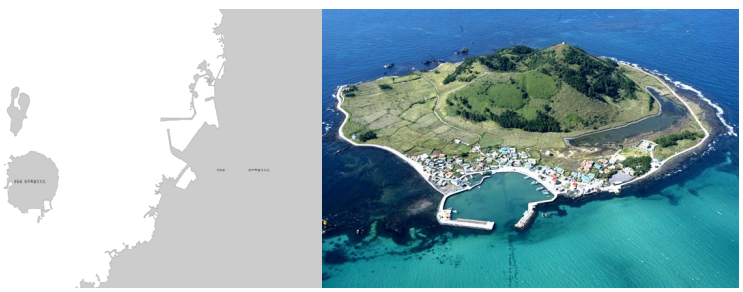
유부도는 최근 폐염전과 폐교를 활용한 생태관광과 세계자연유산(섬 갯벌) 등재 추진으로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으로 군산-유부도-개야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도 추진하고 있다. 유부도는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와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생태관광을 기반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 제주 제주시 한림읍(비양도)

(1) 지역개요

비양도는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0.587㎢로 해안선 길이 2.5㎞의 작은 섬이다. 비양도는 제주 한림항에서 여객선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나 1일 2~4회 빈도로 승선인원과 계절에 따라 선사에서 탄력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과 국가지질공원 지정 등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올레길 관광객들이 자주 찾고 있다.

〈그림 4-4〉 비양도 위치도 및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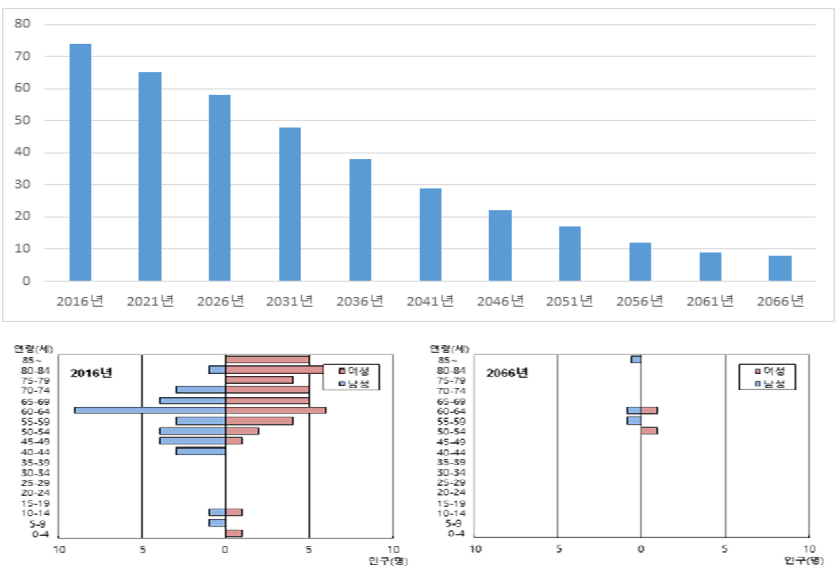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구글검색(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100777379178 (검색일: 2018. 6. 14.)

(2) 인구감소 및 지역실태

가. 인구감소

비양도는 제주 본섬과 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정주환경과 공공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6년 8명으로 지방소멸에 직면해 있다. 비양도에는 2016년 기준으로 20~39세의 가임여성이 0명으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양도는 60세 이상의 여성비중의 인구가 높은데, 이는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해녀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구구조가 유지된다면 결국 비양도는 무인거주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촌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5〉 비양도 인구추정 결과 및 인구피라미드



자료: 이제연 외,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부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pp.956-957

나. 지역실태

비양도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후화된 주택과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에는 현재 3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중학교 진학 시 육지로 이주하기 때문에 3년 내에 폐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양도는 고속 인터넷망, 행정기관, 보건진료소, 복합 휴게시설 등이 어항구역 내에 집중화 되어 있어 지역 내 공공서비스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올레(올레 14번 코스)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제주특화형의 소규모 식당, 민박 등 지역에 활력이 되고 있으나 다수의 지역주민은 해상교통 이용 시 불편사항과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4-6〉 비양도 지역현장

〈노후화된 빈집〉



〈폐교위기에 내몰린 초등학교〉



〈행정기관(리사무소)〉



〈비양보건진료소〉



자료: 저자 직접촬영(촬영일자 : 2018년 4월 20일)

(3) 지역 여건변화와 전망

비양도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이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비양도 어촌사회에 기회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 내 생태관광과 수산물 판매 및 식당, 체험관광 등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유입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올레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귀촌인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연대를 통한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3) 충남 보령시 오천면(호도, 녹도)

(1) 지역개요

호도는 총 면적 1.33㎢, 해안선 길이가 27km인 섬으로 보령의 대천항에서 22.5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지형이 여우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도라고 불리고 있으며 호도의 남쪽에 사슴섬이라고 불리우는 녹도가 위치해 있다. 녹도는 기존 1970~1980년대 어업이 매우 성행해 어업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였으나 인구감소로 인해 현재 일부 어업인만 남아 마을어장을 통한 양식, 안강망어업을 주로 하

〈그림 4-7〉 호도·녹도 위치도 및 항공사진



자료: 저자 작성, 구글검색(http://www.newsis.com/view/?id=NISX20110615_0008457072 (검색일: 2018. 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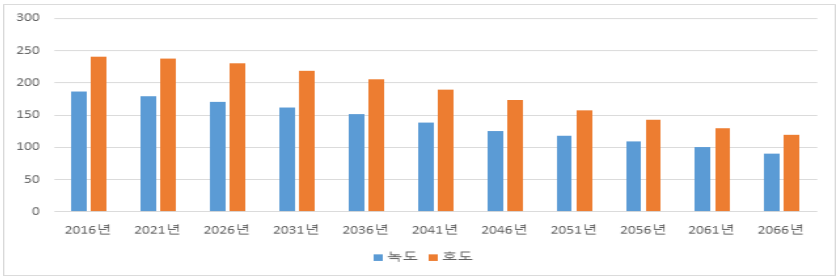
고 있다. 호도의 경우는 소형어선을 활용한 어업을 주로하고 있으며, 어업이외에도 자연경관을 활용한 민박, 식당 등의 관광업이 발달되어 있다.

(2) 인구감소 및 지역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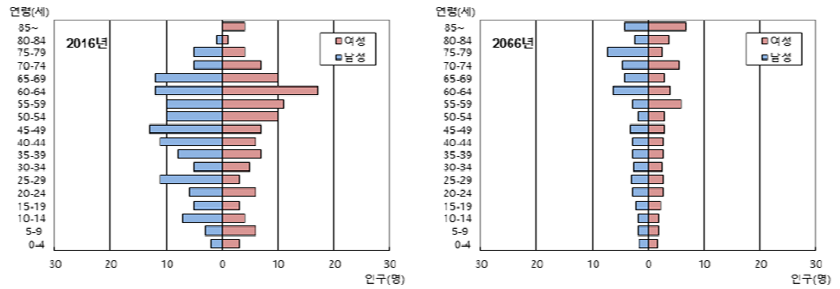
가. 인구감소

호도 및 녹도는 하계기간은 하루 2편, 그 외 기간은 하루 1편의 여객선만을 운행하여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노령화되어 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녹도는 100명 미만 호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인구유입을 위한 특별한 대응방안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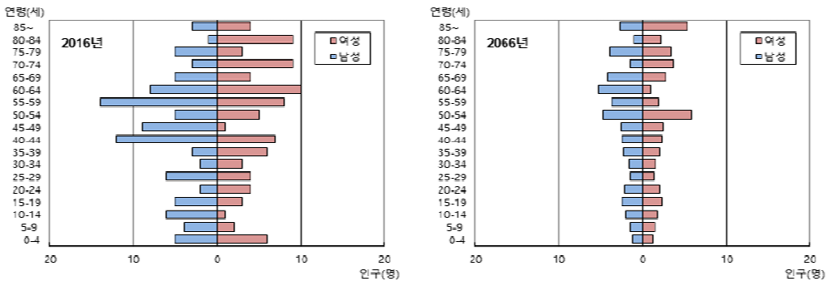
〈그림 4-8〉 호도·녹도의 인구추정 결과 및 인구피라미드



〈호도 인구피라미드〉



〈녹도 인구피라미드〉



자료: 이제연 외,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부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pp.128-131

나. 지역실태

녹도는 마을어업 및 어선 어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낚시관광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서비스 인프라(펜션, 마트 등)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득창출이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집이 노후화 되어 있어 빈집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반면, 호도의 경우는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켜 지역 내 마트, 보건소 등의 기본적이 생활서비스 시설이 입지하여 있으나 숙박시설의 경우는 소규모 민박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젊은 여성 귀촌자가 발생하여 빵집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3) 지역 여건변화와 전망

호도의 경우는 긴 해수욕장과 낚시 관광객을 위한 관광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녹도 역시 지속적으로 낚시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U턴형 귀촌인이 증가하여 펜션, 식당, 빵집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은 생활편의를 위한 소매점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녹도 0개, 호도 1개),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 편의서비스(ATM기기 비치, 카드결제 등)가 불가능

하여 물건을 사거나 비용을 지불할 때 매우 불편함을 야기 시킨다. 낚시 관광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위한 섬지역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실리도)

(1) 지역개요

실리도는 창원시 남동쪽 약 500m 떨어져 있는 섬으로, 면적은 215천㎡이며현재 55가구 122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실리도는 해안경관과 갯벌이 잘 발달하여 있으며, 볼락과 가자미 등이 잘 잡히는 낚시터로도 유명한 곳이다. 현재 마을주민 대부분은 어선어업 또는 마을어업(패류양식)을 주된 소득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림 4-9〉 실리도 위치도 및 항공사진



자료: 저자 작성, 구글검색(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html?cotid=6b63b570-0460-4700-adb7-73ace5b1ea31(검색일: 2018. 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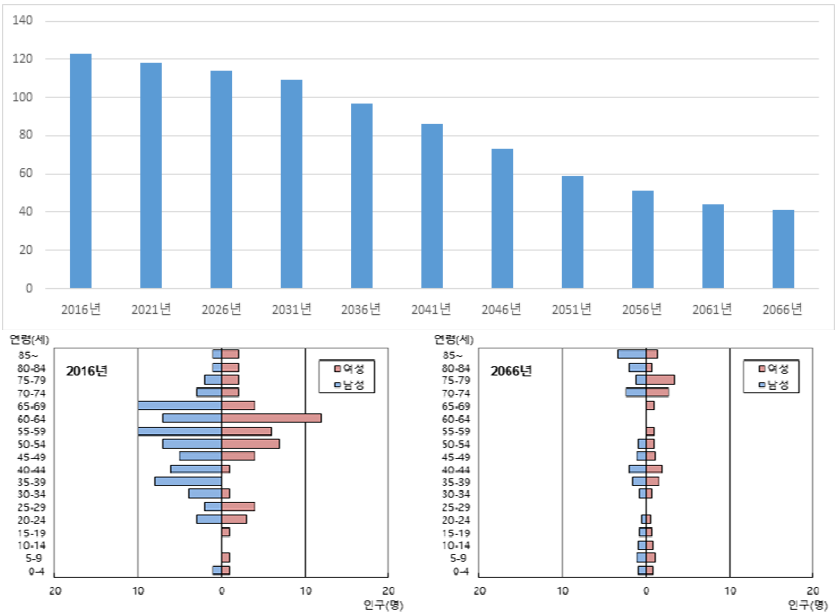
(2) 인구감소 및 지역실태

가. 인구감소

실리도는 다른 도서지역과 다르게 육지 및 도시와의 접근성이 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으며, 이는 어업기반의 소득 이외에는 다른 일자리가 없어 젊은세대의 유입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2066년에는 지금 인구의 1/3수준인 40여명 정도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 또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향후 지역소멸고위험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그림 4-10〉 실리도 인구추정 결과 및 인구피라미드



자료: 이제연 외,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부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pp.798-799

나. 지역실태

실리도는 육지에서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섬으로 다른 도서지역에 비해 접근성은 뛰어난 편이다. 배편도 하루 7회 정기 운행을 하고 있으나 육지와 거리가 멀지 않아 연락을 하면 임시 운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섬을 진입하고 나오는데 어려움은 없다. 마을 내에는 마트, 회관, 체육시설 등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단,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육지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도시지역(창원시)과 거리가 멀지 않아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좋은 접근성이 있음에도 섬이 침체되어 지는 이유는 주된 소득을 어업에만 의존하고 추가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방안 부재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둘레길 및 전망대를 설치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숙박시설 부족으로 체류형 관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마을 내에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을 활용한 식당, 숙박 등의 소득사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4-11〉 실리도 둘레길 및 전망대



자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C%8B%A4%EB%A6%AC%EB%8F%84+%EB%91%98%EB%A0%88%EA%B8%B8#imgId=blog11525833%7C69%7C221356934518_1192447909&vType=rollout(검색일 : 2018.10.20.); https://es.wikiloc.com/rutas-senderismo/cangweon-silrido-dulregil-teureking2014-02-08-8788516/photo-5178940(검색일: 2018. 10. 20.)

(3) 지역 여건변화와 전망

실리도는 현재 지속적인 낚시관광객의 증가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길 원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젊은 인력 및 지원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을 어촌계내에서도 어업만으로는 청년

을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실리도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접근성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젊은 인력들이 창원시로부터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전남 여수시 남면(금오도, 안도)

(1) 지역개요

금오도는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총면적 27.508㎢, 해안선 길이 64.5km의 섬으로 금오열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남면의 9개 리중 4개리(두모리, 심장리, 우학리, 유송리)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안도는 총면적 3,474㎢, 해안선 길이 29km이며 금오도 남단에 위치하여 안도대교로 연결되어 있는 섬이다. 두 지역모두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며, 금오도에 어촌계 9개, 안도에 2개가 양식 및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림 4-12〉 금오도·안도 위치도 및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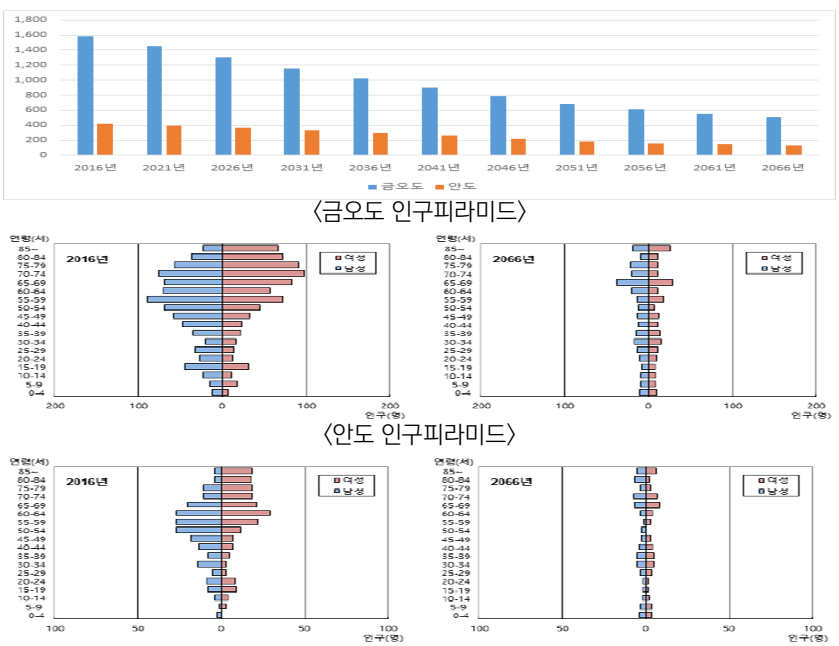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구글검색(http://koreatrails.tistory.com/27, 2018년 6월 14일)

(2) 인구감소 및 지역실태

가. 인구감소

금오도의 경우, 1980년대 인구가 5천명 가까이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기준 876세대, 1,625명이 거주하고 있다. 향후에도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절반 정도인 800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신규 인구유입이 절실한 지역이다. 안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고령화로 인한 어업의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그림 4-13〉 금오도·안도 인구추정 결과 및 인구피라미드



자료: 이제연 외,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부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pp.272-273, pp.278-279,

나. 지역실태

금오도 및 안도에는 어촌계가 총 11개가 존재하지만 현재 고령화로 인하여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촌계는 마을 어장을 활용하여 양식 및 맨손어업(해녀)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나 주로 맨손어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 양식장의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 외부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어촌계 마을어장을 통한 소득은 제한적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촌계 자체사업 및 지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추진 및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도의 경우는 마을자치회와 어촌계가 협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젊은 어업인을 유입시키고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어 어업 여건이 금오도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체 어촌체험마을 및 좌대낚시터를 직접 운영하는 등,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림 4-14〉 금오도·안도 지역현황



〈안도 선상낚시체험〉 〈금오도 비렁길〉

자료 : 이동원, “금오도 지구 섬관광활성화 방안연구”,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 2018, pp 51, 58

(3) 지역 여건변화와 전망

금오도 지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뛰어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해 40만 명이 넘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 발굴 및 운영이 미흡하여 주변여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어업인력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인력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촌계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금오도 두모어촌계의 경우, 어촌계원이 아니더라도 마을어장 어업활동에 참여시키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면 분담금을 일정부분 지급하여 준계원으로 대우함으로써 외부 인력을 금오도 내부로 유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남면사무소 및 지역주민이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 어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한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2. 연안촌락형 어촌 현장조사

1)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1리

(1) 지역개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에 위치한 인구1리는 현남면 면소재지가 있어 생활기반 시설이 다른 어촌지역에 비해 잘 발달된 지역이며 주변에는 인구항이 위치하여 어업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양양지역이 서핑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서핑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지역이 활성화되고 외부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림 4-15〉 강원도 양양군 인구리 위치도 및 항공사진



자료: 저자 작성, 다음지도(http://map.daum.net/, 2018년 10월 28일)

(2) 인구감소 및 지역실태

가. 인구증가

인구1리의 인구는 2000년 이래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으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련서비스업 증가 및 외부인구 유입으로 인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핑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5년전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360명이었던 인구는 2014년 317명까지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7월 기준 33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인구이기 때문에 아직 접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내 서핑 및 관련 서비스 사업을 하는 인구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지역실태

인구1리는 어업외에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서비스사업을 위한 외부 젊은

세대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현재는 그들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다. 더욱이 현남면은 이러한 기회를 더욱 살려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 주민과 외부유입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경관 정비, 산책로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행사 및 축제(프리마켓, 서핑대회, 영화제 등)를 추진하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지역주민과 같이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림 4-16〉 인구리 지역활성화 사업



〈인구해변 서핑체험〉 〈죽도 둘레길 및 전망대〉

자료: http://n240.ndsof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106;
http://redcolorworld.tistory.com/420(모든 자료 검색일: 2018. 10. 20.)

(3) 지역여건 변화와 전망

양양군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스포츠인 서핑에 최적화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으로 젊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주민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외부유입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입인구의 재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양양간 고소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으로 지역여건이 매우 좋아져 지속적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민관의 노력 하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강원도 삼척시 노곡1리(노곡어촌계)

(1) 지역개요

노곡1리는 삼척 노곡면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작은 어항인 노곡항이 위치하고 있다. 인구는 125명으로 5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20여명 정도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삼척시가 유치한 남부발전으로 인해 어업구역이 좁아져 어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발전소 건립 전 연 1억 원 정도의 어가소득이 현재는 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극심한 지역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4-17〉 노곡1리 위치도 및 항공사진





자료: 저자작성, 구글검색(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wanblue&logNo=220150176602&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2018년 10월 28일)

(2) 인구감소 및 지역실태

가. 인구감소

남동발전으로 인해 어업세력이 줄어들고, 소음으로 인한 지역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4년 166명이

었던 인구가 2017년 125명으로 3년만에 41명(약 25%)으로 줄어들어 이러한 추세로 감소되면 머지않아 마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외부에서의 인구유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면 2020년대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나. 지역실태

현재 노곡1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남부발전으로 인한 지역피해이다. 어업피해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생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부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어업보상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음과 먼지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업과 마을간 대립이 장기화 되고 있다. 발전소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의 경우는 지역 내(원덕읍)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 또는 사업에 투자가 불가능하며, 지역 내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유보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지역상황을 고려하고 지역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접근방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여건변화와 전망

노곡1리는 남부발전이라는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급격한 여건 변화가 발생한 지역이다. 따라서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생계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업구역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사업의 투자 및 추진방안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극심한 침체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을발전기금을 다양한 방면과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및 인력유입을 유도해야만 한다.

3) 통영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사량도, 욕지도, 용초도)

(1) 조사개요

어촌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통영지역 중 섬지역인 사량도, 욕지도, 용초도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 조사개요

부문	조사 항목
조사대상	경남지역 어촌마을 거주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경남 통영시 사량도, 욕지도, 용초도 주민
표 본 수	총 109명
조사방법	가구방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1:1 개별면접조사
조사기간	2017년 9월 11일 ~ 9월 29일 (약 3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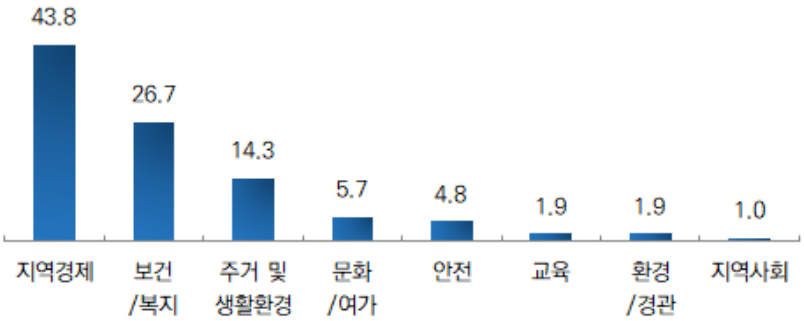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운영 연차보고서』, 2017, pp. 19의 내용을 토대 재작성

(2) 조사결과

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중요도

조사내용 중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정책항목은 지역경제(43.8%)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26.7%), 주거 및 생활환경(14.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여가(5.7%), 안전부문(4.8%)을 제외하면 나머지 교육, 환경, 지역사회 부문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8〉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중요도



자료: 해양수산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운영 연차보고서』, 2017, p. 138

나. 7대 정책 부문별 만족도

정책 중요도를 바탕으로 부문별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세부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만족도(10점 만점)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7대 영역의 부문별 만족도는 대부분 6점 미만으로 삶의 질 여건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병원, 약국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이들을 위한 보건·복지에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어촌지역에 어린자녀들의 보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주생활기반 항목에서는 기초인프라, 생필품, 대중교통 등에 대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거주에 필요한 인프라 및 서비스의 확충이 시급해 보인다. 안전부분에서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연재해 및 기타 재해로부터는 안전함을 느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문화·여가 항목은 모두 3점대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어린 학생부터 젊은 청년세대를 위한 기반시설 및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젊은 세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 및 일자리 부분도 어업을 제외하고 특별한 소득창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한 소득창출 방안 및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표 4-2〉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부문	평균점수		설문문항
보건·복지	4.98	4.65	•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4.44	•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4.13	•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5.71	•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5.80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주생활기반	5.06	5.88	•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5.12	•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3.73	•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4.6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6.00	•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안전	6.19	7.88	•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7.43	•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4.71	•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5.39	•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5.46	• 어업작업 시 다루는 기계장비/기구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단위 : 점)

부문	평균점수		설문문항
교육	3.65	4.06	•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3.52	•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 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37	•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경제활동·일자리	4.61	4.06	•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4.90	•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4.94	• 어업과 어촌 자원을 활용한 수산물 가공 판매, 어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여가	3.58	3.64	•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52	• 문화·체육강좌,·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경관	5.89	6.74	•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5.26	•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65	•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전체	4.86		

자료: 해양수산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운영 연차보고서』, 2017, p. 140

제2절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한 국내외 사례연구

1. 해외사례

1) 일본 지방창생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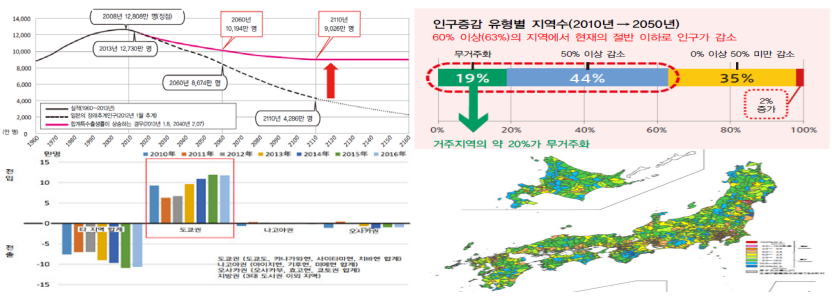
(1) 일본의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 현황 및 전망

일본은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라 1999년 3,232개 시·정·촌(市·町·村)이 2010년 1,727개소로 통폐합되었다. 일본사회는 2008년 인구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2100년까지 급감하는 인구절벽 현상이 전망되었다. 1,727개 시·정·촌 가운데 896개가 소멸하고, 523개는 정주인구 1만 명 이하, 19%인 328개 시·정·촌은 무거주화(無居住化)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과 도쿄권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과밀화가 야기한 국토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베정권은 2014년부터 지방창생 전략을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4-19〉 일본사회의 인구감소와 대응전략 필요성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총무성, 내각관방 내부자료(2018.3.5.~3.6 현지방문 시 회의자료)

일본 수산청은 어업센서스에 근거하여 어항 및 항만배후의 어가 4가구 이상의 취락을 구획하여 어업집락을 설정하고, 어업집락을 입지유형별로 도시형, 중간형, 한계형으로 구분하여 한계지역으로 진입하였거나 장래에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집락을 모두 1,686개 집락(35.4%)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형은 1,925개 집락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인 도시한계형은 58개소로 전체의 3%로 나타났다.

중간형은 2,440개 집락으로 이중 55세 이상 인구비율이 50% 이상

이고, 고령화율이 50% 미만인 준한계형은 1,285개 집락으로 장래에 한계형 마을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계형은 401개 집락으로 한계화 전기형은 358개소, 한계화 후기형은 43개 집락으로 나타났다.

〈표 4-3〉 일본의 어업집락 입지유형별 지방소멸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세부내용	집락수
계	-	4,766 (100.0)
도시형 (1,925집락)	대도시형(특3종 어항배후집락 8개소 포함) ① 배후인구 5,000명 이상(91개 집락) ② 특3종 어항배후 등 도시입지의 유통·가공 거점	91 (1.9)
	도시일반형(도시계획구역 또는 용도지역 지정의 어항배후집락) ③ 존속형(55세 미만 인구 50% 이상) ④ 준한계형(55세 이상 인구 50% 이상) **⑤ 도시한계형(65세 이상 인구 50% 이상) (58개 집락)**	1,834 (39.2%)
중간형 (2,440집락)	존속형(55세 미만 인구비율 50% 이상) - 장래 어촌사회의 건전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락	1,155 (24.7%)
	준한계형(55세 이상 인구비율 50% 이상, 고령화율 50% 미만) - 장래 한계형 마을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취락	**1,285**
한계형 (401집락)	**한계화 전기형(집락인구 20명 이상, 고령화율 50% 이상)**	**358 (7.7)**
	한계화 후기형(집락인구 20명 미만, 고령화율 50% 이상)	**43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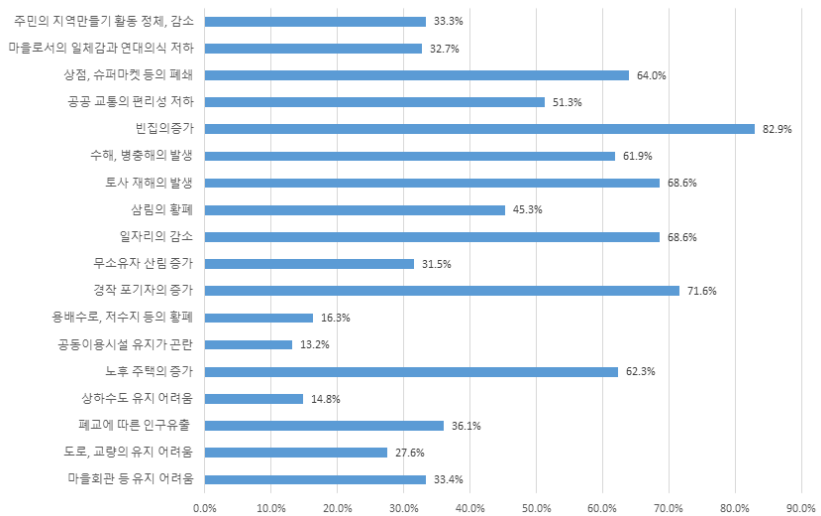
자료: 일본 수산청 면담자료(2018. 3. 5)를 토대로 저자가 정리

(2)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점

한국보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총무성을 중심으로 과소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업집락과 어업집락에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이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농·어업집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경작 포기자의 증대(71.6%), 일자리 감소(68.6%), 상점 및 슈퍼마켓의 폐쇄(64.0%), 빈집의 증가(82.9%), 노후가옥의 증가(62.3%), 수해·병충해 등의 발생(61.9%) 등 산업기반, 정주환경 재해·환경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0〉 일본 지방소멸에 따른 농·어업집락에서 발생하는 지역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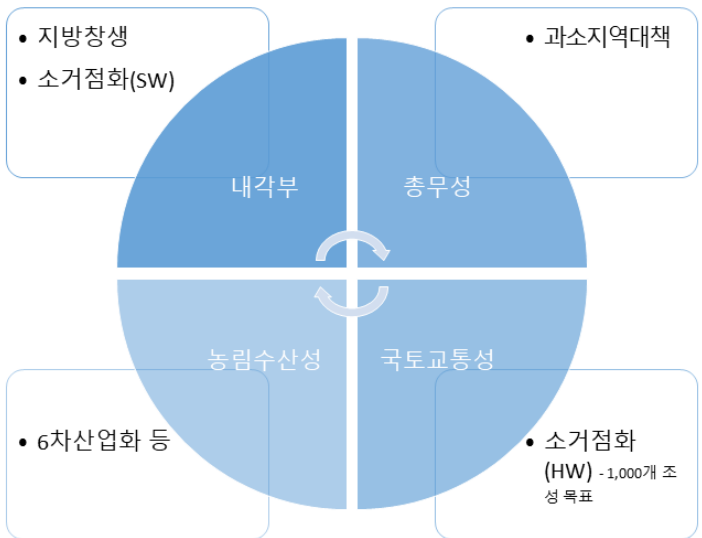
자료: 일본 총무성, 과소지역의 취락 상황에 관한 현황 파악조사, 2016의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3) 대응전략

일본정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 전망과 도쿄권 인구집중에 따른 국토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창생(地方創生) 전략을 내각부 중심으로 2014년부터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창생 전략은 내각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성(소거점화), 총무성(과소지역 대책), 농림수산성(6차산업화) 등 여러 부처

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하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부처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21〉 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응한 일본의 범정부 대응전략



자료: 저자 작성

가. 내각부 지방창생

내각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법(2014년)」을 제정하고, 이는 도쿄권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지방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마을, 사람,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각부는 각 부처별로 지원인력을 통해 지방창생본부를 설치하고, 2060년 인구 1억 명 유지와 도쿄권의 인구집중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지원, 재정지원, 인적지원 등에 연간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표 4-4〉 마을, 사람, 일자리와 창생의 종합전략

정책방향	정책목표	주요 시책내용
사람과 일자리 창생의 선순환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 창출 (청년 일자리수, 여성취업률, 외국인 관광소비액 등)	지역의 중핵기업, 중핵기업 보조지원 - 3년간 2,000개사 지원
		관광업 강화와 지역 연계체제 구축 - 방일외국관광객소비액 8조엔('16년 3.7조엔) - 세계수준의 DMO 형성 100개소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 6차산업화 시장 10조엔('15년 5.5조엔) - 농림수산업 매출액 1조엔('16년 7,502억엔)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 (지방이주건수, 지방대학 진학률 등)	지방이주 촉진 - 연간 이주건수 11,000건('16년 6,800건)
		일본형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구상의 추진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방채용·취업 확대 - 채용자수 4만 명 증가
		지방대학 등 활성화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자녀교육 지원 (청년취업률, 남성육아 휴업률, 첫째자녀 출산 후 여성취업률 등)	청년층 고용대책 추진
		임신 출산, 자녀교육 지원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일하는 방식의 변화)
선순화 지원, 마을 활성화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소거점화 지역수, 정주자립권 협정체결 등)	소거점(다세대교류, 다기능 집락생활권) 형성 지원 - 소거점 100개소('17년 908개소) - 지역운영조직 5000단체('16년 3,071단체)
		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 형성 - 콤팩트화와 네트워크 형성,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정주자립권 형성 추진
		대도시권의 안심생활 기반 확보

자료: 일본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사무국 면담(2018.3.6.)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나. 국토교통성 콤팩트시티(소거점화)

일본 국토교통성은 내각부와 함께 '소거점(小さな拠点) 정책[21]'을 통해 취락의 생활서비스를 총족시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탈 방지와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소거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산간지역 등 핵심취락(어업·농업집락)에 생활서비스와 지역활동의 장을 집적화시켜 주변 취락과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유휴시설의 활용 등 지방의 마을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4-22〉 국토교통성 소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 개념



자료: 일본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사무국 면담(2018.3.6.)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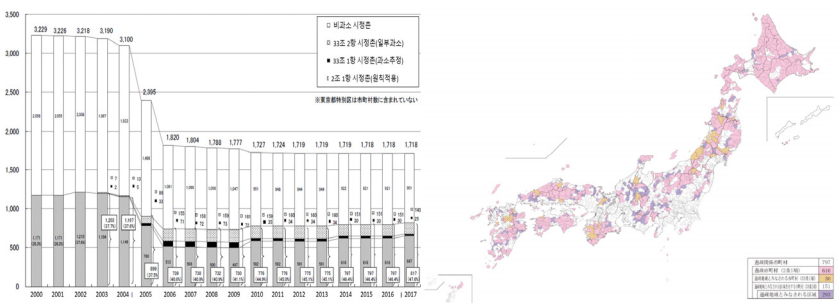
21) '소거점' 만들기는 집락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일생생활 관련 서비스 기능을 집약시켜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조성·운영하는 전략임

또한 국토교통성은 소거점을 중심으로 '향토집락생활권(ふるさと集落生活圏)'을 형성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역내·외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작은 거점을 만들어 의료, 복지, 쇼핑 등의 일상생활 관련 시설을 집적화시키고, 이용자 중심형 대중교통 등 접근수단을 통해 소거점과 주변 집락을 연계시킴으로써 형성되는 생활권을 의미한다.[22]

다. 총무성 과소지역 대책

일본 총무성은 「과소지역 자립촉진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위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정책은 인구 및 재정력 요건[23]을 충족하는

〈그림 4-23〉 일본 과소지역 지정 추이 및 현황



자료: 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kasomain0.htm(검색일: 2018.3,9.)

22) 임상연 외,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동향과 시사점, 작은거점 만들기와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을 중심으로,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2014.12, p.4

23) 인구요건 ① 1960~1995년(35년간) 인구감소율 30% 이상
② 1960~1995년(35년간) 인구감소율 25% 이상, 고령화율(65세 이상) 24% 이상
③ 1960~1995년(35년간) 인구감소율 25% 이상, 청년비율(15세~30세 미만) 15% 이하
④ 1970~1995년(25년간) 인구감소율 19% 이상
재정력 요건 : 재정력지수(1996년~1998년 평균) 0.42 이하

시·정·촌(市·町·村)의 집락을 대상으로 하고, 과소지역은 2000년 전체 3,229개 시·정·촌 중 1,171개 36.3%였으나, 이후 시정촌 통폐합 과정을 거쳐 2017년 기준으로 전체 1,719개 중 817개 47.6%로 나타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총무성은 「과소지역 자립촉진특별조치법」에 따른 인구과소지역의 산업진흥시설, 후생시설(하수처리, 소방시설, 보육소 등), 교통통신시설(주민 교통수산 확보, 해상교통시설), 교육·문화시설(공립 초등, 중학교 및 의무교육 학교 등)에 연간 4,5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표 4-5〉 일본 총무성의 과소지역 지원방안

정책방향	주요 시책내용
1. 산업 진흥 시설 등	• 지역산업, 관광,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
	•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촌 도로 및 시정촌이 관리하는 도도부현 도로 및 농로, 임업로 · 어항 시설 · 항만 시설
	• 지역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시설
	• 중소기업의 육성이나 기업의 도입이나 기업의 홍보를 위해 시정촌이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에 사용하기 위한 공장 및 사무실
	• 관광, 휴양에 관한 시설
	• 농림어업의 경영 현대화 시설
	• 상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 이용 시설
2. 후생 시설 등	• 하수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 화장터, 소빙시설, 간이수도시설
	• 화장터, 소방시설
	• 노인 보건 또는 복지의 향상 또는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 보육, 아동관
	• 시정촌 보건 센터 및 모자 건강 포괄지원센터
3. 교통 통신 시설	• 시정촌 도로 및 시정촌이 관리하는 도도부 현도로 · 교량
	• 농로, 전기 통신에 관한 시설, 재설기계
	• 교통편에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나룻배 시설
	• 주민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지역 간 교류를 위한 철도 시설 및 철도 차량 및 궤도 시설 및 궤도 차량

정책방향	주요 시책내용
4. 교육 문화 시설	•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의무교육 학교 및 시립유치원, 고등학교, 중등교육 학교 및 특별 지원 학교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의무교육 학교 또는 시립 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과정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학교 급식시설 · 설비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의무교육 학교 또는 시립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나 특별 지원 학교의 교직원 주택
	• 시립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 도서관, 집회시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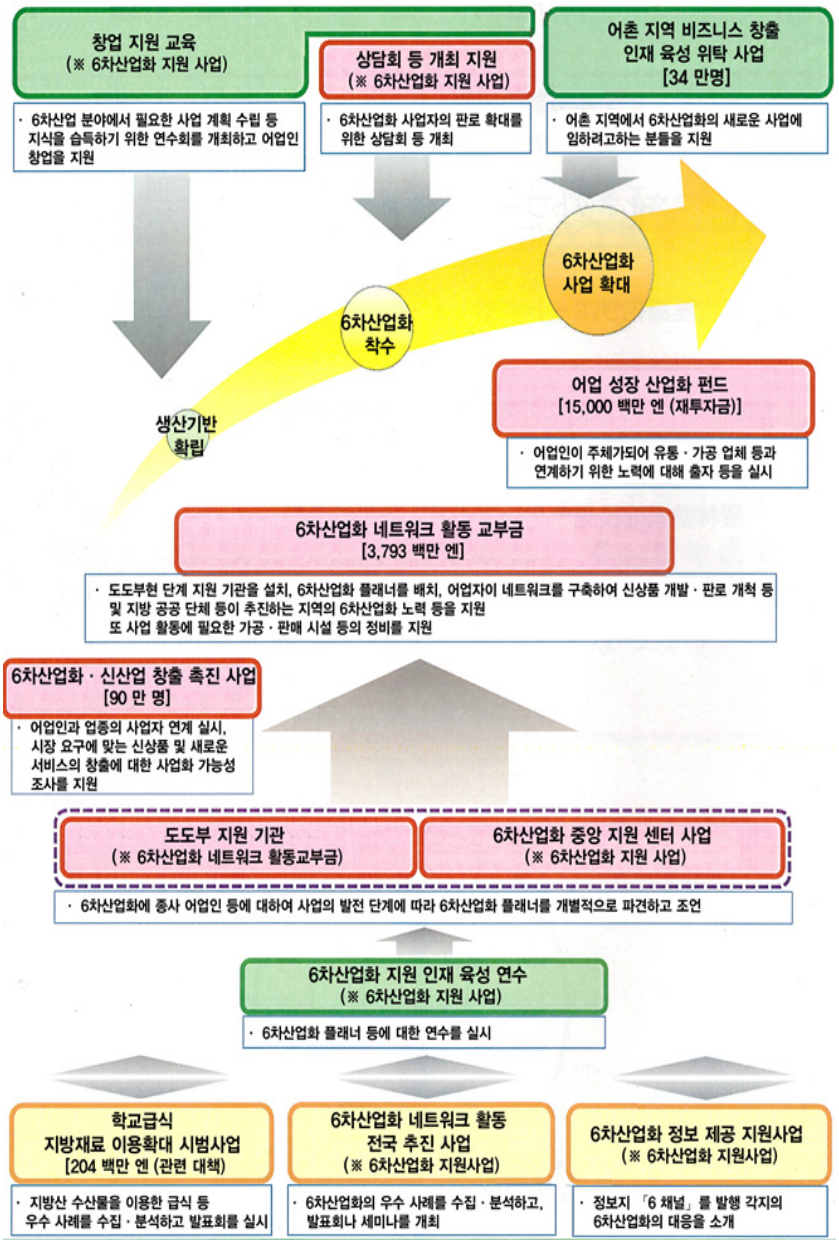
자료: 일본 총무성,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사무국 면담(2018.3.6.)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라. 농림수산성(수산청) 6차산업화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1년 농림수산업의 6차산업화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12년에는 지역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6차산업화 및 지산지소법'으로 전환하였고, 농림어업인이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다른 법률의 특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농촌 6차산업화 정책에 따른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농림어업성장산업화펀드'를 도입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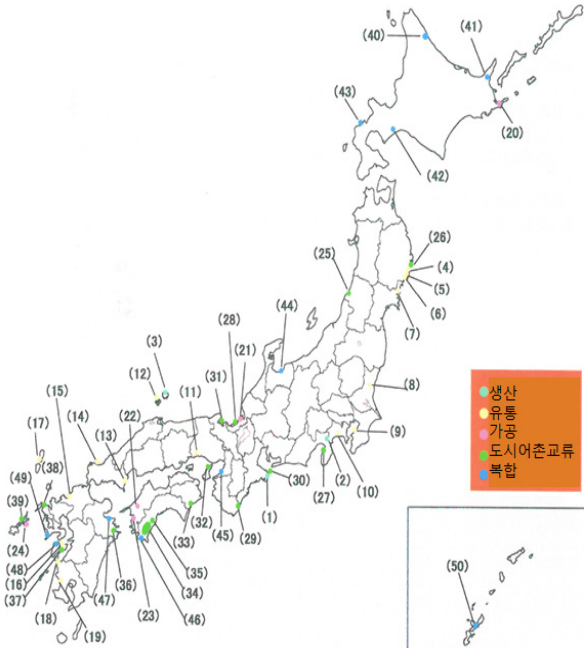
일본 농림수산성은 어촌활성화를 위해 어촌지역에 6차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50개소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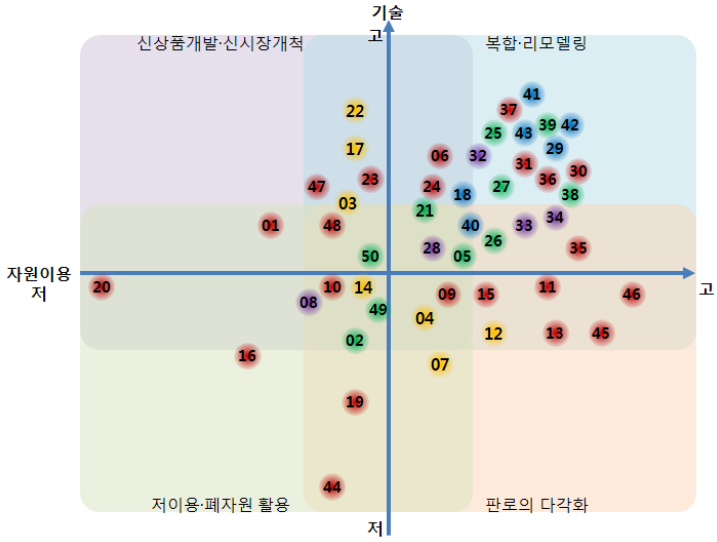
〈그림 4-24〉 일본 농림수산성 6차산업화 추진체계



자료: 농림수산성식료산업국 「農林漁業の成長産業化に向けて」2014

〈그림 4-25〉 일본 수산청 수산업·어촌 6차산업화 추진 사례





자료: (재) 어항어장어촌종합연구소, 어촌활성화 사례분석과 효과평가, 2015, p.133과 그 세부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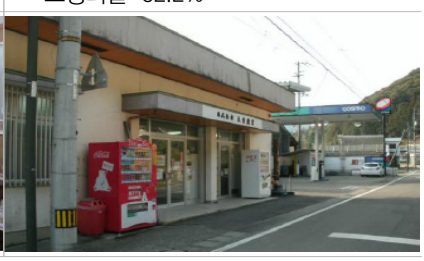
(4) 지방창생 전략의 성과

가. 생활서비스 향상 사례

지방창생은 소거점화 전략(컴팩트시티)을 통해 고령화된 농어촌지역에 식료품, 연료 등 생활필수품을 판매하여 인접지역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서비스를 향상시킨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주민 생활서비스는 간이우체국, 식당, 미용실, 금융, 음식, 교류 등의 기능을 갖춘 소거점을 형성하고, 지역주민은 중심시가지까지 외출하지 않고 이동거리와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시마네현 운난시와 고치현 시만시 오오지구 사례에서는 고령화된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거점으로 형성된 지역과 주변의 농업집락(農業集落)으로부터의 거리와 시간을 단축(시마네현 운난시 10㎞, 20분, 고치현 시만시 15~20㎞, 30~40분)시켜 생활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거점 형성을 위한 인프라는 지자체의 지원이나 보조없이 지역주민이 직접 개설자금이나 회사설립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자구적인 노력과 애향심이 운영·관리의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

〈표 4-6〉 지방창생을 통한 주민 생활서비스 향상 사례

〈시마네현 운난시〉	〈고치현 시만시 오오지구〉
• 인구 : 317명(139세대) • 고령화율 52.4%	• – 인구 : 270명(122세대) • – 고령화율 52.2%
	

〈시마네현 운난시〉	〈고치현 시만시 오오지구〉
• 쇼핑약자 위한 상점(마이크로 슈퍼) 개설 거리단축 : 10㎞(20분) 상품 아이템 : 800개 아이템으로 증가 • 지역주민 개설자금 마련, 협의회 상점 운영	• 지역주민이 직접 출자하여 마을회사 설립 (주유소 및 식료품점) 거리단축 15~20㎞(30~40분) • 인구유출 및 이농방지

자료: 일본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小さな拠点及び地域運営組織形成による効果』, p4, p.7.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

나. 지역주민 고용창출 사례

지방창생 전략은 소거점화 도입으로 식료품, 연료 등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산간 지역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지방창생의 소거점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지역 내 지역주민의 소중한 일자리가 되고 있다.

나가노현 알프스마을의 미치노에키(도로휴게소)는 베이커리(정규직 1명, 파트타임 14명), 농산물직판장(정규직 4명, 파트타임 4명), 잡곡 레스토랑(정규직 1명, 파트타임 3명) 등 3개 점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총 27개의 고용효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알프스마을의 미치노에키(도로휴게소)는 미니 크로와상이 유명해져 현 밖의 지역에서도 구매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히로시마현 NPO법인이 운영하는 미치노에키(도로휴게소)는 향토음식을 뷔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11명의 고용창출과 편의점, 농산물직판장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표 4-7〉 지방창생을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사례

〈나가노현 알프스마을(미치노에키)〉	〈히로시마현 NPO법인(지역재생 프로젝트)〉
• 인구 : 824명(231세대) • 고령화율 48.7%	• 인구 : 9,217명(3,533세대) • 고령화율 46.4%
	
• 중산간지역 미치노에키(도로휴게소) 운영 베이커리, 농산물직판장, 식당 • 3개 점포에서 27명 고용창출 효과 베이커리(정직원 1명, 파트직원 14명) 농산물직판장(정직원 4명, 파트직원 4명) 잡곡 레스토랑(정직원 1명, 파트직원 3명)	• NPO법인이 미치노에키(도로휴게소) 운영 향토음식을 뷔페 형태로 제공(수지 개선) • 편의점, 농산물직판장 등 시너지효과로 연간 4만 명 집객효과 • 정규직 6명, 파트직원 5명, 11명 고용창출 • 지역의 여성 인력을 통한 일자리 효과

자료: 일본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小さな拠点及び地域運営組織形成による効果』, pp.9-10.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

다. 지역주민 소득제고 사례

시즈오카현의 오이마타지구는 소거점 형성을 통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미치노에키(도로휴게소)를 지역주민이 직접 자금을 마련하여 개설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있다. 인근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와 식당운영을 통해 연간 4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역 내 여성인력의 고용과 지역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표 4-8〉 지방창생을 통한 소득향상 사례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오이마타지구〉

- 인구 : 237명(78세대)
- 고령화율 34.6%



- 시즈오카시와 지역주민의 미치노에키(도로휴게소)를 개설
  도시민과 농산촌 교류(가공·판매, 음식, 관광안내)
- 과소지역의 고령자 자택에서 도로휴게소까지 버스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 지원
- 연간 약 4억원 매출(농산물 판매 80%, 식당 매출 20%)
- 출장판매를 통해 매출 증가
- 농가 여성인력 15명의 소득 향상과 지역활동에 기여

자료: 일본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小さな拠点及び地域運営組織形成による効果』, pp.12-13.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

라. 시마네현 아마쵸(海士町) 사례

아마쵸(海士町)는 시마네현에 위치한 4개 섬 가운데 하나로 1950년 인구 약 7,000명에서 2015년 2,353명으로 감소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에 내몰렸다.

〈그림 4-26〉 시마네현 아마쵸 위치 및 전경



자료: 구글검색(http://www.dozen.ed.jp/access/, 2018년 10월27일), 저자촬영(2018년 3월 8일)

특히, 관내 고등학교는 대학진학과 취업 등 학생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본토로 이주하게 되면서 지역쇠퇴에 따른 빈집, 상점 폐업, 대중교통 이용 저하 등 생활기반, 산업기반, 집락기능 등 지역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나타났다.

아마쵸는 섬의 지역재생을 위한 전략으로 '자립·도전·교류'를 설정하고 행정·재정의 개혁, 지역자원을 브랜드화하여 지역산업 육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섬 유학과정과 미래 인재의 양성, 생활서비스 소검점화 등 지역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아마쵸는 공무원의 임금을 직급별로 삭감하고,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올려 연간 20억 원의 재정을 절약하는 등 지역재생을 위한 행정과 지역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지방창생을 이끌기 위해 교류촉진과, 지산지상과(地産地商課), 산업창출과 등 부서를 신설하고, 이들 부서는 소거점화 지역 내에 365일 근무체제를 마련하여 아마쵸의 지역재생 사업을 견인하였다.

둘째, 아마쵸는 교류촉진을 통해 본토에서 청년인재를 유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구상을 통해 각 부처별 보조사업 매칭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굴, 오징어, 전갱이 등 지

역 내 주요 수산물은 본토까지 이격거리에 따른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CAS 냉동 시스템[24]'을 도입하여 선도유지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연간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전통적으로 내려온 재래종 흑우를 1,600두 규모로 사육하고, 아마쵸 브랜드를 통해 본토로 반출하여 고가에 판매하고, 쌀은 굴 껍질과 흑우 배설물을 천연퇴비로 사용하여 '섬이 키우는 쌀'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일본 평균 쌀 가격 보다 4배 이상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 4-27〉 아마쵸의 농수산 지역산업의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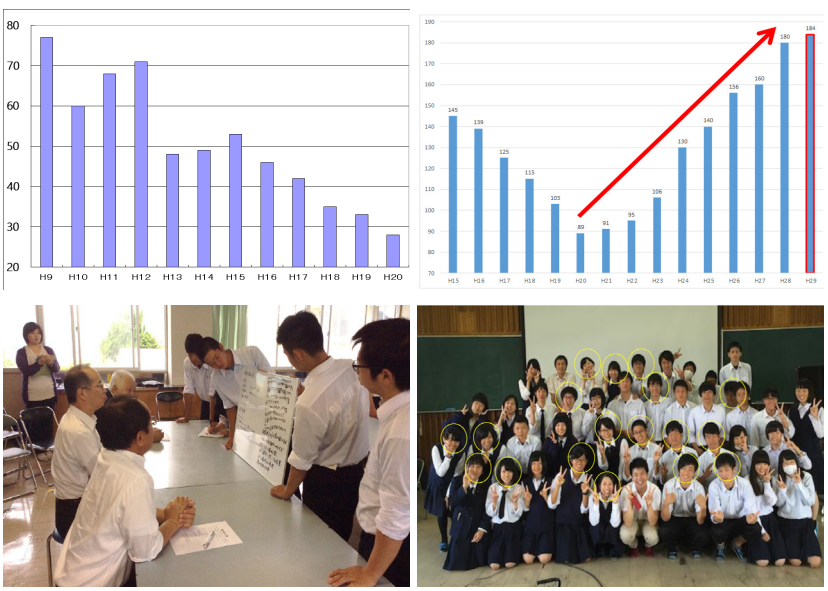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아마쵸 현장조사에서 공무원 발표자료(2018년 3월 8일)

24) CAS(Cell Alive System) : 전자기장 및 기계적 진동을 사용하여 식품 질감을 파괴하는 얼음 결정 형성을 제한함으로써 일반 냉동보다 더 신선하게 임식을 보존할 수 있는 급속냉동 시스템

셋째, 아마쵸는 인구 과소지역에서 초·중·고 학교가 폐교되면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재생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학교 재건을 지역재생의 기반으로 인식하였다. 아마쵸는 매력적인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전국의 우수한 교원과 주민참여를 위한 추진조직을 결성하고,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사업성과가 일본 전역에 전파되면서 섬 유학생이 증가하였다. 아마쵸는 매력적인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미래의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며, 아마쵸의 지역산업을 이끄는 주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4-28〉 아마쵸의 매력적인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효과



자료: 저자 작성 아마쵸 현장조사에서 공무원 발표자료(2018년 3월 8일)

넷째, 아마쵸는 여객선터미널을 복합시설로 조성하여 행정서비스, 관광안내, 소매점, 식당, 공연장, 대중교통 연계서비스, 교육시설, 보육원 등 생활서비스를 집적하여 주변 집락 간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아마쵸는 지역주민과 I턴 이주자들을 위한 주거단지(해바라기촌)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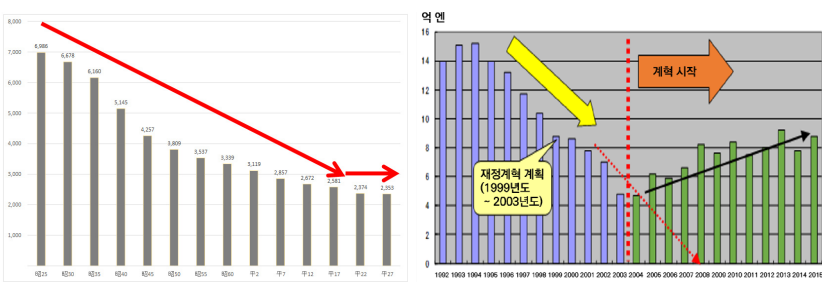
〈그림 4-29〉 아마쵸의 소거점화 및 I턴 이주자 거주단지



자료: 저자 직접촬영(2018년 3월 8일)

아마쵸 지역재생 사업에 따른 성과는 전국적으로 566명(384세대)의 I턴 이주자가 정착하였고, 2010년 인구가 2,374명에서 2015년 2,353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림 4-30〉 아마쵸 지역재생을 통한 인구추이와 지방재정



자료: 저자 작성 아마쵸 현장조사에서 공무원 발표자료(2018년 3월 9일)

마. 가가와현 및 오카야마현의 섬지역 사례

일본 오카야마현과 가가와현 사이에 나오시마, 데시마, 이누시마 등 12개 섬으로 구성된 세토우치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나오시마 등 주요 섬들은 제련산업과 어업이 쇠퇴하면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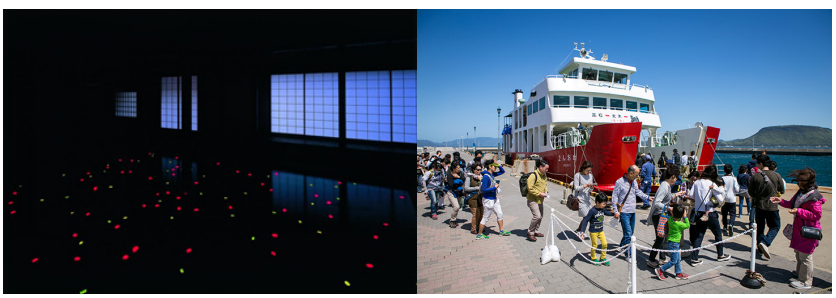
〈그림 4-31〉 세토우치 섬지역 현황



자료: 저자 작성

지자체, 예술가, 지역주민 등은 섬지역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세토우치 섬 예술제'를 매 3년마다 구상하고, 섬의 자연환경, 빈집 등 정주환경 정비, 해상교통 개선 등을 통하여 섬에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그림 4-32〉 빈집 이에(家) 프로젝트 및 해상교통



자료: 저자 작성(촬영일자 : 201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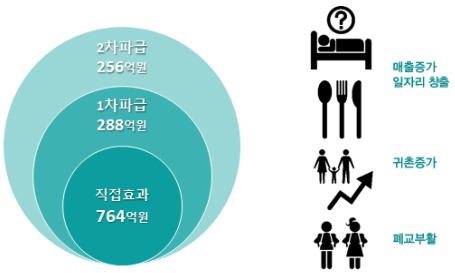
〈그림 4-33〉 세토우치 예술제 관람객



자료: http://benesse-artsite.jp/en/story/20181225-1106.html(검색일: 2018. 6. 11.)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실행위원회는 세토우치 섬 지역 일원의 국제예술제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764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개최기간 내 관광객수는 104만 명으로 이중 20~30대의 여성 관광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소비금액은 숙박객의 경우 5만 3,127엔, 당일 관람객은 1만 4,646엔으로 추정하였다. 숙박관광객의 1인당 지출비용의 증가는 지속적인 해외 관광객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세토우치 예술제는 젊은 청년층의 자원봉사자가 30만 명에 이르면서 지역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림 4-34〉 세토우치 섬 예술제 경제적 효과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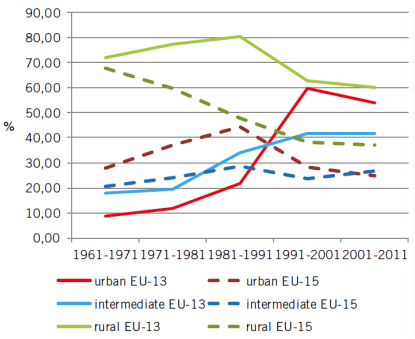
2) EU의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s) 정책

(1) 유럽의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격차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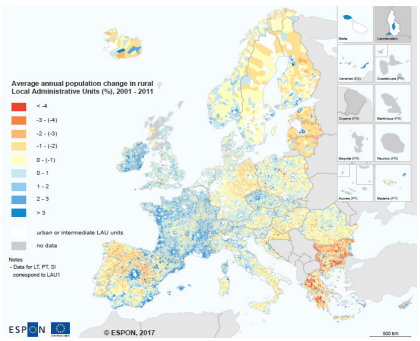
유럽지역의 인구는 1961년부터 2011년 기간에는 약 24% 증가하였으나 농촌지역의 인구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60년에는 농어촌의 인구비율이 70%에 이르렀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부와 동유럽지역(EU-13) 보다 서유럽지역(EU-15)이 인구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4-35〉 입지유형별 인구비율 및 농어촌 우세지역의 인구증감율

〈입지유형별 인구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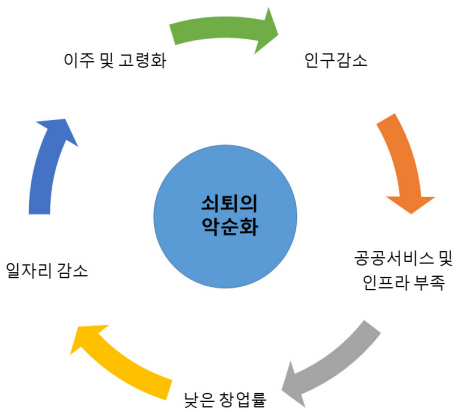
〈농어촌지역 인구증감율(2001-2010)〉



자료: EU, *Policy Brief: Shrinking rural regions in Europe*, 2017, p. 3, p. 5

유럽 농어촌지역개발 네트워크(ENRD : European Network Rural Development)는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쇠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개발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공공 및 민간섹터의 어려움, 지역상권의 약화, 공공서비스의 취약성 등을 제시하였다.[25]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쇠퇴 문제점은 ⅰ) 인구감소 → ⅱ)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 ⅲ) 낮은 창업률 → ⅳ) 일자리 감소 → ⅴ) 이주 및 고령화가 반복되면서 지역문제를 심화시킨다.

〈그림 4-36〉 지역쇠퇴의 악순환



자료: EU, "Smart Villages Revitalising Rural Services", *EU Rural Review*, No. 26, 2018, p. 8

(2) 스마트 빌리지 정책의 도입

가. 스마트 빌리지의 개념

유럽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전략은 스마트 마을이다. 이는 커뮤니티를 기초단위로 공공서비스 거점화, 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서비스 기능의 극대화, 첨단화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25) EU(발행연도), p. 6.

변화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스마트 개념은 첨단기술, 마을-도시 간 연계, 협력과 연대의 구조 설정, 정형화 되지 않은 창의적 접근을 의미한다.

〈그림 4-37〉 스마트 마을의 핵심가치 및 개념



1.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2. 공공서비스의 예산 절감과 거점화 등 지역 해결책 모색
3. 소규모 마을과 도시 간 연계성 강화
4. 저탄소, 선순환 경제 등 농어촌지역의 역할을 극대화
5. 농어촌지역의 디지털화 장려

자료: EU, "Smart Villages Revitalising Rural Services", *EU Rural Review*, No. 26, 2018, pp. 7-8.

〈그림 4-38〉 스마트 마을의 주요내용

〈인구감소 대응〉



〈자연재생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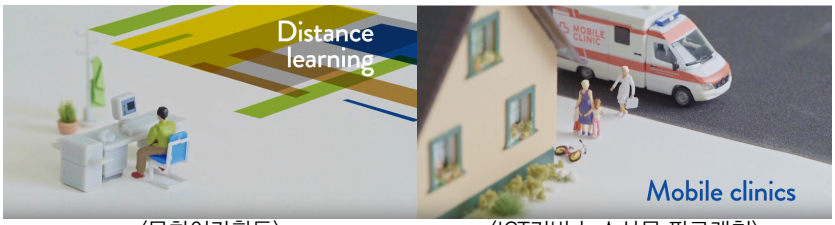
〈공공서비스 거점화〉



〈농어촌과 도시 간 연계성 강화〉



〈원격교육〉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문화여가활동〉 〈ICT기반 농수산물 판로개척〉



자료: https://enrd.ec.europa.eu/smart-and-competitive-rural-areas/smart-villages/smart-villages-portal_en , 2018년 10월 21일

나. 스마트 빌리지 조성 방향

스마트 빌리지는 국가, 지역단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내용은 크게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적 혁신 활용, 농어촌 지역개발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통합적, 선택·유연한 접근, ICT 기반 첨단화 등을 통해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여건에 맞도록 전달체계를 재구성한다.

둘째, 농어업인 등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회적 혁신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스마트 마을의 지원은 유럽의 농어촌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하고, 상향식과 지역공동체 참여, 예산체계 매칭을 고려한다.

〈표 4-9〉 스마트 빌리지 조성 방향

구분		주요 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통합적 접근	• 하나의 건물 또는 장소에 다양한 농어촌 공공서비스를 재배치 • 정보, 행정, 교육 등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 • 보다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화된 팀 간 협력 • 지역 기반의 해결책을 위해 공공, 민간, 공동체 간 협력
	선택적, 유연한 접근	• 사람들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 Hub and Spoke 모델 : 중심거점으로부터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되 인구규모가 작은 원격지에도 정기적이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지역사회의 수요(질, 마케팅,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접근법)에 따라 새롭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
	ICT 첨단화	• 스마트 마을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마련
사회적 혁신 활용		• 지역공동체 회복 • 사회 혁신을 통한 농어촌 서비스의 활력 도모
농어촌 지역개발 프로그램		• 지역혁신을 위한 예산 (기초서비스 및 마을정비 11.3억 유로, LEADER/CLLD 9.8억 유로 등) • 상향식 계획 및 지역공동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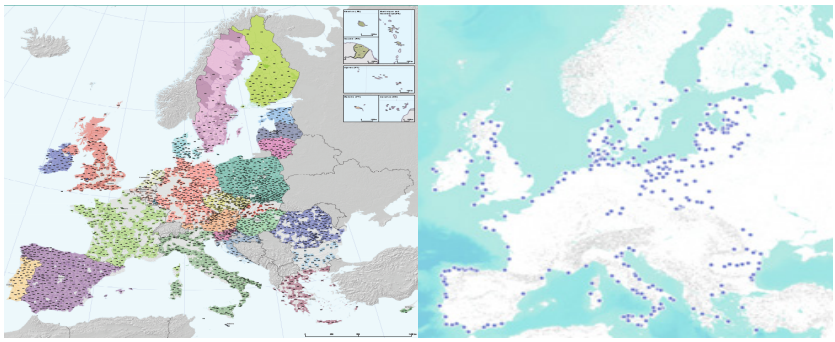
자료: EU, "Smart Villages Revitalising Rural Services", *EU Rural Review*, No. 26, 2018, pp. 16-31.의 내용을 재구성함

(3)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C.L.L.D)

가. 지역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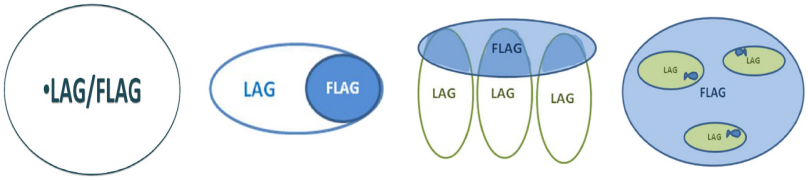
유럽연합은 농업개발기금(EAFRD), 농어촌지역개발기금(ERDF), 해양수산개발기금(EMFF), 사회복지기금(ESF) 등 예산을 매칭하여 지역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발은 지역활동가그룹(LAG)와 수산지역활동가그룹(FLAG)으로 지역설정과 지역여건에 맞는 부가가치 제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다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개발은 LAG와 FLAG가 상호 독립적 또는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림 4-39〉 LAG와 FLAG 사업지역(2007-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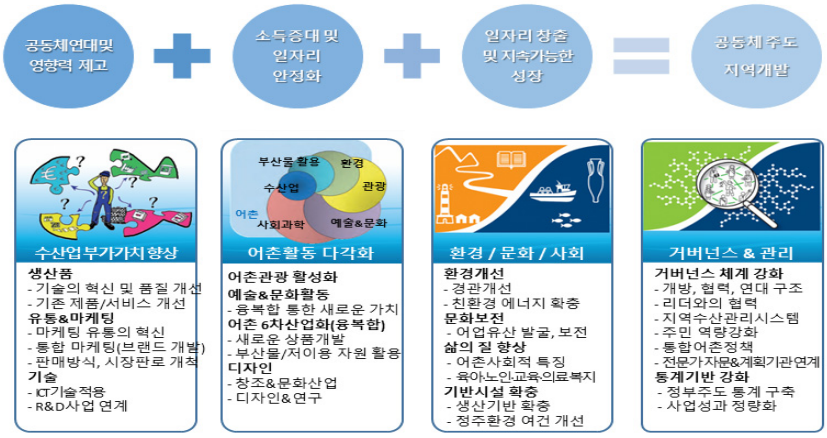
자료: http://enrd.ec.europa.eu/enrd-static/leader/leader/en/lags-database_en.html,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tools/flags-2007-2013(모든 자료 검색일: 2018. 6. 9.)

〈그림 4-40〉 LAG와 FLAG 사업지역(2007-2013년)



자료: FARNET, *Guidance on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 for Local Actors*, 2014, pp.96-97

〈그림 4-41〉 유럽 지역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 사업내용



자료: EU, *Sailing Towards 2020: Axis 4 in Action*, 2015. 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작성

2. 국내사례

1) 국가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전략

(1) 국가균형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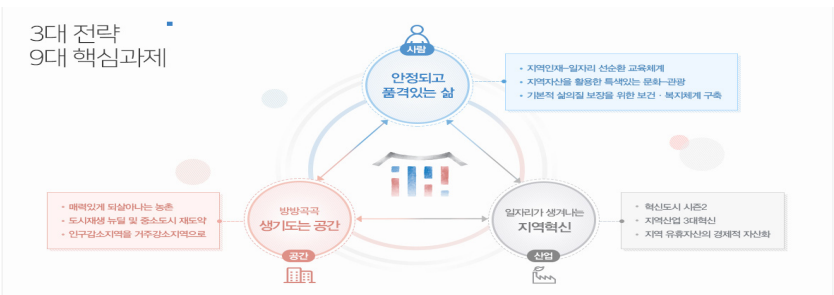
가. 개요

문재인정부는 지난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새로운 비전선포를 통해 국정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지역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방분권' 등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조를 제시하였다.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 등 시대환경을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나.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주도의 자립적 생태계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람', '공간', '산업'이 '삶터·쉼터·일터'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재도약을 이끄는 전략이다. 이를 전략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42〉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과제



자료: http://www.balance.go.kr/ibuilder.do?menu_idx=2235(검색일: 2018. 10. 22.)

국가균형발전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①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②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관광, ③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①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②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③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일자리 생겨나는 지역혁신(①혁신도시 시즌2, ②지역산업 3대 혁신, ③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을 전략과 과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2019~2023년) 수립을 통해 2030년까지 지역인구 50% 사수, 지역일자리 50%, 연간 귀농·귀촌인구 100만 명 이상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다.

〈표 4-10〉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별 주요과제(안)

구분	주요 시책내용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	1.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②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관광 ③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2.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①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②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③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3.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① 혁신도시 시즌2 ② 지역산업 3대 혁신 ③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달성지표	1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인구 50% 사수, 2030 인구 50%)
	2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2030 취업자수 50%, 대졸이상 취업자수 50%)
	3 연간 귀농·귀촌인구 100만 명 이상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2018. p.10의 내용을 일부 발췌함

(2)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가.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제정 추진

대한민국 국회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 지역격차,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들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안[26]을 추진하고 있다.

나. 특별법안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벌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체계로 인구감소율 등을 통해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사업시행자, 주민의 세제상 지원, 사회기반시설과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표 4-11〉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안제7조 (계획수립)	행정자치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빈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인구감소지역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구감소지역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제13~제15조 (지정·해제)	도지사는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시·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며, 인구감소지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6)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2017,6.30, 의안번호 2007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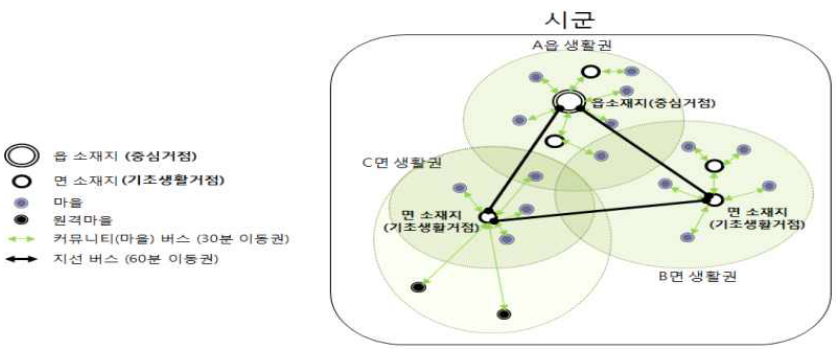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안제18조, 제19조 (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고, 주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제20~ 제23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노후 주택의 개량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료: http://likms.assembly.go.kr(검색일: 0000.00.00.)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2) 농촌 3·6·5 생활권 구축

농촌 '3·6·5 생활권'은 농촌의 정주체계를 구조로 중심지(읍소재지), 기초생활거점(면소재지), 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 강화로 농촌지역 어디에서 불편없는 공공서비스 정책으로 2018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동 정책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시간을 노인·영휴아 보건복지 서비스는 30분, 창업지원 및 평생교육 서비스 60분, 독거노인 응급관리 및 건강모니터링 등 안전·응급 연락체계 5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 체계를 형성하는 개념이다.

〈그림 4-43〉 농촌 3·6·5 생활권 개념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p.56

정부는 농촌 '3·6·5 생활권'을 국가균형발전 추진과제로 채택하여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인접도시와 농촌지역이 기능적 협업을 통해 촘촘한 공공서비스 공급망을 구상하고 있다. 인구와 시설집약도가 높은 읍소재지는 공공시설 및 교육·문화·복지 등 복합서비스 기능을 집중한 중심거점을 2022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한다. 또한 면 소재지는 생필품 구매·교육·간단 진단·보육 등 기초서비스 공급거점을 2022년까지 500개소를 조성한다. 마을단위는 무선방송·안전 가로등 등 ICT 기반 편의시설을 도입하는 창의마을을 2022년까지 1,000개소를 조성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3) 귀농어·귀촌 정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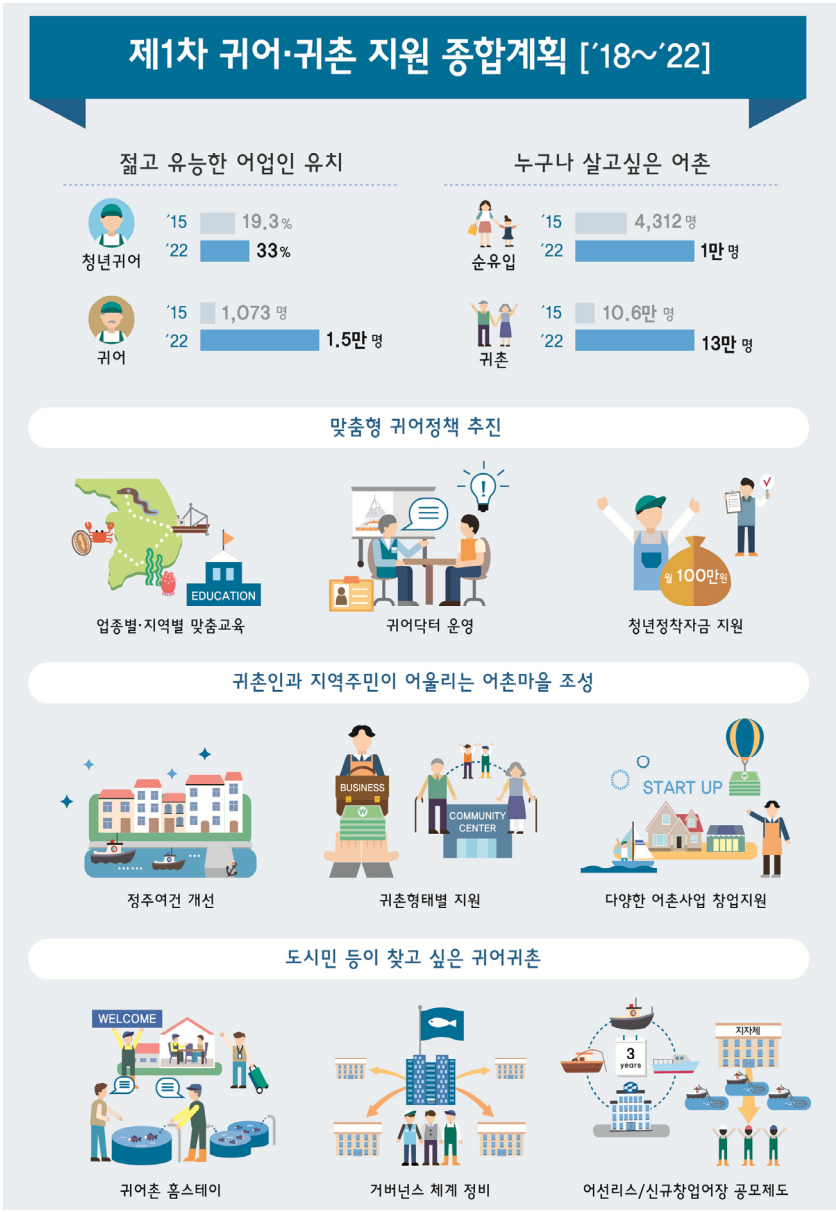
귀농어·귀촌 현황은 2016년 기준으로 귀농 12,875가구(20,559명), 귀어 929가구(1,338명), 귀촌 322508가구(475,4879명)으로 나타났다. 귀어가구는 귀농가구의 6.5% 수준으로 낮으며, 이는 귀어 시 어선 및 어장 확보, 어촌사회의 폐쇄성 등 높은 진입장벽과 높은 어업재해율 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다.

〈그림 4-44〉 귀농어·귀촌 현황



자료: 통계청, 2016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그림 4-45〉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18~2022년)



자료: 해양수산부,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2017, pp.18~38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대책을 통해 젊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귀어귀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서 3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맞춤형 귀어정책 추진으로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귀어정책 지원, 귀어닥터 등을 통한 안정적 귀어정착 지원, 청년어업인에 대한 창업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어울리는 어촌마을 조성으로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어울림마을 조성, 귀촌 희망자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어촌민박 등 새로운 어촌의 어업외 소득원 개발 등을 추진한다.

셋째, 도시민이 찾고 싶은 귀어귀촌으로 귀어인 사전체험 기회 확대 지원, 협의체 구축 등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 어촌인구 감소를 위한 귀어귀촌 진입장벽 개선, 귀어귀촌 홍보 및 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제3절 어촌 현장조사 및 국내외 정책대응의 시사점

국내외 정책대응 사례와 국내 어촌현장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우선적으로 현재 인구감소 추세 전망에 따른 연안·어촌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예측과 범정부 합동 대책마련을 통해 중·장기적인 접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안·어촌의 지방소멸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정비, 교육, 의료 등 정주기반 강화 등을 위한 범부처의 합동 대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특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비하여 각 부처별 지원사업의 개편(지원규모, 지원방식 등)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가 지방소멸 등 연안·어촌지역의 현안문제를 새로운 정책방향으로서 관심을 갖고, 국토부, 행자부, 교육부, 문광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의 혁신과 청년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재생 추진이 요구된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의존성을 낮추고 행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지역재생을 위한 추진동력이 필요하다. 일본 아마쵸는 지자체 재정파탄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올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고, 특히 지역재생을 위한 3개 전담부서 신설과 혁신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시·정·촌 통폐합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였다. 아마쵸의 지역재생은 외부의 청년인재를 유입시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활력을 도모 하는 등 지역재생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셋째, 거점지역과 농어촌마을 간 연계성을 높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연안·어촌의 공공서비스 여건과 공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 의료, 복지,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생활서비스 거점지역을 형성하고 주변 농어촌마을의 연계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생활서비스 거점지역은 연안·어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의 니즈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의료(ICT기반 진료), 복지(찜질방, 노인돌봄 서비스), 교통(해상택시, 셔틀버스), 영유아 보육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생활서비스 거점지역은 지역의 국가어항, 항만과 그 배후지역 등 해양수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

고, 유휴시설 등을 통합하여 생활서비스 거점기능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학교 특성화와 신규 이주촉진을 통해 지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초중·고 학교는 지역 내 인구의 과소화에 따라 경제성, 효율성 논리로 통폐합되고 있으며, 교육기반시설 없이 젊은 세대의 유입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교육부와 해당 지자체는 지역학교의 통폐합 시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소규모 특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특성화 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6차산업화 등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연안·어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유통, 관광, 서비스업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지역의 고유한 브랜드로 개발하여 지역산업과 소득·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시범사업('18년 10개소)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 6차산업화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어촌 인구소멸에 대한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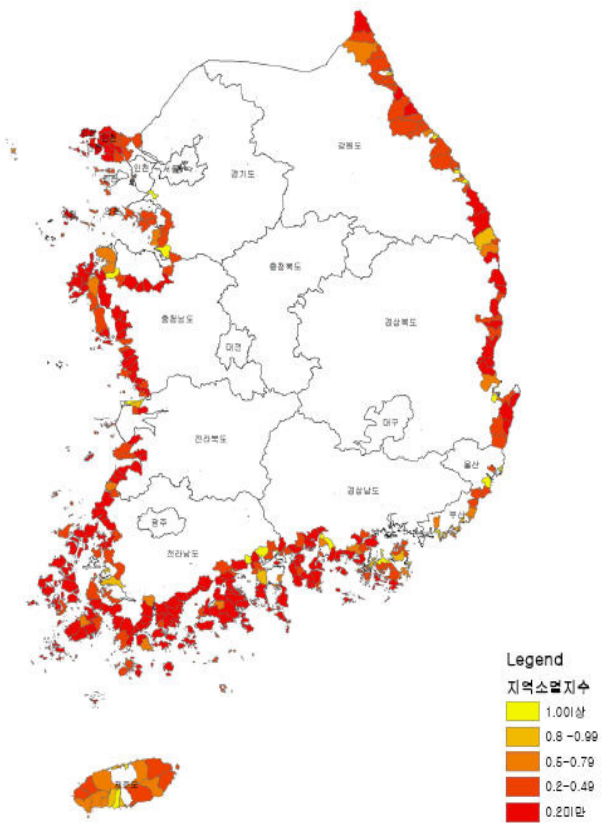
1. 조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요인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어촌지역 이탈요인과 비유입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어촌주민 및 도시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 이탈요인과 유입요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어촌주민과 도시거주민에 대한 조사문항을 상이하게 구성하였다.

먼저, 지역주민 인식조사는 어촌지역 이탈요인과 개선 요청사항 탐색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어촌은 지역사회의 폐쇄성과 어업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고령화·공동화가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섬 지역은 정주인구가 20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어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해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제3장을 통해 인구소멸이 위험수준으로 확인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어촌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또한 어촌 거주민이 인지하는 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요인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세부적인 정책대안 모색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림 5-1〉 어촌의 지역소멸지수 현황



주: 지수가 낮을수록 인구소멸 위험이 높음
자료: 저자 작성

도시민 인식조사는 현재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인구의 어촌이주 유인을 파악하여 어촌지역의 인구유입 방안을 도출하고자 실시하였다. 정주공간으로서 어촌지역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다. 특히, 연안·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는 도시민의 어촌이주 요인을 발굴하여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지역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어촌이주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조사응답자 그룹을 분류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높은 귀어·귀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기존의 지역개발 방식으로는 어촌의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거주 청년층을 대상으로 '살고 싶은 공간'으로서 어촌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조사하였다.

2. 조사 설계 및 방법

1)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어촌주민 인식조사

어촌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주요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근거한 전화 및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표본은 2017년 기준 443개 어촌지역(읍·면·동 단위) 중 제3장에서 분석한 지역소멸지수가 0.5 미만으로 나타나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어촌계원들로 한정하였으며, ㈜한국사회조사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설문조사의 유효샘플은 328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5-1〉 어촌주민 인식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유효샘플	328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및 방문면접 조사
조사 기간	2018.06.03. ~ 2018.06.09. (7일간)
조사 기관	㈜한국사회조사센터

조사대상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시·도별로 지역소멸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부터 선정하였으며, 총 34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선정된 읍·면·동 단위의 지역과 해당 지역 내 어촌계를 매칭하여 탐색하였다. 그러나 지역소멸지수가 낮더라도 해당 지역(읍·면)이 동일한 시군(市/郡) 내에 위치할 경우, 다른 시군의 지역(읍·면)으로 대체하여 지역편중을 조정하였다. 조사대상 지역 및 지역별 유효샘플은 〈표 5-2〉에 표기된 바와 같다.

〈표 5-2〉 어촌주민 인식조사 대상지역

구분	행정구역			지역소멸지수 (2015년)	유효샘플	조사방법
	시도	시군구	읍·면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0.1554	10	전화
2		양양군	손양면	0.2385	10	전화
3		고성군	현내면	0.2170	10	전화
4		강릉시	강동면	0.2346	6	전화
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0.2855	9	전화
6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0.0702	10	전화
7		남해군	서면	0.0888	13	방문
8		고성군	하일면	0.1064	14	방문
9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0.1561	10	방문
10		사천시	서포면	0.1581	12	방문
11		거제시	남부면	0.1820	9	전화

구분	행정구역			지역소멸지수 (2015년)	유효샘플	조사방법
	시도	시군구	읍·면			
12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0.0832	2	전화
13		영덕군	병곡면	0.1058	10	전화
14		포항시 남구	장기면	0.1284	10	전화
15		울진군	기성면	0.1071	8	전화
16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0.0964	10	전화
17		옹진군	덕적면	0.1664	10	전화
18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0.0951	8	방문
19		여수시	화정면	0.1186	14	방문
20		진도군	지산면	0.1140	4	전화
21		해남군	북일면	0.1447	14	방문
22		강진군	도암면	0.1552	14	방문
23		신안군	자은면	0.1457	10	전화
24		장흥군	용산면	0.1654	11	방문
25		완도군	금당면	0.1493	10	전화
26		고흥군	두원면	0.0866	2	전화
27		진도군	조도면	0.1300	10	전화
28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0.1381	13	전화
29		고창군	부안면	0.1282	10	전화
30		부안군	보안면	0.1268	8	전화
31		부안군	줄포면	0.1797	2	전화
32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0.1737	10	전화
33		태안군	이원면	0.1018	9	전화
34		서산시	팔봉면	0.1384	10	전화

주: 지역소멸지수가 낮을수록 인구소멸 위험이 높음
자료: 저자 작성

조사문항은 거주지역의 지역현황과 인구감소에 대응한 정책방안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인구감소 위험지역의 지역현황 조사 측면에서 응답자가 거주하는 어촌지역의 정주환경 문제와 주민들의 이탈요인 및 청년층의 진입 기피요인을 질문하였다. 또한 심각한 인구

감소에 따른 거주지역의 소멸위기에 대해 응답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현 거주민의 이탈방지와 청년층의 신규 유입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질의하였다.

〈표 5-3〉 어촌주민 인식조사 항목

항 목	조 사 항 목
지역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거주지가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원인(유형별, 우선순위) – '정주여건(주거생활)'측면의 문제점 및 이유 – '산업기반(수산업)' 측면의 문제점 및 이유 – '환경여건' 측면의 문제점 및 이유 – '교육여건' 측면의 문제점 및 이유 – '교통여건' 측면의 문제점 및 이유 – '주민 편의생활' 측면의 문제점 및 이유 • 현 거주민의 어촌 이탈 사유 • 청년층의 어촌이주(신규진입) 기피 사유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	• 주민의 이탈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사업 • 청년층의 신규 유입/정착에 요구되는 정책 사업 •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대응의 적절성 및 판단근거 •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최우선적 지원필요 사항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입지 유형 •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

주: 조사표는 〈부록 1〉 참조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이주에 관한 도시민 인식조사

도시민의 어촌이주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은 대규모 응답자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27]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조사표본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

27) 본 도시민 인식조사에서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오픈서베이; Open Survey)은 16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응답자 패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응답자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도시민과 청년층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는 본 설문의 특성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며, 500명의 유효샘플 수(±4.38%P, 95% 신뢰수준)를 확보하였다.

〈표 5-4〉 도시민 인식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유효샘플	500명
표본오차	±4.38%P (95% 신뢰수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응답 수집
조사 기간	2018.05.31. ~ 2018.06.04. (5일간)
조사 기관	연구진이 직접 실시, 오픈서베이(Open Survey) 패널 활용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 도시민 인식조사 설문 화면

예시 화면(스마트폰)



자료: 저자 작성

조사대상 도시민의 거주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5대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는 이와 같이 대도시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도시성이 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지로서 어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어촌이주 희망·기피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별 응답자 표본은 통계청이 공표한 시·도별 주민등록인구와 동일한 비율로 통제하였으며(KOSIS, 2017), 이에 따라 경기도 36%, 서울 28%, 부산 10% 순으로 조사대상자의 지역 분포를 조정하였다.

〈표 5-5〉 도시민 인식조사의 지역 타켓팅 정보

지역별	수도권			5대 광역시					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비중(%)	27.79	35.59	8.24	9.79	6.95	4.24	4.11	3.29	100.00

자료: 저자 작성

더불어 본 설문은 도시거주 청년층의 어촌이주를 통해 정착, 출산, 자녀양육 등 인구의 자연증가 및 어촌공동체의 활성화 측면에 주목하는 관계로 응답자의 연령대에 대한 타겟팅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직업분야에도 타겟팅을 적용하였으며, 도시생활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직장인 집단과 거주지 이동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학생(졸업후이동) 집단의 비중의 높게 조정하여 응답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표 5-6〉 도시민 인식조사의 연령·직업 타켓팅 정보

연 령	비 중	직 업	비 중
19~29세	25%	학생(대학(원)생)	20%
30~39세	25%	직장인	60%
40~49세	25%	전업주부	5%
50~59세	15%	기 타	15%
60~69세	10%		

주1: 연령 및 직업에 대한 사전 타겟팅 정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패널 운영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주2: 직업 분류는 응답자 현황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 가능함
자료: 저자 작성

조사문항은 이주대상 지역으로서 어촌에 대한 인식과 소멸위험지역으로서 어촌에 대한 인식 부분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이주대상 지역으로서 어촌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어촌을 새로운 거주지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어촌을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였다. 이어 제3자의 관점에서 어촌의 인구감소 위협에 대한 인식수준과 현지 거주민의 이탈요인 및 청장년층의 어촌이주 기피·무관심 요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5-7〉 도시민 인식조사 항목

항 목	조 사 항 목
새로운 거주지로서 어촌	• 도시가 아닌 지역(농산어촌)으로 이주 고민 여부 – 귀촌에 대한 관심/선호 그룹 및 ③ 무관심/비선호 그룹으로 분리 • 농산어촌 중 어촌지역으로 이주 고민 여부 – 귀촌에 대한 관심/선호 그룹을 ① 어촌 선호 그룹 및 ② 농산촌 선호 그룹으로 재분류 • (①그룹 대상) 어촌이주 고민 사유, 실제 비이주 사유, 정책적 요구사항 • (②그룹 대상) 이촌 비선호 사유(농산촌 선호 사유), 정책적 요구사항 • (③그룹 대상) 도시이탈 무관심/비선호 사유, 도시와 가까운 어촌지역으로 이주의향, 어촌이주민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소멸 위험지역으로서 어촌	• 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에 대한 인지 수준 • 어촌거주민의 이탈요인 • 젊은 층(20~49세)의 어촌 비이주요인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입지 유형 •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 • 동거인 여부

주: 조사표는 〈부록 2〉 참조
자료: 저자 작성

3. 응답자 특성

1)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어촌주민 인식조사

(1) 성별·연령대별 분포

어촌주민 인식조사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남성이며, 연령대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6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8〉 어촌주민 인식조사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구 분		사례수	비율 (%)
전 체		(328)	100.0
성별	여성	(53)	16.2
	남성	(275)	83.8
연령	30대 이하	(12)	3.7
	40대	(30)	9.1
	50대	(90)	27.4
	60대 이상	(196)	59.8

자료: 저자 작성

(2) 거주지역 및 입지유형별 분포

응답자의 거주지역(시·도별)은 전라도 지역이 3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경상도 29.3%, 경기/인천 11.3%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입지유형으로는 연안촌락형 어촌이 71.3%, 도서형 어촌 유형이 28.7%를 차지하는 등 내륙지역의 어촌거주민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5-9〉 어촌주민 인식조사의 거주지역·입주유형별 분포

구 분		사례수	비율 (%)
전 체		(328)	100.0
거주지역	경기/인천	(37)	11.3
	충남	(29)	8.8
	강원도	(36)	11.0
	전라도	(130)	39.6
	경상도	(96)	29.3
입지유형	연안촌락형 어촌	(234)	71.3
	도서형 어촌	(94)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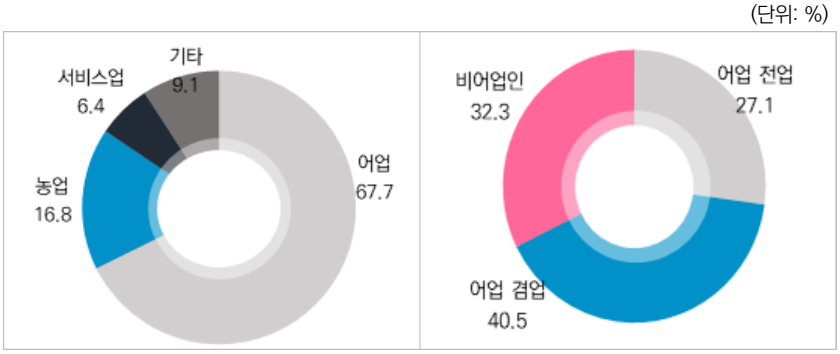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직종별 분포

전체 응답자의 67.7%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종사자 16.8%, 서비스업종사자 6.4%, 기타 9.1%로 나타났다. 또한 어업을 통한 소득 확보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전체 응답자의 32.3%가 어업소득이 없는 비어업인으로 응답하였으며,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7.1% 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3〉 도시민 인식조사 설문 화면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이주에 관한 도시민 인식조사

(1) 성별·연령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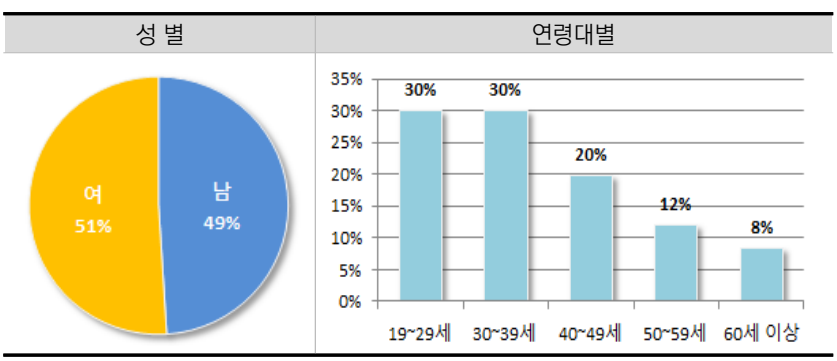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인식조사는 응답자의 51%가 여성, 49%가 남성으로 성별간 유사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전체의 30%로 가장 많으며, 이어 19~29세 30%, 40대가 20% 순으로 젊은 층에서 약 80%의 응답비중을 차지한다.

〈표 5-10〉 도시민 인식조사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구 분		사례수	비율 (%)
전 체		(500)	100
성별	여성	(255)	51
	남성	(245)	49
연령 (만)	19~29세	(145)	30
	30~39세	(150)	30
	40~49세	(99)	20
	50~59세	(60)	12
	60세 이상	(42)	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4〉 도시민 인식조사의 성별·연령대별 응답 현황



자료: 저자 작성

(2) 거주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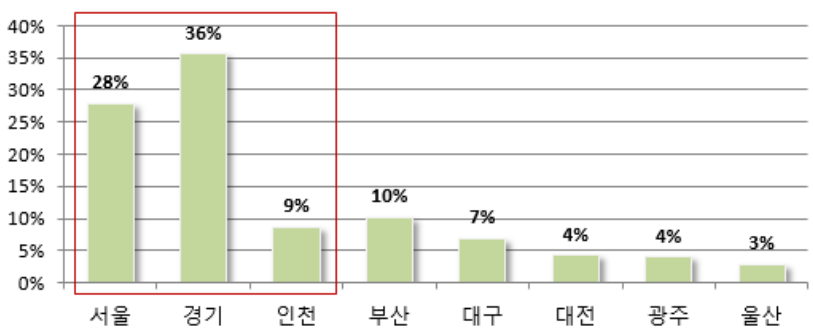
응답자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수도권 및 5대광역시)로는 경기가 36%로 가장 많으며, 서울 28%, 부산 10%, 인천 9%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73%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거주지역 분포는 설문진행에 앞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에 부합하도록 지역별 응답자 타겟팅을 선행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표 5-11〉 도시민 인식조사의 거주지역별 분포

지역별	전체	수도권			5대 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사례수	(500)	(139)	(178)	(43)	(51)	(34)	(21)	(20)	(14)
비율(%)	100	28	36	9	10	7	4	4	3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5〉 도시민 인식조사의 거주지역별 응답 현황



자료: 저자 작성

(3) 직종·직업별 분포

직종·직업별 구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8.8%가 사무/기술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기술직과 함께 직장인 그룹에 해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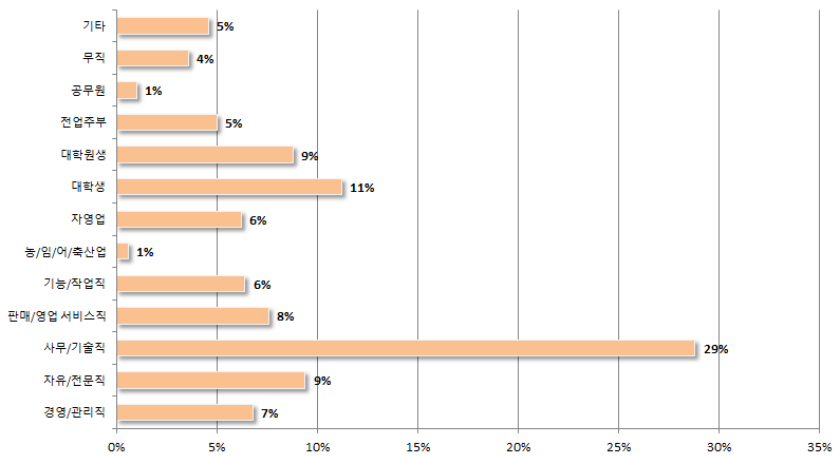
는 직종에서는 자유/전문직 9.4%, 판매/영업서비스직 7.6%로 응답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졸업 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학생 집단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20% 비중을 차지하는 등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5-12〉 도시민 인식조사의 직종·직업별 분포

구 분	사례수	비율 (%)	구 분	사례수	비율 (%)
전 체	(500)	100	-	-	-
경영/관리직	34	6.8%	자영업	31	6.2%
자유/전문직	47	9.4%	대학생	56	11.2%
사무/기술직	144	28.8%	대학원생	44	8.8%
판매/영업서비스직	38	7.6%	전업주부	25	5.0%
기능/작업직	32	6.4%	공무원	5	1.0%
농/임/어/축산업	3	0.6%	무직/기타	64	8.2%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6〉 도시민 인식조사의 직종·직업별 응답 현황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어촌주민 인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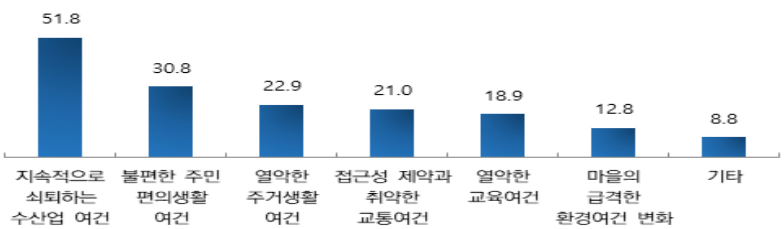
1. 어촌의 정주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본 조사는 응답자 본인이 거주하는 어촌지역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는 응답자가 본인의 거주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이유와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요인별 주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28].

1) 어촌의 인구소멸 위험요인

응답자 본인이 거주하는 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원인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51.8%)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수산업 여건'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물리적·비물리적 산업기반 악화에 이어 '불편한 주민 편의생활 여건' (30.8%),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22.9%), '접근성 제약과 취약한 교통여건'(21.0%) 등이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어촌의 인구감소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5-7〉 어촌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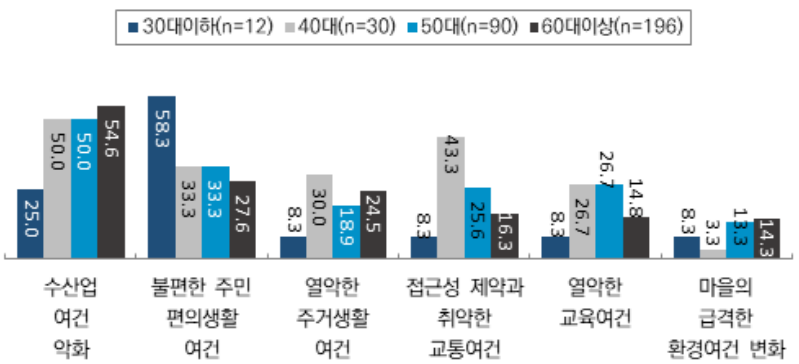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8) 정주환경은 주거·산업기반·환경·교육·교통·편의생활 등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 집단이 '불편한 주민 편의 생활 여건'을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남성 집단은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수산업 여건'을 가장 심각한 인구소멸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수산업 여건'을 어촌의 주요 인구소멸 원인으로 응답한 것과 달리, 30대 이하 그룹은 '불편한 주민 편의 생활 여건'을 주요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수산업 여건'이 인구소멸 원인이라는 응답은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5-8〉 연령대별, 어촌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원인



자료: 저자 작성

거주지역별 특성의 경우, 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불편한 주민 편의 생활 여건'과 '접근성 제약과 취약한 교통 여건'을 인구소멸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여타 지역은 모두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수산업 여건'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과 경상도에서는 해당 응답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타 지역과 견주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지유형별로는 도서형 어촌의 경우 '취약한 교통 여건'을 주된 원인으로 응답

한 비중이 연안촌락형 어촌보다 특히 높게 조사되었다.

〈표 5-13〉 지역별, 어촌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원인

단위: (명),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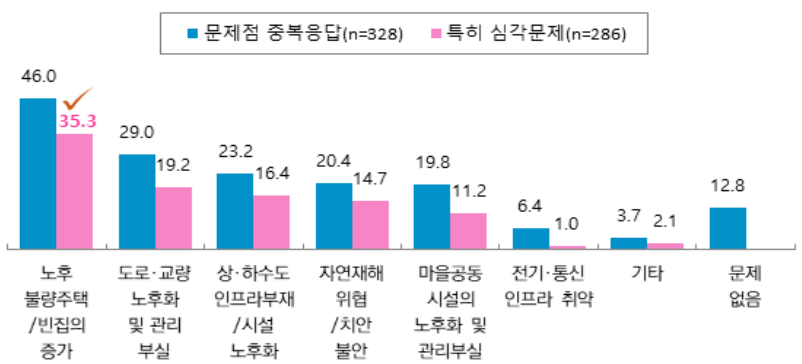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쇠퇴하는 수산업 여건	불편한 주민편의 생활여건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	열악한 교육여건	취약한 교통여건	급격한 환경변화	기타
전 체		(328)	51.8	30.8	22.9	21.0	18.9	12.8	8.8
거주지	경기/인천	(37)	37.8	32.4	24.3	35.1	13.5	5.4	5.4
	충남	(29)	62.1	20.7	24.1	17.2	10.3	27.6	13.8
	강원도	(36)	41.7	19.4	19.4	11.1	16.7	8.3	13.9
	전라도	(130)	61.5	35.4	26.9	18.5	19.2	7.7	10.0
	경상도	(96)	44.8	31.3	17.7	24.0	24.0	19.8	5.2
입지 유형	연안촌락형	(234)	56.4	30.3	20.5	13.7	20.9	16.7	8.5
	도서형	(94)	40.4	31.9	28.7	39.4	13.8	3.2	9.6

자료: 저자 작성

2) 주거생활 측면

〈그림 5-9〉 주거생활 측면의 문제점

(단위: %, 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주거생활 관련 문제점으로는 중복응답 기준 '노후불량주택 또는 빈집의 증가'가 46.0%로 가장 많은 응답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도로·교량 노후화 및 관리부실' 29.0%,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재 및 시설 노후화' 23.2%,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과 치안불안' 20.4%, '마을공동 시설의 노후화 및 관리부실' 19.8%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생활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노후 불량주택 또는 빈집의 증가'(35.3%)가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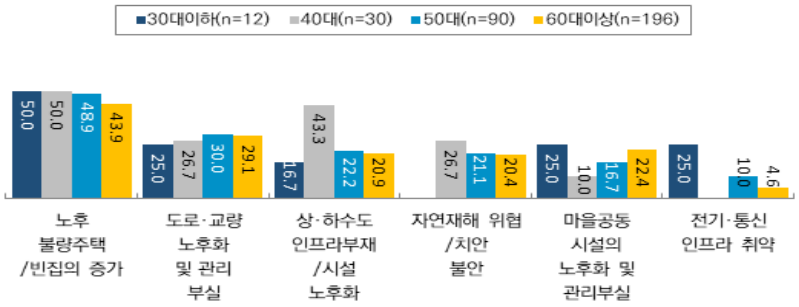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불량 주택 또는 빈집의 증가'를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40대 그룹의 경우 주거생활 측면의 문제점으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재 및 시설 노후화'를 응답한 비중이 40% 이상으로 특히 높았고, 30대 그룹의 경우 '전기·통신 등 인프라 취약'을 응답한 비중이 이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업인·비어업인 분류 결과, 어업인의 경우 주거생활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자연재해 위협 및 치안불안', '마을공동 시설의 노후화 및 관리부실'을 응답한 비중이 비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어업인은 '노후 불량주택/빈집의 증가'를 문제점으로 응답한 비중이 50% 이상으로 특히 높은 비중은 보인다.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 또는 빈집의 증가'문제를 응답한 비중이 과반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경기/인천 지역은 주거생활 관련 문제점으로 '도로·교량의 노후화 및 관리부실'을 주된 문제점으로 응답하였으며, 충남 지역은 '마을공동 시설 (마을회관)의 노후화 및 관리부실'을 정주여건 관련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림 5-10〉 연령별, 주거생활 측면의 문제점

(단위: %, 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거주지역의 입지 유형별로는 연안촌락형 어촌과 도서형 어촌지역 모두 '노후불량 주택 또는 빈집 증가'를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서형 어촌지역의 경우 '자연재해 위협과 치안 불안'을 응답한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표 5-14〉 주거생활 측면의 문제점

(단위: 명, %, 중복응답)

구 분		사례수	노후 불량 주택/ 빈집의 증가	도로·교량의 노후화 / 관리 부실	자연 재해 위협과 치안 불안	마을 공동 시설 노후화 /관리 부실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재 및 시설 노후화	전기·통신 등 인프라 취약	기타	문제 없음
전 체		(328)	46.0	29.0	23.2	20.4	19.8	6.4	3.7	12.8
거주지	경기/인천	(37)	29.7	32.4	24.3	10.8	8.1	16.2	-	16.2
	충남	(29)	6.9	13.8	27.6	6.9	17.2	3.4	20.7	37.9
	강원도	(36)	44.4	30.6	13.9	11.1	19.4	5.6	5.6	13.9
	전라도	(130)	53.1	23.1	30.8	15.4	20.8	4.6	3.1	13.8
	경상도	(96)	55.2	39.6	14.6	38.5	24.0	6.3	-	2.1
입지 유형	연안촌락형	(234)	48.7	29.5	20.9	19.2	23.5	6.0	2.1	13.2
	도서형	(94)	39.4	27.7	28.7	23.4	10.6	7.4	7.4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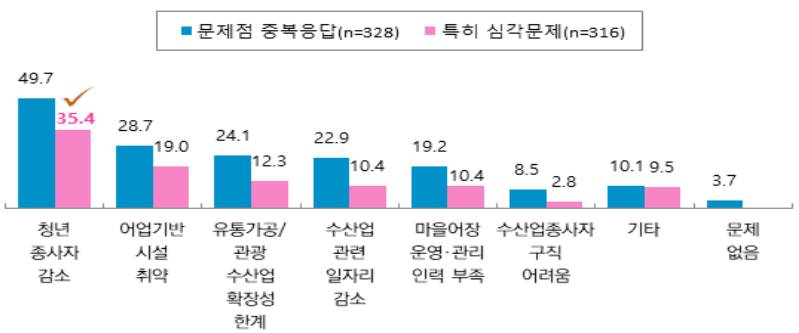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산업기반(어업·수산업) 측면

어업·수산업 등 어촌지역의 산업기반(수반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청년 종사자 감소'가 49.7%(중복응답 기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어업기반시설 취약' 28.7%, '유통가공, 관광 등 수산업 확장성 한계' 24.1%, '수산업 관련 일자리 감소' 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문제점별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 '청년 종사자 감소'를 심각한 산업기반 측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11〉 산업기반(수산·어업) 측면의 문제점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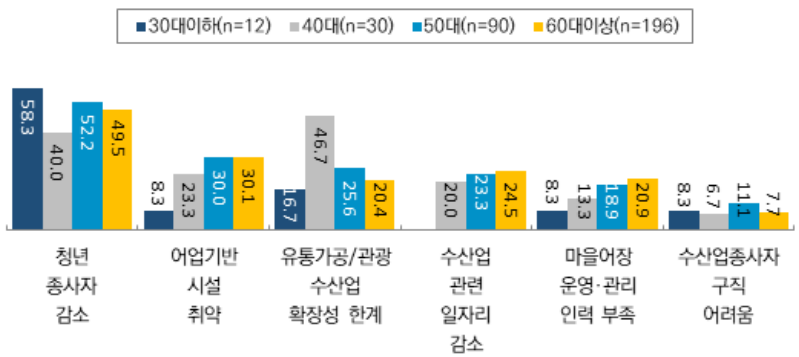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반면 연령대별로는 어촌 산업기반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 일부 차이를 보였다. 40대 그룹의 경우 '유통 가공, 관광 등 수산업 확장성 한계'를 문제점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여타 연령대에서는 '청년 종사자 감소'에 응답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어업기반 시설 취약', '수산업 관련 일자리 감소'와 '마을어장 운영·관리 인력 부족'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어업인·비어업인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어업인 그룹에서는 '어업기반 시설 취약'을 문제점으로 응답한 비중이 비어업인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업 관련 일자리 감소', '유통가공, 관광 등 수산업 확정성 한계'를 응답한 비중이 어업인에 비해 특히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5-12〉 연령별, 산업기반(수산·어업) 측면의 문제점

(단위: %, 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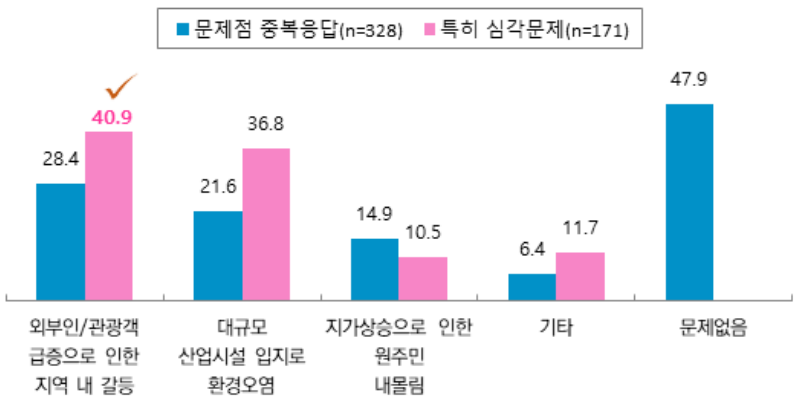
4) 환경여건 측면

거주지역의 환경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전체의 47.9%에 해당(중복응답 기준) 하는 응답자가 환경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환경 측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나머지 집단의 경우, '외부인 이주 또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 문제가 있다는 응답 비중이 28.4%로 높았으며 '대규모 산업시설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21.6%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환경관련 문제점 중 심각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질문한 항목에서는 '외부인 이주 또

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과 '대규모 산업시설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응답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5-13〉 환경여건 측면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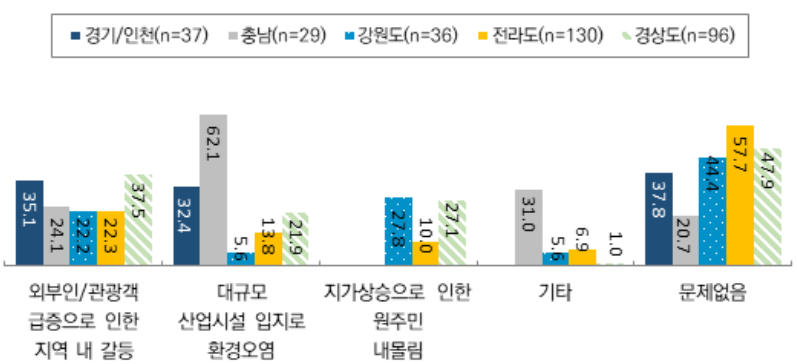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4〉 지역별, 환경여건 측면의 문제점

(단위: %, 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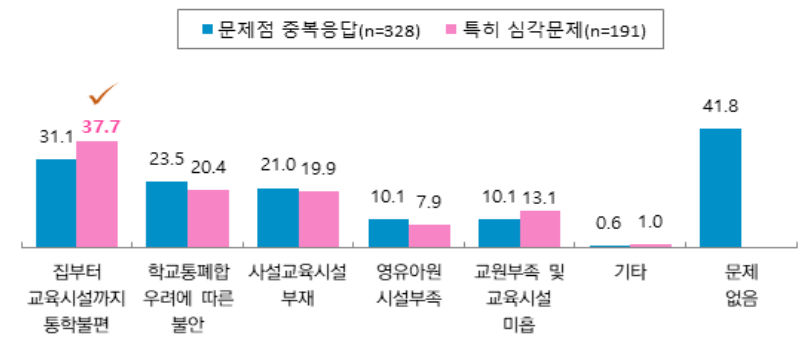
거주지역별로는 전라도의 경우 환경 관련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 지역에서는 '대규모 산업시설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타 지역보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입지유형별로는 연안촌락형 어촌에서 '대규모 자본유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원주민 내몰림' 문제에 대한 응답 비중이 도서형 어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5) 교육여건 측면

응답자가 거주하는 어촌지역의 교육여건과 관련된 문제점 중에는 전체 응답자의 31.1%(중복응답 기준)가 '집부터 교육 시설까지 통학 불편'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하였다. 나아가 '학교통폐합 우려에 따른 불안' 23.5%, '학원 등 사설교육시설 부재' 21.0% 등의 순으로 교육여건 측면의 문제점이 조사되었다. 반면 교육여건 관련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41.8%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5〉 교육여건 측면의 문제점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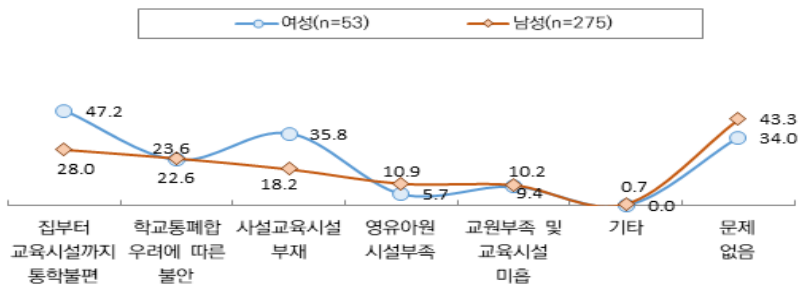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교육여건에 대한 응답결과를 성별에 따라 분류할 경우, 남성 응답자보다 여성 응답자가 거주지역의 교육 여건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집부터 교육시설까지 통학 불편'과 '학원 등 사설교육 시설 부재'를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특히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5-16〉 성별, 교육여건 측면의 문제점

(단위: %, 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연령층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교육 여건 관련 문제가 없다는 항목에 많이 응답하였다. 반면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학교 통폐합 우려에 따른 불안'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50대 이상에서는 '집부터 학교까지 통학불편'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영유아원 시설 부족' 응답 비중이 높게 확인되었다.

거주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교육 여건 관련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충남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원 부족과 교육시설 미흡'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 강원도 지역은 '학교통폐합 우려에 따른 불안'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상도 지역은 '집부터 교육시설까지 통학 불편'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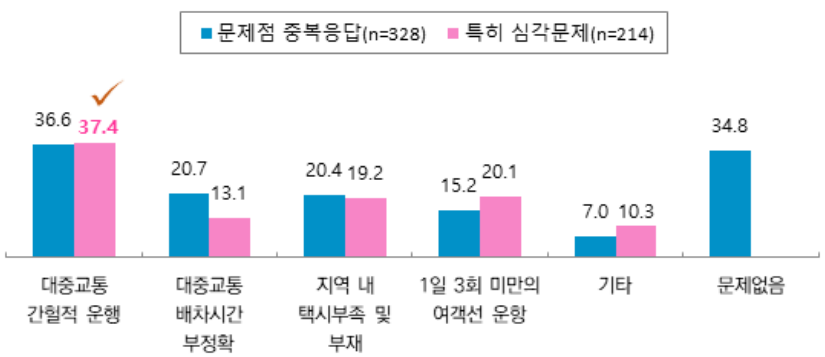
6) 교통여건 측면

교통여건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대중교통(버스) 간헐적 운행' 응답 비중이 36.6%로 가장 많이 차지(중복응답 기준)하고 있다. 이어 '대중교통(버스) 배차시간 부정확' 20.7%, '지역 내 택시부족 및 부재' 20.4%, '1일 3회 미만의 여객선 운항' 15.2% 등의 순으로 어촌지역의 교통여건상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나아가 '대중교통(버스)의 간헐적 운행'은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교통여건 측면의 문제를 성별에 따라 분리할 경우, 여성 응답자는 남성 응답자보다 '대중교통 간헐적 운행', '지역 내 택시부족 및 부재'에 대한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지역 내 택시부족 및 부재'를 교통여건 관련 1순위 문제점으로 꼽은 반면, 여타 연령층에서는 '대중교통 간헐적 운행'을 불편사항 1순위로 꼽았다.

〈그림 5-17〉 교통여건 측면의 문제점

(단위: %, 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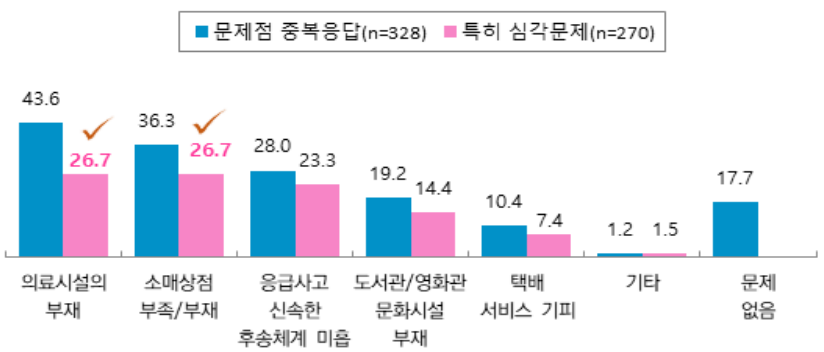
응답자의 거주지역별로는 경기/인천과 충남지역 거주민의 경우 '1일 3회 미만의 여객선 운항' 등 도서교통 관련 문제를 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다른 지역들에서는 '대중교통의 간헐적 운행'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나아가 연안촌락형 어촌에서는 '대중교통 간헐적 운행'이, 도서형 어촌에서는 '1일 3회 미만의 여객선 운항'이 가장 심각한 교통여건 측면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7) 편의생활 측면

주민의 편의생활 관련 문제점으로는 '의료시설의 부재'가 43.6%(중복응답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매상점(슈퍼마켓)' 36.3%, '응급사고 시 신속한 후송체계 미흡' 28.0%, '도서관/영화관 문화시설 부재' 19.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응답한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의료시설의 부재'와 '소매상점(슈퍼마켓 등) 부족'이 함께 지목되었다.

〈그림 5-18〉 편의생활 측면의 문제점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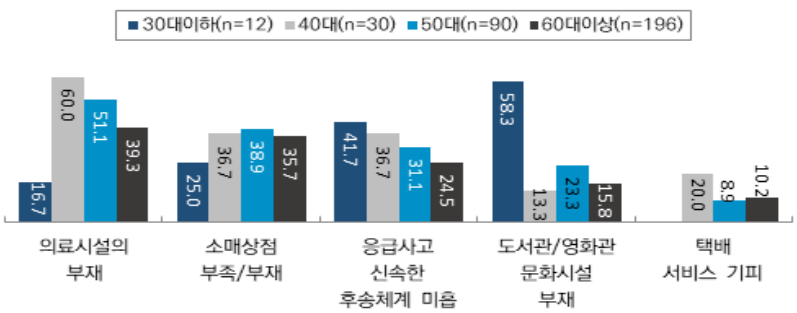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주민 편의생활과 관련, 여성 응답자는 '의료시설의 부재'에 대한 응답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대 기준으로는 3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도서관, 영화관 등 문화시설 부재'를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타 연령대에서는 '의료시설 부재'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9〉 연령별, 편의생활 측면의 문제점

(단위: %, 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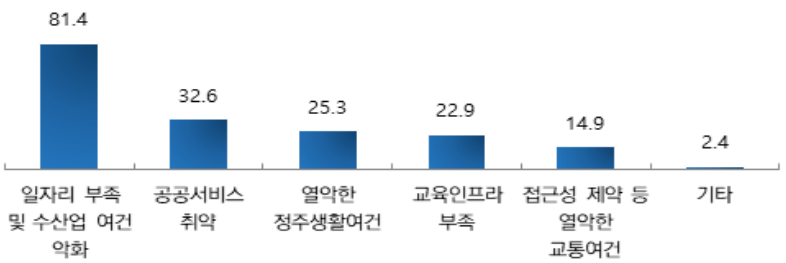
거주지역별로는 충남과 전라도 지역에서 '소매상점(슈퍼마켓 등) 부족'이 편의생활의 가장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은 '도서관, 영화관 등 문화시설 부재'를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경상도 지역은 '의료시설의 부재'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입지유형 차원에서 '응급사고시 신속한 후송체계 미흡' 응답은 도서형 어촌에서 높게 나타났다.

2. 어촌의 인구소멸 원인과 대응방안

1) 지역주민의 어촌이탈 및 청년층의 어촌 비유입 요인

지역주민들이 어촌을 이탈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81.4%)이 '어촌의 부족한 일자리와 어려운 수산업 여건'을 지목하였다. 이외에 '어촌의 취약한 공공서비스' 32.6%, '어촌의 열악한 정주생활여건' 25.3%, '어촌의 취약한 교육 인프라' 22.9%, '어촌의 접근성 제약과 열악한 교통여건'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직면한 1순위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수산업 여건'이 지목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그림 5-20〉 지역주민의 어촌이탈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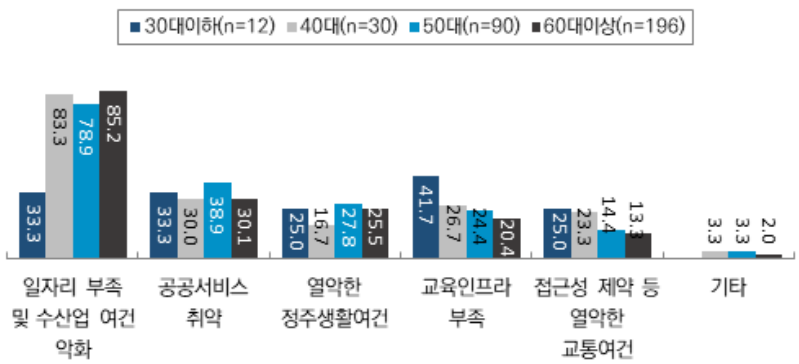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어촌주민들이 어촌을 떠나는 주원인으로 지목된 '어촌의 부족한 일자리와 어려운 수산업 여건'은 응답자 특성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연령별 응답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30대 그룹에서는 여타 그룹과 달리 '어촌의 취약한 교육 인프라'를 주민 이탈 원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아 자녀 교육을 위한 이탈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외에 연령대 그룹에서는 '일자리 부족 및 수산업 여건 악화'를 주된 이탈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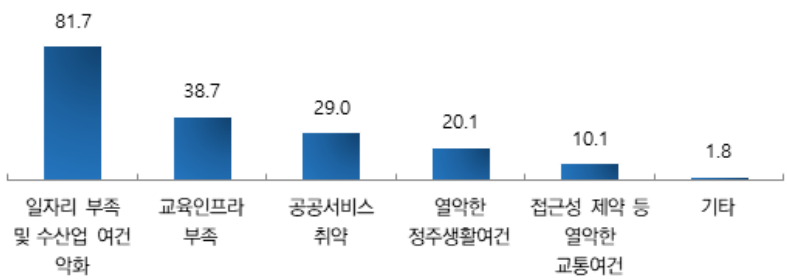
응답자의 81.7%에 해당하는 어촌주민들은 청년층이 어촌지역으로 새로이 이주하지 않는 이유를 '어촌의 부족한 일자리와 어려운 수산업 여건'으로 꼽았다. 이는 앞서 확인한 어촌주민의 주요 이탈요인과 동일한 결과로, 현지 거주민들이 어촌의 산업기반 악화가 인구소멸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응답자들은 '어촌의 취약한 교육 인프라' 38.7%, '어촌의 취약한 공공서비스' 29.0%, '어촌의 열악한 정주생활여건' 20.1% 등을 젊은 층의 어촌 비유입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5-21〉 연령별, 지역주민의 어촌이탈 원인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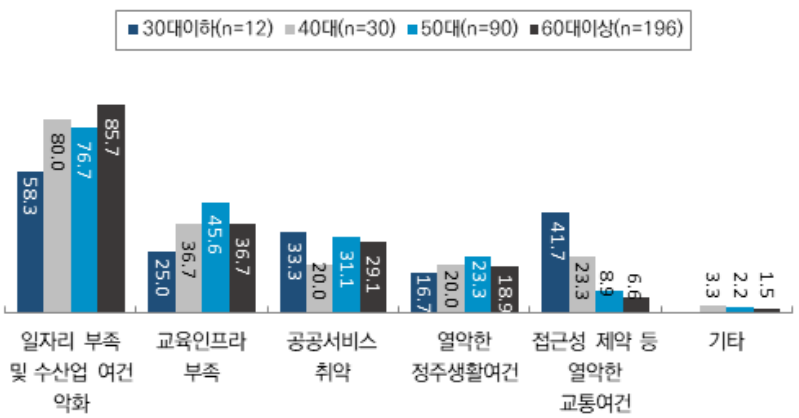
〈그림 5-22〉 젊은 층이 어촌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



자료: 저자 작성

젊은 층이 어촌으로 이주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서 '어촌의 부족한 일자리와 어려운 수산업 여건'은 응답자 특성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보여주었다. 반면 연령대를 기준으로 30대 이하 그룹에서는 '어촌의 취약한 공공 서비스'를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지목한 것이 특징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어촌의 접근성 제약과 열악한 교통여건'을 응답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23〉 연령별, 젊은 층이 어촌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



자료: 저자 작성

직업별로는 전업으로 어업을 하는 응답층에서 청년층의 어촌 비유입 요인으로 '어촌의 열악한 정주생활 여건'을 꼽은 응답이 비어업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경상도 지역에서 '어촌의 취약한 교육 인프라', '어촌의 취약한 공공 서비스'를 주된 이유로 응답한 비중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입지유형별로는 도서형 어촌의 경우 '접근성 제약 등 교통여건'을 비유입 원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연안촌락형 어촌보다 높다.

〈표 5-15〉 지역별, 젊은 층이 어촌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어촌의 부족한 일자리와 어려운 수산업 여건	어촌의 취약한 교육 인프라	어촌의 취약한 공공 서비스	어촌의 열악한 정주생활 여건	어촌의 접근성 제약과 열악한 교통여건	기타
전 체		(328)	81.7	38.7	29.0	20.1	10.1	1.8
거주지	경기/인천	(37)	78.4	21.6	18.9	21.6	21.6	-
	충남	(29)	89.7	34.5	27.6	24.1	6.9	6.9
	강원도	(36)	83.3	30.6	19.4	25.0	2.8	-
	전라도	(130)	90.0	34.6	23.8	21.5	14.6	2.3
	경상도	(96)	68.8	55.2	43.8	14.6	3.1	1.0
입지 유형	연안촌락형	(234)	82.5	44.0	32.5	20.1	2.6	2.1
	도서형	(94)	79.8	25.5	20.2	20.2	28.7	1.1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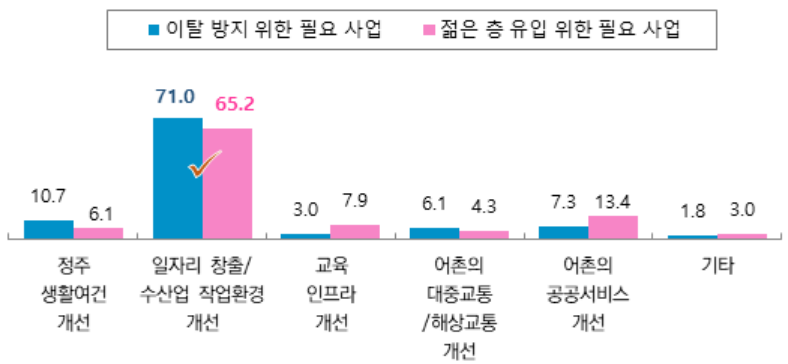
2) 주민이탈 완화 및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대응 방안

지역주민의 어촌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수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1.0%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어촌 내 경제활동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을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어 추진 필요성이 높은 정책사업은 '어촌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 10.7%, '어촌의 공공서비스 개선' 7.3%, '어촌의 대중교통 및 해상교통 개선' 6.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류 결과, '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수산업 작업환경 개선' 응답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인프라 개선'을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어촌의 대중교통 및 해상교통 개선'이나 주택개량 등 정주생환기반 개선이 주민이탈

방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역시 '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수산업 작업환경 개선'으로 인식하였다. 이어 어촌으로 이주한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어촌의 공공서비스 개선'(13.4%), '교육 인프라 개선'(7.9%), '어촌의 정주생활여건 개선'(6.1%) 등을 주요 정책 대안으로 꼽았다.

〈그림 5-24〉 주민이탈 완화 및 청년층 유입에 요구되는 정책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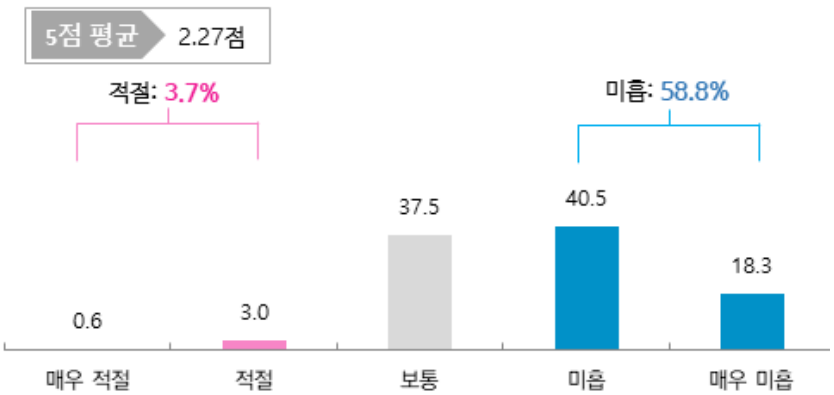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정부의 어촌 인구소멸 대응수준

먼저, 어촌의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를 묻는 5점 척도형 평가문항에서는 보통 이하인 2.27점(평균점수)을 받아 정책대응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보다 상세히 확인할 경우, 정책대응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58.8%(미흡: 40.5% + 매우 미흡: 18.3%), 적절하다는 의견 3.7%(적절: 3.0% + 매우 적절: 0.7%)로 부정적인 의견이 주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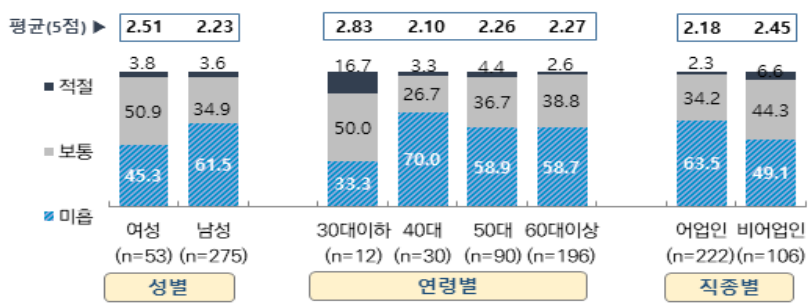
〈그림 5-25〉 어촌 인구소멸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지원의 적절성



주: 5점에 가까울수록 적절성 높음. 매우 적절=5점, 적절=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자료: 저자 작성

정부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 특성별로 현저한 차이 없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40대 이하 연령대에서, 비어업인보다는 어업종사자 집단에서, 충남 지역에서 정부지원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26〉 응답자 특성별, 어촌 인구소멸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지원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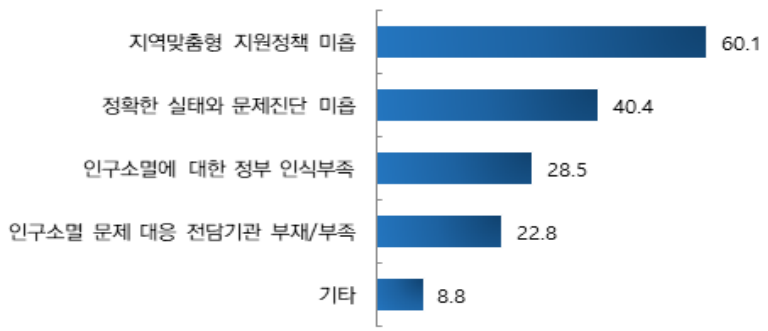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어촌의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 60.1%는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부족'을 평가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문제진단 미흡(40.4%)', '인구소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부족(28.5%)',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할 전담기관 미배치 및 부족(22.8%)' 등이 미흡한 정책대응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5-27〉 어촌의 인구소멸에 대응한 정부지원이 미흡한 이유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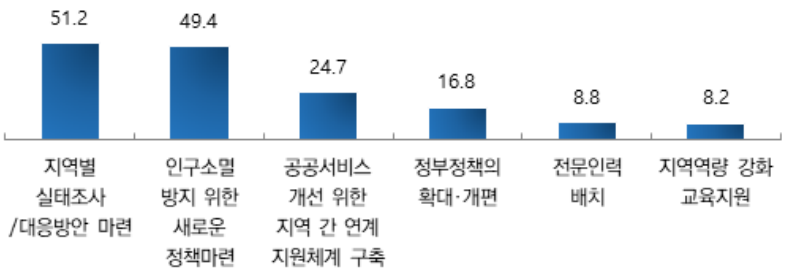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인구소멸에 대한 정책대응이 미흡한 이유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여성 응답자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문제진단 미흡'을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는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미흡'을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경상도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문제진단 미흡'을 주된 이유로, 여타 지역은 '지역맞춤형 지원정책(사업, 지원규모 등)이 미흡'을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다. 특히, 직업별 구분에서 비어업인의 경우 '인구소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부족'과 '인구소멸 문제

에 대응할 전담기관 미배치 및 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정책대응 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5-28〉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최우선 지원사업

(단위: %, 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어촌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별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52.3%)과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마련'(51.0%)에 있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더불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역 간 연계지원체계 구축' 25.3%, '정부정책의 확대·개편' 16.7%, '전문인력 배치' 8.7% 등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어촌 인구소멸 대응정책이 제시되었다.

응답자의 거주지역별로는 경기/인천, 강원도 지역에서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다. 여타 지역들은 '지역별 실태 조사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3절 어촌이주에 관한 도시민 인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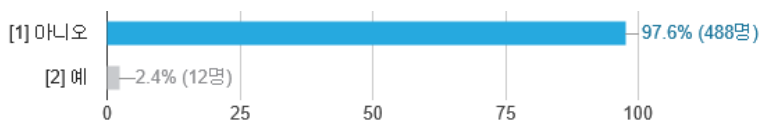
1. 어촌이주에 대한 인식: 새로운 거주지로서 어촌

1) 응답자 그룹 분리

응답자 중에는 현재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97.6%), 어촌이주에 대한 설문은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수도권 및 5대광역시 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5-29〉 어촌지역 거주 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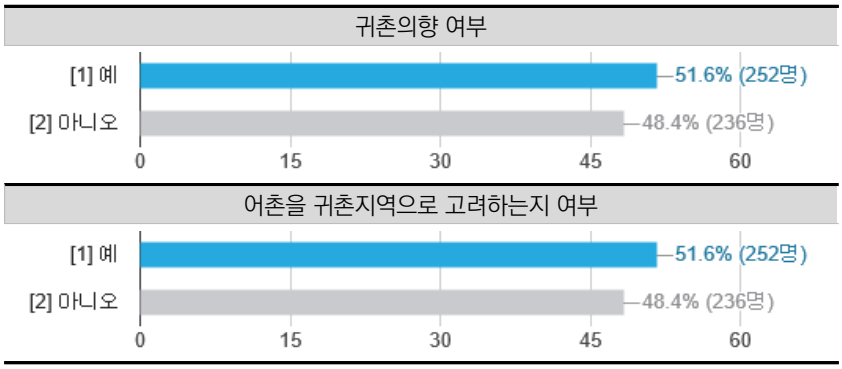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본 설문에서는 새로운 정주공간으로서 어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도시거주 응답자를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어촌이주 가능성에 따라 응답자를 분리한 후 각 집단별 이주유인과 정책요구를 반영한 경우, 청년층의 어촌이주 확대를 위한 실효성 높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어촌이주 의사가 강한 순서대로 ① 어촌으로 이주를 고려한 경험이 있는 그룹 ② 어촌이 아닌 농·산촌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그룹 ③ 귀촌을 고민한 경험이 없는 그룹으로 응답자를 유형화하였다. 즉, ①번 그룹은 〈그림 4-30〉의 문항에 모두 “예”로 응답한 그룹을 의미하며, ②번 그룹은 귀촌의향에는 “예”로 응답하였으나 어촌을 귀촌지역으로 고려하는지 여부에는 “아니오”로 응답한 집단을 뜻한다. 반면 ③번 그룹은 귀촌

의향에 대한 문항에 “아니오”로 응답한 귀촌 기피/무관심 집단에 해당한다.

〈그림 5-30〉 어촌이주 가능성에 따른 응답자 그룹 분리 문항

(단위: %, 명)



자료: 저자 작성

본 절의 인식조사 결과는 ① 어촌으로 이주를 고려한 경험이 있는 그룹을 ‘어촌이주 선호그룹’으로, ② 귀촌을 고민한 경험이 있으나 어촌이 아닌 농·산촌을 선호하는 그룹을 ‘어촌이주 비선호 그룹’으로, ③ 도시에서 계속 거주를 원하는 그룹을 ‘귀촌 비선호 그룹’으로 지칭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는 ③번 그룹에 해당하는 비중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①번 그룹이 전체의 29.9%, 귀촌은 희망하나 어촌이 주는 고려하지 않는 ②번 그룹이 21.7%를 구성하고 있다.

〈표 5-16〉 어촌이주 가능성에 따른 응답자 그룹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① 어촌이주 선호 그룹	②어촌이주 비선호그룹	③ 귀촌 비선호 그룹
사례수	488	146	106	236
비율	100.0	29.9	21.7	48.4

자료: 저자 작성

또한 응답자 그룹별 소득 현황을 확인한 결과, ① 어촌이주 선호 그룹은 여타 그룹 대비 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집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③ 귀촌 비선호 그룹은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 구성비가 귀촌을 고려해 본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17〉 응답자 그룹별 소득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 체	① 어촌이주 선호 그룹	② 어촌이주 비선호 그룹	③ 귀촌 비선호 그룹
전 체	100.0% (500)	100.0% (146)	100.0% (106)	100.0% (236)
100만원 미만	15.0% (75)	15.1% (22)	11.3% (12)	16.9% (4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1.0% (105)	17.8% (26)	15.1% (16)	25.4% (6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 (150)	23.3% (34)	33.0% (35)	32.2% (7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5.0% (75)	18.5% (27)	20.8% (22)	10.6% (2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2% (41)	10.3% (15)	9.4% (10)	5.9% (14)
500만원 이상	10.8% (54)	15.1% (22)	10.4% (11)	8.9% (21)

자료: 저자 작성

응답자 그룹별 동거인 구성을 살펴보면 ③ 귀촌 비선호 그룹에서 동거인이 없는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 이동이 상대적으로 편리한 1인가구에서 귀촌 고민 및 결정이 용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로, 오히려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단에서 가족 단위의 농·산·어촌 이주를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8〉 응답자 그룹별 동거인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 체	① 어촌이주 선호 그룹	② 어촌이주 비선호 그룹	③ 귀촌 비선호 그룹
전 체	100.0% (500)	100.0% (146)	100.0% (106)	100.0% (236)
동거인 없음	35.8% (179)	34.9% (51)	29.2% (31)	40.3% (95)
배우자(연인)	13.0% (65)	8.2% (12)	14.2% (15)	14.8% (35)
배우자 및 자녀	39.2% (196)	44.5% (65)	49.1% (52)	31.8% (75)
자녀	2.4% (12)	2.7% (4)	1.9% (2)	2.5% (6)
기타	9.6% (48)	9.6% (14)	5.7% (6)	10.6% (25)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이주 선호 그룹

먼저, ① 어촌이주 선호 그룹은 도시를 떠나 귀촌할 의향이 있는 동시에, 농·산·어촌 중 어촌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해 본 그룹이다.

〈표 5-19〉 어촌이주를 선호하는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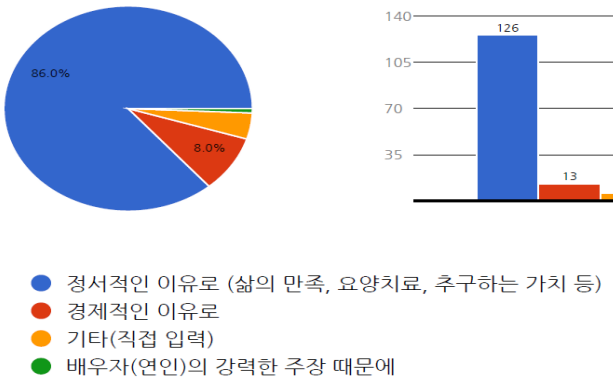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세)				
		남	여	19~29	30~39	40~49	50~59	60 이상
사례수	146	84	62	35	44	33	19	15
비율	100.0	57.5	42.5	24.0	30.1	22.6	13.0	10.3

자료: 저자 작성

어촌이주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어촌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해 본 사유로는 '삶의 만족, 요양치료, 가치추구 등 정서적인 이유'가 86.9% 비중을 보이며, '경제적인 이유'(9.5%)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5-31〉 어촌으로 이주를 고려해 본 이유

(단위: %, 명, n=146)



자료: 저자 작성

응답자 특성별로는 성별의 경우 경제적인 사유로 어촌이주를 고려해 본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9.5%로 여성의 8.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 응답자는 '수산물(회)에 대한 선호', '지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등 기타 사유로 이촌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이촌이주 고려사유는 젊은 층(19~49세)과 50세 이상 장노년층의 특성이 차별적으로 확인되었다. 젊은 층(19~49세)은 정서적인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장노년층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젊은 층과 견주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20〉 어촌이주 고려사유에 대한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세)				
		남성	여성	19~29	30~39	40~49	50~59	60 이상
전체	100.0 (146)	100.0 (84)	100.0 (62)	100.0 (35)	100.0 (44)	100.0 (33)	100.0 (19)	100.0 (15)
경제적인 이유	8.9 (13)	9.5 (8)	8.1 (5)	8.6 (3)	4.5 (2)	3.0 (1)	21.1 (4)	20.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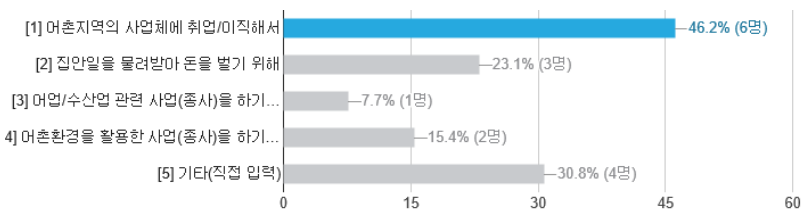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세)				
		남성	여성	19~29	30~39	40~49	50~59	60 이상
정서적인 이유	86.3 (126)	86.9 (73)	85.5 (53)	88.6 (31)	90.9 (40)	93.9 (31)	68.4 (13)	73.3 (11)
배우자 (연인)의 설득	0.7 (1)	-	1.6 (1)	-	-	-	-	6.7 (1)
기타	4.1 (6)	3.6 (3)	4.8 (3)	2.8 (1)	4.5 (2)	3.0 (1)	10.5 (2)	-

자료: 저자 작성

이어 상단의 항목별로 어촌이주를 고려해 본 동기를 보다 상세히 질문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에 응답한 집단 중 46.2%는 '어촌지역의 사업체에 취업/이직'하여 어촌이주가 예정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기타사유(30.8%), 가업승계(23.1%)'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사유는 '값싼 물가', '도시생활의 경제적 부담' 등 어촌지역의 저렴한 물가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어촌환경을 활용한 식당, 관광사업 등에 종사 또는 경영하기 위해 어촌이주를 고려해 본 2건은 모두 50~59세 집단에서 확인되는 등 은퇴를 앞둔 연령대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어촌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표시하였다.

〈그림 5-32〉 어촌이주를 고려하게 된 경제적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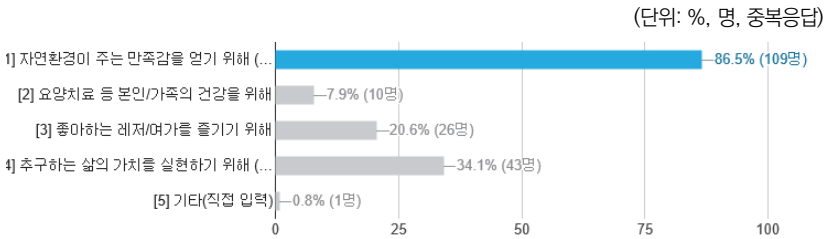
(단위: %, 명, n=, 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어촌이주 동기로서 정서적인 이유를 지목한 응답자들 중 86.5%는 '자연환경이 주는 만족감(바다환경, 생태, 여유로움 등)'을 얻기 위해 어촌이주를 고려해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추구하는 삶의 가치 실현(공동체생활, 자연친화적 삶 등)'(34.1%), '선호하는 레저/여가활동 향유'(20.6%) 등이 어촌이주의 정서적인 이유로 나타났다. 1건의 기타사유는 '도시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33〉 어촌이주를 고려하게 된 정서적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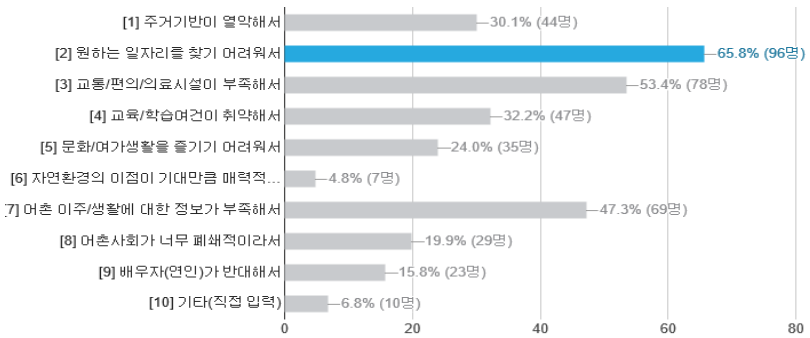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응답자 특성별로는 30대의 직장인 남성 응답자 집단에서 '자연환경이 주는 만족감'을 위해 어촌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전반적으로 남성 응답자는 '자연환경이 주는 만족감'이 정서적인 사유의 90.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반면, 여성 응답자 집단에서는 '추구하는 삶의 가치 실현'이 37.7%로 타 집단 대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40대 응답자들은 '요양치료 등 본인/가족의 건강'을 사유로 어촌이주를 고민해 본 경험이 16.1%로 확인되어 여타 연령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4〉 어촌이주를 실행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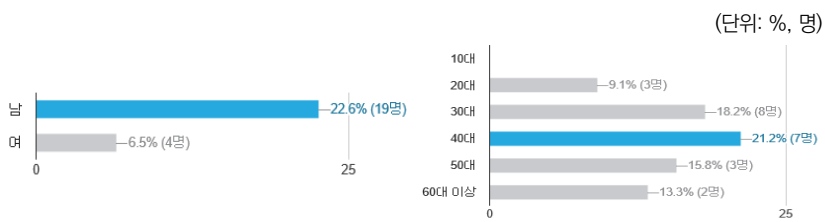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반면 어촌이주를 희망하였으나 실제 어촌으로 이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의 65.8%가 '원하는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원하는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은 특히 20대 여성 집단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어촌의 교통·편의·의료 시설 부족'(53.4%)과 '어촌 이주·생활 정보 부족'(47.3%) 등이 어촌이주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원하는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률이 78.8%로 타 집단 대비 높은 반면, 40대 집단에서는 자녀교육 및 자기계발과 관련된 '취약한 교육/학습여건' 항목이 54.4%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5-35〉 '배우자(연인)의 반대'에 응답한 집단 현황

(단위: %, 명)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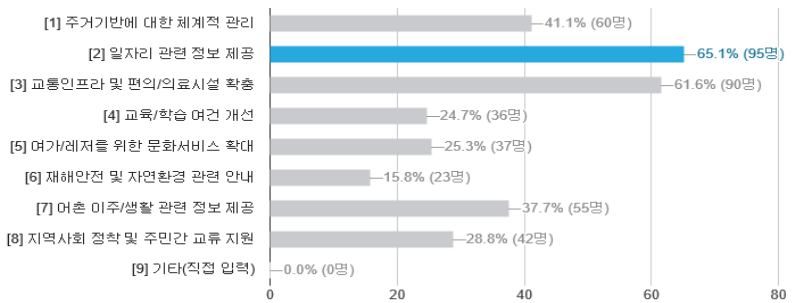
또한 어촌이주를 실행하지 못한 이유로 '배우자(연인)의 강력한 반대'를 지목한 응답자들은 40대 남성 직장인 집단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어촌이주를 희망하는 그룹은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65.1%)이 어촌이주에 요구되는 주요 정책적 지원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교통인프라 및 편의·의료시설 확충'(61.6%)과 '주거기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41.1%) 순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20대 여성 직장인 그룹으로, 해당 집단에서 어촌이주를 실행하지 못한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더불어 여성집단은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보기의 응답률(69.4%)이 타 집단 대비 높은 반면, '어촌 이주·생활 관련 정보 제공'은 상대적으로 남성(46.4%)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69.7% 비중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달리, 40대는 '주거기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48.5%) 등 주거환경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36〉 어촌이주를 다시 고려하기 위한 요건

(단위: %, 명,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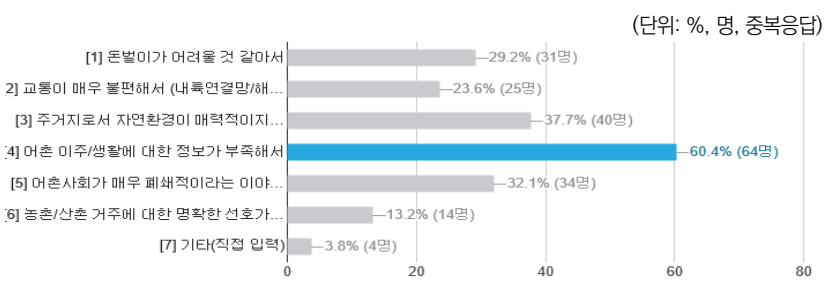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어촌이주 비선호 그룹

귀촌의향은 있으나 어촌이 아닌 농·산촌 이주를 선호하는 집단은 어촌이주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 '어촌 이주·생활 정보 부족'(60.4%), '자연환경의 낮은 매력도(태풍, 비린내, 해양쓰레기 등)'(37.7%), '어촌사회의 폐쇄성'(32.1%)를 지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특성으로는 남성의 경우 69.8%가 '어촌 이주·생활 정보 부족'을 이유로 제시한 반면, 여성은 '경제활동의 어려움'(35.8%)이 정착지로서 어촌을 고려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높은 자연환경 의존도로 인한 생활의 불확실성', '물에 대한 두려움', '심한 배멀미 등 교통한계' 등이 조사되었다.

농·산촌 이주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어촌이주를 고려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주거지로서 어촌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제고(재해안전, 쾌적성 등)'(52.8%), '어촌 이주·생활 관련 구체적 정보 제공'(47.2%),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4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산촌 이주를 고려할 정도로 귀촌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자 하는 집단에게는 어촌의 환경적·사회적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어촌이주를 유인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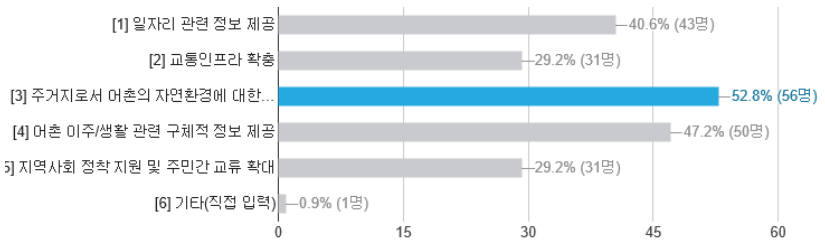
〈그림 5-37〉 농·산촌 대비 어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38〉 어촌이주 결정에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사항

(단위: %, 명, 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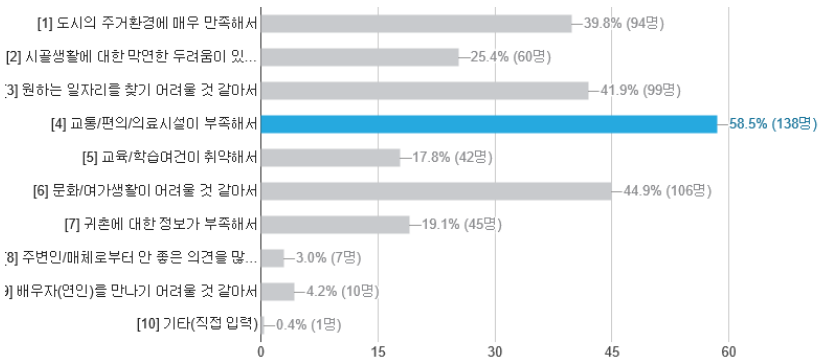
4) 귀촌 비선호 그룹

귀촌을 선호하지 않는 그룹은 귀촌에 따른 '교통·편의·의료시설 부족'(58.5%), '문화·여가생활 향유의 어려움'(44.9%), '원하는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41.9%) 등의 문제를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를 고민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또한 39.8%에 이르는 상당수의 응답자가 '도시의 주거환경에 매우 만족'하여 귀촌을 고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30대 여성 응답자가 귀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교통·편의·의료시설 부족'을 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교통·편의·의료시설 부족' 항목은 전 연령대의 여성 집단에서 62.2% 응답률을 보였으며, 반면 남성 집단에서는 '원하는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51.5%)에 응답한 비중이 여성 대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 연령대 중 20대 집단은 귀촌 비선호 사유로서 '문화·여가생활 향유의 어려움'(52.3%)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직업 분류에서는 20대에 주로 해당하는 학생 집단이 '문화·여가생활 향유의 어려움'(57.4%)에 주로 응답하였다. 무직/기타에 해당하는 직업유형은 '시골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38.7%)에 비교적 많이 응답하였다.

〈그림 5-39〉 귀촌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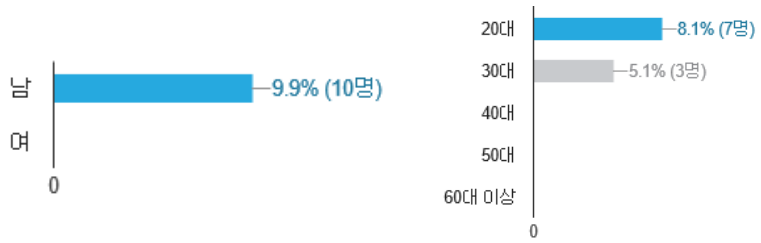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귀촌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배우자(연인)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에 응답한 10명의 응답자는 전원 20~30대 청년층 남성으로 나타났다.

〈그림 5-40〉 '배우자(연인)을 만나기 어려움'에 응답한 집단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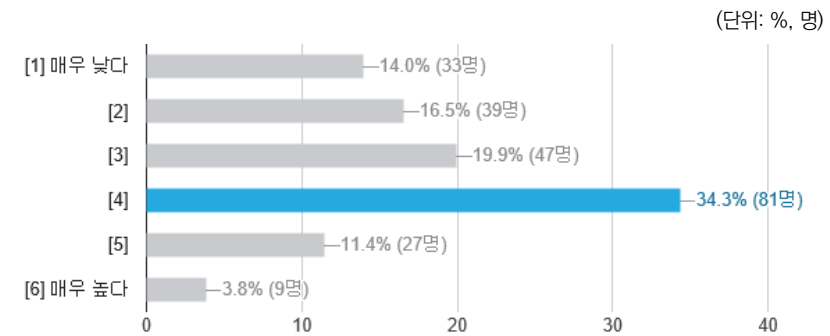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또한 현재와 유사한 수입 및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인근의 어촌지역(예: 강원도 속초시)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를 6점척도형으로 조사한 결과, 귀촌 비선호 집단의 이주의향 평균점수는

3.24점으로 보통보다 일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이주의향 없음(1~3점)'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50.4%로 '이주의향 있음(4~6점)' 의견인 49.6%보다 많았다. 응답자 연령대별로는 40대(65.2%) 응답자가 '이주의향 없음(1~3점)'에 주로 응답한 반면, 20대(55.8%)와 30대(54.2%) 응답자는 '이주의향 있음(4~6점)'에 대한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시와 가까운 어촌으로 이주의향이 '약간 있음(4점)'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3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 도시와 가까운 어촌지역의 정주·교통기능 정비와 홍보 등을 통해 도시민의 어촌이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41〉 도시와 가까운 어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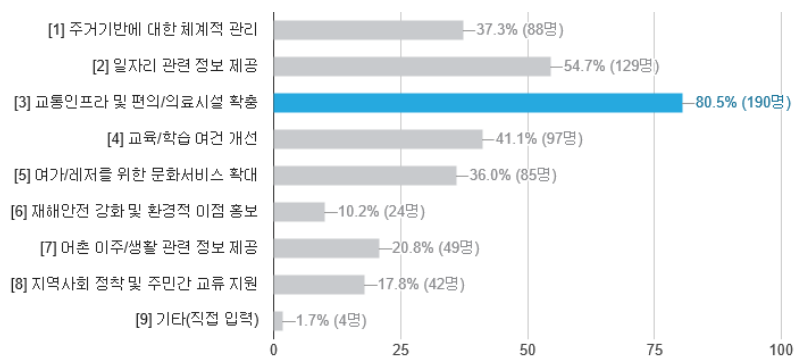
응답자의 80.5%는 도시민의 어촌이주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교통인프라 및 편의/의료시설 확충'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귀촌 비선호 집단이 귀촌을 고려하지 않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 '교통·편의·의료시설 부족'(58.5%)을 선정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반면 44.9%의 응답자가 귀촌 비선호 사유로 '문화·여가생활 향유의 어려

움'을 지목한 것과 달리, 도시민의 어촌이주 확대를 위해 정책적 필요한 대안은 '일자리 정보 제공'(54.7%), '교육·학습 여건 개선'(41.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의견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 유치' 등의 경제적 차원과 '배타적 문화 개선',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문화 개선' 등 정서적 측면의 응답이 제시되었다.

응답자 성별로 분리할 경우 남성은 '주거기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44.6%)를, 여성은 '재해안전 강화 및 환경적 이점 홍보'(13.3%)를 도시민의 어촌이주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66.1%)의 필요성이 강조된 반면, 40대는 '교육·학습여건 개선'(52.2%)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항목은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학생(61.1%), 무직 및 기타(61.3%) 집단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5-42〉 어촌의 거주지 매력도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단위: %, 명,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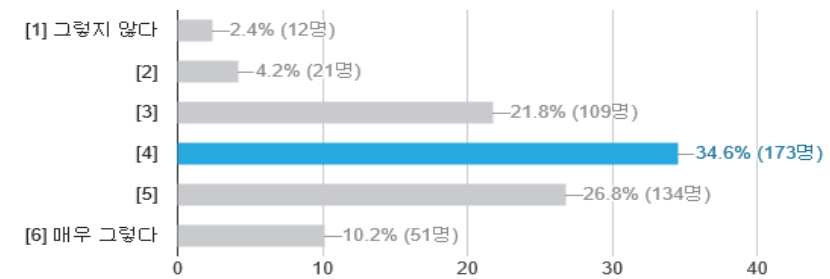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소멸위험 지역으로서 어촌

본 설문에서는 응답자 본인의 거주지로서 어촌에 대한 인식조사와 함께, 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어촌의 인구소멸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응답자 전원에게 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인지수준을 6점척도형으로 질문한 결과, 평균점수 4.10점으로 어촌의 인구소멸에 대한 인지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어촌의 인구소멸 위험에 동의하는 의견(4~6점)은 과반수가 넘는 71.6%로 동의하지 않는 의견(1~3점) 대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43〉 어촌의 인구소멸 위험에 대한 동의여부

(단위: %, 명)



자료: 저자 작성

〈표 5-21〉 귀촌 고려경험 유무에 따른 어촌 인구소멸 위험 인식수준

(단위: %, 명)

구 분		전체	어촌의 인구소멸 위험에 대한 인식수준*					
			매우 낮음	낮음	다소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귀촌(농산어촌) 고려 경험	있음	57.9 (146)	50.0 (2)	75.0 (6)	55.8 (24)	61.1 (58)	54.3 (44)	57.1 (12)
	없음	42.1 (106)	50.0 (2)	25.0 (2)	44.2 (19)	38.9 (37)	45.7 (37)	42.9 (21)

주: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어촌의 인구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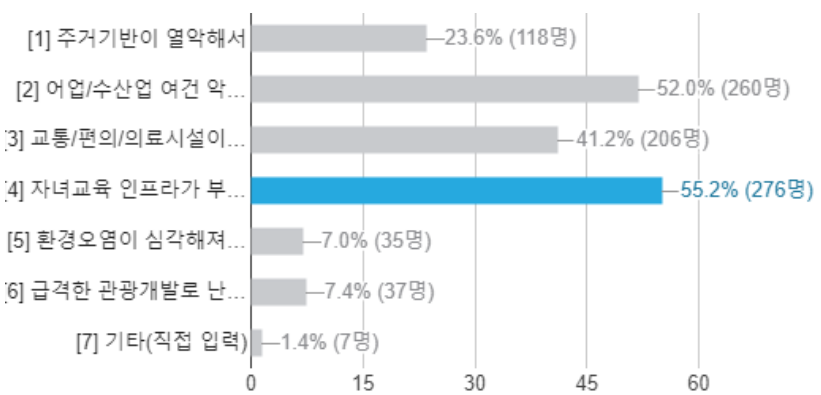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어촌의 인구소멸 위험에 대한 인식수준과 농·산·어촌으로 귀촌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촌의 인구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룹에서 귀촌을 고려해 본 집단의 비중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귀촌을 고려하며 어촌지역에 대해 접하게 된 정보 또는 관심이 어촌지역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도시거주민에게 어촌의 지역주민들이 어촌을 떠나는 이유를 예상해 보도록 요청한 결과, 전체 응답의 55.2%가 '자녀교육 인프라의 부족'을 문제로 어촌을 이탈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어업·수산업 여건 악화로 인한 소득감소'(52.0%), '교통·편의·의료시설의 부족'(41.2%)이 뒤를 이었다. 특히, 40대 여성집단은 타 연령대 대비 '자녀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로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어촌이탈 원인으로 '어업·수산업 여건 악화로 인한 소득감소'는 40대(61.6%)의 응답률이 타 집단 대비 높은 반면, '교통·편의·의료시설의 부족'은 20대(51.4%)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44〉 어촌거주민의 어촌이탈 원인

(단위: %, 명,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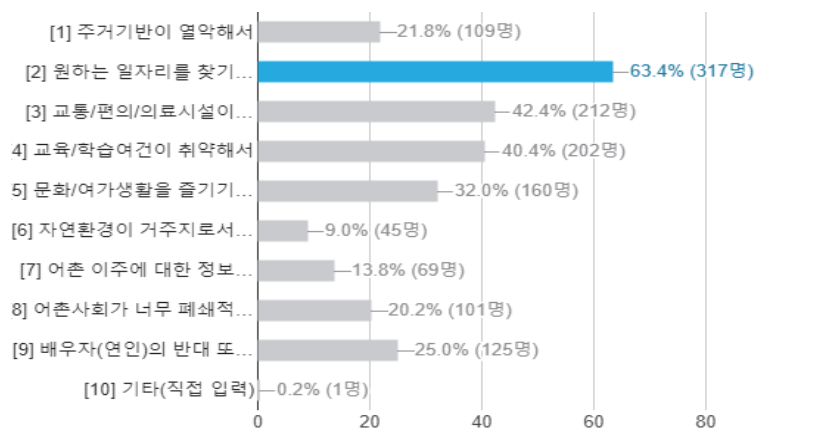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더불어 어촌거주민의 어촌이탈 원인으로서 '급격한 관광개발에 따른 난개발/외지인 증가'(7.4%)와 '발전시설 건립, 해양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7.0%) 역시 일정수준의 응답을 확보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높은 노동강도',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등이 제기되었다.

어촌지역에 20~40대의 젊은 층이 이주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전체 응답의 63.4%가 '원하는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을 꼽았다. '교통·편의·의료시설 부족'(42.4%)과 '취약한 교육·학습여건'(40.4%) 또한 젊은 층의 비유입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취약한 교육·학습여건' 문항에서 여성(45.1%)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배우자(연인)의 반대 또는 어촌에서 결혼상대를 만나기 어려워서'는 상대적으로 남성(33.1%) 응답자가 많이 선택했다. 1건의 기타응답은 '굳이 어촌으로 이주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촌이 도시의 대안지역에서 나아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림 5-45〉 젊은 층의 어촌이주 기피요인

(단위: %, 명, 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제4절 인식조사 결과 종합

본 연구는 어촌지역 내 급격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촌주민 및 도시거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지역주민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어촌 인구소멸 환경과 지역주민의 어촌이탈, 청년층의 어촌이주 진입장벽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수산업 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주민 편의생활 기반, 문화생활 여건, 공공서비스 구축 등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도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되었으나, 인구소멸 위험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현지주민들은 경제활동 기회와 소득문제를 인구소멸에 대응할 핵심 주제로 제시하였다.

반면 어촌이주에 대한 도시민 인식조사 결과는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위험, 해양쓰레기 등 어촌지역의 낮은 환경매력도와 취약한 문화·여가생활 여건이 도시민의 어촌이주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촌이주 기피요인으로서 일자리 문제에서도 일자리 수의 부족보다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어촌 내 일자리 특성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또는 높은 육체노동 강도 대비 낮은 소득수준을 우려하는 등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대상 조사결과는 성별 및 연령대별로 청장년층의 어촌이주 유인전략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가령 청년층(20~30대) 여성은 문화·여가생활 향유가 가능한 어촌지역으로 이주 의향이 높으며, 동일 연령대의 남성은 어촌생활 정보와 배우자(연인) 만남 및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어촌지역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집단은 어촌 내 경제활동 기회에 대한 불확

실성으로 인해 어촌이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우려는 도시민의 인식 속에 어촌 내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노동강도가 높은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촌 내 어업·수산업 분야의 경제활동 중 상당수는 고령 여성집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1차산업 외에도 어촌의 공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부·민간사업이 추진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어촌 내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1인가구 대비 배우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그룹에서 어촌이주 또는 농·산촌이주를 고민해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 이동이 비교적 쉬운 1인가구에서 귀촌을 고려해 본 경험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며, 이로 인해 자녀교육 및 본인·배우자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인프라가 확보된 어촌지역으로 이주를 선호하는 40대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5-22〉 어촌 인구절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구 분	주요 결과 및 이슈	
어촌 주민 인식 조사	어촌지역의 정주환경 문제점	**1순위: 수산업 여건의 지속적 쇠퇴**(51.8%), 2순위: 주민 편의생활 기반 미비(30.8%) - 산업기반 측면에서 '청년 종사자 감소(지원인력 부족)', '어업기반시설 취약', '수산업의 확장성 한계' 문제 지목 - 여성은 '편의생활 기반 미비' 문제 제기
	어촌주민의 이탈요인	**1순위: 일자리 부족 및 수산업 여건 악회**(81.4%), 2순위: 공공서비스(문화/의료) 취약(32.6%) - 고령층 중심 '대중교통/해상교통 부족' 문제 제기
	청년층의 기피요인	**1순위: 일자리 부족 및 수산업 여건 악회**(81.7%), 2순위: 교육인프라 부족(38.7%)
	정책대응 문제	1순위: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부족 원인(60.1%), 2순위: **지자체 중심** 실태조사 및 문제진단 미흡 원인(40.4%)

구 분	주요 결과 및 이슈	
도시민 인식 조사	어촌이주 기피원인	어촌이주 가능성에 따라 유입/기피 원인 상이 ① 높음: (선호) 정서적 이유 → (문제) 원하는 일자리 탐색 ② 보통: (한계) 정보부족 → (문제) 재해위험, 낮은 쾌적성 등 환경매력도 ③ 낮음: (비선호) 교통/편의/의료 및 문화/여가 생활 어려움 → (제안) 공공서비스 확충
도시민 인식 조사	어촌이주 기피원인	성별/연령대에 따라 비유입 요인 상이 - 20~30대 여성: 어촌 일자리 정보 부족 + 문화·여가생활 향유의 어려움 - 20~30대 남성: 어촌이주/생활정보 부족 + 배우자(연인) 만남 어려움 - 40대: 교육인프라 개선 → 가족단위 이주고려
	청년층의 어촌비유입	1순위: 원하는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63.4%), 2순위: 교통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미비(42.4%), 3순위: 교육/학습여건 취약(40.4%), 4순위: 문화/여가생활 여건 부족(32.0%), 5순위: 배우자(연인) 반대 및 결혼 문제(25.0%)

주: 본 표에 요약된 응답비율(%)은 중복응답으로 조사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제 6 장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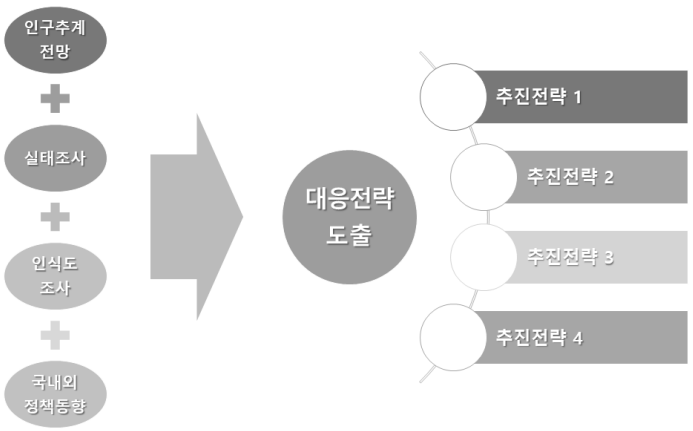
제1절 기본방향

1. 대응전략 도출

1) 대응전략 도출방안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에 대한 어촌사회의 대응전략은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인구추계 전망, 실태조사, 인식도 조사, 국내외 정책동향 등의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분야의 정책환경 변화와 거버넌스, 예산,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그림 6-1〉 대응전략 도출방안



자료: 저자 작성

2) 대응전략 도출

(1) 인구추계 전망

인구추계 전망에 따른 대응전략은 제3장 제2절의 인구추계 전망에서 확인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였다.

첫째, 2045년까지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은 어촌지역(소멸지수 0.2 미만)이 전체의 84.2%로 전망되므로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고 어촌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2045년 기준으로 어촌지역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48.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초고령화에 대응한 어촌사회의 전략은 도시청년을 어촌으로 유입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어업분야에 한정된 귀어·귀촌을 어촌산업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2015년 기준으로 가임여성의 87.0%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촌 재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준도시수준의 생활서비스를 마련해 정주여건에 대해서 여성·가족단위 친화적으로 접근하여 거부감을 줄여나가야 한다.

넷째, 인구추계 결과 지역별로 감소하는 지역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일자리 창출 및 어촌사회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6-1〉 인구추계 전망에 따른 대응전략 도출

구분	주요 이슈 및 문제점	대응전략
지역소멸 위험성	지역소멸지수 0.2 미만 **(15년) 153개소 → (45년) 290개소**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 **새로운 인구유입(청년)을 통한 어촌 활력 제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가 어촌지역 절반 수준 **(15년) 23.58% → (45년) 50.70%**	청년의 어촌 유입을 위한 전략 -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 정책 강화** (어업분야 → 어촌산업 확대 필요)
가임여성 인구비율	가임 여성 87.0% 도시지역에 거주해 농어촌 거주 기피 **(15년) 9.01% → (45년) 5.60%**	어촌지역 재생산력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 **여성 친화형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준도시수준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지역별 인구추계	지역별로 인구감소지역 출현 **(-) :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인천 등**	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인구유입 전략 - **어촌지역 내 소득 및 일자리 창출** - **귀어귀촌 시 진입장벽 완화·해소**

(2) 어촌지역 실태 및 심층조사

어촌지역의 실태조사와 동·서·남해, 제주지역 어촌의 심층조사에 대한 결과에 따른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자리 현황은 평균 종사자수를 비교한 것으로 도시지역 526명에 비해 어촌지역과 섬지역은 각각 341명, 230명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재생 등 청년층의 인구유입을 위한 창업·창직

등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전략과제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어촌사회는 보건·의료, 정주환경, 교육, 문화·여가 등 삶의 질 전반적인 여건에서 생활 SOC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역시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촌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 보건, 문화·여가 등의 생활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충·정비할 수 있는 전략과 어촌의 공간적·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한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어촌사회가 공간적·사회적인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상교통 등 제한된 접근성과 수협이나 어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등 어촌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기존 농어촌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동·서·남해와 제주지역의 어촌의 인구소멸과 지역 여건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부분 섬지역 어촌은 인구소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에 따른 정주여건 악화로 삶의 질 여건에 따른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강원도 양양군 인구리의 어촌은 최근 5년 전부터 서핑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외부로부터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지역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해양레저 활동을 기반의 사업체와 정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레저활동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활동이 창출되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즉, 어촌사회의 새로운 창의적인 융합형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의 개선을 통한 젊은 층의 유입으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실증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표 6-2〉 어촌지역 실태에 따른 대응전략 도출

구분		주요결과	세부내용
일자리 현황 (평균 종사자수)		· 도시지역 : 526명 · 어촌(읍·면지역) : 341명 · 섬지역 : 230명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 **젊은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생활 SOC & 만족도	생활 SOC 확충	· 어촌 생활인프라 상대적으로 취약 · 교육시설 : 어촌(17) / 도시(77) · 여가시설 : 어촌(6) / 도시(46)	**어촌형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개선** - 지역밀착형 생활 SOC 지원 확대
	생활서비스 만족도*	·농촌, 도시에 비해 삶의 질 낮음 · 정주생활(5.06 / 6.09 / 7.40) · 교육(3.65 / 5.32 / 6.77) · 문화여가(3.58 / 4.8/ 6.55)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어항 유휴공간, 폐교 등 거점지역 조성 - 거점지역과 촌락(마을) 간 연계성 제고 - 사회적수산업 도입

주: *는 생활서비스 만족도(10점) 조사 결과를 어촌, 농촌, 도시지역에 대해 비교한 것임

(3) 인식도 조사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원인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요인은 수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효과적인 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출산이 가능한 계층은 어촌사회에 정착하는데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사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취약한 생활서비스 확충과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촌의 공간·사회적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민이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요인은 도시민이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과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어촌으로 이주에 대한 적극성을 갖는 응답자들은 일자리 정보와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에서 벗어나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민은 연령·성별에 따라 어촌사회로 새롭게 진입하는데 제약요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임기의 여성은 일자리와 문하·여가에 대한 니즈가 높았고, 반면 20~30대 남성은 어촌 이주에 따른 배우자 등 가족생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연령층은 자녀 육아 및 교육 등 생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연령·성별 니즈에 따른 맞춤형 어촌정책을 통해 새로운 신규인력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표 6-3〉 지역주민 및 도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전략 도출

구분		주요 이슈 및 문제점	대응전략
지역주민	인구소멸 요인	**일자리 및 경제활동 여건 개선 필요** - 수산업 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는 어촌주민 이탈(82.0%), 청년층의 어촌기피(80.3%) 1순위 요인으로 지목 **어촌주민 이탈방지에는 공공서비스 개선, 청년층 이주확대에는 교육인프라가 주효** - 인구소멸요인 2순위로 공공서비스 취약 (어촌주민, 32.7%), 교육인프라 부족 (청년층, 41.3%) 문제 제기	**이탈방지를 위한 수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어촌활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 - 청년 유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구분		주요 이슈 및 문제점	대응전략
지역 주민	정책 대응	**인구소멸 대응정책의 미흡·태부족 체감** - 지역맞춤형 정책 부족(59.0%), 지자체 중심 실태조사 및 문제진단 미흡(40.5%) 원인 지적	**어촌 공간·입지적 특성에 따른 맞춤개발 전략** - 지방분권 및 지자체별 어촌개발 전략
도시민	이주 기피 요인	**선호 일자리의 부족 및 어촌의 낮은 주거(자연)환경 매력도 문제 제기** - 어촌이주 적극성에 따라 진입장벽 차이 ① 높음: 원하는 일자리 탐색/부족 문제 ② 낮음: 정보부족 및 낮은 환경매력도 (환경재해, 오염, 냄새 등)	**맞춤형 일자리 다양화 전략** - 청년/중장년 유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어촌 내 다양한 경제활동 창출 지원 **어촌이주 및 생활정보 제공채널 확대** **어촌 경관재생 및 환경관리 등 주민친화적 환경개선 전략** - 해양쓰레기, 어구 등 정리사업 진행 및 환경 정비
	연령·성별 특성	**연령/성별에 따라 비유입 요인 상이** - 20~30대 여성: 어촌 일자리 정보 부족 + 문화·여가생활 향유의 어려움 - 20~30대 남성: 어촌이주/생활정보 부족 + 배우자(연인) 만남 어려움 - 40대: 교육인프라 개선 → 가족단위 이주고려 - 1인가구 대비 3인이상 가구(배우자/자녀)의 가족단위 어촌이주 의향 높음	어촌지역 재생산력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 **여성친화형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여성이 종사 가능한 어촌 일자리 정보 제공** - 남성중심의 어촌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 **가족중심형 근린환경 및 문화 조성** - 교육, 여가 등 가족단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 도모

(4) 국내외 정책동향

인구추계 전망에 따른 대응전략은 제4장 제2절 국내외 정책동향에서 살펴보았던 일본과 유럽 등 선진사례의 정책과 시사점을 토대로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 '지방창생'에서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체계적인 접근 전략과 소거점화 및 집락 간 연계를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어촌인구 이탈방지와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럽 농어촌지역의 '스마트 마을(Smart Village)'에서 어촌의 매력성 제고와 상대적 열위에 있는 어촌의 공공서비스를 제고시킬 수 있는 ICT 기반 스마트 어촌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어촌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공간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어촌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표 6-4〉 국내외 정책동향 검토를 통한 대응전략 도출

구분		주요 이슈 및 문제점	대응전략
해외	일본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 지방소멸 대응 '지방창생' 전략 (소득과 일자리 창출, 청년인재 양성)	**범부처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전략 필요** -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 어촌의 지방소멸 대응에 따른 협업체계
		농어촌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소거점화와 농어업집락 연계 강화	**어촌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어항 유휴공간, 폐교 등 거점지역 조성 - 거점지역과 촌락(마을) 간 연계성 제고
	유럽	스마트 마을(Smart Village) 도입 -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서비스, 연계성, 첨단화 등 지향	**어촌의 생활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전략** - ICT기반 스마트 어촌 도입
		지역공동체 주도 지역개발(C.L.L.D) - 지역연대, 소득,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성	**지역공동체 기반 어촌개발 체계 마련** - 촌락(마을) 연대를 통한 권역화 - 지역공동체 역량기반 강화
국내	균형발전계획	지역을 삶터, 쉼터, 일터의 균형 - 삶의 질과 어촌의 매력성 제고 -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규정 마련	**법정계획 간 연계 통한 집행력 제고** - 국가균형발전계획 ↔ 어촌어항발전계획(2019~2023년) - 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농어촌 365 전략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보육보건 30 / 창업,평생교육/30 / 안전응급 5	**어촌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어항 유휴공간, 폐교 등 거점지역 조성 - 거점지역과 촌락(마을) 간 연계성 제고

2. 추진전략

1) 개요

본 연구에서 인구소멸에 대비한 어촌사회 대응전략은 〈표 6-5〉와 같이 모두 4대 전략으로 ⅰ) 인구소멸 대응 정책기반 마련, ⅱ)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주도형 기반 강화, ⅲ) 인구유입 촉진 및 삶의 질 개선, ⅳ) 인구소멸 위기지역 활력 제고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소멸 대응 정책기반 마련 전략은 범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① 인구소멸 대응 법·제도 개선, ② 인구대응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기관 지정, ③ 어촌지역 인구활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토록 한다. 어촌지역의 인구소멸 대응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범 정부차원의 거버넌스와 어촌지역이 국가차원의 인구활력 체계의 틀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기반 강화 전략은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어촌사회에 정착과 어촌사회의 개방성 등 커뮤니티의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이며, ① 수산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② 어업 일자리 매칭 강화, ③ 사회적수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토록 한다. 어촌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높은 기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업·창직 등 일자리 지원과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셋째, 인구유입 촉진 및 삶의 질 개선 전략은 어촌사회의 매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① 수산·어촌 정착지원 강화, ② 어촌 생활서비스 최소기준 도입, ③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을 추진토록 한다. 어촌사회 외부에서 인구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지원방안

과 어촌사회의 매력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 위기지역 활력 제고는 어촌의 인구소멸지수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어촌사회 통합, 첨단기술과 사회혁신 등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으로 ① 어촌사회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 ② 스마트 어촌(Fishing Community)를 조성 한다. 이와 같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서는 어촌사회의 과감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표 6-5〉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대비한 대응전략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대응 전략			
인구소멸 대응 정책기반 마련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기반 강화**	**인구유입 촉진 및 삶의 질 개선**	**인구소멸 위기지역 활력 제고**
인구소멸 대응 법·제도 개선	수산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가족친화형 지원 강화	어촌사회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
인구소멸 대응 전담부서/전문기관신설	어업 일자리매칭 강화	어촌 생활서비스 최소기준 도입	스마트 어촌 도입
어촌지역 인구활력 체계 구축	해양수산형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2.0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자료: 저자 작성

2) 전략과 과제

〈표 6-6〉은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4대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을 정리하였다.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과제는 11대 세부전략과 2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6-6〉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대응 4대 전략과 과제

4대 전략	세부 전략과제	추진과제
인구소멸 대응 정책기반 마련	인구소멸 대응 법제도 개선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칭)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어촌 인구소멸 위기지역 영향평가제도 도입
	인구소멸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전문기관 지정·운영	해양수산부 '어촌사회정책과' 신설
		범 부처 차원의 인구소멸 대응 거버넌스 구축
		어촌의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
	어촌지역 인구활력 체계 구축	수산업·어촌 인구활력 종합계획
		연안 지자체별 인구활력 이행계획
어촌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수산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수산·어촌 일자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수산·어촌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어업 일자리 매칭 강화	
	해양수산형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2.0	어촌계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타 부처 예비 사회적경제조직 연대·협력 기반 마련
인구유입 촉진 및 커뮤니티 기반 강화	가족친화형 지원 강화	가족친화형 '漁울림' 복합단지 조성
		여성 정착을 위한 우대 지원
	어촌 생활서비스 최소기준 도입	입지유형·부문별 어촌 생활서비스 기준 마련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삶의 질 지수 도입 및 서비스기준 이행 평가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어촌 인구소멸지역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어촌 생활복지 거점센터 지원
인구소멸 위험지역 활력 제고	어촌사회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조성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전략별 추진과제

1. 인구소멸 대응 정책기반 마련

1) 인구소멸 대응 법·제도 개선

(1)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본 법안의 제안은 어촌지역으로 특정하는 방안과 농산어촌을 통합하는 방안 등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어촌으로 특정하는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가 소관하고 어촌에 대한 일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점과 「어촌 뉴딜 300사업」 등 어촌 지역재생의 근거규정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농·산촌과 섬지역 역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농산어촌과 섬지역을 포괄하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의 공동으로 소관하는 법률로 입법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다만 농산어촌과 섬지역의 다양성과 입지적 특성이 반영된 지원방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7〉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방향(안)

구분	1안 (어촌을 특정하여 입법 추진)	2안 (농·산·어촌을 통합하여 입법 추진)
법률명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구분	1안 (어촌을 특정하여 입법 추진)	2안 (농·산·어촌을 통합하여 입법 추진)
대상지역	수산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어촌	• 수산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 • 농식품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공간위계	읍·면 전 지역 및 동지역	• 읍·면 전지역 및 동지역(어촌) • 읍·면지역(농촌) •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섬(도서지역)
장점	• 어촌에 대한 일괄적인 정책 추진 가능 • 어촌 지역재생 근거규정 마련	•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가능 • 다부처 소관으로 입법추진 용이
단점	• 농산촌, 섬지역 분리 입법에 따른 부담	• 농산어촌의 공간·사회적 특수성 반영 한계

(2) (가칭)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가가 특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별자금의 운용 및 지출을 특별수입에 의존할 때 독립계정을 설치하여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특별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를 특별회계라 한다[29], 특별회계는 인구소멸의 대응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능률성이 있을 때 조성한다. 따라서 (가칭)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는 인구이동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인하는 것으로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지원에 따른 특별회계는 지정된 세입마련이 필요하며,

29) 경제학 사전(검색일: 2018.10.1)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통해서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동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30]를 통해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6-8〉 (가칭)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원 특별회계 방향

구분	지역발전특별회계	(가칭)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원 특별회계
근거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가칭)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목적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원
재원	주세,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
예산규모	5조 원	1조 원

(3) '어촌 인구소멸 위기지역 영향평가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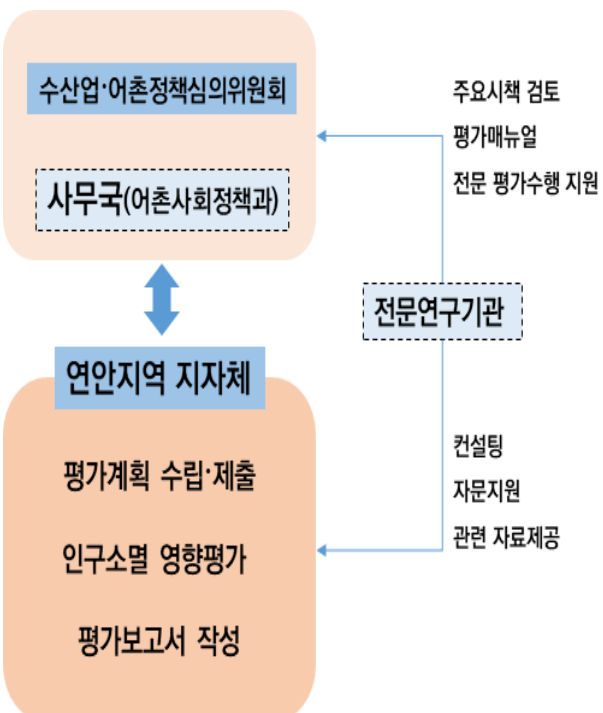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위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소멸의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이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어촌 인구소멸 위기지역 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어촌의 인구소멸과 관련된 통계를 공간위계별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기획·시행하는 정책을

30)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 재정정책자문회의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 각 부처 차관, 기금 소과 위원회 등의 부기관장, 광역단체장,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30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됨

평가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인구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서 총괄하고, 연안지역 지자체가 어촌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영향평가계획 수립과 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연구기관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주요시책 검토, 평가매뉴얼, 전문 평가수행과 연안지역 지자체의 컨설팅, 관련 자료제공 등을 통해 영향평가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2〉 어촌 인구소멸 위기지역 영향평가 체계(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4, p.207의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해 보면 〈표 6-9〉와 같다. 이 영향평가는 크게 기초통계, 정책, 지원사업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에 따라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모니터링, 정책과 지원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해당 정책과 지원사업 집행·관리에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표 6-9〉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 영향평가(안)

구분	세부항목		비고
기초통계	인구	인구통계(가임기, 고령자, 15세 미만 등)	인구소멸 지역 모니터링
	지역소멸	지역소멸지수(읍·면별)	
정책	인구유입	귀어귀촌 지원정책	정부정책 영향평가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지원 정책	
	삶의 질 개선	어촌·어업인 삶의 질 지원정책	
		어촌 정주환경 개선	
지원사업	인구유입	도시민 정착 지원(귀어학교, 홈스테이 등)	지원사업의 인구유입 효과 등 효과 검토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원스톱 창업지원	
		수산창업 투자지원센터 지원	
		수산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지원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수산, 어촌비즈니스)	
		창업 아이디어 지원(해양산업 오션 비즈니스 등)	
		창업펀드 지원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삶의 질 개선	어업인 복지(가사도우미, 어가도우미 등)	
		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인프라 지원(어촌뉴딜, 일반농산어촌 등)	
		작업환경 개선(수산장비 구입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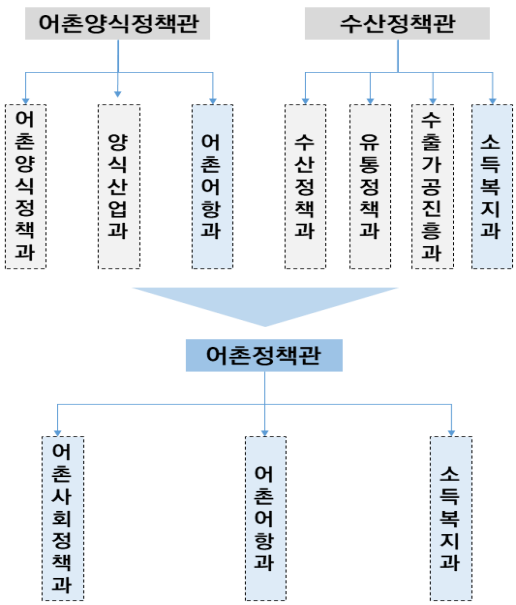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인구소멸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전문기관 지정·운영

(1) 해양수산부 '어촌사회정책과' 신설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대한 정책은 인구학, 사회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며, 일자리, 사회혁신, 인력정책, 삶의 질 향상, 정주환경 개선 등의 복합된 업무로 기존 어촌개발이나 소득복지과 등의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인력과 업무영역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 어촌사회정책과를 신설하고, 어촌어항과(어촌양식정책관), 소득복지과(수산정책관)를 어촌정책관(신설)으로 이설하여 어촌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그림 6-3〉 (가칭) 어촌사회정책과 신설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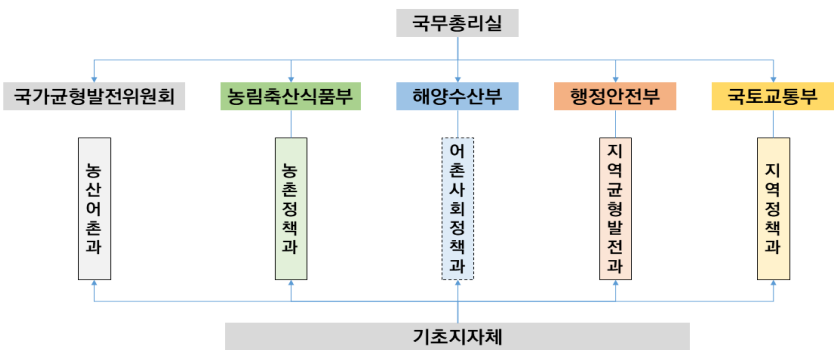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범 부처 차원의 인구소멸 대응 거버넌스 구축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는 어촌뿐만 아니라 농촌, 산촌, 섬지역 등 비도시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입지여건과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이들 지역 간에도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인구소멸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규제개혁 등 공동의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부(가칭 어촌사회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등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각 부처별 농산어촌과 지역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범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그림 6-4〉 범정부 차원의 인구소멸 거버넌스 구축(안)



자료: 저자 작성

(3) 어촌의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인구소멸에 대한 통계분석, 심층조사, 정책과 지원사업의 영향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현장의 니즈를 진단하고 정확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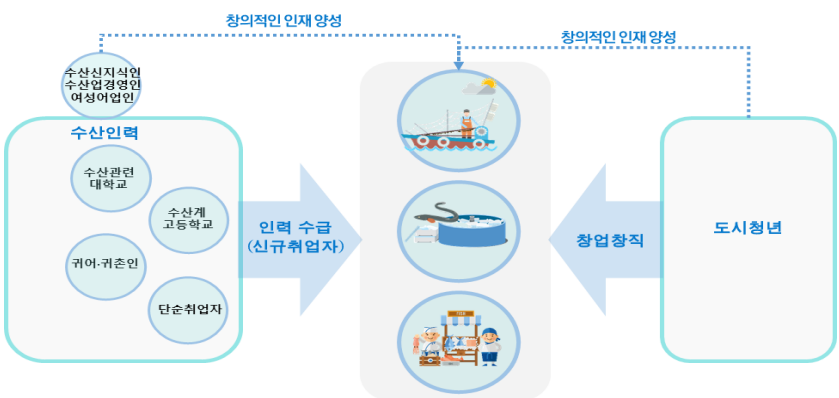
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과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어촌지역 인구활력 체계 구축

(1) 수산업·어촌 인구활력 종합계획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대응한 해양수산부 차원의 인구활력 종합계획의 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산계고등학교, 신지식인, 귀어귀촌, 어업인 일자리 매칭 등 기존 파편화된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어촌사회로 유입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도출하고, 현장맞춤형 지원체계, 안정적인 정착단계 지원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그림 6-5〉는 수산업·어촌 인구활력 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수산인력의 유입과 비수산 분야의 인력이 수산업·어촌으로 창업·창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방식, 소요예산, 정책목표. 연차별 로드맵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점검·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6-5〉 수산업·어촌 인구활력 추진방향(안)



자료: 저자 작성

〈표 6-10〉 수산업·어촌 인구활력 종합계획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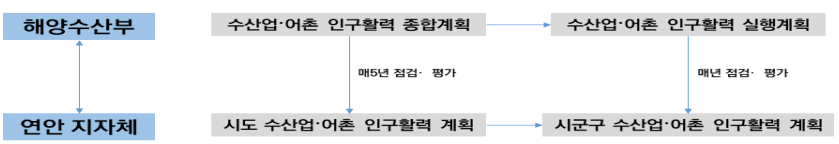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비고
지원대상	수산분야	수산신지식인	-
		수산업경영인	
		여성어업인	
		수산계고등학교/ 수산관련 대학교	
		귀어귀촌인	
		단순취업자	
	비수산분야	도시민(청년포함)	
지원방식	직접지원	정책대상자 지원	-
	간접지원	전문기관, 중간지원조직	
소요예산	각 지원사업 예산 소계		-
정책목표	인구소멸 위험지역 인구활력 : ○○명/년		부분별 산출을 통해 실행 가능한 목표 설정
연차별 로드맵	1차 종합계획(2020~2024년)		상위계획 연계성 고려

자료: 저자 작성

(2) 연안 지자체별 인구활력 이행계획

정부의 인구활력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근거하여 지자체별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의 위계별로 5년/1년마다 점검·평가를 통해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토록 한다. 지자체의 인구활력 이행계획은 정책목표별 달성정도가 판단될 수 있도록 〈그림 6-6〉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 6-6〉 연안 지자체별 인구활력 이행계획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1) 수산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1) 수산·어촌 일자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문재인정부는 저성장과 국가경제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청년층을 포함하여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운영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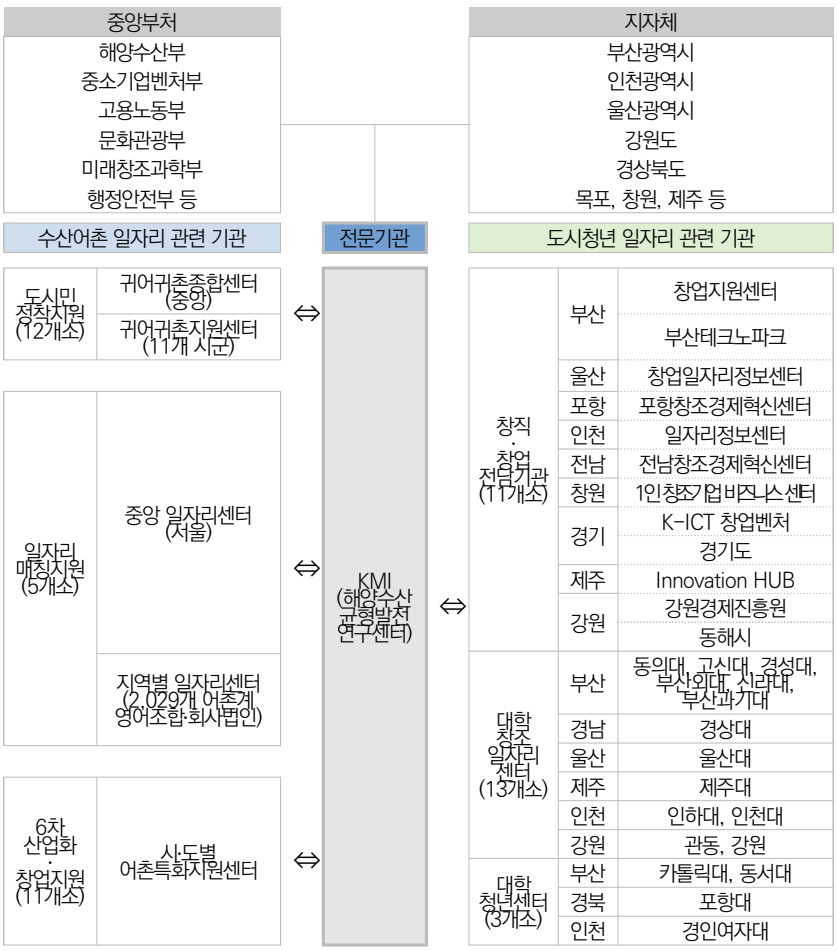
정부는 어촌사회로 신규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일자리 관련기관으로 귀어귀촌종합센터, 어업분야 일자리 매칭지원, 수산창업 및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촌사회의 일자리는 아직 큰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분절된 업무영역과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와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등 환류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도시청년 일자리 관련 기관은 주로 시·도별 창업·창직 전담기관과 대학별 창조 일자리 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해양수산분야는 정보부족과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청년들의 호기심과 도전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산·어촌 일자리와 어촌사회의 자원과 사회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의 창의적 융합형 일자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원기관이 필요하며, 이 전문기관은 기존 전문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와 어촌사회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력유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각 기관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설정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수산어촌 일자리 전문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그림 6-7〉과 같다.

〈그림 6-7〉 수산·어촌 일자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안)



자료: 박상우 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p.145 일부 수정함

(2) 수산·어촌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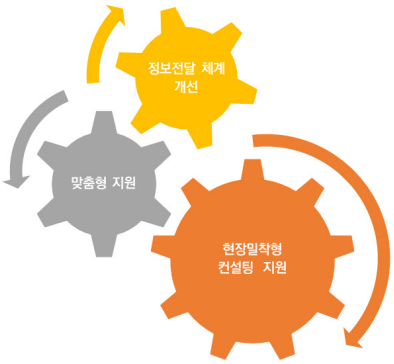
수산어촌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는 누구나 어촌사회에 대해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 개선, 맞춤형 창업·창직 지원, 현장밀착형 컨설팅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어촌사회의 정보전달 체계는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와 제공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어촌사회의 창업·창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도해야 한다. 어촌사회의 정보전달 체계의 개선은 기존 지원정책과 어촌에 대해 소개하는 수준의 콘텐츠가 아니라 창업·창직 절차에 따른 행정요건,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맞춤형 창업·창직은 분야, 기술, 연령 등 지원자의 조건과 사업계획의 실행력 및 타당성 등에 기초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등 사업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획일적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현장밀착형 컨 설팅 지원은 지원단계에서 지속성과 현장성, 지원자의 다양한 니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현장밀착형 컨설팅 조직을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산·어촌분야의 청년일자리는 관련 전문가들의 현장밀착형 접근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림 6-8〉 수산업·어촌 일자리 생태계 구축



자료: 저자 작성

2) 수산·어촌 일자리 매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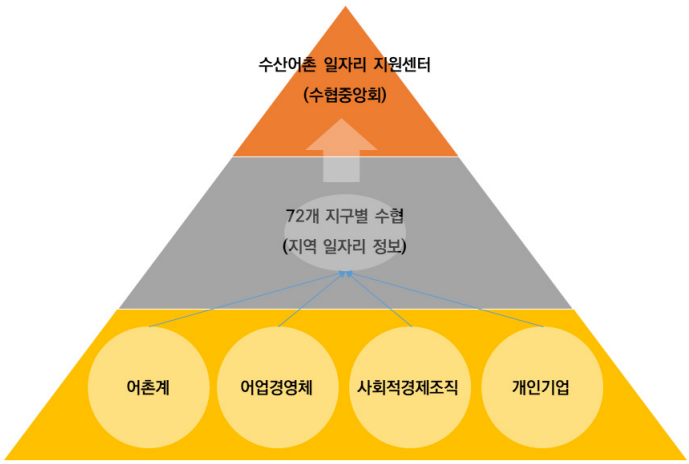
어업 일자리 지원센터는 어촌사회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연결시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지원정책으로 수협중앙회에서 서울과 광주, 강릉, 부산, 포항, 보령 등 주요도시 등 5개소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어업 일자리는 연근해어업의 어선원 일자리를 매칭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계층과 니즈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첫째, 어업 일자리센터를 연근해어업의 중심지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 시군구 단위로 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네트워크 망과 협력적인 거버넌스 형성에 따라 광역 지원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촌사회의 다양한 일자리는 생산분야 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판매, 관광, 행정사무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니즈가 나타나고 있다. 어업 일자리 지원센터는 어촌계, 어업경영체 등 어촌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체로부터 일자리 니

즈를 취합할 수 있는 촘촘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6-9〉 어업 일자리 지원센터 확대·개편방안



자료: 저자 작성

3)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2.0

(1) 어촌계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수산업·어촌분야의 특성에 따른 어촌계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어촌사회의 내외부적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어촌계와 새로운 인력이 협력하여 어촌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사회의 발전과 지속성을 유지해 온 어촌계를 바탕으로 내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칭) 어촌계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부와 새로

운 변화를 희망하는 어촌계는 기존 조직체계와 사업방향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조직화, 초기 창업자금, 활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6-10〉 (가칭) 어촌계 사회적경제조직 구성과 추진방향

기존 어촌계		어촌계 사회적경제조직
수협법		사회적경제기본법(예정)
수협조합원+어촌계원	⇒	어촌계원+참여희망자(도시 청년 등)
어업활동 경제공동체		지역문제 해결형 공동체
영리조직		영리+비영리 선택
협동조합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자료: 저자 작성

사회적경제조직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부처별로 예비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일부 사회적기업을 필두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 질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어촌 사회적경제조직은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2.0을 추진토록 한다.

〈그림 6-11〉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2.0 추진방향

사회적경제 활성화 1.0		수산업·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예비 사회적경제조직 인증		사회적	① 사업화지원
인큐베이팅	⇒	경제조직	② 사업참여 우선권 부여
맞춤형 지원(판로지원 등)		활성화 1.0	③ 기금지원(수발기금, 해양수산 R&D 등)

자료: 저자 작성

(2) 타 부처 예비 사회적경제조직 연대·협력 기반 마련

수산업·어촌분야에서 추진되는 수산사업 및 어촌개발 등 재정이 투입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특화어항, 어촌뉴딜 300 등 마중물 사업의 사업참여 시 타 부처의 예비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입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산·어촌분야에서 형성할 수 없었던 건축·주택분야, 다양한 경제활동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여러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어촌사회에 유입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타 부처의 예비 사업적경제조직을 어촌사회로 유입시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2〉 타 부처의 예비 사회적경제조직 연대·협력 기반 마련



자료: 저자 작성

3. 인구유입 촉진 및 어촌 커뮤니티 기반 강화

1) 가족친화형 지원 강화

(1) 가족친화형 '漁울림' 복합단지 조성

어촌사회의 열악한 정주여건과 폐쇄적·배타적인 지역공동체의 문제점을 완화·해결하기 위해 이주민과 기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가칭) 어울림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출산, 육아, 교육 등 이주과정에서 예상되는 어촌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육아, 교육, 문화·여가 등을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정서적인 유대감과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3〉 가족친화형 '漁울림 복합단지' 조성 예시

〈어울림 복합단지〉



〈공동육아 나눔터〉



〈원격 교육〉



〈복지시설〉



자료: http://joongdo.co.kr/main/view.php?key=201610201139;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488202&memberNo=25324157; http://www.veritas-a.com/news/photoView.html?idxno=56690;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64#0AW3(검색일: 2018. 10. 30.)

(2) 여성 정착을 위한 우대 지원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정주환경 등 삶의 질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임기 또는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어촌사회 이주는 제약이 많다. 따라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여성 정착 시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약을 완화·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차등·우대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각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6-11〉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여성 보건복지분야 우대지원(안)

구분	지원내용	인구소멸 위험지역 우대지원(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부여	• 지원기준에 5일 연장 가능 지원
아동통합 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	• 가정 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기본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우선 선정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 이웃 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	• 지원대상 우선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우선 순위
온라인 정보화교육	• 평생교육 사이트 “배움나라”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웹디자인 등 83개 정보화 교육과정을 제공	• 어촌사회 정착과 관련된 콘텐츠 제공

구분	지원내용	인구소멸 위험지역 우대지원(안)
청소년 활동지원	• 청소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개성과 창의성을 개발	• 지원대상 우선 지원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초중고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통합문화이용권	•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활동 지원	• 지원대상 확대 지원

자료: www.bokjiro.go.kr(검색일: 2018.10.1.)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어촌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생활서비스 최소기준 도입

(1) 입지유형·부문별 어촌 생활서비스 기준 마련

인구소멸 위험성이 높은 어촌사회는 대부분 생활서비스 수준이 낮다. 또한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인식도 열악한 정주환경과 생활서비스가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민과 지역주민의 인구유입과 이탈방지에 준하는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촌사회의 생활서비스 최소기준 설정은 정부의 재정투입이 커질 수 있지만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과 삶의 질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기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 6-12〉과 같이 도시, 연안촌락, 도서형의 입지유형과 보건·복지, 교육, 정주 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부문별 최소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다만,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이주 또는 지속적으로 정착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은 입지유형과 부문별 실태조사와 통계구축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최소기준 평가와 국가재정, 농산촌 등의 상대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 영유아), 교육(초중등, 평생교육), 정주 생활기반(대중교통), 문화여가, 안전(재해예방) 등은 지원규모를 집중하여 국민의 니즈에 우선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삶의 질 지수 도입 및 서비스기준 이행 평가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삶의 질 지수는 해당 지역의 삶의 질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삶의 질 수준을 빠르고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마련하는 추가적인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서비스기준을 토대로 연차별로 서비스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정책 집행에 따른 서비스기준 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 6-12〉 입지유형·부문별 어촌 인구소멸 위기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안)

구분			목표치
도시형 연안 촌락형 도서형	보건·복지	진료서비스	•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주요 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응급서비스	•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닥터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단축
		노인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영유아	•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제고
	교육	초·중등 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학교 육성 •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평생교육	•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거점시설 설치·운영

구분			목표치
	정주 생활기반	주택	•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상수도	• 상수도 보급률 제고
		대중교통	• 수요부족으로 대중교통 어려운 지역에는 수요 대응형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도입 • 도시지역의 여객선 이용가능성 제고
		커뮤니티	• 이주한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연대·협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설치
		광대역 통합망	•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제고
	경제활동·일자리	창업/컨설팅	• 창업 지원센터 등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편의성 제고 •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 확충
	문화·여가	문화시설	• 문화시설 이용가능성 및 전달체계 개선
	환경·경관	하수도	• 하수도 보급률 제고
	안전	방범설비	• 마을에 범죄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율 제고
		경찰순찰	• 범죄 취약지역에 마을별로 순찰 실시
		소방출동	• 신고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단축
		재해예방	• 업무상 안전재해 예방교육을 통한 사고발생 건수 감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8.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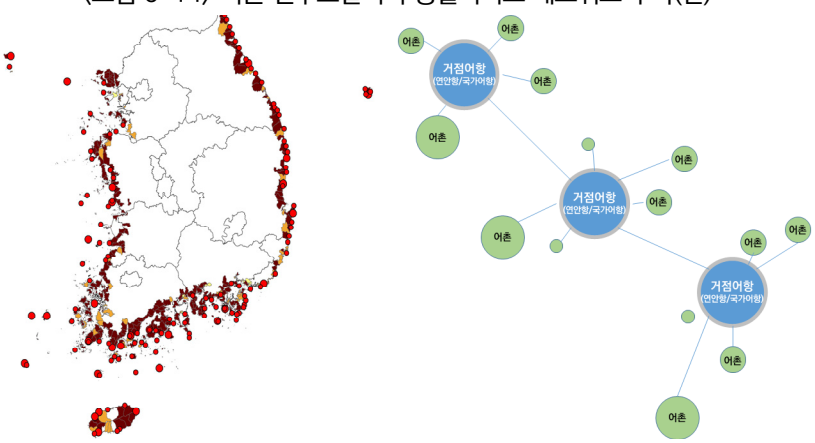
3)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 어촌 인구소멸지역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어촌의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대부분 연안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해상교통, 어업의 경제활동 근거지인 주요 거점어항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점어항 인근의 어촌과의 연계성을 높여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구분 없이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365 서비스 전달체계는 어촌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실과의 괴리성이 나타나며, 생활서비스 공급기능의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림 6-13〉은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위험지역과 연안항과 국가어항 등 거점어항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요 거점어항에 생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수협(업종·지구별 수협)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점어항과 인근 어촌간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상교통, 준대중교통(어촌지역 내 셔틀버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6-14〉 어촌 인구소멸지역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안)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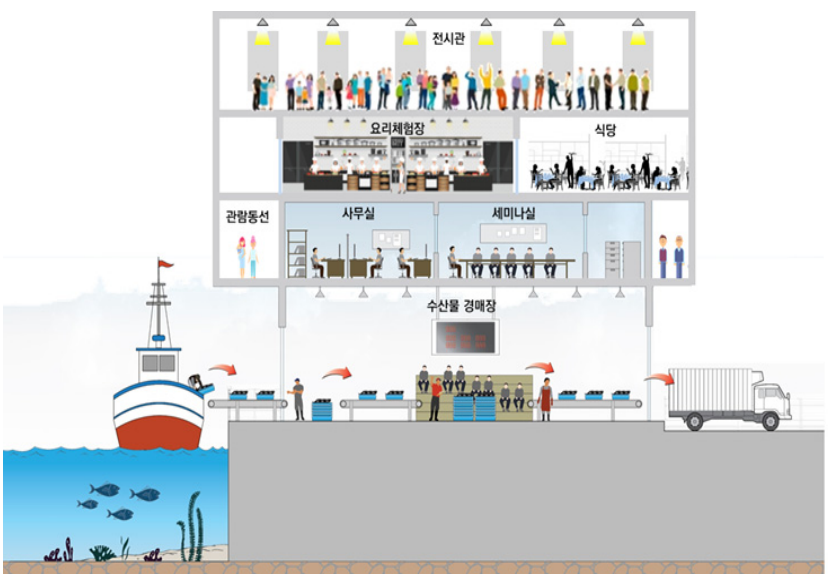
(2) 어촌 생활복지 거점센터 지원

어촌의 생활복지 거점센터는 연안항이나 국가어항 육역 내에 산지 위판장 또는 별도 건축물을 활용하여 어촌사회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기능(교육, 문화여가, 복지, 돌봄서비스, 공동목욕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어항구역의 특성 상 해상교통, 육상 준대중교통을 도입함으로써 주변의 어촌마을 간 연

계성을 높여 어촌사회에 촘촘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어촌형 생활복지 거점센터는 어항구역 내 육역부지와 기존 산지위판장 인프라를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제약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거점센터의 운영·관리도 수협이나 사회적경제조직 유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업종·지구별 수협단위의 거점지역을 형성함으로써 어업인도 1,500명 내외의 상시 수요와 지역주민의 니즈를 수용한다면 경제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 생활복지 거점센터는 사업규모와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확보와 향후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단계별 확산이 필요하다.

〈그림 6-15〉 어촌생활복지 거점센터 조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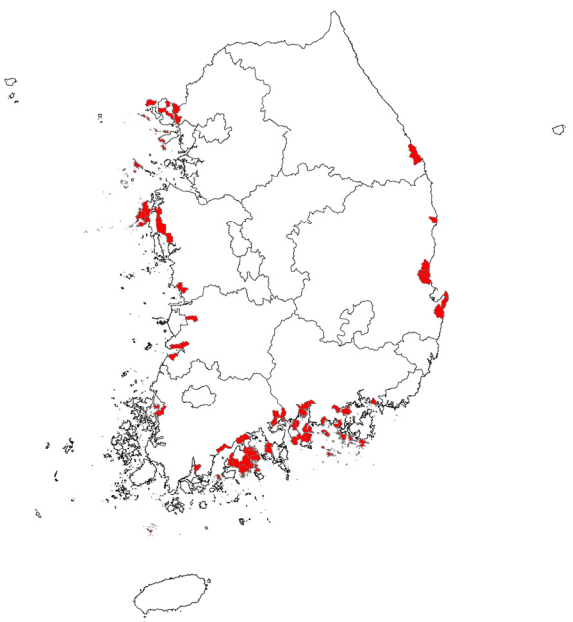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4. 인구소멸 위험지역 활력 제고

1) 어촌사회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

어촌사회는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어촌사회는 어촌계의 마을어장과 경제활동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6-15〉는 2045년 지역소멸지수가 0.05미만으로 소멸이 거의 확실 시 되는 지역을 도출한 것으로 이들 지역은 지역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통합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림 6-16〉 어촌사회 통합이 필요한 지방소멸 고위험지역 도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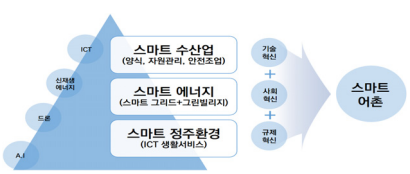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조성

정부와 지자체는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 인구소멸 위기, 열악한 정주환경에 따른 삶의 질 문제 등 어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소멸과 삶의 질 저하 등 지속적인 지역쇠퇴와 생활서비스 공급의 입지적인 불리성으로 인해 어촌은 사회·경제·문화·환경적인 문제점들을 완화·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어촌정책이 필요하다.

스마트 어촌은 ICT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구현되는 스마트 어업(Smart Fishing), 스마트 에너지(Smart Energy), 스마트 정주환경(Smart Life)이 통합된 개념을 의미한다. 스마트 어촌은 낮은 삶의 질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 도시의 청년층에게도 어촌이 매력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17〉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추진방향





자료: 저자 작성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성장률이 0.3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2032년에 인구성장률이 0%로 전망되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성장하면서 급격한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어촌사회는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와 해체가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사회 인구추계와 지역소멸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204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의 84.2%가 소멸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망은 어촌사회의 실질적인 '소멸'(燒滅)을 의미하며, 더 이상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의 수산정책은 여전히 수산자원의 증식과 부가가치 창출에만 매몰되어 있다.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이 현실적인 문제로 전망되면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사회가 인구소멸의 과정으로 접어들면서 문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적극적인 정책과 전략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되었고, 인구소멸에 따른 어촌사회의 전망과 실태조사, 인구소멸에 대응한 국내외 정책동향, 인구소멸에 대한 어촌주민과 도시민의 인식조사 등을 통해 4대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인구소멸에 대응한 정책기반 마련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추진방향과 관련 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와 범정부 차원의 전담부서와 거버넌스 체계, 전문지원기관의 신설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인구소멸이 나타나는 지역에 인구활력 체계를 제시하였다.

둘째, 어촌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전략에서는 수산산업 창업, 어업분야 일자리 매칭, 해양수산형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한 사회혁신과 외부와의 협력·연대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어업생산 영역에서 유통, 가공, 관광에 이르는 해양수산산업으로 확장하여 창업·창직 및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어촌사회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2.0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구유입 촉진과 커뮤니티 기반 강화전략으로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어촌사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중심의 가족친화형 커뮤니티 조성과 어촌사회의 열악한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소기준과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멸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사회의 통합과 스마트 어촌 도입을 통한 첨단기술 도입과 사회혁신을 도입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1. 단기적 정책제언

1) 어촌 인구소멸 영향평가제도 도입

제3장에서는 어촌지역의 인구추계 전망과 지역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해 보았고,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2045년에는 전체 어촌지역의 81.24%인 342개소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 영향평가제도는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기초통계,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사업이 해당지역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 인구소멸 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세분화된 추진방안으로 기초통계, 정책,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기초통계

어촌의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인구통계(가임기 여성인구, 고령자 인구, 15세 미만, 전체인구 등)와 지역소멸지수는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매년 산출하여 기초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초통계는 정부와 관련 산하기관, 지자체에서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사업 추진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정부·지자체의 관련정책 영향평가

어촌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귀어귀촌 등 어촌사회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 어촌지역 내 일자리 창출 정책,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나누고, 이들 정책이 어촌 인구소멸 대응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추진토록 한다. 앞으로 인구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보다는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특히,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관련 정책의 영향평가는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영향평가는 직접 또는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추진하며, 영향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3)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어촌사회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특정하고, 각 사업별로 성과분석을 매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이들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은 계획(설계), 집행,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성과분석의 결과에 따라 사업설계,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개선 또는 사업 간 통합 등을 검토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과분석의 프로세스는 정부의 사업 설계 영역과 지자체의 집행과 사후관리 단계로 이원화하여 분석토록 한다.

각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은 전문지원기관별에서 매년 시행하고, 성과평가의 환류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어촌 인구활력 종합계획 및 이행계획 마련

본 연구는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어촌 인구활력 종합계획과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어촌 인구활력 종합계획과 이행계획은 법정계획의 위상으로 종합계획은 해양수산부가 5년 마다 수립하고, 이행계획은 해당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함으로써 계획과 지원정책의 집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촌 인구활력 종합계획과 이행계획의 법적 근거는 우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인구활력을 도모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토록 한다.

〈표 7-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제41조의 2 (어촌 인구활력)	〈신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촌의 인구활력 종합계획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는 매 5년 마다 어촌 인구활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어촌 인구활력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3) ‘어촌형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및 거점 조성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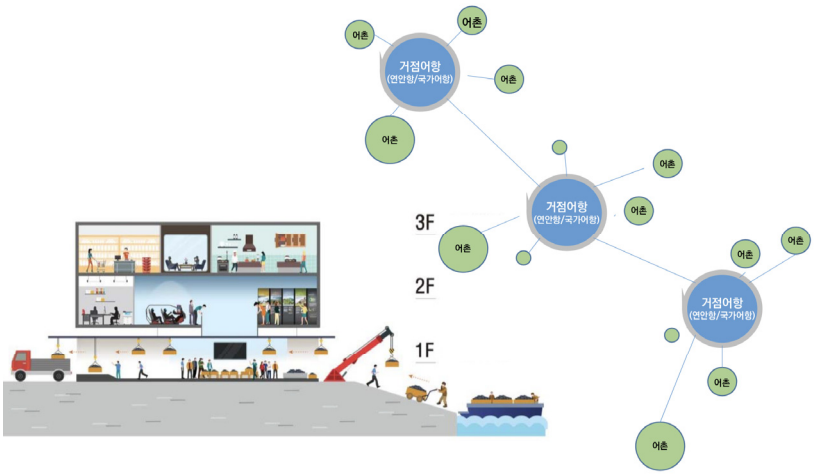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어촌사회의 열악한 생활서비스 실태와 어촌주민 및 도시민들의 인식도를 살펴보았다. 어촌의 취약한 생활서비스 수준은 기존 지역주민의 이탈과 새로운 사람의 유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사회는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입지적, 공간적 특성상 생활서비스가 농촌이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농촌 365 생활권 구축[31]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라 50조 규모의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과 어업인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어촌의 입지특성은 어항과 그 배후촌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독특한 정주체계를 기반으로 생활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지역별로 복합적인 생활서비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열위에 있는 섬 지역 어촌의 생활서비스는 접근성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거점형성과 전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획기적인 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서비스 개편이 필요하다.

〈그림 7-1〉은 어촌 생활서비스 네트워크와 거점 조성사업의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는 거점어항을 네트워크로 형성하고, 주변의 어촌마을 간 전달체계는 거점형성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활서비스 거점지역은 어항구역 내 산지 위판장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복합기능의 시설을 조성하고, 복합시설의 도입시설과 운영방식은 해당 어촌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31) 농촌의 정주체계를 구조로 중심지(읍소재지), 기초생활거점(면소재지), 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 강화로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불편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

〈그림 7-1〉 어촌형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및 거점 조성사업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4) 어촌계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어촌의 인구감소는 어촌계 등 어촌사회를 구성하는 경제활동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최근 정부는 어촌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협법 개정과 어촌계 일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어촌계는 거주기간과 가입비 등을 낮춰 신규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어촌계는 여전히 미래 어촌사회의 붕괴와 해체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계의 개방성과 어촌사회의 내재된 지역현안을 어촌공동체가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촌계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국정과제로 사회적 농어업에 대한 정책마련과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어촌은 '어촌계'라는 사회, 문화, 경제적 공동체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어촌사회를 지켜 온 핵심적인 주체이다. 어촌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그들 스스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화해 나감으로써 개방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칭) 어촌계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고, 기본 생산활동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활동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재조직화, 초기 창업자금, 활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항포구 등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 SOC 확충과 정비 등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로 어촌재생을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 어촌재생의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건축, 문화여가, 관광,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림 7-2〉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자료: 저자 작성

5) ‘가족친화형 漁울림 복합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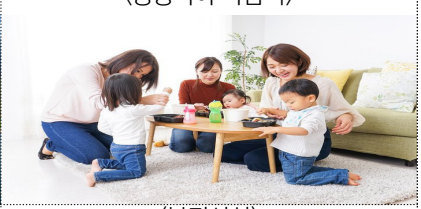
도시민이 어촌사회로 이주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은 새로운 환경에 따른 외로움과 불안감이다. 특히 어촌사회의 폐쇄성과 배타성은 이방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높은 진입장벽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사회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활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漁울림 복합단지’ 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족친화형 漁울림 복합단지’는 육아, 교육 등 여성과 가족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주한 사람들의 조기정착뿐만 아니라 기존 어촌사회와의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분양 시 일정물량을 기존 지역주민에게 할당하여 기존 어촌사회와 상생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7-3〉 가족친화형 ‘漁울림 복합단지’ 조성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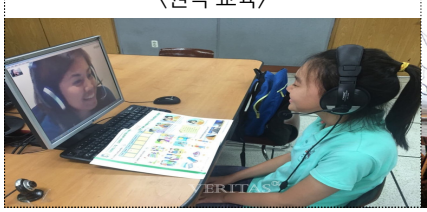
〈어울림 복합단지〉



〈공동육아 나눔터〉



〈원격 교육〉



〈복지시설〉



자료: http://joongdo.co.kr/main/view.php?key=201610201139;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488202&memberNo=25324157; http://www.veritas-a.com/news/photoView.html?idxno=56690;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64#0AW3(검색일: 2018. 10. 30.)

2. 중·장기적 정책제언

1)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조성

스마트 어촌은 기술혁신, 사회·규제혁신을 통해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어촌정책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사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러한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어업에 진입할 수 있는 스마트 수산업(Smart Fishing), 햇빛을 양식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스마트 에너지(Smart Energy), 어촌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정주환경(Smart Life)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 어촌은 2019년 KMI 기본과제 수행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개념과 정부 정책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증단지 조성 등을 마련토록 한다.

〈그림 7-4〉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개념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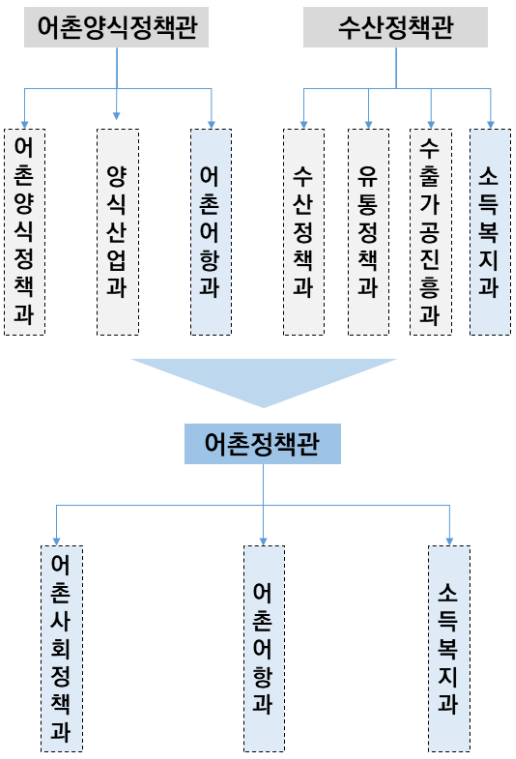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구소멸에 대응한 지원 특별법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어촌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농촌, 산촌, 섬, 어촌지역을 포괄하는 방안으로 이원화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어촌지역에 한정하기 보다는 농산어촌을 포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어촌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원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3) 어촌사회 인구소멸에 대응한 해양수산부 '어촌사회정책과' 신설

수산업은 어촌사회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조직은 어촌사회의 정책에 대한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문제는 미래에 직면할 불가피한 현실이고, 해양수산부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도 요구된다. 즉, 생산중심의 수산분야 조직체계에서 사람중심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내에 '어촌사회정책과'를 신설하고, 어촌어항과(어촌양식정책관), 소득복지과(수산정책관)를 신설하는 어촌정책관(국)으로 옮겨 사람, 공간, 일자리, 삶의 질 등의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안에 따라 신설하는 어촌사회정책과는 인구소멸, 고령화·고령화, 어촌공동체 등 어촌사회를 구성하는 인력, 조직, 귀어귀촌, 인구문제,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등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수립과 지원방안 등을 소관토록 한다.

〈그림 7-5〉 어촌사회정책과 신설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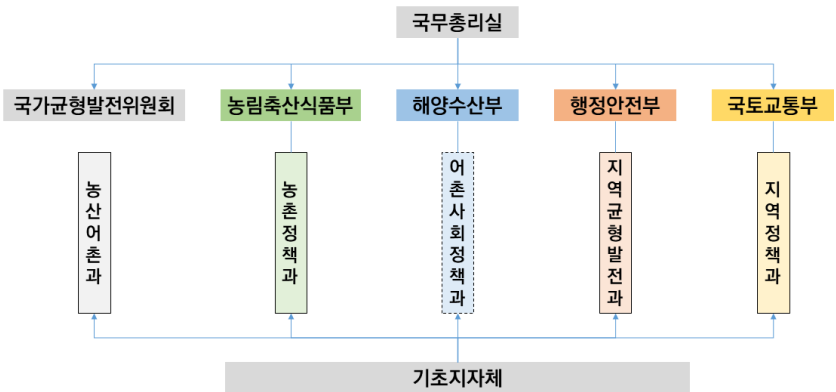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4) 범정부 차원의 인구소멸 대응 거버넌스 구축

본 연구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농산어촌의 인구소멸 문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 부처의 정책과 지원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범정부의 거버넌스는 해양수산부(어촌사회정책과),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산어촌과),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림 7-6〉 범정부 차원의 인구소멸 대응 거버넌스 구축(안)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미나·김근용·김혜승·김은란·임은선,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7.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작업 안전재해 거버넌스 구축 및 과제발굴 연구』, 2017.

기정훈,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쇠퇴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1.

김원규·황원식,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2018.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4.

박상우·이호림·이상규,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박상헌·노승만·황규선·조명호·권오영·최원실, 『강원도 인구구조 분석과 지역소멸 대응 방안』, 강원연구원, 2017.

박승규·이제연,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박진경·김선기,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유선종·노민지,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 매일경제신문사, 2018.

이동원, 『금오도 지구 관광활성화 방안연구』,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 2018.

이병기,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이상림·조영태, 「H-P기법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장래인구 추계」,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2005.

이상호,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2016.

이제연 외,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부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이제연 외,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이지연, 「센서스 커버리지 측정을 위한 기대인구 추정기법」, 『통계연구』, 제10권 제2호, 2005.

임상연·변필성,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동향과 시사점, 작은거점 만들기와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을 중심으로」, 『국토정책 Brief』, 제492호, 국토연구원, 2014.

지역발전위원회,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2018.

해양수산부, 『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2016.

해양수산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운영 연차보고서』, 2017.

해양수산부, 『제1차 귀어귀촌 종합발전 계획』, 2018.

〈국외 문헌〉

(재) 어항어장어촌종합연구소, 『어촌활성화 사례분석과 효과평가』, 2015.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2014

일본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사무국 내부자료, 2018.

일본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小さな拠点及び地域運営組織形成による効果』, 2017.

일본 농림수산성식료산업국, 『農林漁業の成長産業化に向けて』, 2014.

일본 총무성, 『과소지역의 취락 상황에 관한 현황 파악조사』, 2016.

EU, *Sailing Towards 2020 : Axis 4 in Action*, 2015.

___, *Policy Brief: Shrinking rural regions in Europe*, 2017.

___, "Smart Villages Revitalising Rural Services", *EU Rural Review*, No. 26, 2018

FARNET, *Guidance on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 for Local Actors*, 2014.

Hamilton, Horace C., and Josef Perry, "A Short Method for Projection Population by Age from One Decennial Census to Another.", Social Forces, 41, 1962.

Dent, Harry, *The Demographic Cliff*, 청림출판, 2014.

Smith, Stanley K., and Jeff Tayman, " An evaluation of population projections by age", *Demography*, 40(4), 2003.

Smith, Stanley K., Jeff Tayman, and David A. Swanson, *State and Local Population Projections : Methodology and Analysis*,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인터넷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경제학 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9760&cid=42085&categoryId=42085(검색일: 2018.10.1.)

경북신문, "지방소멸에 대한 두 가지 관점"(2017. 10 19.),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188648(검색일: 2018.2.10)

구글 이미지 검색, http://joongdo.co.kr/main/view.php?key=201610201139;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488202&memberNo=25324157; http://www.veritas-a.com/news/photoView.html?idxno=56690;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64#0AW3(모든 자료 검색일: 2018. 10. 30.)

국가공간정보포털,「의료기관 자료」, http://www.nsdi.go.kr(검색일: 2018.5.30.)

_____,「하수종말처리시설 자료」, http://www.nsdi.go.kr(검색일: 2018.8.31.)

통계청,「어업생산동향」 각 연도, www.kosis.kr(검색일: 2018.3.5)

_____,「고용허가제 고용동향」 각 연도, www.kosis.kr(검색일: 2018.3.5)

_____,「농어업총조사」, www.kosis.kr(검색일: 2018.3.5)

_____,「등록어선통계」 각 연도, www.kosis.kr(검색일: 2018.3.5)

_____,「어업총조사」 각 연도, www.kosis.kr(검색일: 2018.3.5.)

_____,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www.kosis.kr(검색일: 2018.3.5)

_____, 「한국선원통계」 각 연도, www.kosis.kr(검색일: 2018.3.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2017. 6. 30, 의안번호 2007713)」, http://likms.assembly.go.kr(검색일: 2018.2.20.)

다음 지도, http://map.daum.net/(검색일: 2018. 10. 28.)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제인정부 국가균형발전」, http://www.balance.go.kr/ibuilder.do?menu_idx=2235(검색일: 2018.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검색일: 2018.4.11)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www.bokjiro.go.kr(검색일: 2018.10.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도별 폐교보유 현황」, http://www.eduinfo.go.kr/portal/theme/abolSchStatusPage.do(검색일: 2018.3.5.)

총무성, 「과소대책」, 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kasomain0.htm(검색일: 2018.3.9.)

통계청, 「2017년 출생·사망통계(잠정)」, www.kosis.kr(검색일: 2018.3.5)

_____,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www.kosis.kr(검색일: 2018.3.5)

_____,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www.kosis.kr(검색일: 2018.3.5)

_____, 「장래인구추계」, www.kosis.kr(검색일: 2018.3.5.)

_____, 「총조사인구」 각 연도, www.kosis.kr(검색일: 2018.3.5.)

_____, 「2016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www.kosis.kr(검색일: 2018.10.1)

_____,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www.kosis.kr(검색일:2018.3.5.)

유럽 농촌개발 네트워크(ENRD), 「스마트 빌리지」, https://enrd.ec.europa.eu/smart-and-competitive-rural-areas/smart-villages/smart-villages-portal_en(검색일: 2018. 6. 9.)

_____, 「LEADER」,http://enrd.ec.europa.eu/enrd-static/leader/leader/en/lags-database_en.html(검색일: 2018. 6.9.)

유럽 어업지역네트워크, 「FARNET」,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tools/flags-2007-2013(검색일: 2018. 6.9.)

부록

〈부록 1〉

전국 어촌지역 인구추계 전망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전국총계			3,783,746	3,699,381	3,737,453	3,759,059	3,772,971	3,795,042	3,821,164	3,752,206
강원도	소계		275,788	270,563	273,239	273,528	272,406	271,793	271,121	261,633
	강릉시	강동면	5,162	4,930	4,688	4,359	3,973	3,583	3,177	2,740
		사천면	4,198	4,467	4,819	5,089	5,309	5,507	5,682	5,684
		연곡면	6,714	6,868	7,161	7,332	7,389	7,372	7,258	6,890
		옥계면	4,337	4,060	3,814	3,513	3,185	2,830	2,455	2,036
		주문진읍	19,634	17,766	16,267	14,650	12,972	11,343	9,690	7,936
		경포동	4,814	5,244	5,750	6,100	6,340	6,634	7,111	7,459
		성덕동	29,145	30,813	33,865	36,553	38,993	41,352	43,478	43,580
		송정동	7,469	7,251	7,240	7,117	6,924	6,691	6,370	5,779
		초당동	5,997	5,585	5,360	5,130	4,893	4,644	4,340	3,858
	고성군	간성읍	7,414	7,562	7,901	8,037	8,021	7,968	7,997	7,729
		거진읍	7,658	7,009	6,455	5,790	5,089	4,428	3,790	3,109
		죽왕면	4,217	3,988	3,786	3,469	3,130	2,816	2,521	2,178
		토성면	7,651	8,031	8,381	8,157	7,635	7,182	7,009	6,665
		현내면	2,940	2,647	2,355	2,051	1,760	1,487	1,218	953
	동해시	망상동	3,929	4,118	4,421	4,741	5,136	5,584	6,075	6,405
		묵호동	4,588	3,737	3,101	2,504	1,985	1,543	1,169	850
		발한동	5,235	4,354	3,653	3,010	2,455	1,972	1,547	1,171
		부곡동	7,130	6,110	5,334	4,603	3,922	3,291	2,697	2,118
		북평동	10,421	9,397	8,716	7,966	7,191	6,443	5,639	4,694
		천곡동	27,898	31,271	36,286	41,787	47,418	53,475	59,809	64,012
		송정동	5,166	4,724	4,368	3,962	3,554	3,148	2,752	2,319
	삼척시	근덕면	5,790	5,786	5,775	5,632	5,399	5,140	4,752	4,175
		원덕읍	5,469	5,831	6,305	6,820	7,383	8,000	8,565	8,939
		교동	10,455	11,415	12,949	14,429	15,887	17,401	19,012	19,529
		남양동	10,023	9,103	8,360	7,621	6,887	6,142	5,349	4,449
		정라동	12,391	10,776	9,723	8,645	7,567	6,555	5,575	4,536
	속초시	금호동	7,537	7,329	7,248	7,073	6,828	6,532	6,143	5,518
		대포동	3,731	3,510	3,316	3,075	2,805	2,524	2,227	1,893
		동명동	4,032	3,667	3,387	3,095	2,803	2,487	2,161	1,803
		영랑동	5,677	5,286	5,027	4,746	4,423	4,029	3,575	3,029
		청호동	4,416	3,829	3,332	2,850	2,401	1,990	1,612	1,251
	양양군	강현면	4,270	4,176	4,132	3,995	3,777	3,541	3,245	2,828
		손양면	2,456	2,400	2,365	2,286	2,184	2,063	1,896	1,658
		양양읍	11,746	11,638	11,854	11,843	11,638	11,364	10,972	10,151
		현남면	3,334	3,149	3,003	2,799	2,553	2,290	1,999	1,684
		현북면	2,744	2,736	2,742	2,697	2,597	2,442	2,254	2,025

전국 어촌지역 인구추계 전망(계속)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경기도	소계		143,193	142,729	147,044	149,153	148,442	145,922	141,879	133,458
	김포시	대곶면	10,589	9,860	9,287	8,589	7,779	6,914	6,003	5,055
		월곶면	5,962	5,567	5,262	4,878	4,436	3,942	3,416	2,818
	시흥시	군자동	42,418	42,054	43,338	43,878	43,571	42,753	41,649	39,041
		정왕3동	26,308	26,139	27,017	27,541	27,491	26,937	25,928	23,992
	안산시	대부동	7,147	7,718	8,379	8,915	9,332	9,585	9,627	9,306
	평택시	포승읍	26,859	26,496	27,170	27,446	27,131	26,424	25,482	23,981
	화성시	서신면	6,856	6,935	6,992	6,910	6,694	6,387	5,967	5,383
		우정읍	17,054	17,960	19,599	20,996	22,009	22,980	23,809	23,881
경상남도	소계		650,298	631,465	636,468	639,033	639,647	639,645	638,092	619,436
	거제시	거제면	6,970	7,143	7,442	7,679	7,845	7,972	7,987	7,733
		남부면	1,876	1,743	1,619	1,474	1,316	1,152	982	809
		동부면	3,597	3,654	3,768	3,828	3,856	3,827	3,718	3,447
		둔덕면	3,529	3,486	3,497	3,438	3,318	3,144	2,903	2,574
		연초면	9,390	10,552	12,388	14,167	15,831	17,515	19,211	20,334
		일운면	7,204	7,228	7,511	7,665	7,670	7,543	7,266	6,711
		장목면	5,186	4,930	4,737	4,493	4,210	3,912	3,581	3,167
		하청면	4,898	5,620	6,618	7,751	9,019	10,452	12,092	13,553
		고현동	39,994	42,840	47,694	52,279	56,359	59,771	62,768	63,277
		능포동	12,706	12,236	12,126	11,813	11,309	10,686	9,947	8,936
		옥포1동	9,037	8,231	7,700	7,027	6,285	5,532	4,834	4,055
		옥포2동	29,678	28,074	27,633	26,701	25,378	23,789	21,920	19,354
		장승포동	4,188	4,020	4,038	4,000	3,831	3,707	3,498	3,263
		장평동	27,798	25,100	23,909	22,160	19,960	17,617	15,401	13,113
	고성군	거류면	5,509	5,061	4,769	4,447	4,094	3,726	3,321	2,847
		고성읍	25,218	25,923	27,529	28,778	29,776	30,656	31,333	30,641
		동해면	3,970	3,483	3,071	2,667	2,275	1,904	1,548	1,206
		마암면	2,136	1,927	1,756	1,567	1,373	1,175	976	765
		삼산면	1,958	1,807	1,674	1,512	1,338	1,156	968	781
		하이면	2,969	2,817	2,691	2,531	2,357	2,178	1,973	1,730
		하일면	2,021	1,884	1,742	1,578	1,408	1,232	1,048	859
		회화면	4,108	3,906	3,744	3,524	3,288	3,038	2,760	2,414
	남해군	고현면	4,509	3,906	3,376	2,889	2,449	2,051	1,684	1,327
		남면	4,239	3,808	3,410	3,020	2,658	2,315	1,962	1,591
		남해읍	13,915	13,377	13,175	12,844	12,404	11,909	11,225	10,129
		미조면	2,909	2,653	2,451	2,216	1,981	1,737	1,473	1,188
		삼동면	4,431	4,069	3,768	3,443	3,128	2,804	2,443	2,036
		상주면	1,867	1,719	1,562	1,402	1,250	1,115	974	820
		서면	3,246	2,942	2,678	2,399	2,133	1,862	1,593	1,302
		설천면	3,385	3,143	2,913	2,649	2,386	2,106	1,812	1,480
		이동면	4,538	4,206	3,867	3,503	3,150	2,791	2,415	1,996
		창선면	6,077	5,802	5,541	5,206	4,824	4,388	3,881	3,282
	사천시	곤양면	4,403	3,840	3,388	2,936	2,518	2,122	1,729	1,338
		사천읍	16,972	18,511	20,869	23,293	25,761	28,393	31,218	32,996
		서포면	4,351	3,859	3,410	2,941	2,497	2,093	1,700	1,318
		축동면	2,163	1,912	1,703	1,483	1,278	1,084	891	692
		남양동	6,139	5,863	5,763	5,567	5,280	4,970	4,595	4,072
		동서금동	6,328	5,599	5,045	4,473	3,889	3,329	2,788	2,245
		동서동	8,957	7,742	6,794	5,881	4,995	4,151	3,353	2,591
		선구동	6,924	5,893	5,085	4,314	3,600	2,952	2,371	1,839
		향촌동	7,410	7,104	6,988	6,820	6,585	6,324	5,963	5,390

전국 어촌지역 인구추계 전망(계속)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경상남도	창원시	구산면	5,390	4,864	4,383	3,883	3,389	2,893	2,394	1,907
		진전면	4,503	4,358	4,232	4,029	3,784	3,484	3,115	2,673
		문화동	13,575	12,877	12,348	11,644	10,893	10,174	9,443	8,454
		반월동	9,442	8,902	8,644	8,319	7,871	7,387	6,869	6,132
		산호동	15,379	13,970	12,919	11,827	10,707	9,590	8,496	7,324
		월영동	34,283	30,806	28,427	25,885	23,338	20,837	18,369	15,528
		중앙동	8,951	8,667	8,579	8,379	8,098	7,748	7,306	6,628
		합포동	8,353	7,499	6,795	6,061	5,324	4,608	3,920	3,225
		봉암동	4,726	4,276	3,953	3,604	3,226	2,845	2,462	2,066
		덕산동	11,575	12,081	13,219	14,311	15,211	15,909	16,424	16,350
		병암동	8,660	8,670	8,933	9,050	9,014	8,884	8,660	8,140
		웅동1동	8,535	8,470	8,861	9,171	9,354	9,544	9,653	9,341
		웅동2동	30,741	34,713	41,745	50,620	61,088	72,148	83,099	92,181
		웅천동	4,980	4,157	3,498	2,895	2,370	1,906	1,495	1,124
		이동	11,349	10,820	10,500	9,981	9,300	8,559	7,768	6,842
		태평동	7,337	6,686	6,268	5,769	5,235	4,704	4,172	3,562
		풍호동	18,206	21,617	26,640	32,231	38,117	44,410	51,564	57,553
	통영시	도산면	3,369	3,171	2,985	2,748	2,479	2,198	1,886	1,547
		사량면	1,765	1,566	1,400	1,221	1,052	891	727	567
		산양읍	5,705	5,107	4,616	4,095	3,581	3,067	2,550	2,027
		욕지면	2,277	2,020	1,820	1,615	1,398	1,182	963	750
		용남면	11,211	11,544	12,309	12,874	13,321	13,690	13,953	13,520
		한산면	2,453	2,204	1,995	1,735	1,479	1,237	1,009	795
		도천동	12,451	11,393	10,672	9,827	8,950	8,065	7,153	6,074
		명정동	4,825	3,861	3,143	2,536	2,010	1,568	1,195	873
		무전동	14,357	15,609	17,504	19,406	21,089	22,651	24,067	24,567
		봉평동	14,129	13,260	12,851	12,264	11,564	10,805	9,917	8,706
		북신동	12,151	9,877	8,270	6,831	5,547	4,426	3,450	2,582
		정량동	11,483	10,890	10,612	10,183	9,594	8,862	8,007	6,909
		중앙동	6,493	5,373	4,521	3,731	3,056	2,471	1,934	1,439
	하동군	금남면	4,190	4,057	3,957	3,772	3,564	3,366	3,116	2,774
		금성면	3,634	3,672	3,745	3,711	3,624	3,519	3,391	3,167
		진교면	7,117	6,815	6,680	6,463	6,159	5,833	5,462	4,910
	소계		**299,451**	**276,013**	**260,485**	**243,021**	**224,433**	**206,020**	**187,081**	**164,305**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6,718	5,930	5,250	4,550	3,868	3,236	2,631	2,053
		양남면	7,092	6,558	6,281	5,961	5,513	4,996	4,426	3,749
		양북면	4,398	4,412	4,417	4,330	4,262	4,243	4,244	4,177
	영덕군	강구면	7,658	6,793	6,121	5,371	4,610	3,889	3,195	2,496
		남정면	2,897	2,595	2,334	2,039	1,760	1,490	1,217	946
		병곡면	3,244	3,031	2,828	2,565	2,297	2,040	1,779	1,485
		영덕읍	11,121	11,189	11,481	11,619	11,608	11,549	11,414	10,867
		영해면	7,273	6,759	6,356	5,874	5,370	4,883	4,374	3,761
		축산면	3,191	3,043	2,869	2,641	2,397	2,144	1,866	81,569
	울릉군	북면	1,433	1,432	1,440	1,419	1,375	1,322	1,255	1,159
		서면	1,614	1,496	1,375	1,243	1,098	959	829	691
		울릉읍	7,491	7,068	6,717	6,258	5,715	5,154	4,607	4,020

전국 어촌지역 인구추계 전망(계속)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3,008	2,868	2,756	2,609	2,462	2,308	2,122	1,850
		기성면	2,946	2,738	2,537	2,311	2,070	1,831	1,584	1,330
		매화면	2,533	2,294	2,120	1,905	1,687	1,500	1,308	1,073
		북면	7,258	7,102	7,287	7,364	7,255	7,003	6,660	6,098
		울진읍	13,840	14,535	15,802	17,007	18,191	19,451	20,668	20,907
		죽변면	6,893	7,368	8,054	8,622	9,103	9,514	9,812	9,732
		평해읍	3,417	3,261	3,006	2,732	2,414	2,164	1,873	1,560
		후포면	8,455	8,014	7,691	7,292	6,818	6,306	5,706	4,928
	포항시	구룡포읍	10,444	8,747	7,335	6,021	4,853	3,830	2,917	2,117
		동해면	12,133	10,078	8,586	7,222	5,996	4,913	3,945	3,031
		장기면	5,403	4,725	4,100	3,494	2,935	2,424	1,936	1,475
		호미곶면	2,526	2,199	1,931	1,669	1,409	1,154	918	690
		송도동	18,536	15,425	13,115	11,065	9,224	7,545	5,967	4,499
		제철동	3,435	3,342	3,577	3,466	3,136	2,791	2,509	2,284
		청림동	7,333	6,277	5,536	4,721	3,910	3,197	2,593	2,062
		송라면	3,057	2,815	2,612	2,383	2,131	1,866	1,587	1,286
		청하면	5,798	5,231	4,742	4,194	3,644	3,105	2,571	2,041
		흥해읍	36,675	33,977	32,443	30,542	28,340	26,012	23,465	20,254
		두호동	27,092	24,792	23,375	22,009	20,644	19,161	17,397	15,022
		죽도동	22,819	21,537	20,466	19,109	17,556	15,893	14,105	12,140
		중앙동	19,608	17,072	14,987	12,905	10,912	9,052	7,349	5,785
		환여동	12,112	11,310	10,957	10,507	9,868	9,095	8,251	7,170
부산광역시	소계		684,686	673,338	682,162	688,665	694,888	704,115	715,917	713,805
	기장군	기장읍	51,851	54,317	58,278	61,611	64,285	66,439	67,767	66,601
		일광면	8,686	9,034	9,487	9,822	10,061	10,219	10,231	9,919
		장안읍	10,354	8,939	7,826	6,740	5,727	4,787	3,905	3,066
	남구	감만1동	18,455	16,297	14,707	13,041	11,386	9,821	8,330	6,811
		문현4동	12,726	11,320	10,227	9,052	7,890	6,821	5,820	4,802
		용당동	9,934	9,328	9,002	8,522	7,975	7,397	6,791	6,001
		용호1동	46,709	44,265	42,989	41,237	39,164	37,052	34,658	31,079
		용호2동	19,652	20,376	21,727	22,857	23,652	24,296	24,737	24,233
		용호3동	15,818	14,112	12,785	11,456	10,120	8,810	7,512	6,185
		용호4동	8,446	9,772	11,684	13,860	16,271	19,050	22,332	25,347
		우암동	21,251	18,596	16,540	14,443	12,369	10,436	8,659	6,944
		범일5동	5,377	4,517	3,844	3,225	2,655	2,146	1,703	1,302
	동구	초량3동	5,832	6,297	6,893	7,365	7,693	8,014	8,381	8,655
	사하구	감천1동	25,905	22,702	20,164	17,730	15,457	13,357	11,324	9,262
		구평동	6,933	7,227	7,714	8,153	8,521	8,803	8,976	8,862
		다대1동	46,039	44,608	44,603	44,018	42,985	41,570	39,588	36,056
		다대2동	30,350	31,284	33,089	34,758	36,303	37,541	38,104	36,938
		신평2동	17,171	15,579	14,475	13,243	11,985	10,744	9,479	8,022
		장림1동	15,002	13,812	13,035	12,005	10,857	9,702	8,606	7,343
		하단1동	24,275	23,446	22,981	22,266	21,367	20,283	19,000	17,207
	서구	남부민1동	6,427	5,361	4,521	3,748	3,043	2,426	1,876	1,398
		남부민2동	11,801	11,260	10,865	10,285	9,565	8,802	7,993	7,017
		암남동	19,357	16,870	14,865	12,919	11,065	9,359	7,774	6,228
		충무동	8,291	8,256	8,315	8,173	7,855	7,504	7,208	6,848
	수영구	광안2동	16,460	17,847	19,775	21,700	23,690	25,949	28,734	31,314
		남천1동	14,232	15,017	16,091	16,994	17,804	18,513	19,181	19,344
		남천2동	15,126	14,709	14,700	14,455	14,046	13,539	12,901	11,815
		민락동	21,894	23,630	25,883	27,752	29,258	30,553	31,765	32,176
	영도구	남항동	11,832	10,536	9,480	8,389	7,286	6,229	5,235	4,267
		동삼1동	33,987	31,316	29,260	26,929	24,434	21,941	19,424	16,606
		동삼2동	4,405	3,890	3,473	2,965	2,485	2,090	1,772	1,444
		동삼3동	13,912	12,432	11,355	10,214	9,045	7,838	6,578	5,293
		봉래1동	7,708	7,413	7,147	6,791	6,375	5,922	5,449	4,893
		영선2동	11,485	9,917	8,677	7,484	6,356	5,336	4,397	3,503

전국 어촌지역 인구추계 전망(계속)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1,390	1,174	980	801	641	488	366	259
		중앙동	1,929	1,707	1,518	1,311	1,096	897	722	569
	해운대구	송정동	9,535	9,876	10,342	10,637	10,779	10,792	10,652	10,166
		우1동	41,186	49,881	61,908	76,313	93,344	113,684	137,800	161,954
		중1동	21,675	23,732	26,507	29,186	31,882	34,776	37,816	39,903
		중2동	11,288	12,686	14,448	16,217	18,114	20,188	22,372	24,172
울산광역시	소계		172,881	168,818	171,314	172,519	172,069	170,942	169,833	165,285
	남구	선암동	17,540	16,659	16,325	15,680	14,843	13,847	12,677	11,132
		장생포동	14,689	12,134	10,199	8,437	6,855	5,468	4,254	3,183
	동구	남목2동	28,281	25,216	22,973	20,542	18,076	15,672	13,393	10,988
		남목3동	15,627	14,227	13,443	12,507	11,335	10,050	8,761	7,340
		방어동	39,467	43,390	49,121	54,551	59,326	63,836	68,330	71,199
		일산동	8,401	7,423	6,625	5,781	4,942	4,143	3,404	2,726
		전하1동	17,974	16,903	16,386	15,665	14,562	13,281	11,977	10,545
	울주군	서생면	7,729	8,754	10,145	11,739	13,635	15,732	18,066	20,074
		온산읍	23,173	24,112	26,097	27,616	28,496	28,913	28,971	28,099
인천광역시	소계		261,069	259,882	268,174	276,180	284,180	292,584	301,118	304,310
	강화군	강화읍	22,743	22,688	23,023	23,189	23,115	22,849	22,270	20,884
		교동면	3,091	2,973	2,823	2,636	2,421	2,165	1,895	1,597
		길상면	6,261	6,451	6,743	6,958	7,069	7,088	6,998	6,657
		내가면	3,088	3,034	2,974	2,843	2,653	2,423	2,140	1,794
		불은면	4,305	4,511	4,753	4,913	4,975	4,936	4,794	4,497
		삼산면	2,287	2,292	2,290	2,237	2,137	1,995	1,831	1,625
		서도면	681	644	623	572	491	411	338	274
		선원면	7,193	7,453	7,903	8,255	8,523	8,670	8,668	8,341
		송해면	3,174	3,061	2,939	2,764	2,541	2,294	2,032	1,718
		양도면	3,605	3,916	4,290	4,699	5,102	5,442	5,704	5,758
		양사면	1,926	1,831	1,750	1,627	1,492	1,339	1,165	973
		하점면	4,040	3,965	3,863	3,666	3,405	3,116	2,835	2,482
		화도면	4,318	4,347	4,366	4,293	4,137	3,906	3,611	3,205
	남동구	논현1동	30,796	33,101	37,107	41,098	44,875	48,262	51,169	52,022
	동구	만석동	8,032	7,788	7,773	7,623	7,343	6,990	6,592	5,990
		화수2동	10,121	8,876	7,987	7,088	6,171	5,311	4,501	3,689
	서구	가좌1동	14,398	12,513	11,103	9,677	8,332	7,092	5,958	4,809
		석남2동	17,674	15,281	13,479	11,677	9,955	8,388	6,957	5,565
		신현원창동	28,128	27,422	27,340	26,951	26,324	25,581	24,531	22,632
	옹진군	대청면	1,526	1,643	1,777	1,802	1,898	1,977	2,143	2,236
		덕적면	1,955	2,042	2,179	2,263	2,282	2,242	2,164	2,018
		백령면	5,021	5,392	5,957	6,287	6,428	6,566	6,860	7,036
		북도면	2,281	2,222	2,229	2,161	2,053	1,895	1,710	1,490
		영흥면	4,949	6,021	7,431	8,973	10,633	12,349	14,161	15,803
		자월면	1,166	1,317	1,493	1,652	1,777	1,882	1,985	2,036
	중구	북성동	4,189	3,382	2,774	2,242	1,781	1,400	1,081	810
		신포동	6,279	5,668	5,232	4,738	4,232	3,722	3,253	2,768
		신흥동	15,926	14,926	14,310	13,499	12,552	11,592	10,651	9,487
		연안동	8,343	7,392	6,669	5,932	5,206	4,515	3,843	3,165
		영종동	29,150	33,789	41,455	50,740	61,578	73,907	87,414	101,482
		용유동	4,423	3,941	3,540	3,125	2,699	2,275	1,862	1,467

전국 어촌지역 인구추계 전망(계속)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전라남도	소계		709,581	683,691	679,980	674,736	670,706	670,130	671,325	652,619
	강진군	강진읍	15,336	15,054	15,197	15,110	14,929	14,681	14,307	13,299
		대구면	1,493	1,386	1,318	1,205	1,085	969	854	721
		도암면	3,294	2,996	2,765	2,492	2,209	1,933	1,648	1,339
		마량면	2,153	2,028	1,915	1,773	1,621	1,469	1,315	1,130
		신전면	2,168	1,993	1,864	1,699	1,530	1,365	1,199	1,006
		칠량면	2,904	2,670	2,489	2,251	2,016	1,793	1,567	1,306
	고흥군	과역면	4,047	3,608	3,209	2,794	2,409	2,051	1,703	1,358
		금산면	5,059	4,804	4,530	4,170	3,784	3,401	3,000	2,547
		남양면	2,750	2,532	2,305	2,061	1,817	1,583	1,357	1,134
		대서면	2,812	2,532	2,268	1,986	1,715	1,452	1,200	951
		도덕면	3,494	3,208	2,955	2,679	2,389	2,094	1,796	1,483
		도양읍	11,814	11,180	10,699	10,050	9,317	8,562	7,756	6,728
		도화면	4,766	4,268	3,840	3,382	2,933	2,503	2,084	1,660
		동강면	3,786	3,377	3,017	2,619	2,246	1,906	1,583	1,265
		동일면	1,740	1,579	1,440	1,282	1,124	958	790	622
		두원면	3,658	3,341	3,017	2,645	2,277	1,950	1,668	1,389
		봉래면	2,273	2,091	1,925	1,724	1,509	1,296	1,096	887
		영남면	1,604	1,416	1,231	1,040	864	703	562	433
		점암면	3,179	2,880	2,571	2,256	1,943	1,647	1,365	1,101
		포두면	5,975	5,419	4,902	4,334	3,767	3,228	2,701	2,174
		풍양면	3,850	3,513	3,166	2,799	2,434	2,078	1,742	1,413
	광양시	옥곡면	3,988	3,334	2,829	2,347	1,930	1,572	1,250	949
		진월면	3,674	3,284	2,983	2,656	2,324	2,003	1,691	1,380
		골약동	2,623	2,206	1,872	1,563	1,283	1,041	829	631
		광영동	12,240	13,021	14,313	15,557	16,796	18,031	19,056	19,122
		금호동	16,044	14,216	13,438	13,720	14,486	15,000	14,740	13,524
		중마동	48,298	54,172	64,255	75,168	86,126	97,192	108,789	115,957
		태인동	2,740	2,228	1,836	1,493	1,211	974	772	585
	목포시	만호동	4,489	3,863	3,398	2,937	2,500	2,099	1,746	1,413
		북항동	10,364	10,126	10,095	9,936	9,621	9,272	8,852	8,114
		삼향동	6,741	5,570	4,821	4,083	3,413	2,827	2,330	1,830
		신흥동	18,580	17,798	17,693	17,629	17,504	17,169	16,544	15,164
		연산동	6,241	6,703	7,492	8,299	9,197	10,182	11,225	11,775
		유달동	7,155	5,923	4,915	3,978	3,168	2,477	1,905	1,412
		이로동	11,852	11,051	10,692	10,231	9,629	9,017	8,396	7,464
		죽교동	4,744	4,017	3,431	2,878	2,384	1,955	1,579	1,228
	무안군	망운면	2,617	2,209	1,905	1,616	1,341	1,080	839	619
		운남면	3,858	3,332	2,886	2,439	2,028	1,664	1,335	1,016
		청계면	7,502	6,750	6,126	5,457	4,786	4,148	3,537	2,909
		해제면	6,358	5,664	5,036	4,347	3,703	3,109	2,564	2,030
		현경면	6,176	5,262	4,502	3,777	3,118	2,539	2,017	1,529
	보성군	득량면	5,000	4,559	4,175	3,739	3,305	2,887	2,464	2,015
		벌교읍	14,674	13,715	13,034	12,089	11,079	10,075	9,038	7,752
		조성면	4,597	4,112	3,676	3,206	2,745	2,319	1,931	1,542
		회천면	3,613	3,287	3,020	2,699	2,365	2,045	1,734	1,397
		별량면	6,798	6,080	5,448	4,780	4,133	3,521	2,947	2,368
	순천시	도사동	9,730	10,787	12,253	13,857	15,580	17,556	19,734	21,292

전국 어촌지역 인구추계 전망(계속)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3,141	3,009	2,881	2,687	2,494	2,368	2,234	2,037
		비금면	3,938	3,917	3,913	3,848	3,731	3,585	3,385	3,092
		신의면	1,827	1,792	1,774	1,724	1,646	1,566	1,482	1,359
		안좌면	3,609	3,377	3,143	2,874	2,607	2,361	2,118	1,846
		암태면	2,256	2,237	2,214	2,116	2,021	1,934	1,835	1,683
		압해읍	7,025	6,604	6,252	5,820	5,376	4,897	4,368	3,735
		임자면	3,695	3,526	3,427	3,270	3,087	2,949	2,827	2,592
		자은면	2,422	2,387	2,349	2,253	2,128	2,007	1,866	1,689
		장산면	1,806	1,763	1,717	1,636	1,539	1,431	1,311	1,161
		증도면	2,146	2,019	1,873	1,670	1,467	1,304	1,157	991
		지도읍	5,140	4,866	4,604	4,269	3,903	3,542	3,164	2,721
		팔금면	1,242	1,144	1,061	965	862	774	689	600
		하의면	2,086	1,953	1,833	1,674	1,499	1,337	1,178	1,004
		흑산면	4,744	4,300	3,929	3,495	3,061	2,644	2,263	1,868
	여수시	남면	3,629	3,301	3,001	2,675	2,331	2,010	1,702	1,384
		돌산읍	14,809	14,290	14,046	13,535	12,796	11,937	10,946	9,636
		삼산면	2,580	2,382	2,204	2,009	1,807	1,595	1,381	1,148
		율촌면	7,441	7,053	6,757	6,347	5,880	5,407	4,908	4,284
		화양면	8,129	6,959	6,038	5,138	4,307	3,566	2,870	2,212
		화정면	2,790	2,420	2,088	1,773	1,475	1,203	957	734
		국동	12,611	13,039	13,794	14,415	14,872	15,148	15,167	14,563
		대교동	7,596	6,161	5,060	4,098	3,250	2,518	1,895	1,370
		동문동	5,849	4,687	3,793	3,019	2,352	1,783	1,322	956
		묘도동	1,338	1,274	1,259	1,205	1,130	1,066	1,003	894
		시전동	22,949	28,069	36,058	46,411	59,132	74,388	92,607	109,781
		쌍봉동	37,346	36,235	36,525	36,335	35,785	34,924	33,678	31,066
		월호동	8,757	7,834	7,186	6,535	5,846	5,165	4,520	3,791
		중앙동	6,431	5,423	4,640	3,895	3,202	2,577	2,026	1,539
	영광군	백수읍	5,459	5,232	5,011	4,599	4,186	3,882	3,581	3,163
		법성면	6,397	5,876	5,442	4,916	4,370	3,861	3,376	2,837
		염산면	4,835	4,379	3,986	3,549	3,095	2,650	2,217	1,779
		낙월면	639	579	526	459	395	334	268	200
		홍농읍	7,650	7,599	7,756	7,816	7,748	7,623	7,465	7,058
	영암군	삼호읍	21,513	22,381	24,519	26,133	27,320	28,217	28,945	28,290
	완도군	고금면	4,581	4,572	4,596	4,548	4,475	4,455	4,451	4,280
		군외면	3,605	3,509	3,437	3,266	3,071	2,883	2,672	2,369
		금당면	1,147	1,069	999	905	815	728	637	543
		금일읍	3,960	3,924	3,990	4,062	4,124	4,164	4,159	4,000
		노화읍	5,706	5,643	5,752	5,816	5,799	5,746	5,685	5,377
		보길면	2,869	2,905	3,049	3,166	3,294	3,475	3,658	3,654
		생일면	898	869	849	839	814	801	801	790
		소안면	2,906	2,731	2,598	2,443	2,269	2,106	1,937	1,714
		신지면	3,762	3,625	3,524	3,323	3,106	2,881	2,652	2,352
		약산면	2,459	2,450	2,477	2,480	2,482	2,475	2,444	2,333
		완도읍	19,383	18,898	18,902	18,636	18,175	17,604	16,869	15,458
		청산면	2,585	2,500	2,423	2,328	2,232	2,166	2,092	1,965
	장흥군	관산읍	6,299	5,657	5,064	4,449	3,858	3,315	2,807	2,293
		대덕읍	4,151	3,994	3,863	3,663	3,467	3,296	3,115	2,838
		안양면	3,330	3,206	3,086	2,919	2,737	2,550	2,344	2,081
		용산면	2,664	2,634	2,625	2,568	2,507	2,446	2,365	2,213
		회진면	3,402	3,210	3,071	2,870	2,636	2,397	2,169	1,858

전국 어촌지역 인구추계 전망(계속)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4,134	3,998	3,936	3,793	3,627	3,465	3,270	2,951
		군내면	3,525	3,280	3,076	2,820	2,549	2,297	2,043	1,744
		의신면	4,135	3,831	3,563	3,236	2,896	2,572	2,253	1,893
		임회면	4,019	3,781	3,583	3,333	3,058	2,800	2,519	2,165
		조도면	3,217	3,151	3,095	2,981	2,856	2,767	2,701	2,564
		지산면	3,845	3,595	3,358	3,076	2,798	2,543	2,277	1,949
		진도읍	10,633	10,527	10,683	10,768	10,746	10,720	10,628	10,119
	함평군	손불면	4,020	3,731	3,480	3,161	2,838	2,540	2,245	1,899
		함평읍	9,305	9,065	9,017	8,893	8,743	8,625	8,431	7,919
	해남군	문내면	4,820	4,654	4,592	4,459	4,320	4,182	4,001	3,644
		북일면	2,463	2,276	2,103	1,887	1,684	1,482	1,285	1,071
		북평면	3,452	3,176	2,943	2,672	2,401	2,146	1,891	1,593
		송지면	7,258	6,861	6,537	6,147	5,756	5,368	4,922	4,315
		현산면	3,650	3,352	3,101	2,804	2,518	2,252	1,979	1,661
		화산면	4,023	3,730	3,489	3,172	2,866	2,594	2,327	1,990
		화원면	4,490	4,293	4,209	4,082	3,980	3,913	3,838	3,567
		황산면	6,209	5,783	5,507	5,177	4,834	4,444	4,009	3,433
	소계		99,110	91,425	86,246	80,233	73,983	67,711	61,388	53,872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3,098	3,031	3,000	2,914	2,918	2,951	2,984	2,945
		상하면	2,868	2,657	2,461	2,240	2,010	1,785	1,560	1,304
		심원면	2,919	2,762	2,632	2,452	2,252	2,039	1,808	1,539
		해리면	3,336	3,103	2,891	2,615	2,314	2,024	1,743	1,446
		흥덕면	3,679	3,582	3,483	3,317	3,154	2,987	2,776	2,471
	군산시	옥도면	4,473	4,045	3,705	3,336	2,938	2,549	2,172	1,775
		경암동	8,529	8,206	8,062	7,794	7,409	6,950	6,425	5,745
		구암동	7,153	6,456	5,988	5,453	4,896	4,328	3,760	3,139
		소룡동	18,809	19,169	20,292	20,941	21,219	21,147	20,837	19,700
		월명동	8,964	6,921	5,456	4,244	3,240	2,437	1,799	1,278
		중앙동	4,341	3,627	3,074	2,589	2,142	1,729	1,352	1,014
	김제시	진봉면	3,469	3,060	2,693	2,312	1,949	1,618	1,321	1,037
	부안군	계화면	4,698	4,026	3,463	2,900	2,368	1,900	1,487	1,121
		동진면	3,801	3,304	2,840	2,384	1,975	1,620	1,309	1,018
		변산면	5,296	4,832	4,485	4,072	3,631	3,185	2,737	2,253
		보안면	2,948	2,732	2,516	2,281	2,040	1,790	1,530	1,254
		줄포면	3,253	3,011	2,784	2,528	2,266	2,013	1,747	1,452
		진서면	2,755	2,544	2,371	2,176	1,953	1,715	1,461	1,184
		위도면	1,354	1,264	1,198	1,127	1,048	967	889	804
		하서면	3,367	3,093	2,851	2,558	2,261	1,977	1,692	1,393
	소계		273,850	285,203	307,320	329,037	351,258	375,151	399,922	412,22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18,118	18,569	19,385	19,910	20,202	20,349	20,194	19,235
		대정읍	16,564	18,319	20,978	23,963	27,284	30,976	34,801	37,479
		성산읍	13,992	14,184	14,572	14,773	14,786	14,598	14,157	13,174
		안덕면	9,597	10,011	10,719	11,255	11,695	12,066	12,274	12,007
		표선면	10,743	11,310	12,205	12,916	13,440	13,802	13,936	13,484
		대륜동	9,102	10,976	13,724	17,066	20,876	25,136	29,788	33,855
		대천동	6,907	7,962	9,468	11,148	12,985	14,857	16,690	17,929
		송산동	4,958	4,771	4,691	4,544	4,329	4,080	3,811	3,414
		중문동	8,849	9,597	10,796	11,975	13,122	14,250	15,308	15,677
		천지동	3,821	3,848	3,949	3,973	3,919	3,803	3,629	3,322
		예래동	3,545	3,716	3,986	4,185	4,336	4,452	4,510	4,434
		효돈동	4,980	5,071	5,266	5,395	5,466	5,504	5,487	5,238

전국 어촌지역 인구추계 전망(계속)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14,706	14,558	14,659	14,523	14,271	13,927	13,429	12,468
		애월읍	27,563	30,684	35,232	39,895	44,634	49,424	54,140	56,807
		우도면	1,563	1,691	1,884	2,090	2,303	2,513	2,688	2,787
		조천읍	20,831	20,908	21,557	21,845	21,834	21,637	21,189	19,926
		추자면	2,479	1,986	1,645	1,341	1,081	856	662	488
		한경면	8,148	8,414	8,820	9,117	9,357	9,574	9,649	9,273
		한림읍	19,260	19,563	20,322	20,813	21,065	21,122	20,879	19,825
		건입동	10,839	10,005	9,461	8,783	8,021	7,227	6,434	5,534
		도두동	2,737	2,816	2,998	3,114	3,191	3,206	3,184	3,043
		삼도2동	9,594	8,965	8,548	8,039	7,448	6,825	6,215	5,452
		외도동	15,029	18,612	24,243	31,138	39,640	50,386	63,793	76,517
		용담1동	8,688	8,235	8,006	7,673	7,265	6,817	6,326	5,637
		용담2동	17,154	16,511	16,308	15,801	15,110	14,369	13,576	12,370
		이호동	4,083	3,921	3,898	3,761	3,598	3,395	3,172	2,852
충청남도	**소계**		**213,839**	**216,254**	**225,021**	**232,953**	**240,960**	**251,030**	**263,489**	**271,257**
	당진시	석문면	7,894	8,160	8,532	8,770	8,933	9,031	9,049	8,752
		송악읍	22,107	26,098	31,582	37,458	43,724	50,772	58,972	66,507
		신평면	14,652	17,507	21,913	27,387	34,088	42,532	53,070	63,359
	보령시	남포면	5,733	5,503	5,304	5,034	4,715	4,375	3,977	3,483
		오천면	5,735	5,362	5,069	4,692	4,273	3,806	3,323	2,793
		웅천읍	7,408	6,924	6,490	6,005	5,481	4,906	4,280	3,590
		주교면	5,724	5,553	5,443	5,236	4,977	4,707	4,379	3,906
		천북면	4,224	3,868	3,562	3,225	2,886	2,535	2,180	1,790
		대천5동	7,304	7,050	6,880	6,562	6,147	5,667	5,130	4,459
	서산시	대산읍	16,123	15,443	15,212	14,687	13,915	13,100	12,207	11,008
		부석면	6,139	5,763	5,400	4,987	4,507	4,006	3,473	2,910
		지곡면	8,332	9,234	10,597	11,873	13,075	14,423	15,845	16,973
		팔봉면	3,481	3,479	3,472	3,397	3,261	3,064	2,814	2,475
	서천군	마산면	1,641	1,552	1,464	1,358	1,249	1,142	1,032	898
		비인면	3,587	3,264	2,969	2,664	2,353	2,036	1,709	1,377
		서면	4,913	4,752	4,655	4,444	4,168	3,845	3,477	3,024
		마서면	6,240	5,534	4,944	4,318	3,710	3,155	2,625	2,098
		장항읍	13,529	12,309	11,370	10,295	9,197	8,155	7,138	5,999
		종천면	2,380	2,264	2,184	2,060	1,908	1,733	1,527	1,281
	태안군	고남면	2,692	2,595	2,512	2,359	2,173	1,971	1,750	1,490
		근흥면	6,096	5,626	5,233	4,782	4,268	3,716	3,144	2,546
		남면	4,549	4,583	4,632	4,428	4,117	3,838	3,594	3,285
		소원면	5,970	5,594	5,211	4,778	4,291	3,779	3,259	2,695
		안면읍	9,715	9,277	8,907	8,363	7,680	6,983	6,256	5,405
		원북면	5,004	4,532	4,236	3,900	3,524	3,122	2,686	2,202
		이원면	2,443	2,329	2,226	2,052	1,853	1,649	1,438	1,189
		태안읍	26,374	28,532	31,711	34,823	37,782	40,578	43,073	44,051
	홍성군	서부면	3,850	3,567	3,311	3,015	2,708	2,404	2,080	1,712

주 : 전국 연안 읍면동 450개 지역중 421개 지역의 인구추계 결과임

〈부록 2〉

※ 본 설문은 전화 및 방문면접을 통해 진행되었으므로 실사에서는 용어 및 표현 등을 쉽게 순화하여 사용하였음

ID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지역주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어촌의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향후 해양수산 분야를 위한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설문의 결과와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6월

문의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	박상우 부연구위원(051-797-4562) 황재희 전문연구원(051-797-4728) 이상규 연 구 원(051-797-4566)
조사 기관	한국사회조사센터	김지환 차 장(02-780-2261)

SQ1.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어촌지역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예상되어 향후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① 예(☞ 조사진행) ② 아니오(설문종료)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SQ3.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19세 미만은 설문 중단)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4.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시/도 ( )군 ( )읍/면/동 ( )리

PART A. 지역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Q01. 귀하가 거주지역에서 느끼는 '정주여건(주거생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2개)

① 마을공동시설(마을회관)의 노후화 및 관리부실

② 도로·교량의 노후화 및 관리부실

③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재 및 시설 노후화

④ 노후불량주택 또는 빈집의 증가

⑤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위협과 치안 불안

⑥ 전기·통신 등 인프라 취약
⑦ 기타 ( )

Q01-1. 위의 응답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Q02. 귀하가 거주지역에서 느끼는 '산업기반(수산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2개)
① 어업기반시설 취약(어항 부재, 노후화)
② 마을어장 운영·관리 인력 부족
③ 청년종사자 감소
④ 유통가공, 관광 등 수산업 확장성 한계
⑤ 수산업종사자 구직 어려움
⑥ 수산업 관련 일자리 감소
⑦ 기타 ( )

Q02-1. 위의 응답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Q03. 귀하가 거주지역에서 느끼는 '환경여건'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2개)
① 대규모 산업시설(발전소, 산업단지 등)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조명, 미세먼지, 온배수 등)
② 외부인 이주(귀어·귀촌) 또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
③ 대규모 자본유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원주민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④ 기타 ( )

Q03-1. 위의 응답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Q04. 귀하가 거주지역에서 느끼는 '교육여건'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2개)

① 영유아원 시설부족
② 초·중등학교 교원부족과 교육시설 미흡
③ 학원 등 사설교육시설 부재
④ 집부터 교육시설까지 통학불편(대중교통, 소요시간)
⑤ 학교통폐합 우려에 따른 불안
⑥ 기타(　　)

Q04-1. 위의 응답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Q05. 귀하의 거주지역에서 느끼는 '교통여건'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2개)

① 1일 3회 미만의 여객선 운항
② 대중교통(버스) 간헐적 운행
③ 대중교통(버스) 배차시간 부정확
④ 지역 내 택시부족 및 부재
⑤ 기타(　　)

Q05-1. 위의 응답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Q06. 귀하의 거주지역에서 느끼는 '주민 편의생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2개)

① 소매상점(슈퍼마켓 등)
② 도서관, 영화관 등 문화시설 부재
③ 응급사고 시 신속한 후송체계 미흡
④ 의료시설의 부재(산부인과 등)
⑤ 택배서비스 기피(별도 추가요금 등)
⑥ 기타(　　)

Q06-1. 위의 응답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Q07. 귀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직면한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① 열악한 주거생활여건
(노후·불량주택, 안전재해·치안 불안, 상하수도, 전기공급 등)
②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수산업 여건
(열악한 작업환경, 어업소득 감소, 청년 등 구인난)
③ 마을의 급격한 환경여건 변화
(원자력·화력발전시설, 산업단지 환경문제 발생, 어장소실 등)
④ 열악한 교육여건
(영유아원 부족, 초등 교원 및 교육인프라 부족, 중·고등학교 부재 등)
⑤ 접근성 제약과 취약한 교통여건
(여객선 해상교통, 지역 내 대중교통 불편)
⑥ 불편한 주민 편의생활 여건
(슈퍼마켓 및 소매점 부재, 문화시설 부재, 의료서비스 취약)
⑦ 기타 ( )

Q08. 귀 지역에서 주민들이 떠나가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2개)

① 어촌의 열악한 정주생활여건
② 어촌의 부족한 일자리와 어려운 수산업 여건
③ 어촌의 취약한 교육 인프라
④ 어촌의 접근성 제약과 열악한 교통여건
⑤ 어촌의 취약한 공공서비스(문화, 복지, 의료 등)
⑥ 기타( )

Q09. 귀 지역에 젊은 층(30~40대)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2개)

① 어촌의 열악한 정주생활여건
② 어촌의 부족한 일자리와 어려운 수산업 여건
③ 어촌의 취약한 교육 인프라
④ 어촌의 접근성 제약과 열악한 교통여건
⑤ 어촌의 취약한 공공서비스(문화, 복지, 의료 등)
⑥ 기타( )

PART B. 인구소멸방지를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업

Q10. 귀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탈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어촌의 정주생활여건 개선
② 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수산업 작업환경 개선
③ 교육 인프라 개선
④ 어촌의 대중교통 및 해상교통 개선
⑤ 어촌의공공서비스(문화, 복지, 의료 등) 개선
⑥ 기타( )

Q11. 귀 지역에 젊은 층(30~40대)이 새롭게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어촌의 정주생활여건 개선
② 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수산업 작업환경 개선
③ 교육 인프라 개선
④ 어촌의 대중교통 및 해상교통 개선
⑤ 어촌의 공공서비스(문화, 복지, 의료 등) 개선
⑥ 기타( )

Q12. 현재 인구소멸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적절 ② 적절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미흡

Q12-1.(④,⑤ 응답자) 지원이 미흡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① 인구소멸(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부족
② 지역맞춤형 지원정책(사업, 지원규모 등)이 미흡
(지역여건, 의견을 반영하지 않음)
③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문제진단 미흡
④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할 전담기관(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함
⑤ 기타(　　)

Q13.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① 전문인력 배치
② 지역별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신산업 등)
③ 정부정책의 확대·개편
④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역 간 연계 지원체계 구축
⑤ 지역역량 강화 교육지원
⑥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마련

DQ1. 귀하의 직업(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어업　② 농업　③ 서비스업(판매업, 요식업 등)
④ 사무직(일반사무, 공무원, 교사 등)　⑤ 단순노무종사자
⑥ 학생　⑦ 전업주부　⑧ 기술직　⑨ 기타

DQ2.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 ~200만원 미만
③ 200 ~ 300만원 미만　④ 300 ~ 400만원 미만
⑤ 400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성명		연락처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3〉

※ 본 설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었으므로 실사에서는 용어 및 표현 등을 쉽게 변경하거나 단순화하여 사용하였음
(모바일환경에 적합하도록 조정, 응답항목 셔플링 설정)

ID

어촌 이주에 관한 도시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

[응답소요시간 3분]

2018년 5월

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	박상우 부연구위원(051-797-4562) 황재희 전문연구원(051-797-4728) 이상규 연 구 원(051-797-4566)

파트 I. 새로운 거주지로서 어촌

0. 귀하는 현재 어촌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아니오 (→ 1로)　　② 예 (→ 파트 II로)

1. 귀하는 "도시가 아닌 지역(농·산·어촌)"으로 이주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2로)　　② 아니오 (→ 3으로)

2. 귀하는 "어촌" 지역으로 이주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 2-1로)　　② 아니오 (→ 2-2로)

2-1. 어촌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해 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인 이유로(→ 2-1-①로)
② 정서적인 이유로(삶의 만족, 요양치료, 추구하는 가치 등)
(→ 2-1-②로)
③ 배우자(연인)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④ 기타 (　　)

2-1-①. 다음 중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로 어촌 이주를 고려해 보셨습니까? (1~2개)

① 어촌지역의 사업체에 취업/이직해서
② 집안일을 물려받아 돈을 벌기 위해
③ 어업/수산업 관련 사업(종사)을 하기 위해
④ 어촌환경을 활용한 사업(종사)을 하기 위해 (식당/관광사업 등)
⑤ 기타 (　　)

2-1-②. 다음 중 어떠한 정서적인 이유로 어촌 이주를 고려해 보셨습니까? (1~2개)

① 자연환경이 주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 (바다, 생태, 여유 등)
② 요양치료 등 본인/가족의 건강을 위해
③ 좋아하는 레저/여가를 즐기기 위해
④ 기타 ( )

2-1-1. 아직 어촌으로 이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 필수)

① 주거기반이 열악해서
②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③ 교통/편의/의료시설이 부족해서
④ 교육/학습여건이 취약해서
⑤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 어려워서
⑥ 자연환경의 이점이 기대만큼 매력적이지 않아서
⑦ 어촌 이주/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⑧ 어촌사회가 너무 폐쇄적이라서
⑨ 배우자(연인)가 반대해서
⑩ 기타 ( )

2-1-2. 어촌으로 실제 이주하게 된다면, 정책적으로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3개 필수)

① 주거기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②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③ 교통인프라 및 편의/의료시설 확충
④ 교육/학습 여건 개선
⑤ 여가/레저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⑥ 재해안전 및 자연환경 관련 안내
⑦ 어촌 이주/생활 관련 정보 제공
⑧ 지역사회 정착 및 주민간 교류 지원
⑨ 기타 ( )

2-2. 농촌·산촌 대비 "어촌"으로 이주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필수)

① 돈벌이가 어려울 것 같아서
②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내륙연결망/해상교통 미비)
③ 주거지로서 자연환경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태풍, 비린내, 해양쓰레기 등)

④ 어촌 이주/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⑤ 어촌사회가 매우 폐쇄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⑥ 농촌/산촌 거주에 대한 명확한 선호가 있어서
⑦ 기타 ( )

2-2-1. 다음 중 어떠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어촌으로 이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2개 필수)

①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② 교통인프라 확충
③ 주거지로서 어촌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 (재해안전, 쾌적성 등)
④ 어촌 이주/생활 관련 구체적 정보 제공
⑤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및 주민간 교류 확대
⑥ 기타 ( )

3.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를 고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3개)

① 도시의 주거환경에 매우 만족해서
② 시골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③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④ 교통/편의/의료시설이 부족해서
⑤ 교육/학습여건이 취약해서
⑥ 문화/여가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⑦ 귀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⑧ 주변인/매체로부터 안 좋은 의견을 많이 들어서
⑨ 배우자(연인)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⑩ 기타 ( )

3-1. 도시와 가까운 어촌*에서 적정 수준의 수입 및 공공서비스가 보장된다면 이주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강원 속초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다소 낮다
④ 다소 높다　⑤ 높다　⑥ 매우 높다

3-2. 어촌을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필수)

① 주거기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②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③ 교통인프라 및 편의/의료시설 확충
④ 교육/학습 여건 개선
⑤ 여가/레저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⑥ 재해안전 강화 및 환경적 이점 홍보
⑦ 어촌 이주/생활 관련 정보 제공
⑧ 지역사회 정착 및 주민간 교류 지원
⑨ 기타 ( )

파트 II. 소멸 위험지역으로서 어촌

1. 귀하는 어촌지역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비동의 ② 비동의 ③ 다소 비동의
④ 다소 동의 ⑤ 동의 ⑥ 매우 동의

2. 어촌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어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수응답)

① 주거기반이 열악해서
② 어업/수산업 여건 악화로 돈벌이가 어려워져서
③ 교통/편의/의료시설이 부족해서
④ 자녀교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⑤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 (발전시설, 해양쓰레기 등)
⑥ 급격한 관광개발로 난개발/외지인이 많아져서
⑦ 기타 ( )

3. 어촌지역에 젊은 층(만20~49세)이 이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① 주거기반이 열악해서
②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③ 교통/편의/의료시설이 부족해서
④ 교육/학습여건이 취약해서
⑤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 어려워서
⑥ 자연환경이 거주지로서 매력적이지 않아서
⑦ 어촌 이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⑧ 어촌사회가 너무 폐쇄적이라서
⑨ 배우자(연인)의 반대 또는 어촌에서 짝을 만나기 어려워서
⑩ 기타 ( )

파트 III. 응답자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나이(만)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도/특별·광역시 ( )시/구 ( )동

4. 귀하의 직업(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사무직 ② 서비스 및 판매직 ③ 전문가 및 관리자
④ 농림어업/제조/건설 현장근로자 ⑤ 학생
⑥ 전업주부 ⑦ 기타 ( )

5. 귀하의 월 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단위: 만원)

① 100미만 ② 100이상 200미만 ③ 200이상 300미만
④ 300이상 400미만 ⑤ 400이상 500미만 ⑥ 500이상

6. 귀하는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 제외)

① 동거인 없음 ② 배우자(연인) ③ 배우자 및 자녀
④ 자녀 ⑤ 기타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부문 전망모형「KMI-FOSiM」구축연구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헌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국내 가두리 양식장 어장환경개선 방안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 해양사고조사체계 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구축방안 연구	고병욱
12	해운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황진회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	이언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 함수 추정 및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박한선
18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진출 사례 분석 및 추진전략	이기열

2017년

01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대영
02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03	해양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장정인
04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최지연
05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6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박상우
07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08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임경희
0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10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 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11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박한선
12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고병욱
13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이기열
14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 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김은수
15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하역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형모
16	지진에 대비한 항만기능 유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김우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03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4	해양생태도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박수진
05	국내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안용성
06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항만배후단지內 FTZ활성화 방안연구	조지성
07	최저임금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8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수립 및 사회적 경제 도입방안 연구	류정곤

2017년

01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물류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박용안
02	해양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홍장원
03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황진회
04	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5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장홍석
06	한·중·일 신선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7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8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 갯벌어업 패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09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홍현표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미얀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연구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대기업 물루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수산식품·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17년

01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방향	전형진
02	한투발루 협력 증진을 위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창모
03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이언경
04	해외 진출 무역업체의 한국인 포워더 수요 추정 연구	신수용
05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박한선
06	부산 영도구·중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한진중공업·자갈치시장 사례 중심-	최나영환
07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이헌동
08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국 해운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고병욱
09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부산 원도심 및 영도지역 사례 분석-	최지연
10	갯벌 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모형 개발 방향	육근형
11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찬호
12	전자상거래 기반 상업항 개발전략	최상희
13	항만 내 어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광석
14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과 부산항 신항 환적 운영 개선 방향 연구	김은수
15	PA관할 항만 항계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분담기준 마련	김근섭
16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정명화
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현대송
18	부산항 신항 혼합형 전용터미널(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근섭
19	해양경비 여건 분석과 역량 강화 방안	윤성순
20	바닷모래의 이용실태와 관리 개선방향	윤성순
21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사례 및 시사점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황진회
22	한국 컨테이너선대 육성의 필요성	김태일
23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한광석
24	우리나라 항만산업 고용통계 조사 연구	하태영
25	뉴질랜드·노르웨이의 양식 수산물 수출 전략	임경희
26	빅데이터 적용 해운항만산업 연구분석 우선순위 연구	최종희
27	해양수산 생명자원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28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임경희
29	도시-어촌 상생협력 인식도 조사	이상철

30	크루즈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책과제	황진회
31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김태일
32	우리나라의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이기열
33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강화에 따른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심기섭
3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박광서
35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방안	안용성
36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홍장원
37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 방안	김경신
3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평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신수용
39	2018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40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박상우
41	4차 산업혁명시대 항만물류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이언경
42	원양어선 승무 선원의 스트레스 분석에 관한 연구	이승우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 경제특구 발전 방향	박성준
44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기초정보 개선 연구	정지호
45	세계경영을 위한 해외 터미널 및 물류시설 투자방안	박주동
46	연안 소규모 하·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원근
47	거대선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 방향	전형진
48	해양법 관련 최근 판례 및 동향 분석 - 남중국해 분쟁 등 해양법 판례 중심 -	최지현
49	화주 관점의 항만배후단지 역할 제고 방향	김은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 소규모 항·포구 개선사업 -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동향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회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인 쇄 ▌2018년 12월 29일 인쇄
발 행 ▌2018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양 창 호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애드원플러스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15,000원